

도시연구

Korean Journal of
Urban Studies

2023 통권 제24호

권두언

산업혁명 이후 도시 곳곳에 공장들이 들어서고, 공장에서 일하는 인구가 도시로 모여들면서 도시화가 빠르게 진전되었습니다. 도시가 평면적으로 확대되면서 장거리 이동 수요가 많아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트램이나 철도와 같은 대중교통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동차문화의 발달과 함께 버스가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고, 최근에는 공유 자전거, 공유 킥보드, 공유 자동차 등 새로운 유형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비용 절감 효과가 크고, 여러모로 편리함을 주고 있어 도시는 물론 국가에서도 핵심적인 정책대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이슈들이 상존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는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중교통 안전에 대한 문제 인식이 제기되었고, 새로운 유형으로 확장되고 있는 대중교통에 대한 또 다른 대응체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기에 디지털 약자에 해당하는 고령자에 대한 접근성 확보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처럼 도시정책 영역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중교통’을 이번 호의 기획논문 주제로 다루고자 합니다. 이번 호에도 두 편의 기획논문이 최종 게재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획논문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DRT: Demand Responsive Transit)을 다루고 있습니다. DRT는 규칙적이지 않은 교통 수요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기존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충분히 미치지 못한 지역에도 접근성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범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논문의 목적은 이용자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현행 DRT 시스템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분석하고, 순서형 로짓 모형 구축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만족도 조사는 버스형 DRT와 택시형 DRT를 구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중교통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은 택시형 DRT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버스형 DRT는 몸이 불편한 승객을 위한 교통약자 편의시설 제공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는 등 많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획논문은 초고령사회로의 빠른 인구구조변화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과 고령자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령자에게 있어 디지털 사회는 커다란 생활장벽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슈입니다. 대중교통의 디지털 기술 발전도 자가운전이 어려운 고령층의 이동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정책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논문은 고령 디지털 약자가 향상된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정책 방안은 고령 디지털 약자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선진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폴란드 '포즈난'과 대전광역시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스마트시티 기술의 도입을 통해 고령 디지털 약자의 이동 편의와 대중교통 복지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인가에 정책적 고민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술적 솔루션이라 할 수 있는 효율적 경로 제공, 접근성 향상,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과 함께 디지털 교육 및 약자에 대한 사회 인식 증진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호의 일반논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년계층 공공주택 입주

의향 분석, 메타버스 시대 스마트관광도시 인천의 관광플랫폼 정보공유의도 연구, Agile Management to Agile Collaboration in the Nonprofit Sector,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운영실태 비교분석, 통근이 거주지역 만족도와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 상권 방문객의 혁신성 식별과 혁신성 결정요인 분석연구, 기업의 지역이동에 관한 연구,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 중심의 공동 마케팅 전략 제안 등 총 8편이 실렸습니다. 공공주택, 관광플랫폼, Agile Management, 통근, 상권, 기업 이동, 공공 마케팅 등 다양한 정책 이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시연구가 첫 번째 재인증평가를 받았는데, 그동안 보내주신 도시연구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 덕분에 좋은 평가와 함께 등재학술지로 재인증 되었습니다. 편집위원의 구성과 학술지 관리체계의 우수성을 높게 평가해 주셨지만, 추후 연구주제 등의 차별성과 전문성 유지가 관건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재인증 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의 보완과 함께 학술적으로 더 큰 기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는 '푸른 용의 해'라고 합니다. 청룡의 힘찬 기운을 받아, 계획했던 모든 일이 풍성한 결실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30.

편집위원장 이 왕 기

목 차

기획논단

- 순서형 로짓 모형을 이용한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DRT) 이용자 만족도 분석 박유진·이경재·추상호·임준범·정준영 11
- 고령 디지털 약자의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연구: '대전광역시'와 '포즈난'을 중심으로 전숙연·정석 43

일반논문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년계층의 공공주택 입주의향 분석: 수도권 무주택 청년계층을 중심으로 정기성 97
- 메타버스 시대 스마트관광도시 인천의 관광플랫폼(인천e지) 정보공유의도 연구: 확장된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2)과 자기결정이론(SDT)의 이론통합적 분석 김규미·한진석 129
- Agile Management to Agile Collaboration in the Nonprofit Sector: Cas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iwon Suh ·Jennifer Reiner·Jung Wook Kim 169
-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운영실태 비교분석: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윤난·김부열 215
- 통근이 거주지역 만족도와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 인천광역시 거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양은모·배호중 257
- 상권 방문객의 혁신성 식별과 혁신성 결정요인 분석연구 류새배·김새힘·김승훈·이명훈 305

- 기업의 지역이동에 관한 연구:
경기도 화성시의 기업 유출입을 중심으로 김규환·이덕·오근상 345
-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 중심의 공동 마케팅 전략 제안 강정석·강선우 397

서 평

- 주목받는 미래 자율주행으로 옛보다 한대희 439
『퓨처라마 모빌리티 혁명의 미래』, 변완희 지음, 2021, 서울: 크레파스북.

『도시연구』 휘보

- 『도시연구』 발간연혁 449
-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활동 453
- 『도시연구』 학술행사 보고 454

『도시연구』 규정

- 『도시연구』 편집 및 발간 규정 459
-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470
- 『도시연구』 논문심사 규정 473
- 『도시연구』 연구윤리 규정 480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492

기획논단

- | 순서형 로짓 모형을 이용한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DRT) 이용자 만족도 분석
박유진·이경재·추상호·임준범·정준영
- | 고령 디지털 약자의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연구:
‘대전광역시’와 ‘포즈난’을 중심으로
전숙연·정석

순서형 로짓 모형을 이용한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DRT) 이용자 만족도 분석*

박유진**·이경재***·추상호****·임준범*****·정준영*****

I. 서론

II. 선행연구 검토

1. DRT 관련 연구
2. 교통부문 이용자 만족도 관련 연구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III.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2. 연구 방법

IV. 연구 결과

1. 기초통계분석
2. 요인분석 결과
3. 모형 설정
4. 순서형 로짓 모형 분석 결과

V. 결론 및 제언

박유진 · 이경재 · 추상호 · 임준범 · 정준영

* 이 논문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2년 대중교통 현황조사」의 자료를 일부 활용하여 분석함.
 **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시계획과 석사과정
 ***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시계획과 박사과정, 공동저자
 ****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교신저자(E-mail: shchoo@hongik.ac.kr, Tel: 02-320-3068)
 *****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정책연구처 책임연구원, 공동저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정책연구처 선임연구원, 공동저자
<http://doi.org/10.34165/urbanr.2023..24.11>

투고(접수)일 2023.11.7. 심사(수정)일 2023.11.18. 게재확정일 2023.12.14.

I. 서론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DRT: Demand Responsive Transit)은 기존의 고정 노선 및 시간표 기반의 대중교통 시스템과는 달리, 사용자의 실시간 수요에 기반하여 운행되는 교통체계이다. DRT는 규칙적이지 않은 교통 수요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기존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충분히 미치지 못한 지역의 한정적인 접근성을 보완하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는 2015년 전라북도에서 시행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162개 시군 중 약 55.6%에 해당하는 90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한국교통안전공단 2022).

DRT는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되는데, 대표적으로 운행 차량의 형태에 따라 버스형과 택시형으로 구분한다. 버스형 DRT는 소형 승합차 형태가 주를 이루며, 택시형 DRT는 일반 택시와 형태가 유사하다. 두 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용량이며 한 번에 더 많은 이용객이 탑승 가능한 버스형 DRT의 경우 실제 노선버스와 유사하게 지정된 정류장에서 탑승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2022년 기준으로 국내의 택시형 DRT 이용 지역이 총 이용 지역의 63.3%로, 버스형 DRT보다 택시형 DRT가 더 많이 운영되고 있다(한국교통안전공단 2022).

그러나 아직 국내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DRT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였는데, 향후 원활한 도입 및 상용화를 위해서는 현재 DRT 이용자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RT가 이용자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현행 DRT 시스템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분석하고, 순서형 로짓 모형을 구축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2년 대중교통 현황조사」에서 수행한 만족도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II. 선행연구 검토

벽지노선 운행 지역과 같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효과적으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각광받고 있는 DRT는 국내의 경우 아직 시범단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추후 확대 시 개선 방향을 고찰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DRT 이용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였으며, 교통 분야에서 이용객의 만족도를 조사 및 분석한 연구들 또한 추가로 검토하였다.

1. DRT 관련 연구

장태연 외(2016)는 DRT 시범사업 시행 후 실도입 여부가 상반된 두 지역인 완주군(도입 추진)과 정읍시(사업 중단)에서 DRT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최소자승법에 의한 분석과 분위회귀분석의 결과 비교를 통해 DRT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도출했다. 분석 결과 두 지역의 연령, 거주 기간, 이용 빈도, 예약, 요금 항목의 최소자승법 결과의 부호가 상반되어 DRT 만족도와 지속사업으로의 진행 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분위회귀분석 및 한계효과 분석 결과 완주군 이용자의 하위 분위와 상위 분위 간 만족도 편차가 작아 지속사업으로 진행되는 환경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기준·정현영(2019)은 노선버스 과소운행 지역의 버스노선 대체형 DRT 도입 시 적절한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창원시의 노선버스 과소운행 지역 39개 마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항 로짓 모형과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해 노선버스 대체형 DRT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항 로짓 모형 분석 결과를 통해 버스 이

용 횟수가 많을수록, 집 앞까지 오는 교통수단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의료·친교·쇼핑을 목적으로 통행하는 사람일수록 DRT 이용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DRT 이용을 거부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 기존 이용 수단에 불편함이 없는 그룹, 변화 지향성이 낮은 그룹, DRT가 대중교통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룹에서 DRT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Many-to-one 형태, 세미다이나믹 형태를 병행한 버스 운영을 제안하였다.

송기욱·박기준(2022)은 2017년부터 운영 중인 경남형 DRT ‘브라보 택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운행 초기와 2년 경과 후의 이용자 의식 변화를 공간분석을 통해 비교했다. 그 결과 브라보 택시에 대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나, 이용객 증가로 인한 대기시간 증가, 쿠폰 지급의 부족 및 탑승이 불가능한 경우의 발생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Abdullah et al.(2021)는 파키스탄의 라호르 지역의 수요 응답형 버스 2가지(SWVL, Airlift)의 이용객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비교 결과를 토대로 요인분석과 순서형 회귀 분석을 진행해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수를 판별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요인 분석 결과 ‘서비스 속성’과 ‘분위기’의 두 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순서형 회귀 분석 결과 SWVL의 경우 두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서비스가 분위기에 비해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Airlift는 두 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Wong et al.(2023)는 홍콩의 버스형 DRT와 기존의 노선 버스에 대한 이용객의 만족도를 10가지 서비스에 대해 비교해 전반적 만족도에 기여한 서비스를 식별하고, 순서형 로짓 모형을 구축해 개선 영역의 우선순위

를 설정하였다. 회귀 분석 결과 차량 내 환경, 운전자의 태도, 안전환경, 대기 시간, 주행 안전성 항목에서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 시간의 연장과 승객 대기 시설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2. 교통부문 이용자 만족도 관련 연구

추상호 외(2012)는 인구 및 사회경제적 계층, 대중교통 이용 특성 등에 따른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통계적으로 입증했다. 2011년 대중교통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4가지로 구분된 서비스 분야(기본적, 부가적, 외부 환경, 인적)의 18가지 만족도 항목에 대해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대중교통 이용자의 개인 속성, 지역 특성, 지난 1년간 대중교통 전환 여부, 교통카드 사용 여부, 무정차 여부, 통행 목적 등이 대중교통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외(2014)는 이용자 만족도와 정량적 지표 간의 상관성을 분석해 서비스 제공 수준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2013년 대중교통 전반적 만족도 상위 지역(서울, 대전, 창원)과 하위 지역(인천, 광주, 전주)의 총 1,54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해 순서형 로짓 모형을 구축하였다. 연구 결과 대중교통 수단별, 지역별로 이용자가 느끼는 최대 만족도는 상이하며, 수단별로 이용자들이 기대하는 만족도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외(2014)의 연구는 기존의 정성적 조사의 해석적 측면 한계를 극복한 것에 의의가 있다.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DRT의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에 앞서,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았다. 기존 연구는 설문 문항이 세부적으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으며, DRT 형태에 따라 만족도 영향 요인을 구분해 도출한 연구도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RT 유형을 버스형과 택시형으로 구분해, 다양한 이용 실태 및 서비스 영역에서의 만족도를 조사 및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1) DRT 이용자 만족도 조사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2년 대중교통 현황 조사의 일환으로 시행된 설문조사 자료이다. 대중교통 현황조사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지원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하여 기초자료 조사 및 결과 제공을 목적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그 중 ‘대중교통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다양한 서비스 요소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조사하며, 2022년에는 DRT 이용자 추가 조사를 수행하였다.

2) 표본 설계 및 문항 구성

설문조사는 2022년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경상남도 사천시, 통영시, 고성군의 DRT 이용객 6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DRT 형태에 따라 택시형 DRT 이용객 300명, 버스형 DRT 이용객 300명으로 표

본을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의 경우 이용 실태, 서비스 항목별 만족도, 이용자 만족도, 기타 사항 등 총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만족도 문항은 전 문항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표 1] DRT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세부 문항

구분		문항 내용
DRT 이용 실태		이용 목적, 이용 시간대, 이용 빈도, DRT 운영 전 이용 교통수단, DRT 이외에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DRT 이용 전/후 소요시간, DRT 탑승 장소까지 이동 시 이용 교통수단, 이동시간 및 소요시간 적절성, 차량 대기시간, 대기시간 적절성, 탑승 인원, 요금 지불 방식
서비스 항목별 만족도	운영 서비스	노선 체계 및 배차간격 적절성, 이용 요금 합리성, 요금 지불 방식 적절성, 승하차 장소 위치 적절성, 운영 시간대 적절성
	예약 서비스	신속한 연결, 상담원 태도, 예약 소요시간 적절성, 정보 제공 여부, 변경/취소 절차 안내 여부
	이용환경 서비스	차량 내부 시설 청결성, 규모 적정성, 교통약자 시설 구비, DRT 차량 인지도, 운전기사 태도
	안전환경 서비스	안전시설, 안전 운행, 비상시 대처
이용자 만족도		이용자 만족도, 이용 의향, 추천 의향
기타		자가용 보유 여부, 운전면허 보유 여부, 개인교통수단 보유 여부, 월평균 소득, 직업

2. 연구 방법

1)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만족도 변수를 구축하고자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측정 변수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해 이들 간의 공통요인을 추출하여, 전체 측정변수를 대변할 수 있는 변수의 수를 축약하는 분석 기법이다(최창호·유연우 2017).

측정 변수 x_1, x_2, \dots, x_p 에 대하여 $m(\ll p)$ 개의 인자를 고려하는 요인 분석 모형은 식(1)과 같이 쓸 수 있다. 여기에서 확률변수 f_1, f_2, \dots, f_m

은 모든 변수들의 분산에 영향을 주는 공통인자(common factor)인 반면, ϵ_i 는 단 하나의 변수 x_i 의 변이에만 영향을 주는 확률변수인 유일성 변수(uniqueness variate)이다. 인자적재(factor loading)라고 부르는 λ_{ij} 는 인자모형에서 고려된 i 번째 변수 x_i 에 관한 j 번째 인자 f_j 의 중요성을 나타낸다(강현철 외 2005).

$$\begin{cases} x_1 - \mu_1 = \lambda_{11}f_1 + \lambda_{12}f_2 + \dots + \lambda_{1m}f_m + \epsilon_1 \\ x_2 - \mu_2 = \lambda_{21}f_1 + \lambda_{22}f_2 + \dots + \lambda_{2m}f_m + \epsilon_2 \\ \dots \\ x_p - \mu_p = \lambda_{p1}f_1 + \lambda_{p2}f_2 + \dots + \lambda_{pm}f_m + \epsilon_p \end{cases} \quad (1)$$

몇 가지 기본적인 가정 하에 측정변수 x_i 의 분산을 식(2)로 표현할 수 있다.

$$\text{Var}(x_i) = c_i + \psi_i = \{\lambda_{i1}^2 + \lambda_{i2}^2 + \dots + \lambda_{im}^2\} + \psi_i \quad (2)$$

위 식에서 c_i 는 측정변수 x_i 의 공통성(communality)으로, x_i 의 분산 중 m 개의 요인들로 설명되는 부분으로 해석된다(강현철 2013).

2) 순서형 로짓 모형

본 연구는 운행 초기인 DRT의 이용객 특성 및 현행 서비스에 대한 이용객의 만족도 분석을 위해 진행되었다. 따라서 회귀 분석을 통해 DRT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종속변수로 채택한 DRT 이용자 만족도 문항은 응답 형태가 리커트 7점 척도이다. 리커트 척도의 경우 비율 척도나 등간 척도가 아닌 순서형 척도인데, 응답 결과는 1-7의 이산적 값으로 나타난다. 이는 실제 이용자들의 선택행태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한국교통안전공단 2022) 순서화되고 위계가 없는 범주형 종속변수의 값을 확률적으로 처리하는 순서형 프로빗 모

형 또는 순서형 로짓 모형이 분석에 적합하다. 두 모형의 차이는 오차항의 분포인데, 순서형 프로빗 모형의 경우 오차항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는 반면 순서형 로짓 모형은 오차항이 와이블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순서형 로짓 모형이 극단적인 값에 덜 민감하므로 (Mauchant et al. 2011),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된 이용자 만족도의 분포가 6점 및 7점에 집중된 특성을 고려하여 순서형 로짓 모형을 분석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순서형 로짓 모형은 순서화된 변수의 각 응답들의 잠재적 선택 기준을 제공하는 모형으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관계는 식(3)과 같다.

$$y^* = \sum_{k=1}^K \beta_k x_k + \epsilon \quad (3)$$

y^* 는 관찰 불가능한 응답 변수이고 x 는 독립변수에 해당한다. 식(3)을 통해 회귀 분석에 부적합한 기존 종속변수의 형태를 변환한다. 식(4)는 실제 응답(y)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범주화된 기준(y^*)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μ 는 경계값을 의미하는데, μ_{k-1} 와 μ_k 사이의 y^* 값을 가지는 경우 k 번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한다. y 가 특정값 j 로 선택될 확률은 식(5)와 같다(이성우 외 2005).

$$\begin{aligned} y &= 1 \text{ if } y^* \leq \mu_1 (= 0) \\ y &= 2 \text{ if } \mu_1 < y^* \leq \mu_2 \\ y &= 3 \text{ if } \mu_2 < y^* \leq \mu_3 \end{aligned} \quad (4)$$

⋮

$$y = 7 \text{ if } \mu_7 < 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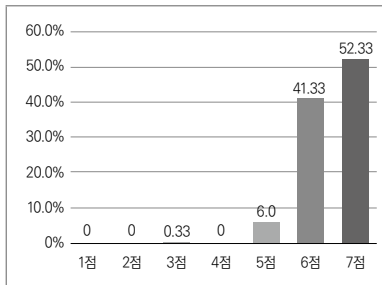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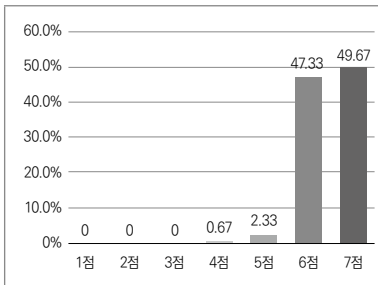
$$\text{Prob}(y = j) = F(\mu_j - \sum_{k=1}^K \beta_k x_k) - F(\mu_{j-1} - \sum_{k=1}^K \beta_k x_k) \quad (5)$$

IV. 연구 결과

1. 기초통계분석

1) DRT 이용자 만족도

종속변수인 이용자 만족도 항목의 DRT 유형별 응답 분포는 [그림 1], [그림 2]와 같다. 두 유형 모두 6, 7점 응답 비율이 전체 표본의 90% 이상을 차지하여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버스형 DRT의 이용자 만족도 평균은 6.46점, 택시형 DRT의 이용자 만족도 평균은 6.45점으로 거의 유사하다.



[그림 1] 버스형 DRT 이용자 만족도 응답 분포 [그림 2] 택시형 DRT 이용자 만족도 응답 분포

2) 개인 속성

분석에 활용한 표본 수는 총 600건으로, 버스형 DRT 이용객 응답 300건, 택시형 DRT 이용객 응답 300건을 수집하였다. DRT 유형별 표본의 개인 속성 분포는 [표 2]와 같다. 성별의 경우 버스형 DRT는 남성과 여성이 유사한 반면 택시형 DRT는 여성 이용객의 수가 남성의 2배 이상 차지하였다. 연령대의 경우 두 유형 모두 60~79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버스형 DRT의 경우 30대 이하 연령층도 분포하고 있는 반면, 택시형 DRT는 60대 이상 이용객이 약 97%를 차지해 평균 이

용 연령대가 버스형 DRT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용, 개인교통수단 보유 여부는 모두 미보유가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직업의 경우 두 유형 모두 농림·어업 종사자(63.7%, 69.0%)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2] 개인 속성에 따른 표본 분포

구분		응답 비율			
		버스형		택시형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성별	남성	127	42.3	81	27.0
	여성	173	57.7	219	73.0
연령대	15~19세	10	3.3	0	0
	20~39세	18	6.0	0	0
	40~59세	56	18.7	7	2.3
	60~79세	171	57.0	195	65.0
	80세 이상	45	15.0	98	32.7
자가용	보유	38	12.7	47	15.7
	미보유	262	87.3	253	84.3
개인 교통수단	보유	45	15.0	40	13.3
	미보유	255	85.0	260	86.7
직업	일반 사무직 종사자	10	3.3	0	0
	서비스·판매 종사자	22	7.3	0	0
	농림·어업 종사자	191	63.7	207	69.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2	0.7	0	0
	단순 노무 종사자	15	5.0	9	3.0
	학생	14	4.7	0	0
	기타	46	15.3	84	28.0

3) DRT 이용 실태

본 설문조사에서 조사한 이용 실태 항목에는 이용 목적, DRT 운영 전 이용 수단, DRT 외 주 이용 수단이 있다. 또한 DRT 지정 탑승 장소까지

의 이동 시간 및 그 만족도, 탑승 장소에서 차량을 대기하는 시간 및 그 만족도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이용 목적, DRT 운영 전 이용 수단, DRT 외 주 이용 수단의 경우 복수 응답을 허용하였으며, 해당 항목의 응답 비율의 경우 유형별 표본 300명에 대한 비율을 명시하였다. 그 결과 먼저 이용 목적의 경우 두 유형 모두에서 병원진료와 시장보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병원진료의 경우 택시형 DRT 이용객의 90% 이상이 선택해 DRT가 의료 시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DRT 이용객들은 DRT가 서비스되기 이전에 노선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버스형 DRT 이용객의 80% 이상이 DRT 이용 이전에 노선버스를 주 이동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DRT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또한 버스형 DRT의 경우 노선버스, 택시형 DRT의 경우 택시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3] 이용 실태 문항 응답 결과

구분		응답 비율			
		버스형		택시형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이용 목적 (복수응답)	출퇴근	4	1.3	0	0
	등하교	14	4.7	1	0.3
	업무	89	29.7	36	12.0
	쇼핑	26	8.7	12	4.0
	여가	17	5.7	33	11.0
	학원	2	0.7	0	0.0
	병원진료	190	63.3	273	91.0
	시장보기	196	65.3	185	61.7
	관공서 방문	33	11.0	0	0
이용 목적 (복수응답)	친인척 방문	2	0.7	8	2.7
	종교활동	2	0.7	1	0.3
	기타	10	3.3	4	1.3
		은행, 이발소		목욕	

구분		응답 비율			
		버스형		택시형	
		응답 수	비율(%)	응답 수	비율(%)
DRT 운영 전 이용 수단 (복수응답)	개인 차량	24	8.0	21	7.0
	가족 차량	30	10.0	63	21.0
	지인 차량	10	3.3	55	18.3
	택시	13	4.3	48	16.0
	노선버스	247	82.3	157	52.3
	자전거	6	2.0	1	0.3
	오토바이	3	1.0	7	2.3
	농기계	0	0	10	3.3
	도보	0	0	17	5.7
DRT 외 주 이용 수단 (복수응답)	개인 차량	21	7.0	12	4.0
	가족 차량	39	13.0	74	24.7
	지인 차량	9	3.0	62	20.7
	택시	15	5.0	102	34.0
	노선버스	247	82.3	87	29.0
	자전거	4	1.3	0	0
	오토바이	4	1.3	3	1.0
	농기계	0	0	1	0.3
	도보	1	0.3	0	0
	이동하지 않음	0	0	6	2.0

탑승 장소까지 이동시간, 차량 대기시간 및 그 만족도 응답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탑승 장소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버스형 DRT가 더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정 정류장에서 탑승하는 형태인 버스형 DRT 운영 특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유사하게 탑승 장소에서 대기시간 또한 버스형 DRT가 택시형 DRT에 비해 평균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또한, 이동·대기시간에 대한 만족도 분석 결과, 버스형 DRT는 이동거리 및 소요시간 만족도와 대기시간 만족도 모두 평균 점수가 6점에 미치지 못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탑승장소까지 이동·대기시간 응답결과(버스형)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탑승 장소까지 이동시간(분)	4.26	3.75	1	50
탑승 장소에서 대기시간(분)	5.67	3.35	1	30
이동거리 및 소요시간 만족도	5.72	0.64	2	7
차량 대기시간 만족도	5.64	0.74	2	7

[표 5] 탑승장소까지 이동·대기시간 응답결과(택시형)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탑승 장소까지 이동시간(분)	1.75	0.94	1	5
탑승 장소에서 대기시간(분)	3.90	1.60	1	10
이동거리 및 소요시간 만족도	6.25	0.62	4	7
차량 대기시간 만족도	6.10	0.65	4	7

4) 서비스 만족도

본 설문조사에서는 서비스 분야를 총 4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서비스 항목은 크게 운영 서비스, 예약 서비스, 이용환경 서비스, 안전환경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 만족도와 개선 사항에 대해 조사하였다. 운영 서비스, 이용환경 서비스, 안전환경 서비스 만족도 설문 의 경우 DRT 유형을 지정해 응답을 받은 운영 서비스의 문항 4가지를 제외한 전 문항에서 표본 600명이 모두 응답하였으나, 예약 서비스 만족도 문항의 경우 예약 과정을 거친 이용자 320명만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기초통계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먼저 운영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택시형 DRT(6.45)가 버스형 DRT(6.30)에 비해 높았고 버스형 DRT는 5번 '이용요금이 합리적이다' 문항이, 택시형 DRT는 8번 '운영 시간대가 적절하다' 문항이 가장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버스형 DRT 이용객이 5번 문항에 대해 낮은 평균 만족도를 보여주었는데, 버스형 DRT와 택시형 DRT의 이용 요금이 유사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두 유형의 DRT 서비스에 대해 이용객들이 기대하는 요

금이 달라 나타나는 결과로 보인다. 이용환경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택시형 DRT(6.32)가 버스형 DRT(6.2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3번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문항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안전환경 서비스의 경우 두 유형에서 유사하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표 6] 서비스 유형별 DRT 만족도 문항 응답 결과(버스형)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운영 서비스	1	목적지까지 빠른 경로로 이동 ¹⁾	-	-	-	-
	2	목적지까지의 노선 제공	6.46	0.79	1	7
	3	노선의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가 적절	6.25	0.82	2	7
	4	탑승 장소에 차량이 제시간에 도착	6.33	0.82	3	7
	5	이용 요금이 합리적	5.85	1.14	1	7
	6	요금 지불방식이 적절	6.50	0.66	4	7
	7	지정된 승하차 장소의 위치가 적절	6.31	0.81	2	7
	8	운영 시간대가 적절	6.33	0.79	2	7
	9	운영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	6.30	0.69	3	7
이용 환경 서비스	1	차량 실내가 청결하게 관리	6.69	0.50	4	7
	2	차량의 규모가 적절	6.17	0.82	3	7
	3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구비	4.84	2.28	1	7
	4	DRT 차량임을 쉽게 인지 가능	6.11	0.97	1	7
	5	운전기사가 친절하고 요구에 만족스럽게 응대	6.39	0.73	2	7
	6	이용환경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	6.23	0.64	4	7
안전 환경 서비스	1	차량 내부에 안전을 위한 시설 구비	6.62	0.58	4	7
	2	운전기사가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	6.26	0.73	4	7
	3	운전기사가 승객이 착석한 것을 확인 후 출발	6.25	0.78	4	7
	4	안전환경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	6.26	0.65	4	7

자료(설명): 1) 택시형 DRT와 관련된 항목임.

[표 7] 서비스 유형별 DRT 만족도 문항 응답 결과(택시형)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운영 서비스	1	목적지까지 빠른 경로로 이동	6.59	0.56	5	7
	2	목적지까지의 노선 제공 ¹⁾	-	-	-	-
	3	노선의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가 적절 ¹⁾	-	-	-	-
	4	탑승 장소에 차량이 제시간에 도착	6.45	0.56	5	7
	5	이용 요금이 합리적	6.37	0.57	4	7
	6	요금 지불방식이 적절	6.37	0.67	4	7
	7	지정된 승하차 장소의 위치가 적절 ¹⁾	-	-	-	-
	8	운영 시간대가 적절	6.28	0.79	3	7
	9	운영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	6.45	0.60	5	7
이용 환경 서비스	1	차량 실내가 청결하게 관리	6.57	0.57	5	7
	2	차량의 규모가 적절	6.22	0.74	4	7
	3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구비	6.00	0.90	1	7
	4	DRT 차량임을 쉽게 인지 가능	6.14	0.79	4	7
	5	운전기사가 친절하고 요구에 만족스럽게 응대	6.36	0.65	4	7
	6	이용환경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	6.32	0.63	4	7
안전 환경 서비스	1	차량 내부에 안전을 위한 시설 구비	6.45	0.62	4	7
	2	운전기사가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	6.24	0.70	4	7
	3	운전기사가 승객이 착석한 것을 확인 후 출발	6.31	0.64	4	7
	4	안전환경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	6.33	0.66	4	7

자료(설명): 1) 버스형 DRT와 관련된 항목임.

2. 요인분석 결과

서비스 항목에 대한 변수를 도출하고자 서비스 만족도에 해당하는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운영 서비스 만족도 설문 항목에서 두 DRT 유형의 문항이 상이하여 공통되는 문항만 포함하였다. 또한 서비스별 마지막 문항인 서비스 전반적 만족도 문항은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요인분석에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으며, 예약 서비스의 경우 직접 예약 서비스를 이용한 응답자에 한하여 답변을 받아 표본 수가 다르기 때문에 요인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4가지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 간 공통되는 성질을 반영하여 ‘이용 편의성’, ‘서비스 균등성’, ‘차내 환경 쾌적성’, ‘운영 시스템 적절성’으로 정의하였다.

‘이용 편의성’ 요인은 이용환경 서비스와 안전환경 서비스에 해당하는 문항 4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DRT를 이용하는 동안 제공받는 시설 및 서비스 현황에 대해 만족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서비스 균등성’ 요인은 이용환경 서비스와 안전환경 서비스에 해당하는 문항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자 등의 교통약자가 균등한 DRT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다고 판단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차내 환경 쾌적성’ 요인은 이용환경 서비스와 안전환경 서비스에 해당하는 문항 2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차내 청결도, 안전시설 유무 등 가장 근본적인 차내 서비스의 제공 현황에 대해 만족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운영 시스템 적절성’은 운영 서비스에 해당하는 문항 3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DRT 서비스를 운영하는 현행 DRT 운영 시스템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축되어 이에 만족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표 8] 요인분석 시 활용한 문항

구분		
운영 서비스	4	탑승 장소에 예약한 차량이 제시간(늦거나 빠르지 않게)에 도착한다.
	5	DRT의 이용 요금은 합리적이다.
	6	요금 지불방식은 적절하다.
	8	DRT가 운영되는 시간대는 적절하다.
이용환경 서비스	1	차량 실내의 좌석/손잡이/바닥 등이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다.
	2	승객 수와 짐의 양을 고려했을 때, 차량의 규모가 적절하다.
	3	휠체어 리프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4	차량이 DRT 차량임을 쉽게 알 수 있다.
	5	운전기사가 친절하고 요구에 만족스럽게 응대한다.
안전환경 서비스	1	차량 내부에 안전을 위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2	운전기사가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한다.
	3	운전기사가 승객이 착석한 것을 확인하고 출발한다.

[표 9] 서비스 만족도 문항 요인분석 결과

구분	문항 내용	성분				요인 설정
		1	2	3	4	
이용-2	차량의 규모는 적절하다.	0.749				이용 편의성
안전-2	운전기사가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한다.	0.684				
이용-5	운전기사는 친절하고 요구를 만족스럽게 응대한다.	0.664				
안전-3	운전기사는 승객이 착석한 것을 확인하고 출발한다.	0.478				
이용-3	차량 내부에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0.864			서비스 균등성
운영-5	이용 요금이 합리적이다.		0.716			
이용-4	차량이 DRT 차량임을 쉽게 알 수 있다.		0.571			
이용-1	차량 실내가 청결하다.			0.836		차내 환경 쾌적성
안전-1	차량 내부에 안전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0.803		
운영-8	운영 시간대가 적절하다.				0.711	운영 시스템 적절성
운영-4	탑승 장소에 차량이 제시간에 도착한다.				0.613	
운영-6	요금 지불 방식이 적절하다.				0.608	
아이겐 값		2.035	1.818	1.814	1.726	
공통변량(%)		16.961	15.150	15.119	14.383	
누적변량(%)		16.961	32.111	47.230	61.612	
KMO 측도		0.812				
Bartlett 구형성 검정		근사 χ^2 : 1651.220, 자유도: 66, p: 0.000				
표본 수		600				

3. 모형 설정

본 모형에서 사용한 독립변수로는 조사지역, 개인 속성 중 자가용 보유 여부, 개인교통수단 보유 여부와 이용 실태 중 병원진료 목적 이용, 시장보기 목적 이용, 탑승지까지 이동시간, 차량 대기시간 만족도 그리고 요인분석으로 도출한 서비스 만족도 요인 4가지를 선택하였다.

이때 조사지역, 자가용 보유 여부, 개인교통수단 보유 여부, 이용 목적은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이용 목적의 경우 병원진료와 시장보기를 선

택하여 각각 변수를 구축하였다.

변수로 모형을 구축하기에 앞서 변수들의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확인하였는데, 전체 변수 중 조사지역 변수는 그 값이 버스형 7.821, 택시형 8.412로 나타나 모형에서 제외하였다. 그 밖의 변수는 모두 2 미만으로 도출되어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표 10] 순서형 로짓 모형에 활용한 변수

구분		문항 내용		VIF ¹⁾	
				버스형	택시형
종속 변수	이용자 만족도	1 =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 보통이다, 3 = 그런 편이다, 4 = 그렇다, 5 = 매우 그렇다		-	-
		조사지역	버스형	1 = 미보유, 0 = 보유	7.821
	택시형		1 = 미보유, 0 = 보유	-	8.412
독립 변수	개인 속성	자가용 보유 여부	1 = 미보유, 0 = 보유	1.161	1.253
		개인교통수단 보유 여부	1 = 미보유, 0 = 보유	1.088	1.071
	이용 실태	이용 목적	1 = 병원진료, 0 = 그 외	1.473	1.281
		이용 목적	1 = 시장보기, 0 = 그 외	1.148	1.116
		이동거리 및 소요시간 만족도	리커트 7점 척도(1,7)	1.981	1.631
		대기시간 만족도	리커트 7점 척도(1,7)	2.235	1.451
	독립 변수	서비스 항목별 만족도	이용 편의성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한 잠재변수(연속변수)	1.036
서비스 균등성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한 잠재변수(연속변수)	1.114	1.064
차내 환경 쾌적성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한 잠재변수(연속변수)	1.130	1.485
운영 시스템 적절성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한 잠재변수(연속변수)	2.255	1.054

자료(설명): 1) VIF 값이 낮게 처리된 변수는 모형에 사용되었음을 의미함.

4. 순서형 로짓 모형 분석 결과

본 연구는 개인 속성, 이용 실태 등의 요인이 DRT의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각 영향요인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려한 전체 변수를 모형의 독립변수로 구성하였다. 이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수일지라도 DRT 만족도를 설명하는 모형의 통제 변인으로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모형에서 제외하지 않았으며, 승산비를 중심으로 모형 분석 결과를 해석하였다.

1) 버스형 DRT 이용자 만족도 모형

버스형 DRT의 이용자 만족도 모형 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모형 추정 결과, McFadden's pseudo R^2 이 0.634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해당 값이 0.2~0.4 이상일 경우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므로(김기영·정현영 2018) 모형의 설명력이 적절한 것을 알 수 있다. 종속변수의 수준별 경계값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버스형 DRT의 이용자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먼저 이용 목적이 병원진료인 경우는 그 외 목적에 비해 이용자 만족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진료를 목적으로 통행하는 이용객들이 DRT 서비스에 상대적으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몸이 불편한 이용객 특성상 대기 및 승하차 과정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차량 대기시간 만족도의 경우 이용자 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차량 대기시간이 만족스러운 경우 DRT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진행한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한 네 가지 요인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용자 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차내 환경 쾌적성’ 요인의 승산비가 4.238배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차내 환경 쾌적성 요인은 차내 청결도와 차내 안전시설 구비 여부에 대한 만족도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버스형 DRT의 이용자 만족도에는 실제 이용 중 차내 환경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표 11] 순서형 로짓 모형 분석 결과(버스형)

변수		B ¹⁾	S.E.	P-value	Odds Ratio
개인 속성	자가용 보유여부 (1=미보유, 0=보유)	-0.468	0.452	0.301	0.626
	개인교통수단 보유여부 (1=미보유, 0=보유)	-0.324	0.430	0.450	1.383
이용 실태	이용 목적(1=병원진료, 0=그 외)	-0.645*	0.373	0.083	0.525
	이용 목적(1=시장보기, 0=그 외)	-0.092	0.324	0.776	0.912
	이동거리 및 소요시간 만족도	0.063	0.354	0.860	1.065
	차량 대기시간 만족도	0.541*	0.309	0.080	1.718
요인	이용 편의성	1.232***	0.181	0.000	3.428
	서비스 균등성	0.902***	0.173	0.000	2.465
	차내 환경 쾌적성	1.444***	0.183	0.000	4.238
	운영 시스템 적절성	0.921***	0.199	0.000	2.512
임계값	이용자 만족도=4점	-7.972***	2.095	0.000	
	이용자 만족도=5점	-3.297**	1.748	0.057	
	이용자 만족도=6점	3.168**	1.701	0.061	
모형 적합도	-2LL(0)	831.777			
	-2LL(β)	304.683			
	McFadden's pseudo R^2	0.634			

자료(설명): 1) * p<0.1, ** p<0.05, *** p<0.01

2) 택시형 DRT 이용자 만족도 모형

택시형 DRT의 이용자 만족도 모형 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다. 모형 추정 결과, McFadden's pseudo R^2 이 0.631로 나타나 모형의 설명력이

적절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종속변수의 수준별 경계값도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택시형 DRT의 이용자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먼저 개인 속성의 경우 자가용 미보유 이용객들의 택시형 DRT 이용자 만족도가 자가용 보유자들의 이용자 만족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택시형 DRT의 경우 원하는 구역에서 탑승이 가능한 점, 동승객 수가 적은 점 등 버스형 DRT에 비해 운행 체계가 자가용에 가깝다. 따라서 자가용 미보유 승객들에게 자가용을 대신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용 실태의 경우 이용 목적이 '시장보기'인 경우와 차량 대기시간 만족도가 이용자 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기초통계분석에서 택시형 DRT 이용객의 60% 이상이 '시장보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버스형 DRT에 비해 편리성, 신속성 등의 측면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이용자 만족도에도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버스형 DRT와 유사하게 차량 대기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용자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한 네 가지 요인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용자 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서비스 균등성' 요인의 승산비가 5.296배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비스 균등성 요인은 교통약자시설의 구비, 적절한 이용 요금, DRT 차량 식별 용이성에 대한 만족도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버스형 DRT에 비해 적은 승객과 차량 형태에 따른 비교적 용이한 탑승 과정, 기존의 택시와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이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등의 이유로 이용자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 순서형 로짓 모형 분석 결과(택시형)

변수		B ¹⁾	S.E.	P-value	Odds Ratio
개인 속성	자가용 보유여부 (1=미보유, 0=보유)	1.229***	0.445	0.006	3.418
	개인교통수단 보유여부 (1=미보유, 0=보유)	0.448	0.497	0.368	1.565
이용 실태	이용 목적(1=병원진료, 0=그 외)	-0.622	0.567	0.272	0.537
	이용 목적(1=시장보기, 0=그 외)	0.543*	0.313	0.083	1.721
	이동거리 및 소요시간 만족도	-0.081	0.305	0.792	0.922
	차량 대기시간 만족도	0.489*	0.290	0.092	1.631
요인	이용 편의성	1.178***	0.188	0.000	3.248
	서비스 균등성	1.667***	0.184	0.000	5.296
	차내 환경 쾌적성	1.118***	0.181	0.000	3.059
	운영 시스템 적절성	0.853***	0.166	0.000	2.347
임계값	이용자 만족도=4점	-7.358***	2.652	0.005	
	이용자 만족도=5점	-1.739	2.102	0.394	
	이용자 만족도=6점	3.384*	2.108	0.097	
모형 적합도	-2LL(0)	831.777			
	-2LL(β)	306.745			
	McFadden's pseudo R^2	0.631			

자료(설명): 1) * p<0.1, ** p<0.05, *** p<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한 「2022년 대중교통 현황조사」 중 DRT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DRT의 유형에 따라 이용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속성 및 DRT 이용 실태, 서비스 만족도 변수들을 활용해 이용자 만족도를 설명하는 순서형 로짓 모형을 구축하였다.

모형 구축에 앞서, 서비스 만족도 항목의 경우 운영 서비스, 이용환경

서비스, 안전환경 서비스에 해당하는 12개의 항목들에 대해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4가지의 잠재 변수가 도출되었으며, 해당 잠재변수들을 ‘이용 편의성’, ‘서비스 균등성’, ‘차내 환경 쾌적성’, ‘운영 시스템 적절성’으로 정의하였다.

위 잠재변수들과 함께 개인 속성 및 이용 실태 변수를 활용하여 순서형 로짓 모형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버스형 DRT의 경우 차량 대기시간 만족도, ‘이용 편의성’, ‘서비스 균등성’, ‘차내 환경 쾌적성’, ‘운영 시스템 적절성’이 이용자 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병원 진료 목적 통행의 경우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형 DRT의 경우 자가용 보유 여부, 시장보기 목적 통행, 차량 대기시간 만족도와 ‘이용 편의성’, ‘서비스 균등성’, ‘차내 환경 쾌적성’, ‘운영 시스템 적절성’ 모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버스형 DRT 및 택시형 DRT 모두 서비스 만족도 요인변수들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반면, 요인변수들 간의 영향력은 서로 다른 것으로 분석되어 DRT 유형별 서비스의 중요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위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병원진료를 목적으로 버스형 DRT를 이용한 승객들의 이용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버스형 DRT는 승객이 지정된 승하차 장소까지 이동해야 하고, 차량 특성상 몸이 불편한 승객의 승하차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진료를 목적으로 탑승하는 승객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초통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60% 이상의 이용객이 병원진료를 목적으로 버스형 DRT를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버스형 DRT가 의료 목적 통행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버스형 DRT는 몸이 불편한 승객의 탑승이 용이하도록 교통약자 편의시설 제공 등의 개선이 촉구된다.

두 번째, 택시형 DRT의 경우 자가용을 보유하지 않은 이용객의 이용

자 만족도가 자가용을 보유한 이용자의 이용자 만족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택시형 DRT는 자가용에 비해 적은 비용과 대중교통에 비해 높은 접근성을 가진 교통수단으로서, 조사지역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자가용을 보유하지 않은 이용객에게 자가용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대중교통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택시형 DRT를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세 번째, 시장보기를 목적으로 택시형 DRT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이용자 만족도가 다른 목적으로 택시형 DRT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이용자 만족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보기의 경우 다른 통행과 비교해 귀가 시 짐이 늘어나는 특성이 있어, 접근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택시형 DRT에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대상 지역과 유사한 대중교통 소외지역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장과 주거지역 간의 거리가 멀어 교통수단의 이용이 필수적이므로, 택시형 DRT 뿐만 아니라 버스형 DRT 또한 시장 인근에 탑승장소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두 유형 모두 차량 대기시간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 기존의 교통수단과 비교하여 DRT가 가진 차별점은 원하는 시간에 가까운 장소에서 탑승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DRT의 대기시간이 길어질수록 기존의 열악한 교통환경의 개선에 어려움이 있어, DRT가 도입되는 지역에 적합한 배차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짧은 대기시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 DRT의 실제 이용자 만족도 영향 요인을 DRT의 유형별로 조사 및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다. 다만, 조사지역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것과 도입 초기이므로 비교군이 적어 정확한 만족도의 측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타 지역의 DRT 이용자에 대한 설문을 통해 지역별 만족도와 그 영향 요인을 비교하고, 차량 형태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서비스 유형으로 세분화된 DRT의 이용객 만족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강현철. 2013. 「구성타당도 평가에 있어서 요인분석의 활용」.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3(5): 587-594.
- 강현철·한상태·김기영·전명식. 2005. 『다변량 자료분석 입문』. 파주: 자유아카데미.
- 김기영·정현영. 2018. 「순서형 로짓 모형을 활용한 택시환승할인수요에 관한 고찰」. *대한토목학회논문집* 38(5): 685-692.
- 김민석·박선영·김정미·김진희·정진혁. 2014. 「대중교통 이용자 만족도와 정량적 지표 분석을 통한 서비스 수준 분석」. *국토연구* 83: 3-15.
- 박기준·정현영. 2019. 「노선버스 대체형 DRT 운행방안에 관한 고찰」. *대한교통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 송기욱·박기준. 2022. 「경남형 DRT 브라보택시 도입 이후 이용자 의식변화 기초연구」. *대한토목학회논문집* 42(1): 57-65.
- 이성우·민성희·박지영·윤성도. 2005. 『로짓·프라빗모형 응용』. 서울: 박영사.
- 이충기·박상수. 2014. 「인구고령화와 주택연금 수요 분석: 일반화된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적용하여」. *경제학연구* 62(2): 27-58.
- 장태연·김준성. 2018. 「수요응답형교통 (DRT)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도-실행도 분석」. *한국 ITS 학회 논문지* 17(3): 46-58.
- 장태연·한우진·김정호. 2016. 「분위회귀분석에 의한 수요응답형교통 이용자 만족도 분석」. *한국 ITS 학회 논문지* 15(3): 118-128.
- 최창호·유연우. 2017. 「탐색적요인분석과 확인적요인분석의 비교에 관한 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0): 103-111.
- 추상호·이향숙·강동수. 2012. 「대중교통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분석」. *서울도시연구* 13(3): 65-78.
- 한국교통안전공단. 2022. 「2022년 대중교통 현황조사」. 한국교통안전공단.
- Abdullah, M., Ali, N., Shah, S. A. H., Javid, M. A., and Campisi, T. 2021. "Service quality assessment of app-based demand-responsive public transit services in Lahore Pakistan." *Applied Sciences* 11(4): 1911.
- Hill, R. C., Griffiths, W. E., and Lim, G. C. 2010. *Principle of Econometrics (Third Edition)*. Wiley(Hoboken, NJ, USA)John Wiley & Sons, Inc.

- Mauchant, D., Rice, K. D., Riley, M. A., Leber, D., Samarov, D., and Forster, A. L. 2011. *Analysis of three different regression models to estimate the ballistic performance of new and environmentally conditioned body armor*. US Department of Commerc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 Wong, R. C. P., Yang, L., and Szeto, W. Y. 2023. "Comparing passengers' satisfaction with fixed-route and demand-responsive transport services: Empirical evidence from public light bus services in Hong Kong." *Travel Behaviour and Society* 32(1): 100583.

국 문 초 록

순서형 로짓 모형을 이용한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DRT) 이용자 만족도 분석

박유진(홍익대학교 도시계획과 석사과정)

이경재(홍익대학교 도시계획과 박사과정)

추상호(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임준범(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정책연구처 책임연구원)

정준영(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정책연구처 선임연구원)

본 연구는 도입 초기인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DRT)의 상용화를 위해, 현재 DRT를 이용 중인 승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DRT의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분석 자료는 경상남도 사천시, 통영시, 고성군의 DRT 이용객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순서형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이용자 만족도 영향 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자가용 보유 여부, 이용 목적(병원진료, 시장보기), 차량 대기시간 만족도, 그리고 서비스 만족도가 DRT의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세부 서비스 항목별 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한 '이용 편의성', '서비스 균등성', '차내 환경 쾌적성', '운영 시스템 적절성'의 네 가지 요인들도 DRT의 이용자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상용화가 진행 중인 DRT의 실제 이용자 만족도 영향 요인을 DRT의 유형별로 조사 및 분석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만족도 조사지역과 DRT의 유형이 한정된 점, 비교군이 없어 만족도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추후 조사지역을 다양화하고 DRT 유형을 세분화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요인분석,
순서형 로짓 모형

Abstract

Analysis of User Satisfaction for Demand-Responsive Transit (DRT) using an Ordered Logit Model

Park, Yoojin(Master student,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Hongik University)

Lee, Gyeongjae(Ph.D. student,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Hongik University)

Choo, Sangho(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Design&Planning, Hongik University)

Lim, Junbeom(Lead Researcher of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Jeong, Junyoung(Senior Researcher of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key factors that influence satisfaction with Demand-Responsive Transit (DRT) in its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in Korea.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current DRT passengers in Gyeongsangnam-do, with the goal of facilitating the commercialization of DRT services. The analysis, based on data collected from 600 DRT users, employed ordered logit model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overall satisfaction.

The model results demonstrated that private vehicle ownership, trip purpose, satisfaction with vehicle waiting time, and satisfaction with in-vehicle services significantly affected the overall satisfaction with DRT services. Moreover, it was found that four factors extracted through factor analysis of satisfaction with specific service aspects - 'convenience of use,' 'service equity,' 'comfort within the vehicle environment,' and 'appropriateness of the operating system' - also significantly influence the overall satisfaction of DRT.

However, this study was limited by the scope of the surveyed areas and the types of DRT under consideration. Therefore, a larger sample size would be necessary to draw more reliable conclusions in the future.

Key words: Demand-Responsive Transit, User Satisfaction Survey, Factor Analysis, Ordered Logit Model

고령 디지털 약자의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연구: ‘대전광역시’와 ‘포즈난’을 중심으로*

전숙연**·정석***

전
숙
연
·
정
석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II. 고령 디지털 약자의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1. 주요 선행연구 고찰
2. 연구 차별성
3.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복지서비스의 중요성
4. 비교 대상 도시의 선정

III. 고령 디지털 약자의 디지털 접근성 개선 국내·외 사례분석

1. 대전광역시 사례
2. 폴란드 포즈난 사례
3.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비교 분석

IV.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1. 스마트 대중교통 서비스 사례
2. 고령 디지털 약자 교통 복지서비스
3. 대전광역시와 포즈난의 고령 디지털 약자의 교통수단 비교

V.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는 2023년 <제25회 도시연구세미나>에서 발표했으며,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생 대상 학술 & 자율·융합 연구과제 수행 중인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스마트복지사례 및 적용에 관한 연구: 대전광역시와 폴란드 포즈난의 스마트시티 복지사례 비교연구를 중심으로』의 중간 연구 결과에 기반하고 있음.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E-mail: bansile@naver.com)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교신저자(E-mail: jerome365@uos.ac.kr)

<http://doi.org/10.34165/urbanr.2023..24.43>

투고(접수)일 2023.11.1. 심사(수정)일 2023.11.15. 게재확정일 2023.12.14.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고령인구의 증가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고령자에게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현대 사회는 마치 한국어만 쓸 수 있는 사람이 해외 이민을 간 것처럼 굉장히 적응하기 어려운 사회이다(최문정 외 2022).”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시스템의 디지털화로 복지에 대한 사회서비스가 큰 전환시점을 맞고 있으며 일상생활의 편의성이 저해되는 문제는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고령 디지털 약자란 디지털 기술 접근과 활용 시 디지털 장벽에 직면한 고령인구로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없는 취약계층 고령자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서툰 고령자도 포함한다(RightBrain 2019/1/25). ‘2021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의하면 4대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고령층이 가장 취약하며 만 65세 이상 고령 디지털 약자 중 장애요인이 있는 49.4%는 고령 디지털 약자와 교통약자로 중복되기도 하고 탈북자나 외국인과 겹치기도 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22). 교통약자의 정의는 나라 및 연구자별로 다양하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면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통약자 중 디지털 활용에 취약하여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고령자를 ‘고령 디지털 약자’로 통합하고 그들이 경험하는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를 대전광역시와 폴란드 포즈난(Poznań) 사례로 분석하였다. 고령 디지털 약자는 택시 호출 등의 현재 기본적인 대중교통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됨은 물론 미래에는 아예 디지털 능력없이 대중교통 탑승조차 할 수 없고, 고령 디지털 약자의 대중교통 수요부족은 디지털 데이터 참여 부족으로 이어져 정책 반영 등에서도 소외될 수 있

다. 베이비붐 세대와 같은 고령 디지털 약자들의 경제적 활동 참가가 늘어나게 되면 운전의 어려움과 은퇴 후 경제력 저하 등의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증가한다. 디지털 국토의 ‘대중교통맵’이나 일반 시민이 같이 만들어 가는 디지털 국토의 ‘커뮤니티맵’과 같은 신개념에서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고령 디지털 약자를 고려하여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최근 ‘디지털 대중교통 정보 안내시스템 D-TIS’ 등으로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복지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사례와 선진 사례를 가지고 있는 폴란드 포즈난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및 대전광역시가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기술적 적용 및 기술적 적용 외, 정책적 지침’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여기서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는 복지로서의 교통정책을 말한다. 사전에 따르면 복지란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로, 사람과 재물의 장소적 이동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는 일련의 정부활동을 ‘교통 정책’이라고 정의하였으나 교통이 복지의 영역인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아직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용어는 아니다(뉴스포스트 2023/2/22). 본 연구의 목적은 급격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소외되고 있는 고령 디지털 약자들이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를 더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분석하여 가속화되는 디지털 장벽에서 낙심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더 나은 정책과 서비스 제공 방안을 대중교통 분야에서 도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디지털 장벽을 겪고 있는 고령 디지털 약자의 대중교통 복지서비스가 단순히 ‘기술적 적용’을 통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가?

둘째, 고령 디지털 약자를 포함한 모두를 위한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를 위해 ‘기술적 적용 외’로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셋째,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대전광역시의 대중교통 복지서비스와

고령 디지털 약자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선진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폴란드 ‘포즈난’을 비교하여 두 도시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며 대전광역시 및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은 어떤 것인가?

2. 연구 방법

공간적 배경은 대전광역시와 폴란드 포즈난으로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대전광역시와 폴란드를 방문하여 이해관계자 및 현지인 인터뷰와 관찰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 디지털 약자가 교통약자로서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를 더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문헌 고찰을 통해 ‘고령 디지털 약자의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국내 및 폴란드를 포함한 국외사례를 조사하였다.

둘째, 폴란드 방문 후 포즈난을 비교도시로 선정하였다. 선정 방법은 폴란드에서 디지털 약자를 위한 정책 모범도시를 관찰연구하고 VIVA Senior Program 및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이해관계자들과의 인터뷰 및 문헌연구를 통해 다양한 기술적 요인 기반 물리적 요인과 고령 디지털 약자에 대한 시민 인식 등의 기술 외적 요인 기반 정성적 요인을 고려해 포즈난을 비교 도시로 선정하였다.

셋째, 대전광역시의 고령 디지털 약자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를 조사하고 포즈난으로부터 적용 가능한 ‘기술적 및 기술 외적’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로 그들의 이동 편의와 대중교통 복지서비스가 실현되고 ‘모두를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포용과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부가적인 사항도 연구하고자 한다.

II. 고령 디지털 약자의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1. 주요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와 차별성이 있으나 유사성이 있는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60세 이상의 경기도 고령자를 대상으로 버스정보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과제로 시행된 빈미영 외(2023)의 “고령자의 대중교통 정보 이용 격차 해소방안 연구”이다. 빈미영 외(2023)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일반인의 수치 100%를 기준으로 고령 디지털 약자의 정보화 수준 접근지수는 83.7%, 역량은 47.6%, 활용은 52.8%이며 많은 나이와 낮은 학력, 낮은 소득수준일수록 수치도 낮아짐을 분석하였다. 또한 정부의 ‘디지털 배움터’ 사업의 낮은 이용률 개선과 이용자 교육 및 홍보 확대,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 3개의 목표 하에 9개 과제를 제안하였다.

둘째, 고령인구의 통행패턴 연구로 65세 이상 노인과 청년층의 이동 특성을 총 통행거리와 통행횟수 및 길이로 비교하여 65세 이상이 될수록 감소한다는 노시학·조창현(2008)의 연구다. 추상호 외(2013) 역시 65세 이상 고령자의 통행 발생 요인 규명을 위해 통행거리와 시간, 목적으로 통행패턴을 분석하여 고령자 통행이 과거보다 활발해지고 출근과 쇼핑, 여가 통행이 증가함을 연구하였다. 김원호 외(2008) 또한 교통약자의 유형별 이동행태 분석과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 정보 제공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김지혜·홍동식(2020)의 연구는 고령자를 위한 대중교통 정보 디자인 적합성 연구로 피어 쉐도잉(Peer Shadowing) 기법을 적용하여 60~70세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대상자 20명 중 1명만이 대중교통 앱을 혼자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현재 버스정보 제공은 고령자를 배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정희준(2022)은 고령

자가 포함된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해 가독성 있고 정보 제공이 쉬운 안내 표시장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고령자를 위한 시선 높이와 시야각 확보 등을 설명하였다.

넷째, 권선희(2022)는 고령층의 낮은 컴퓨터 보유율과 낮은 인터넷 이용률로 디지털 격차가 심해지는 것으로 보고 기기의 보급과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저소득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임정훈 외(2020) 역시 베이비붐 세대의 정보격차 영향 요인을 분석하며 격차 해소 방안으로 다른 고령자 세대와 달리 PC환경에 익숙한 베이비부머에게 온라인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형태의 물리적 스마트기기를 지원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김봉섭(2016) 또한 정보격차의 요인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교육과 유니버설디자인 설계 그리고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통신요금 인하와 기기 보급정책 수립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50대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 10인에게 코레일톡 예매과정을 관찰 인터뷰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책으로 프로토타입을 개발한 이해연·윤재영(2020)의 연구가 있으며, 유사연구로 김제희 외(2022)의 연구는 인천시 노인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와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64.1%가 대중교통을 온라인으로 예매한 경험이 없고 여성, 낮은 학력과 소득, 독거노인일수록 낮은 수치임을 밝혔다. 송민경(2012)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노인과 장애인의 이동장애를 완화하기 위해 모바일 기반 복지서비스 개념 도출과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기존 정보기술과 시스템 문제를 지적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 차별성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연구에서 고령 디지털 약자가 주요 연구 대상

인 자료는 부족했으며, 교통약자의 5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자(국토교통부 2022)에 대한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는 필요한 사항이지만 현재까지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동유럽 5개국의 복지 국가의 동질성과 다양성으로 특성연구를 한 신현중(2016)과 폴란드, 체코 그리고 헝가리를 중심으로 체제전환국의 복지 체제를 연구한 정홍모(2007) 외에는 우리나라와 폴란드를 비교한 연구는 전무하다. 또한 대중교통 복지서비스와 정책에서 고령 디지털 약자와의 만남 등으로 그들의 욕구와 의사를 반영하는 실질적인 활용방안 연구도 발견할 수 없었다. 고령 디지털 약자의 복지서비스에 관한 실질적인 국외 비교연구는 지상과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발현된 디지털 격차에 대해 취약계층 모두에게 보편적 복지를 선택한 미국과 경제적 취약계층에 제한된 선택적 복지를 선택한 한국 사례를 비교한 황용석·윤은상(2010)의 연구가 유일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차별성은 고령 디지털 약자의 대중교통 복지서비스에 대해 기술적 적용에 치중한 정책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연구가 매우 부족한 폴란드 포즈난과 대전광역시의 고령 디지털 약자들을 위한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대전광역시를 포함한 우리나라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 및 서비스 형태 등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령 디지털 약자들이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를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복지의 우선 방향과 ‘기술적 적용 및 기술적 적용 외’에 추가적인 사항 및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다.

3.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복지서비스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은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규모 인원을 수송하는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버스, 지하철, 전철, 트램, 택시 등을 말하나,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새로운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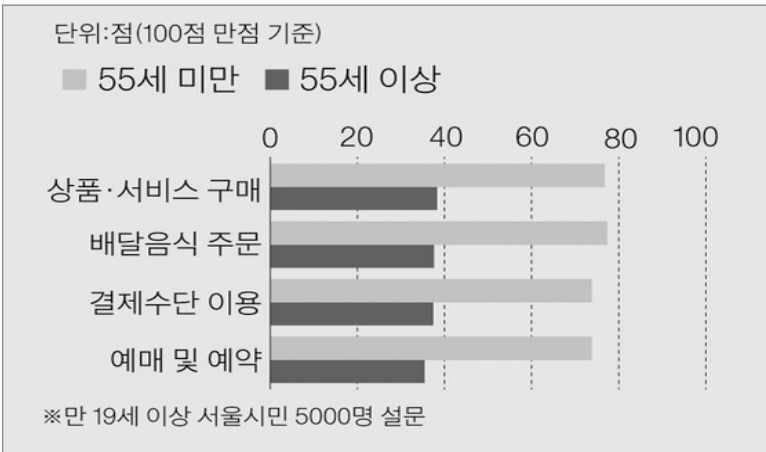
가 필요하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노인교통정책 2018-2022'에 의하면 고령자를 위한 교통정책에는 5가지를 더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고령자가 경험하는 교통시설 접근의 어려움이나 요금 지불의 어려움, 안전문제, 독립 이동에 대한 자신감 저하 등의 교통 불이익을 감소한다. 둘째, 모두를 위한 보편 설계를 한다. 셋째, 이동의 연속성으로 갈아타는 불편함 감소와 고령자의 주 이용장소인 병원과 쇼핑센터 등과 연계를 강화한다. 넷째, 정부 간 협력으로 책임과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한다. 다섯째, 혁신적인 해법 강구로 신기술과 보조도구 활용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 주문형 교통 서비스를 도입한다(서울연구원 2019/3/26).

또한 거동이 불편해지고 사회적인 활동이 적어지며 경제적 수익이 적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고령 디지털 약자에게 필요한 대중교통 복지 발전의 중요성을 4가지로 정의하였다. 첫째, 고령 디지털 약자의 대중교통 복지서비스가 발전하게 되면 운전이 어려워지는 그들의 대중교통 이용도가 높아지고 독립성과 자유성이 높아져 혼자 자유로운 이동이 용이하게 된다. 둘째, 대중교통 복지서비스가 발전하게 되면 친구, 가족, 커뮤니티 활동 등을 참여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수단이 되어 사회적 연결성이 강화된다. 셋째, 대중교통 복지서비스의 발전은 안전과 편의성이 높아져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이 된다. 넷째, 경제적 수입이 적어지는 고령자들에게는 자동차의 이용보다 대중교통이 경제적 이동수단이 되어 경제적 효율성이 높아진다(서울연구원 2019/3/26).



[그림 1] 연령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

자료(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22)



[그림 2] 디지털 서비스 이용 능력

자료(출처): 서울디지털재단(2022)

[그림 1]은 모바일 기반 유무선 융합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정보 격차의 수준 및 특성을 설문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자료이다. 연령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준고령자인 50대¹⁾부터 97.0%로 평균치인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에 근거하여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준고령자로 지칭하였다.

100%에 미치지 못하고 60대는 77.1%, 70대 이상은 46.6%로 20%씩 수준이 감소한다. 즉 고령으로 갈수록 유무선 기기의 보유 및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과 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이 취약하다. [그림 2]는 55세 이상 고령층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능력이 대중교통 예매를 비롯한 각종 예매 및 예약 등 모든 방면에서 55세 미만의 이용 능력보다 낮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고령자들의 디지털 활용 취약점이 모바일 서비스 접근성과 연결이 되고 대중교통 온라인 예매나 택시호출과 같은 기본적인 대중교통 복지서비스에서도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령 디지털 약자들의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는 현재 대중교통을 사용함에도 어려움을 주지만 이용량의 감소로 데이터 수집도 빈약하게 된다. 더욱이 공중까지 포함해 3차원의 입체공간으로 표현되는 신개념인 ‘디지털 국토’를 기반으로 ‘대중교통맵’이나 ‘커뮤니티 맵핑’의 효용성 수요조사 등에도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고령 디지털 약자의 경우 제공할 정보가 제한되어 향후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그들에게 적합한 대중교통 복지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급격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소외되고 있는 고령 디지털 약자들이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를 더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분석하여 가속화되는 디지털 장벽에서 낙심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더 나은 정책과 서비스 제공 방안을 대중교통 분야에서 도출하는 것이다.

4. 비교 대상 도시의 선정

대전광역시시는 ‘디지털 대중교통 정보안내시스템’의 도입과 노인 버스요금무료 등 대중교통 복지서비스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매일경제 2023/09/12). 또한 2032년까지 돌봄 서비스 개발 및 보편적 통합 돌봄을 제공한다는 계획으로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머니투데이 2023/1/16). 한편 폴란드 포즈난은 기존의 고령자 복지 프로그램인 VIVA Senior Program에 고령 디지털 약자의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모든 고령자에게 생활 편의적 복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도시의 정책지속도 및 적극도와 도시의 지리환경적 요인, 인구요인과 산업특성요인 등을 분석하여 선정하였다.

[표 1]은 대전광역시와 포즈난을 비교 도시로 선정한 이유이다. 먼저 물리적 유사점을 보면 두 도시 모두 각 나라의 중서부 내륙에 위치해 있고, 도시면적이 대전광역시 496㎢, 포즈난 440㎢이며, 모두 예전에 수도였던 지정학적 유사점이 있다. 인구 현황에서도 유사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대전광역시의 인구 147만 명과 광역인구를 포함한 포즈난의 인구수는 164만, 인구순위도 모두 5위이다. 도심인구밀도는 2,951.4명/㎢(대전광역시)과 2,035명/㎢(포즈난), 남녀 비율 각각 0.997:1(대전광역시)과 0.923:1(포즈난), 평균연령도 대전광역시 41세, 포즈난 43세로 두 도시가 유사하다. 주요산업도 제조업으로 각각 대전광역시 67%, 포즈난 65%이며 평균임금순위는 대전 전국 5위, 포즈난 전국 4위, 주요대중교통수단은 버스로 유사점이 많다. 다만 고령자 비율은 대전 13.5%, 포즈난이 17.3%로 포즈난의 고령자 비율이 좀 더 높은 편이나 포즈난의 정책관계자 인터뷰에 의하면 포즈난은 고령복지프로그램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어 타지역 이주고령자의 수가 많고 고령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본 연구가 고령 디지털 약자의 대중교통 복지서비스인 것을 상기해 보면 유사점이 많으면서 고령자의 비율이 다소 상이한 편이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의 기본 접근의 방향과 적용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대전광역시의 비교 도시로 포즈난을 선택하게 되었다. 실제로 포즈난의 경우 대전광역시와는 다르게 예전부터 잘 운영되고 있던 고령자 프로그램인 VIVA Senior Program을 고령 디지털 약

자의 대중교통 복지서비스와 직접 연계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고령자에게 통합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용자의 호응뿐 아니라 시민들의 지지로 탄탄한 자원봉사시스템이 지속될 수 있었다.

[표 1] 대전광역시와 포즈난의 비교

구분	대전광역시	포즈난
위치	중서부 내륙	중서부 내륙
국가 내 도시순위	대한민국 5대 도시	폴란드 5대 도시
도시면적	496km ²	도심면적: 261.8km ² 광역면적: 약 440km ² (도시외곽 5km 이내)
수도 역사	임시수도*	수도
인구	약 147만 명	도심인구: 약 54만 명 광역인구: 약 110만 명
인구순위	5위	5위
도심인구밀도	2,951.4명/km ²	2,035명/km ² **
남녀 비율	0.997:1	0.923:1
고령자 비율	13.5%	17.3%
평균연령	41세	43세
주요산업	제조업 67%	제조업 65%
평균임금순위	전국 5위, 광역시 3위	전국 4위
주요대중교통	버스/지하철	버스/트램/택시

자료(설명): *한국전쟁(6.25전쟁) 당시 1950년 6월 28일 대전이 임시수도로 공표됨.

** 13세기 폴란드 왕국의 수도임.

자료(출처): 대전TV- 대전광역시 공식 유튜브 채널(2021/6/21), 폴란드 통계청 홈페이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홈페이지, KOSIS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ZhujiWorld.com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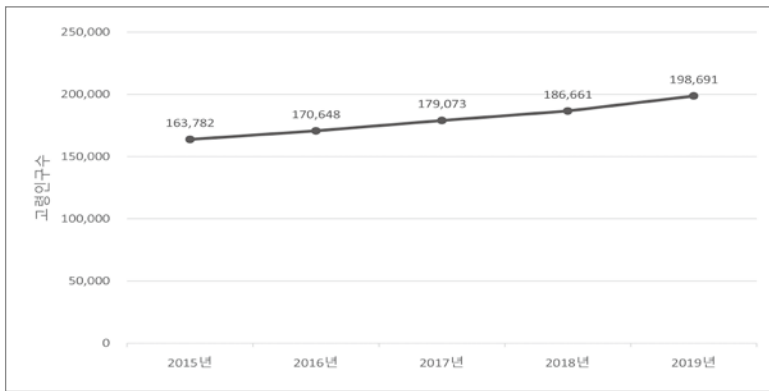
1) 비교 대상 도시의 고령자 인구 현황

2020년 2월 기준 대전광역시 인구 중 고령인구(만 65세 이상)는 총 198,691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3.5%를 차지하며 [그림 3]에 나타났듯이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 다룰 대중교통 이용에서도 스마트폰을 활용하지 못할 경

우 지역별 공용자전거 대여나 택시 호출, 버스시간표 확인 등의 기본적인 정보도 접근이 어려워지고 자전거를 탈 줄 아는 고령자가 어플을 이용해 자전거를 대여하지 못해 공용자전거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서울연구원 2018).

또한 디지털 기술이 발달한 우리나라 정부에서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고령층에 대한 교통 복지를 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로 강화하자는 주장(이데일리 2021/6/16)에 더 힘이 실리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 자치구별로 시행 사업을 선정하여 구축해 나갈 예정이나, 실제 고령 디지털 약자들의 대중교통 복지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림 3] 대전광역시 고령인구 추이

자료(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 비교 대상 도시의 고령 디지털 약자 교통 복지서비스 현황

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등을 분석해서 고령 디지털 약자의 현황과 교통 복지서비스 현황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고령 디지털 약자만의 통계상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 향후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Ⅲ. 고령 디지털 약자의 디지털 접근성 개선 국내·외 사례분석

1. 대전광역시 사례

1)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이동지원사업

대전광역시에서 최근 시행된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은 지원 대상에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되고 중위소득 80% 이하는 전액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5대 기본돌봄사업에서 이동지원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병원, 관공서 등 외출 시 동행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고령 디지털 약자의 대중교통 복지서비스이다(충청신문 2023/4/2).

2) 대전광역시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일반교통 현황

[표 2]는 대전광역시의 일반교통 현황이다. 대전광역시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24.6%로 전국이 43.5%인 것에 비해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시 다음으로 현저하게 낮다. 시내버스의 주요 노선 정체시간 조사에서도 대전시가 7.5분으로 서울시 7분, 대구시 5.3분, 광주시 4.6분에 비해 길며 평균 배차시간 역시 15분이 넘어 서울 10분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내버스 총대수 또한 6.8대로 서울 7.5대와 부산 7.2대에 비교해 적은 편이다. 대전광역시의 시내버스 총대수의 경우 타 광역시에 비해 큰 차이가 없으나 시내버스 정체시간이 교통정체가 심한 서울보다 긴 것이다. 대전광역시민이 가장 애용하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는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이용 환경임을 알 수 있다.

[표 2] 대전광역시의 일반교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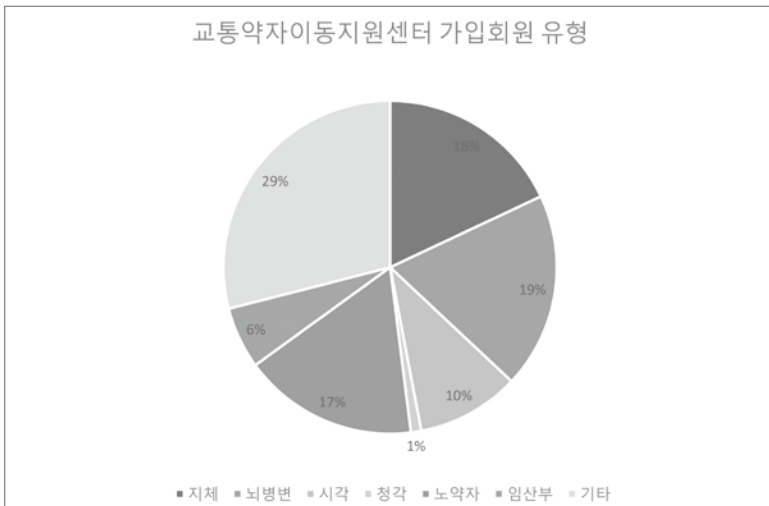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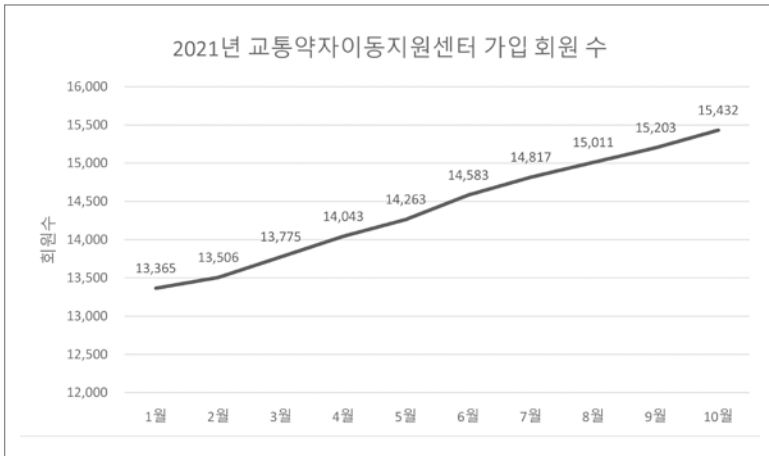
지명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 2019년)	시내버스 정체시간(분)	평균 배차시간(분)	시내버스 총대수 (인구 1만 명당 시내버스 대수 또는 총 차량수)
전국	43.5	-	-	-
대전시	24.6	7.5	15	6.8
울산시	15.8	-	10-100	736*
서울시	65.6	7.0	10	7.5
부산시	44.3	-	16.7	7.2
광주시	31.0	4.6	10-30	1,116*
대구시	30.0	5.3		6.1

자료(설명): * 울산시, 광주시의 경우 인구 1만 명당 시내버스 대수 대신 시내버스 총 차량수를 표시함.
 자료(출처): 더위키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홈페이지, 울산광역시 공식블로그(2023/8/7), 국토교통 통
 계누리 교통부문수송실적보고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대전광역시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사업과 개선방안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중 특별교통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한다. 제2조에 의하면 교통약자란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교통약자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라는 매우 주관적인 기준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약자 중 디지털 활용에 취약하여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9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에서는 총 인구 5,180명 중 1,521명(29.4%)이 교통약자로 집계되었다. 그 중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802명(52.7%)으로 절반이 넘으며 고령이면서 장애인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중복요인을 제외한 것(국토교통부 2020)을 감안하면 교통약자 중 고령자의 비율이 더 높을 수 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총인구 147만 명 중 41만 명(27.8%)이 교통약자로 분류되었고, 이들 중 약 20만 명(48.7%)이 고령자로 나타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대전광역시 역시 중복요인은 제외하였음(국토교통부 2020)을 고려하면

48.7%보다 높은 고령자 교통약자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고령화 대비 노인친화적 교통체계 수립’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49.4%는 장애가 있으며 27.4%는 교통을 포함한 돌봄지원이 필요하다(서울연구원 2019/3/26). 2005년에 시작된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일반택시보다 저렴하고



[그림 4]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가입 회원수(2021년)와 가입회원유형(2021년 10월)
 자료(출처): 충남일보(2021/12/15)

친절하게 24시간 365일 활동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운전원 344명과 차량 336대가 운행 중이며, 15,432명(2021년 10월 기준)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앞으로 더 확장될 예정이다. 사전예약제 운영방식에서 당일 이용 30분 전 신청이 가능한 '바로콜' 서비스로 변경되면서 2017년 1월부터 2018년 1월 기간을 비교했을 때 이용률이 42.8%에 달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또한 GPS기능으로 최단거리 배차 서비스가 가능한 콜센터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다.

[그림 4]를 보면 2021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가입 회원수는 이용 대상자 확대와 전용 앱 개발, 차량 증차 등으로 매일 100~300명 씩 꾸준히 늘고 있고, 그중 노약자 비율은 17%(2,552명)이다. 노약자 중 고령 인구비율만을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이동지원 서비스의 방문지가 귀가(31.3%, 15만 49명)에 이어 병원 방문(22.4%, 10만 7,598명)이 두 번째 방문목적인 점으로 보아 상당수의 고령인구가 포함되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경우 고령화와 디지털화라는 교통 환경 변화에 맞춘 배차간격이나 이동 소요 시간 등의 불편 가증에 대하여 이용자인 고령 디지털 약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포용법(2021년 발의)에 따른 대중교통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미리 관리하고 통제하는 시스템 고도화 작업과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나 결과 공표가 필요하다(빈미영 외 2023). 그러나 디지털 시스템이나 전용앱 접근이 어려운 고령 디지털 약자 경우 특별교통수단에서마저 배제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손쉽게 이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고 배차 현황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제 및 콜 접수 시스템을 동시에 고도화하고 확대하여야 한다.

또 다른 사업으로는 충청권 최초로 도입한 대전형 바우처택시가 있다. 평소 시민 대상으로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이용자의 호출에는 우선 서비스하는 것이다. 현재 바우처택시 60대와 비휠체어 교통약자 전용택시 90대가 병행 운영되어 이용자의 대기 시간

이 현저히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전형 바우처택시는 대전광역시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사업의 개선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대전형 바우처택시 역시 고령 디지털 약자에게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에 대하여 대상별 맞춤형 직무 교육을 실시하거나, 역량 강화 컨설팅을 통한 이용자 대면서비스를 강화하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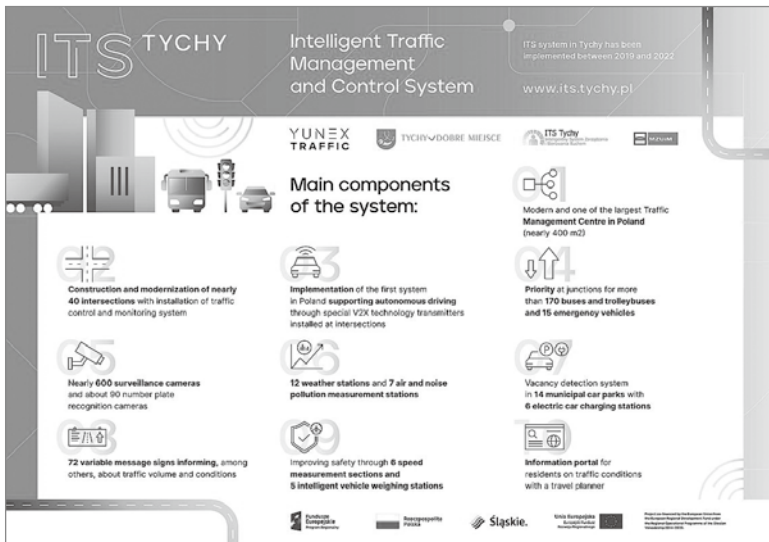
2. 폴란드 포즈난 사례

1) 폴란드 포즈난 고령 디지털 약자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Polska Cyfrowa 2020’을 통해 스마트시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 혼잡 해소와 지능형 교통 관리 등의 분야에서 ICT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폴란드에서는 기존 고령자 복지 프로그램인 VIVA Senior Program을 적극 활용하여, 초기부터 사용자인 고령 디지털 약자에게 급진적으로 디지털화되는 대중교통사용과 복지서비스에 대하여 직접 묻고 논의하며 속도를 조절하고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즈난의 정책관계자 및 시민과의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포즈난의 경우 교통체증완화를 위해 2016년부터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예매 및 키오스크판매가 확장되고 있는데, 디지털 활용의 어려움으로 표 구매를 하지 못하거나 현금 구입으로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고령 디지털 약자들을 위하여 콜센터 예약을 시행하거나 트램역 매표소 운영자를 예약도우미로 지정하고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포즈난에서는 이러한 물리적 대안과 함께 고령 디지털 약자에 대한 시민인식개선을 위해 기다려주기운동, 대신요금결제해주기, 시민자발적인 홍보 등도 지원하고 있다.

[그림 5]처럼 폴란드의 여러 도시에서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교통체증 완화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도시 내의 교통 신호등이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감지하고 분석하여 최적화된 신호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체증을 줄이고 자율 주행 자동차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교통체증 완화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 환경 보호, 안전 등 다양한 면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잘 발달된 고령자프로그램으로 이주 고령자로 인해 고령자 비율이 폴란드 내 다른 도시보다 월등하게 많은 포즈난에서는 소외되기 쉬운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복지서비스에 대하여 기존의 VIVA Senior Program을 활용하여 그들의 디지털 소외를 완화하고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를 잘 받기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음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림 5] 스마트 교통관리체계

자료(출처): YUNEX TRAFFIC(2022/7/4)

이 외에도 전기자동차와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여 교통 혼잡과 대기오염을 줄이는 ‘Smart Parking’ 시스템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시 대중교통 현황 및 정보를 위한 ‘E-podróżnik’ 시스템 구축 등 대중교통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교통의 디지털 혁신들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고 고령 디지털 약자의 이동 편의와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포즈난은 폴란드 내에서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 복지서비스”로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포즈난에서는 원하는 모든 고령자들에게 스마트폰과 노트북 무상대여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고령자들이 현대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건강 상태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연락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에서 소외되기 쉬운 고령자들이 디지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물리적 자원을 지원하고 디지털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시티 포즈난’이라는 어플을 통해 온라인 예약 및 결제, 실시간 주차공간 확인, 전자 지불시스템, 카메라 센서 활용 등 스마트 주차서비스를 적극 도입하고 있고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디지털 교육을 통해 대중교통에 필요한 티켓 구매 및 유·무상 택시 이용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포즈난은 다양한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시민뿐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소외되기 쉬운 디지털 약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 디지털 약자들을 위한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 있다.

2) 폴란드 포즈난 “VIVA Senior Program” 사례

포즈난은 다양한 고령자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시작된 VIVA Senior Program(World Health Organization 2019/12/31; VIVA seniorzy 홈페이지)은 특히 고령 디지털 약자에게 새로운 디지털

복지서비스로, 모든 고령자들에게 태블릿 PC, 스마트폰, 스마트TV 등을 제공하여 거주지에서 다양한 디지털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고령 디지털 약자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교통,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며, 스마트 TV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무료 Wi-Fi 액세스를 제공하며, 재능 기부자들이 고령 디지털 약자들에게 디지털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VIVA Senior Program은 디지털 활동을 통해 고령자들이 사회적 연결성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디지털 기술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VIVA Senior Program은 공공 서비스의 혁신적인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폴란드와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스마트 복지서비스를 활용한 VIVA Senior Program은 통합 교통 시스템, 헬스케어 시스템, 스마트 홈,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스마트 화재 발생 예방 시스템 등을 포함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10가지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고령 디지털 약자들이 스마트시티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9/12/31).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10가지 스마트 복지서비스 중 대중교통을 살펴보면 먼저 “Senior Taxi”가 있다.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자들을 위한 무료 택시 운송 서비스로 대상자는 원하는 모든 고령자이며 디지털에 약한 고령자를 위해 콜센터로 예약이 가능하고 전문앱 활용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둘째, “Handyman for the Senior”는 전문지식이나 허가가 필요 없는 간단한 집수리(전구 교체, 문 수리 등)를 무료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보행이나 대중교통 탑승이 어렵고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고령자들을 위해 콜센터 운영과 지속적인 A/S 및 피드백을 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함

으로써 디지털 소외를 완화하고 있다.

셋째, “Book for the Senior”는 원하는 모든 노인, 장애인, 부양가족에게 큰 글자 종이책, 오디오북 등을 무료 대여하거나 배달해 줌으로써 교통상황이 좋지 않아 고립되기 쉬운 고령 디지털 약자의 사회적 참여와 소통까지 세심하게 돌보고 있다.

넷째, “Rehabilitation Equipment Rental Service for the Senior” 역시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재활 및 정형외과 장비 무료 대여 서비스로 이동성이 부족한 고령자에게 택시바우처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고 더 복잡해지는 장비의 디지털 기능을 교육함으로써 고령 디지털 약자들도 새로운 재활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다섯째, “Pedicure Service for the Senior”는 위생과 미적인 부분에 소홀하기 쉬운 고령자들을 위한 손, 발톱 손질 및 무료 화장품 및 메이크업 서비스로 인근 자원봉사자와 고령자들을 디지털로 연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 고령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고령 디지털 약자 역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편을 제공하고 디지털 디바이스 사용과 전용앱 교육을 통해 디지털 자립을 강화하고 있다.

여섯째, “Poznan Senior Gold Card”는 개인정보 수록 후 특별 할인 무료 카드로 디지털 전산망을 통해 문화, 스포츠, 교육을 자동 제공한다. 특히 현금지불 비율이 높아 스마트폰 예매보다 더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 고령 디지털 약자에게 대중교통 할인 및 무료 이용 서비스를 지원하여 대중교통 복지서비스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일곱째, “Tombstones Cleaning at Cemeteries”는 가까운 인근 자원봉사자에게 디지털로 자동 연결하여 사망한 노인의 묘비 무료 청소서비스를 해준다.

여덟째, “Transportation in Municipal Cemeteries”는 이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공동묘지 내에서의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령 디지

털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중 특별교통서비스에 해당하며 시민 인터뷰를 통해 이용자인 고령 디지털 약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호응과 지원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폴란드는 전통적인 카톨릭국가이며 98%가 폴란드인으로 구성된 세계 제일의 단일민족으로 가족주의가 매우 강하나, 사회주의체제 전환국답게 복지만큼은 국가에서 모두에게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만 65세의 고령자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에 복지저항 대신 언젠가 나도 받게 될 혜택으로 인식하고 단단한 자원 봉사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고령부부나 1인 고령자를 위한 “Window Cleaning for the Senior”, 긴급 의료 지원과 스마트워치 및 이머전시 버튼 등을 잘 사용하기 위한 디지털 교육이 포함된 “Poznan Life Box for the Senior” 등이 있다. 이처럼 정책입안자들과 연구자들이 고령 디지털 약자를 포함한 시민들의 일상을 잘 관찰함으로써 일상에서 도움이 되는 세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고 이용자들의 높은 호응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였다.



[그림 6] Poznan Viva Senior Card

자료(출처): World Health Organization(2019/12/31)

[그림 6]은 VIVA Senior Program을 사용하기 위해 원하는 모든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포즈난 VIVA Senior 카드로 65세 이상의 모든 포즈난 고령자들이 공평한 복지기회를 가지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포즈난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사용 시 현장이나 현금요금이 더 비싸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대중교통 활용이 어려운 고령 디지털 약자들이 더 많은 지불을 하고 있다. VIVA Senior 카드를 사용하면 앱 사용자와 동일한 요금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고령 디지털 약자의 대중교통 복지서비스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3.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비교 분석

대전광역시와 폴란드 포즈난의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를 [표 3]과 같이 비교 분석하였다.

[표 3]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과 포즈난 Viva Senior Program의 비교

구분	대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Viva Senior Program	비고	
기본 돌봄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ndyman for the Senior • Pedicure Service for the Senior • Window Cleaning for the Senior • 위 서비스를 위해 고령 디지털 약자는 특별교통수단 및 자원봉사자와 동행하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편의성 확보 •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및 적응 속도 홍보로 시민 호응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va Senior Program은 실제 고령자들의 요청 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하여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 선별 • 지원 대상 기준에 적합한 지원자가 신청 시 심사 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상 고령자 전체 대상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 알람 • 자원봉사자 비상 연결 시스템

구분		대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Viva Senior Program	비고
스마트 돌봄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 말동무 • 돌봄 로봇 • 홈 케어링 서비스 • 안심서비스 앱 • 스마트돌봄 플러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nior Taxi • Book for the Senior • Poznan Senior Gold Card • 프로그램 수행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자원봉사자 동행 대중교통 활용 • 디지털 기기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형 스마트 돌봄사업은 자치구별 사업계획 별도수립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 선별 • 원 방법 및 대상 선정 기준 확립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상 고령자 전체 대상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대상자에 대한 온라인 연결 시스템 필요 • 응급상황 대처 시스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정보 등록시스템 • 온라인 연결 시스템 • 그 외 	

자료(출처): 저자 작성

[표 3]의 분석에서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에서는 이동지원 사업을 제외하고는 기술 적용에서는 특정한 대상, 특히 고령 디지털 약자를 상대로 하는 세부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결과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반면 포즈난은 Viva Senior Program 시행 당시 스마트 기술력이 매우 월등하지 않았음에도 초기부터 실제 고령자들과의 직접적인 접촉과 회의를 통하여 그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항들을 일일이 체크하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시행하였고, 관리플랫폼을 만들어 고령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을 이용자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에 필요한 개선점은 거창한 정책계획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기술의 이름을 차용한 또 다른 사업계획에서만 그치지 말고, 고령 디지털 약자들이 실생활에서 원하는 사항들을 우선 파악하여 신속히 시행하고, 관리가 용이한 플랫폼 등으로 기술 활용부터 우선하는 것이다. 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시행은 재원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재정적 계획에 맞는 필수 사항부터 먼저 시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IV.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개선방안

1. 스마트 대중교통 서비스 사례

최근에는 전용 앱의 예약 없이는 도로에서 택시를 잡기가 쉽지 않다. 시내버스 역시 '현금 없는 버스'의 확대와 현금지불 불가로 탑승을 거절 당할 수 있다. 아마 가까운 미래에는 스마트폰 이용이나 디지털 교통정보 접근 없이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빈미영 외 2023).

다음은 스마트 대중교통 서비스의 사례이다.

1)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2018년 제로셔틀을 판교제로시티에 시범운행한 것을 시작으로(경기도정신문 2018/9/5) 대전광역시에서는 조만간 왕복 64.4km를 최고 시속 80km로 주행하는 국내 최초의 유상운송 환승서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이코노믹 리뷰 2023/10/13). 지금까지는 서울 등에서 관광목적의 자율주행차가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만 운행되었지만 간선도로에서 달리는 것은 대전광역시가 처음이다. 아직 시행 전이라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없으나 포즈난의 경우처럼 시행 전부터 이용자들에게 미리 필요한 부분들을 직접 물어보는 과정을 발견할 수 없었다. 포즈난의 경우 현재 자율주행 서비스의 도입을 위해 시험운행 진행 중이며 관광지를 중심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2)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대전광역시는 이미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으며 고령자

에게 근거리 이동 시 앉아서 이동하는 수단,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1~2인이 탑승 가능한 소형 개인이동수단으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며 1인용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 중·저속 전기자동차 등을 포함하는 이동수단을 말한다. 기존의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이동수단에 비하여 무게와 크기 등이 소형화 및 경량화되어 제작되므로 휴대가 용이하며 타 교통수단에 탑승이 가능하다. 또한 크기가 작아 장소를 고려하지 않고 주차가 용이하여 통근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관광지에서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보통 10~20km/h 속도를 낼 수 있으며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멀고 차량으로 이동하기에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기에 적합하다(김태형 외 2018).

[표 4] 퍼스널 모빌리티

운행사례	사진	특징
다인승 초소형 EV 모빌리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탑승인원 1~2인의 극소형 디자인 • 최고시속 30km/h 수준 • 1회 충전 최대이동거리 100km 수준 • 최소한의 주차 공간 및 dead space 활용
1인승 초소형 EV 모빌리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륜 & 3륜 구조 + eLan to Steer • 한 손으로도 손쉽게 균형을 잡고 주행 • 최고시속 30km/h 수준 • 1회 충전 최대이동거리 40km 수준 • 탈착형 배터리 및 무인 충전 스테이션
공용자전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한 무인대여시스템 • QR코드 인식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대여 가능 •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중교통 환승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대중교통과 연계

자료(출처): 이재용 외(2018)

[표 4]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서비스로는 서울시, 대전시, 세종시 등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용자전거 대여서비스로, 공용자전거를 원하는 곳에서 쉽게 대여하고 사용 후 가까운 곳에 반납 가능한 대여서비스가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중교통 환승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버스 하차 후 공용자전거(예, 어울링) 대여, 공용자전거 반납 후 버스 탑승 등 두 가지에 대하여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운영 중이다. 대전광역시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자전거인 시민공영자전거 '타슈'가 있다. '타슈'는 무인 대여 공공자전거서비스로 모바일 앱을 활용한 출차가 이루어지는데, 이로 인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고령 디지털 약자들은 앱사용의 어려움으로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최근에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와 공유킴보드 '지쿠' 등이 오픈되어 있으나 역시 디지털 활용에 능숙하지 못하는 고령 디지털 약자들에게는 운용할 수 있는 1인 이동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포즈난은 폴란드 내에서 대중교통 서비스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자전거뿐만 아니라 전기킴보드, 전기자전거, 스쿠터 등 다양한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자전거는 20분 동안은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단거리 이동에 고령 디지털 약자를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다. 고령 디지털 약자들의 디지털 장벽이 낮아지는 것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이용자들에게 디지털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서 디지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디지털 약자가 있음을 인지하고 설계부터 그들의 능력에 맞는 개발을 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고령 디지털 약자들이 교육을 받아 디지털 능력이 향상되어 효능감도 느끼고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고령자의 신체적·인지적 기능이 점점 나빠질 가능성이 크고 한계가 있음을 우리

는 알고 있다. 그렇다면 초기 단계부터 우리 사회에는 언제나 디지털 약자가 존재하고 있고 특히 고령 디지털 약자의 대중교통 등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에 한해서는 그들의 능력에 맞는 개발과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2. 고령 디지털 약자 교통 복지서비스

1) 대전광역시 고령 디지털 약자 교통 복지

(1) 대전광역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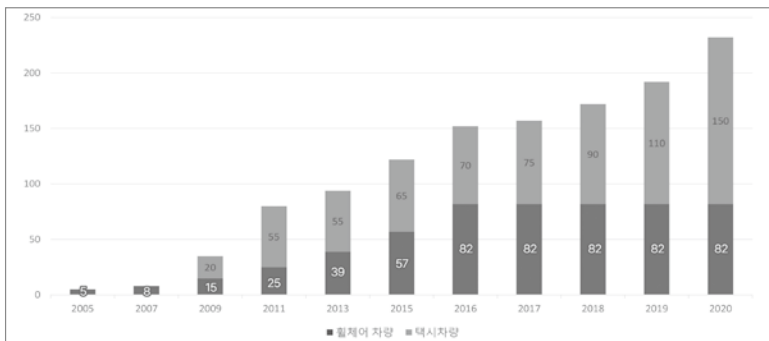
2020년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보급된 특별교통수단은 총 232대로 휠체어 차량 82대, 택시차량 150대이다. 2005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표 5]과 [그림 7]의 보급현황과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특별교통수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이정범 2020).

[표 5] 대전광역시 연도별 특별교통수단 보급 현황

(단위: 대)

구분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휠체어 차량	5	8	15	25	39	57	82	82	82	82	82
택시차량	-	-	20	55	55	65	70	75	90	110	150
합계	5	8	35	80	94	122	152	157	172	192	232

자료(출처): 이정범(2020)



[그림 7] 대전광역시 연도별 특별교통수단 보급 추이

자료(출처): 이정범(2020)

(2) 대전광역시 특별교통수단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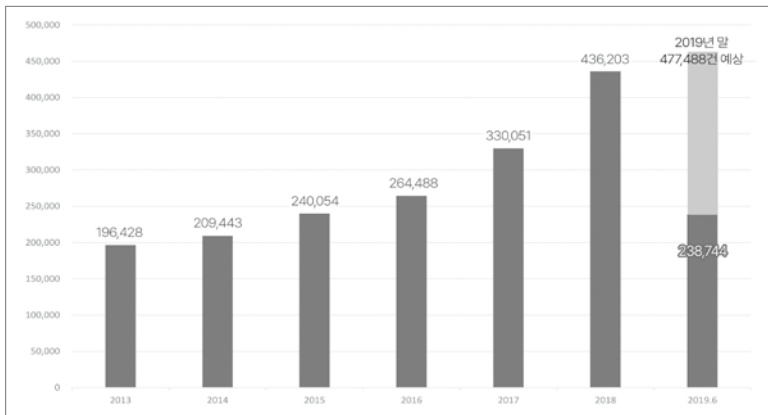
대전광역시의 연도별 특별교통수단의 회원수 및 운행건수는 2013년 이후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통계는 장애인 현황 기준으로 나와 있어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의 이용 현황을 별도로 구분하여 통계를 낼 수 없었으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고령자들의 이용 현황이 포함된 통계이므로 고령자의 이용 또한 증가하였다고 예측할 수 있다.

[표 6] 대전광역시 연도별 특별교통수단 이용 현황

(단위: 명, 건,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6
대상	15,826	15,697	15,760	17,884	18,127	18,672	18,672
회원수	8,162	9,327	10,165	10,213	12,027	13,945	14,895
운행건수 (증가율)	196,428 (-)	209,443 (6.6)	240,054 (14.6)	264,488 (10.2)	330,051 (24.8)	436,203 (32.2)	238,744 (9.5)

자료(출처): 이범규(2019)



[그림 8] 대전광역시 연도별 특별교통수단 이용 건수 추이

자료(출처): 이범규(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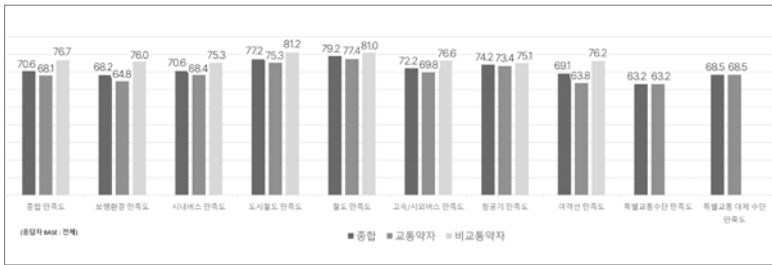
(3)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개선 필요성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인구수와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는 증진되었는지, 교통약자들은 교통수단의 이용에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하여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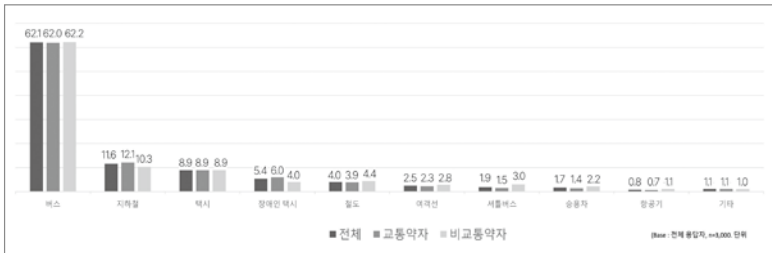
① 교통약자 이동편의 만족도 분석

종합만족도에 있어 비 교통약자의 만족도(76.7점)가 교통약자의 만족도(68.1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국토교통부 2022).



[그림 9] 비 교통약자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종합만족도

자료(출처): 국토교통부(2022)



[그림 10] 가장 개선이 시급한 교통수단 (전체 응답자 3,000명, 단위: %)

자료(출처): 국토교통부(2022)

여러 교통수단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교통수단으로 비 교통약자(62.2%)와 교통약자(62.0%) 모두 버스를 지적하였다. 교통약자별 조사에서 장애인(54.9%), 임산부(61.9%), 고령자(69.2%)가 버스의 개선을 지적하였고, 특히 고령자가 버스의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부분

은 고령 디지털 약자의 대중교통 개선에 있어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대전광역시 평가지표

대전광역시는 8개 특별광역시 중 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평가지표에서 하위권으로 조사되었다.

[표 7] 8개 특별광역시 교통수단의 이동편의시설 평가지표 산정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버스	설치율	97.6	89.0	94.9	93.9	94.9	95.9	94.0	85.6
	지역별 가중치	0.15	0.15	0.11	0.12	0.12	0.11	0.13	0.12
	지표값	14.7	12.9	10.1	11.7	11.5	10.7	11.8	9.9
	순위	1	2	7	4	5	6	3	8

자료(출처): 국토교통부(2022)

특히 교통 복지 평가지표에서 대전광역시는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저상버스 보급률 지표는 평균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접근로 보행환경, 보행자 안전도,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및 이용률, 고령자 및 어린이 안전도, 교통 복지 행정지표에서 평균값 이하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2022).

(4)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대전광역시 교통 개선의 필요성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대전광역시는 8개 특별광역시 중 평가지표 6위로 하위권에 위치해 있다. 전국 조사에 있어 교통수단 중 버스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대전광역시는 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및 이용률과 고령자의 안전도에 있어서 평균값 이하로 나타났다.

이에 교통약자를 위한 대전광역시의 가장 시급한 개선 사항은 버스, 특별교통수단, 안전도에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현재 대전광역시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률이 전국 평균 이하로 나온 것은 사용 시 불편함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고령 디지털 약자는 시설이 개선되더라도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아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들을 위한 교통 개선에 있어 편의 시설 확충과 더불어 디지털 교육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토대로 적용 방식의 개선도 필요하다.

2) 포즈난 고령 디지털 약자 교통 복지

폴란드는 민주화 이후 경제적 상황이 자본주의 체제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복지의 개념은 사회주의적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정홍모 2007). 특히 교통 분야에 있어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복지는 포즈난의 VIVA Senior Program에서 살펴보았듯이 만 65세 고령자 누구나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포즈난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공공교통 체계 내에서 제공하고 있다.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택시 서비스 외에 공공교통 이용고령자, 장애인 및 기타 취약한 그룹을 위하여 공공교통 시설 확충과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통약자를 위한 공공교통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저상버스 및 트램

포즈난의 시내버스는 저상버스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트램 분야에 있어 기존의 구형 트램은 높이차로 인하여 교통약자를 위해 리프트를 사용하였으나, 현대로템에서 2019년 납품하는 트램을 비롯하여 현재 저층으로 설계되어 교통약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현대로템 공식 블로그 홈페이지).

(2) 전용 교통 서비스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전용 교통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별 프로그램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포즈난 VIVA Senior Program의 무료 택시 이용 서비스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은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시행되고 있다.

(3) 교통 정보 앱 및 웹사이트

포즈난은 승객들에게 대중교통 정보를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모바일 앱 및 웹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사용자는 실시간 버스 및 트램 위치, 예상 도착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 교통교육과 훈련

포즈난은 고령 디지털 약자를 비롯한 교통약자 및 그들의 돌봄 제공자를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승객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문제 상황을 바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3. 대전광역시와 포즈난의 고령 디지털 약자의 교통수단 비교

대전광역시와 포즈난의 비교 분석에 있어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였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는 버스가 공통적으로 이용되었다. 특별교통수단에 있어 포즈난은 무료 서비스가 지원되는 반면 대전광역시는 유료로 이용을 해야 했다. 개선방향에 있어서는 포즈난과 대전광역시 모두 물리적인 시설 확충이 필요했다. 복지의 지원 차원에서 물리적 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경제적 여건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8]은 대전광역시와 포즈난의 고령자 교통수단을 비교한 것으로 대전광역시가 인구수는 3배 정도 많으나 고령자 비

율은 오히려 포즈난에 비하여 낮음을 알 수 있다. 정책 방향 역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포즈난에 비하여 대전광역시는 경제적 차등을 두어 선택적 복지를 함으로 인해 복지대상에 제한이 있고, 주요 특별교통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택시의 경우 무료로 사용가능한 포즈난에 비하여 대전광역시는 휠체어 차량까지 유료 택시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스마트시티 접목을 살펴보면 전화 및 온라인 예약방식은 동일하나 포즈난의 경우 정기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자동연결되어 있어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는 반면, 대전광역시는 아직 데이터 축적이 자동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개선방안에 있어서는 두 도시 모두 물리적 시설 확충이 필요하나 대전광역시의 경우 특별교통수단 시설의 확충과 특히 버스에 대한 시민과 고령 약자들의 공통된 불만이 조사에서 밝혀진바 저상버스 확충에 더 노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보완도 필요하다.

[표 8] 대전광역시와 포즈난의 고령자 교통수단 비교

구분	대전광역시	포즈난
인구수	1,474,870	532,983
고령자 인구수	198,691	92,592
고령자 비율	13.5%	17.4%
정책 방향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
많이 이용하는 교통	버스	버스, 트램
특별교통수단	유료 택시(휠체어 차량 포함)	무료 택시(휠체어 차량 포함)
스마트시티 접목 (디지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화 및 온라인 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화 및 온라인 예약 정기 이용자 데이터 축적으로 자동연결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교통수단 시설 확충 저상버스 확충 디지털 서비스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리적 시설 확충

자료(출처): 저자 작성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령 디지털 약자가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를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와 포즈난을 대상 도시로 설정하여 고령 디지털 약자의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를 분석하였다. 3가지의 연구질문은 첫째, ‘고령 디지털 약자의 대중교통 복지서비스가 ‘기술적 적용’을 통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가?’이다. 첨단 기술 시스템 구축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접근법에 치중이 된다면 고령 디지털 약자의 대중교통 복지서비스가 향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 포즈난 사례에서 인프라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술력이 다소 부족한 설계초기부터 이용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과정 등 기술 외적인 측면이 필요하다.

둘째, ‘고령 디지털 약자를 포함한 모두를 위한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를 위해 ‘기술 외적 적용’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이다. 포즈난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모두에게 기술적 요인의 접근과 해결책을 제시하기에 앞서, 실제 고령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사항들을 관리하는 플랫폼 구축하며 실질적 도움 제공을 위해 회의나 사전 설문조사 등의 기술 외적 요인인 소프트웨어적인 접근 방식을 같이 취하여 고령 디지털 약자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과정을 중요시하였다. 반면 대전광역시는 기술적인 구축을 우선하여 하드웨어적인 접근법에 치중되어 있고 실질적인 고령 디지털 약자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기록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첨단 기술 시스템 구축만으로는 고령 디지털 약자들의 복지와 교통 이동수단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없었다. 기술적인 해결책의 집중이 아니라 인프라의 질적 향상, 교육, 그리고 사회 인식의 증진과 같은 다양한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 민간기업, 자원 봉사자와 같은 다양한 조직들의 협업이 기술적 적용과 함께 반드시 선행되어야 고령 디지털 약자들의 복지에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기술 외적 적용으로는 인프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이용자의 참여와 고령 디지털 약자의 디지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또는 그들의 늦은 디지털 적응을 이해하기 위한 비 디지털 약자들의 인식교육이나 홍보 등이 있다. 그리고 설계자들이 고령 디지털 약자들의 능력과 속도에 맞게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다. 또한 누구라도 언젠가는 고령 디지털 약자가 될 수 있음을 알고 그들을 향한 사회 인식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 지자체와 민간기업 자원봉사자와 같은 다양한 조직들의 협업이 기술적 적용과 함께 반드시 선행되어야 고령 디지털 약자들의 복지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령 디지털 약자의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정책방향은 기술적 요인을 강조한 물리적 시스템의 차원과 함께 기술 외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면도 같이 보아야 한다.

셋째,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대전광역시의 대중교통 복지서비스와 고령 디지털 약자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선진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폴란드 포즈난을 비교하여 두 도시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며 대전광역시 및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은 어떤 것인가?’이다. 디지털 혁명과 장수 혁명은 대중교통 체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고령 디지털 약자의 독립적 이동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하나의 언어가 되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또 하나의 사회적 장애가 되고 있는 고령 디지털 약자에 대해서는 아직 정량적·정성적 데이터가 모두 부족하다. 이것은 오늘날의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사용의 불편함도 크나 사용의 어려움으로 데이터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 정책적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날 가능성이 커 지속적으로 디지털 혁명에서 소외되고 세대 간 디지털 격차가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중교통 정책관계자들은 요금 지불을 하지 않더라도 노인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데이터 기반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교통이용패턴과 지역별 고령 디지털 약자의 불이익 실

태 파악 및 잠재적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여 수요 대응형 대중교통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고령자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고령자 횡단보도 보행시간 연장 등 신호체계 변경을 강화하고 이용자인 고령 디지털 약자에게도 활용교육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고령 디지털 약자의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는 기술적 요인을 강조한 물리적 시스템의 차원과 기술 외적 요인인 이용자참여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면을 보아야 한다.

물리적 시스템 측면에 있어 폴란드 포즈난은 고령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를 저상버스로 운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기준 30.6% 수준의 시내버스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2026년까지 62%의 시내버스 저상버스 전환을 계획하고 있으나 재원 확보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경향신문 2022/9/27).

대전광역시의 경우 [그림 9]와 [그림 10], [표 7]에서도 볼 수 있듯이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 타 특별광역시보다 낮은 점수로 개선의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특별교통수단에 있어 스마트시티의 정책과 연계된 디지털 사용 여부는 온라인 예약에 불과하고, 특히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편의 기능은 제공되지 않았다. 기본적인 데이터 축적을 통해 보편적 지원과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에서 택시 위주의 교통수단에서 벗어나 스마트시티의 정책과 연계하여 현재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 스마트시티 교통서비스의 시행과 접목이 필요하고, 고령 디지털 약자들이 사용하기 편한 정책과 교육이 보편적 가치의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책의 방향에 있어 폴란드 포즈난은 기본 고령자 복지 정책인 Viva Senior Program과 연계하여 지원 대상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 대전광역시는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택적 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혜대상

자는 미리 정책을 인지하여야 하며,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이동이 쉽지 않고 공공기관 내 키오스크 등의 활용이 원활하지 않은 고령 디지털 약자들이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및 등록 후 온라인 서류작성과 인터뷰 등을 통해 평가를 받고, 수입과 자산의 등급에 따라 수혜자격이 결정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겪고 있다. 대전광역시를 포함한 우리나라에는 이미 정보격차관련 법률이 1993년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부터 최근 발의된 ‘디지털 포용법(2021년 발의)’이 있으며, ‘지능정보화 기본법(2022년 시행)’에서는 고령 디지털 약자의 지능정보 서비스 접근 및 이용보장 조항까지 마련되어 있다. 또한 통합교육플랫폼인 ‘디지털배움터’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특히 대중교통 복지서비스는 디지털 생활 부분 교통정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 디지털 약자에게는 플랫폼 접근 자체가 어려워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디지털배움터를 전국 911개소로 확장하고 기관대상 방문교육인 ‘찾아가는 버스’로 고령 디지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빈미영 외 2023).

본 연구는 폴란드 포즈난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령자 스마트복지 시스템과 시행 초기인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돌봄사업을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고령자들이 요구하는 스마트복지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였고, 고령 디지털 약자들의 교통 이동수단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시티 기술의 도입을 통해 고령 디지털 약자의 이동 편의와 대중교통 복지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기술적 해결책으로는 효율적인 경로 제공, 접근성 향상,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기술적 해결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인프라의 질적 향상, 디지

털 교육 및 약자에 대한 사회 인식 증진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렇게 다각도로 접근하는 것은 고령 디지털 약자의 이동성을 향상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즉 기술적 발전과 함께 고령자들의 실제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플랫폼의 중요성과 그 구축 방향에 대한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

인프라를 질적으로 향상하려는 노력은 단순히 기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령 디지털 약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활동을 의미한다. 버스 이용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전용 앱 접근이 어려운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빈자리와 혼잡정도까지 나타나는 정류소 전광판(BIT)의 가독성 있는 디자인(빈미영 외 2023), IPTV설치, 승차벨서비스, 수용응답형 버스나 저상버스의 도입과 버스 정류장의 장애물 제거 그리고 버스 전용차선 확대와 같은 물리적 개선은 필수적이지만, 그것은 크게 보면 하드웨어적 해결책에 지나지 않는다. 인프라의 질적 향상을 구현하려면 사용자 경험 중심의 설계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설계 단계에서 설계자가 직접 고령 디지털 약자의 경험을 체험하거나, 그 그룹과의 워크숍을 개최해 그들의 생각과 필요를 청취하는 과정을 통해 실제 사용자의 목소리와 의견을 직접 들으며 서비스나 제품을 개발하면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인프라의 향상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더불어, 그들의 어려움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통신 체계나 플랫폼의 구축도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은 스마트시티 기술의 성공적인 도입과 활용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해 교육 및 인식 증진을 위한 방안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단순히 고령 디지털 약자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 플랫폼을 준비해 놓아도 그들이 그 기술을 제대

로 활용하지 못하면 투입된 노력과 자원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교육과 인식 증진을 토대로 활용되는 기술은 특정 약자그룹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더 넓은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이러한 기술 및 서비스의 중요성과 활용 방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 및 홍보 활동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교육 및 인식 증진은 사회 구성원 전체에 도움을 주는 보편적인 기술 및 플랫폼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횡단보도에 설치된 시각장애 인용 음향 신호기 기술이 그 적용 사례이다. 많은 경우 이 신호기 옆에는 시각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시설물이라는 안내 표지판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이 기술이 특정 약자 그룹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도움을 주는 보편적인 기술 및 플랫폼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면 교육과 홍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사회적 연대감과 상호 이해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수단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역 정부, 민간기업, 학교, 자원봉사자 그룹, 노인복지단체와 같은 다양한 조직들이 함께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수도 있다. 특히 고령 디지털 약자의 대중교통 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연대감을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 구조 속에서 자신들의 전문성과 보유자산을 통해 고령 디지털 약자들의 필요와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조정된 교육 프로그램이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육기관에서는 고령 디지털 약자들을 위한 특별한 워크샵이나 세미나를 주최하여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민간기업은 그들의 기술력과 연구개발능력을 활용하여 더 사용자 친화적이고 직관적인 교통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영역의 이해당사자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협력하는 구조를 통해 고령 디지털 약자들이 사회와의 연결을 더욱 강화하고 대중교통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의미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다.

대중교통 복지의 실현을 위한 스마트시티 기술의 도입과 활용에 많은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지만,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장애물과 도전을 예상하게 된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도시 인프라와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과 제도 등이 원활하게 통합되기까지는 여러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 기술적 관점에서는 기존 도시 인프라와의 호환성 문제,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유지보수와 업그레이드 이슈 등이 지속적인 해결 과제로 나올 것이다. 특히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과정에서 생기는 정보의 손실, 중복 처리나 시스템의 충돌 및 오류는 사용자에게 혼란을 줄 것이며, 특히 고령 디지털 약자들에게는 더 큰 불편과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초기에 큰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 새로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설치, 전문가팀의 구성, 시스템 통합 및 테스트 등과 같은 초기 단계 작업은 예산 부담이 될 수 있고 투자 후 유지보수, 지속적인 기술적 업데이트와 투자는 예상했던 결과보다 지속적인 투자를 필요로 할 수 있다. 또한 예상 효과나 수익 미발생 시 경제적 손실이 많이 늘어나고, 예산 제약이 있는 지방 정부나 경제적으로 도전에 직면한 지역에서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다. 이러한 기술 도입은 사회적 과장도 무시할 수가 없다. 빠르게 접근하고 적응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으며 고령 디지털 약자처럼 기술적 장벽 앞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디지털 소외감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스마트시티 기술의 도입을 검토할 때 중요한 것은 고령 디지털 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복지 향상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것이다. 기술 도입 초기에는 다양한 비용이 수반되나 시간이 지나 기술이 안정화되고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질 때 그 편익은 점점 더 명확해질 것이다. 특

히 디지털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 관리 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실시간 교통 정보의 제공은 대중교통 이용 시의 편리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고령자나 장애인 등의 특수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통 서비스 제공은 그들의 이동성을 더욱 증진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기술 도입의 장기적인 가치를 평가할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해결책 제시와 초기 투자와 관련된 부담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기술이 가져다줄 수 있는 장기적인 편익과 고령 디지털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편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22. 「2021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 국토교통부. 2020. 『2019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세종: 국토교통부.
- _____. 2022.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연구』. 세종: 국토교통부.
- 권선희. 2022. 「디지털 정보격차에 대한 취약계층의 계층별 분석」. 지식경영연구 23(4): 1-9.
- 김봉섭. 2016. 『디지털 디바이드(커뮤니케이션 이해총서)』.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원호·이신해·김시현. 2008. 「교통약자 유형별 이동행태분석 및 맞춤형 대중교통정보 제공방안 연구」. 서울도시연구 9(2): 105-119.
- 김제희·하석철·황남희. 2022. 「인천시 노인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 및 지원방안」.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 김지혜·홍동식. 2020. 「고령자를 위한 지능형 대중교통 서비스의 정보디자인 연구: 부산시 버스 노선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68: 233-242.
- 김태형·최정민·이호·소재현·김미정. 2018. 「스마트시티 교통체계 구축전략 및 실행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 노시학·조창현. 2008. 「수도권 고령 인구와 청장년 인구간의 통행패턴 차이 분석」. 2008년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 문자영. 2023. 「Aging in Community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복지시설 계획지침 개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반영운·김유미·홍나은·한경민·백종인. 2017.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 추진방안」. 지역연구 33(1): 45-57.
- 빈미영·김병관·김도균·김현주·이채원. 2023. 「고령자의 대중교통 정보 이용 격차 해소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 서성은. 2008. 「메타버스 개발동향과 발전전망 연구」. 한국 HCI학회 2008년도 학술대회 발표논문.
- 서울디지털재단. 2022. 「2021년 서울시민 디지털역량실태조사」. 서울디지털재단.
- 서울연구원. 2018. 「서울복지 실태조사(2018)」. 서울연구원.
- 성지은·송위진. 2023.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기반 복지·돌봄 혁신

- 방향에 관한 연구: 기술·서비스 통합도 및 돌봄 당사자의 주체화를 중심으로」, 도시연구 23: 177-214.
- 송민경. 2012.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복지서비스 개념 도출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중. 2016. 「동유럽 5개국의 복지국가 특성의 동질성과 다양성」, 政策分析評價學會報 26(4): 99-135.
- 이범규. 2019.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 이소현. 2023. 「디지털 격차와 사회적 약자: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이슈를 중심으로」, 생명연구 69: 1-22.
- 이재용·조영태·백남철·김태형·강호용·조훈희·유정호·김현주·손세형·원도연·현창택. 2018.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연구개발사업 세부기획」, 국토연구원.
- 이정범. 2020.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정책 기본방향」, 대전세종연구원.
- 이혜연·윤재영. 2020. 「모바일 철도 예매의 시니어 사용자 경험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 연구 73: 355-368.
- 임정훈·이혁준·이지훈. 2020. 「장노년층의 디지털 정보격차 영향요인: 베이비붐세대와 노인세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20(9): 475-485.
- 정홍모. 2007. 「체제전환국의 복지체제: 체코·헝가리·폴란드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17(1): 71-99.
- 정희준. 2022. 「고령자를 위한 운행정보 안내표시장치 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 고속시외버스 터미널을 대상으로」,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76: 89-98.
- 최문정·김문구·박종현·이승민·하영욱. 2022. 「미래 디지털 역기능 전망과 대응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통신학회 동계종합학술발표회 논문집 2: 581-582.
- 최영락. 2018.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회고와 전망」, 과학기술정책 1(1): 7-33.
- 추상호·이향숙·신현준. 2013.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고령자의 통행행태 변화분석」, 국토연구 76: 31-45.
- 홍진이. 2014. 「고령자보건복지정책과 지자체의 역할: 노인간병보험제도의 한,일 지자체간 역할비교와 서울시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와 정책 6(2): 109-128.
- 황남희·김혜수·김경래·주보혜·홍석호·김주현. 2020. 「노년기 정보활동 현황 및 디지털 소외 해소 방안 모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용석·윤은상. 2010. 「디지털TV 전환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정책에 관한 한미 비교연구: 지원대상과 지원기술에 대한 비판적 접근」. 방송통신연구 73: 66-93.

Jonek Kowalska, I., and Wolniak, R. 2020. *Smart City in Poland: Towards sustainability and a better quality of life?*. London: Routledge.

Kisala, M. 2021. "The Polish Experience in the Development of Smart Cities." *TalTech Journal of European Studies* 11(2): 48-64.

Leal Filho, W., Platje, J., Gerstlberger, W., Ciegis, R., Kääriä, J., Klavins, M., and Kliučininkas, L. 2016. "The role of governance in realising the transition towards sustainable societies."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13: 755-766.

LEE, J. H., Hancock, M. G., and Hu, M. C. 2013. "Towards and effective framework for building smart cities: Lessons from Seoul and San Francisco."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89: 80-99.

Masik, G., Sagan, I., and Scott, J. W. 2021. "Smart city strategies and new urban development policies in the Polish context." *Cities* 108: 102970.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서 ‘제로서틀’ 시범운행.” 경기도정신문. 2018.9.5. <http://www.idoj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72>(검색일: 2023년 8월 18일)

“고령화 대비 노인친화적 교통체계 수립(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 서울연구원. 2019.3.26. <https://www.si.re.kr/node/61560>(검색일: 2023년 10월 10일)

“교통정책과 이동권, 교통은 복지의 영역인가?” 뉴스포스트. 2023.2.22. <https://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05965>(검색일: 2023년 10월 28일)

“국내 최장거리·최고속도 ‘자율주행버스’가 운행한다던데...이달부터 충청권서 탑승.” 이코노믹 리뷰. 2023.10.13.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629561>(검색일: 2023년 10월 28일)

“노인을 위한 무임승차는 없다?...지하철 세대갈등 재점화.” 이데일리. 2021.6.16.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63206629082376>(검

색일: 2023년 10월 28일)

“대전 시내버스에 정보안내 시스템 ‘디티스’ 도입.” 매일경제. 2023.9.12. <https://www.mk.co.kr/news/society/10827701>(검색일: 2023년 10월 28일)

“대전교통약자지원센터 16년간 행보...‘교통약자 이동권, 특권 아닌 권리.’” 충남일보. 2021.12.15. <https://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8042>(검색일: 2023년 10월 10일)

“대전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강화.” 머니투데이. 2023.1.16.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11609377810780&type=1>(검색일: 2023년 8월 17일)

“대전형 통합돌봄사업, 기준중위소득80%이하 전액 무료.” 충청신문. 2023.4.2. <https://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739222>(검색일: 2023년 8월 17일)

“디지털 세상, 모두에게 평등할까?” RightBrain. 2019.1.25. <https://blog.rightbrain.co.kr/?p=9497>(검색일: 2023년 10월 28일)

“울산 시내버스 운행정보와 버스 요금 인상 그리고 808번 수소버스의 새로운 소식.” 울산광역시 공식블로그. 2023.8.7. https://blog.naver.com/ulsan_nuri/223173540265(검색일: 2023년 10월 11일)

“장애인‘버스 이용 문턱’ 더 낮춘다...2026년까지 시내버스 62% 저상버스로 교체.” 경향신문. 2022.9.27. <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9271247001#c2b>(검색일: 2023년 10월 11일)

“준비 안된 ‘노인공화국’ ATM, 모바일 앱 낫설고 어려워, 1.5km걸어 은행 방문해 송금.” The JoongAng. 2022.11.1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8854#home>(검색일: 2023년 10월 28일)

“창원시, 폴란드 포즈난시와 국제우호협약 체결.” 뉴스1 부산경남. 2023.9.11. <https://bk.news1.kr/news/articleView.html?idxno=16571>(검색일: 2023년 10월 28일)

“폴란드 스마트시티 어디까지 왔나?”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3.15. https://dream.kotra.or.kr/kotra4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187494(검색일: 2022년 7월 4일)

“폴란드 포즈난, 잃어버린 영원한 제국의 수도.” 매일경제. 2010.5.16. <https://www.mk.co.kr/news/culture/4721296>(검색일: 2023년 10월 28일)

“폴란드의 전기 대중 교통.” EMERICs. 2021.3.18. <https://www.emerics.com>

org:446/issueDetail.es?mid=a10200000000&systemcode=07&brdcts
No=313365(검색일: 2022년 8월 17일)

“한때는 대전이 한국의 수도였다. WHY?” 대전TV- 대전광역시 공식 유튜브 채널. 2021.6.21. <https://www.youtube.com/watch?v=MfuJdwsn3os>(검색일: 2023년 10월 28일)

“Future of Mobility.” Frost and Sullivan. 2015.6.12. <https://www.slideshare.net/alanwoodland169/frost-and-sullivan>(검색일: 2022년 7월 4일)

“Katowice is undergoing a smart revolution.” Teraz Srodowisko. 2022.4.13. <https://www.teraz-srodowisko.pl/aktualnosci/katowice-smart-city-inteligentne-miasto-11737.html>(검색일: 2022년 6월 28일)

“Poland’s east depopulates as suburbs grow, census data show.” Notes from Poland. 2022.9.21. <https://notesfrompoland.com/2022/09/21/polands-east-depopulates-as-suburbs-grow-census-data-show>(검색일: 2023년 10월 28일)

“Poznan VIVA SENIOR.”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9.12.31. <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fp/poznan-viva-senior>(검색일: 2022년 6월 14일)

“The most modern traffic control system in Poland is launched- ITS Tychy.” YUNEX TRAFFIC. 2022.7.4. <https://www.yunextraffic.com/the-most-modern-traffic-control-system-in-poland-is-launched-its-tychy>(검색일: 2022년 8월 14일)

“Warsaw toward a Smart City.” Knight Frank. 2018.4.24. <https://content.knightfrank.com/research/1500/documents/en/warsaw-towards-smart-city-april-2018-5462.pdf>(검색일: 2022년 6월 14일)

“13세기 폴란드 수도, 포즈난 스마트디지털시티로 변신.” SMARTTODAY. 2021.6.12. <https://www.smart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42>(검색일: 2023년 10월 28일)

경기도 자율주행 센터(<https://www.ggzerocity.or.kr>)

국토교통 통계누리 교통부문수송실적보고(<https://stat.molit.go.kr/portal/cate/statView.do?hRsId=54&hFormId=&hSelectId=&sStyleNum=&sStart=&sEnd=&hPoint=&hAppr=&oFileName=&rFileName=&midpath=>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세종 인포그래픽스 23호(<https://www.dsi.re.kr/upload/>

board/0026/1582780675297.pdf)

더위키 광주광역시 시내버스(<https://thewiki.kr/w/광주광역시%20시내버스>)

폴란드 통계청(<https://stat.gov.pl/en>)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https://www.kdata.or.kr>)

현대로템 공식 블로그(<https://blog.hyundai-rotem.co.kr/646>)

Katowice, Investors Assistance Department(<https://invest.katowice.eu/jakosc-zycia/smart-city>)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VIVA seniorzy(<https://vivaseniorzy.pl/en>)

ZhujiWorld.com(<https://zhujiworld.com>)

국문 초록

고령 디지털 약자의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연구:
‘대전광역시’와 ‘포즈난’을 중심으로

전숙연(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정석(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광역시와 폴란드 포즈난의 복지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고령 디지털 약자들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형태 제공 방안을 대중교통 분야에서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 고찰과 해외 사례 조사, 정책 조사, 고령자 교통 복지 비교 분석이며, 이를 통해 고령자를 위한 대중교통 복지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포즈난은 소프트웨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대전광역시는 하드웨어적인 접근법에 치중되어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첨단 기술의 시스템 구축만이 고령 디지털 약자들의 교통이동수단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정책의 방향에 있어 포즈난은 보편적 복지를, 대전광역시는 선택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다. 물리적 측면에 있어 기술적인 측면만 부각이 될 경우 호환성 등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경제적 손실이 늘어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기술의 도입은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포즈난 현지 관련자 인터뷰 시행 이전에 실시한 논문으로 현지 조사가 이루어진 후 데이터 보안을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고령 디지털 약자, 대중교통복지서비스, 대전광역시, 포즈난

Abstract

A Study on the Public Transport Welfare Services for the Aged Digitally Abbreviated:

With a Focus on 'Daejeon Metropolitan City' and 'Poznan' Public Transportation

Jun, Sukyeon(Ph.D. student, Department of Urban Science, University of Seoul)

Jeong, Seok(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Science, University. of Seou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welfare cases of Daejeon Metropolitan City and Poznan in Poland and to derive policies and service forms for the aged digitally abbreviated in the field of public transportation. This study presents a public transportation welfare plan for the elderly through a literature review, overseas case studies, policy surveys, and a comparative analysis of elderly transportation welfar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is study, Poznan is taking a software approach, but Daejeon Metropolitan City is focused on a hardware approach. As for policy directions, Poznan is implementing universal welfare and Daejeon Metropolitan City is implementing selective welfare. To solve this problem, smart-city technology should be introduced universally. This study was conducted befor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 local people in Poznan. After the field survey, follow-up research using data supplementation is required.

Key words: the Aged Digitally Abbreviated, the Welfare of Public Transportation, Poznan, Daejeon Metropolitan City

일반논문

-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년계층의 공공주택 입주의향 분석:
수도권 무주택 청년계층을 중심으로
정기성
- | 메타버스 시대 스마트관광도시 인천의 관광플랫폼(인천e지) 정보공유의도 연구:
확장된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2)과 자기결정이론(SDT)의 이론통합적 분석
김규미·한진석
- | Agile Management to Agile Collaboration in the Nonprofit Sector:
Cas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iwon Suh · Jenifer Reiner · Jung Wook Kim
- |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운영실태 비교분석: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윤난·김부열
- | 통근이 거주지역 만족도와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
인천광역시 거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양은모·배호중
- | 상권 방문객의 혁신성 식별과 혁신성 결정요인 분석연구
류새배·김새힘·김승훈·이명훈
- | 기업의 지역이동에 관한 연구:
경기도 화성시의 기업 유출입을 중심으로
김규환·이덕·오근상
- |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 중심의 공동 마케팅 전략 제안
강정석·강선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년계층의 공공주택 입주의향 분석: 수도권 무주택 청년계층을 중심으로

정기성*

정
기
성

I. 서론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1. 코로나19 청년계층의 주거위기
2. 청년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

III. 연구 설계

1. 연구 방법 및 변수의 구성
2. 연구 분석 모형

IV. 실증 분석

1. 기초통계량
2. 분석결과

V. 결론

.....
* LH토지주택연구원 정책지원단 책임연구원(E-mail: jkseong@lh.or.kr, Tel: 031-738-3245)
<http://doi.org/10.34165/urbanr.2023.24.97>

투고(접수)일 2023.5.3. 심사(수정)일 2023.5.30. 게재확정일 2023.12.14.

I. 서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 청년층의 주거 문제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었다(정기성 2021). 특히 수도권에서는 고가 주택 및 임차료로 인해 청년들의 거주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청년 주거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의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최근 통계청 '출생·사망 통계'(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인 0.78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통계청 홈페이지). 이러한 상황을 야기하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청년들은 주거불안을 겪으면서 다음 생애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청년 주거문제는 2000년대 이후로 꾸준히 우려되어온 이슈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청년계층이 이끌며 주거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졌다(임재빈·정기성 2021).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고 나타내고 있으며, 청년들이 일자리와 학업의 문제로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꾸준히 몰려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은 높아지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주거비용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주거실태조사(2021) 결과에 따르면 청년 가구의 81.6%는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Rent to Income Ratio)은 평균 가구의 16.6 대비 16.8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의 임차 주거비 부담 수준이 특히 더 높았는데, 그들의 RIR은 일반 가구의 RIR 18.6 대비 20.0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년 가구와 평균 가구 간 주거비용 부담 차이를 크게 보여준다. 또한, 박미선·우지윤의 2021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년 1인 가구 중 30.8%가 RIR이 30이 넘는 주거비용 과부담 상태에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박미선·우지윤 2021). 따라서 청년들의 주거 문제는 고용 상황, 가구 특성, 소득, 경제 문제 등에 영향을 받아 악화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청년 가구의 주거 불안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초저금리와 유동성 확대 등의 시장 변화는 국내와 글로벌 주택시장에서 급격한 가격 상승을 유발했고 이는 사회·경제적인 기반이 부족한 청년들의 고용난과 실업 문제에 더 큰 충격을 주었다(Jeong and Lim 2023). 또한 전세가격 상승은 전월세 시장의 월세화 전환에 영향을 미치며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월세의 임대료 또한 크게 상승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더욱 악화시키고 주거 불안을 심화시킨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고용난과 실업 문제는 청년 가구의 주거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큰 요인으로 확인된다(변금선 2021).

정부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주거문제 완화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되는 공공주택 공급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주요 정책 수단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공급하여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택이다. 공공분양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건설한 후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시민에게 분양하는 주택이다. 각각의 공공주택은 대상별로 세분화되어 맞춤형으로 공급되어 왔는데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을 핵심 대상으로 공급하는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 ‘행복주택’이 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또한 청년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주택, 금융 지원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정부의 주거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시기 동안 청년들의 주거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전세사기 피해가 청년계층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주거불안정성은 대도시 지역,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 나타난다(변금선 2021).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청년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개선하는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년들의 공공주택(임대·분양) 선호와 특성을 비교분석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현 정부는 청년계층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보다 뉴홈 정책 등 공공분양주택 공급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혜자인 청년들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었던 수도권 무주택 청년계층의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입주의사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청년들의 가구특성, 경제특성, 주택특성, 코로나19 충격 요인들을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론으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고 공공임대 모형과 공공분양 모형으로 적용하여 비교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청년계층의 주거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공공주택 정책 수립에 있어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1. 코로나19 청년계층의 주거위기

국내 청년계층의 주거문제는 해마다 제기되는 주요한 문제이지만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이다.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청년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대학졸업 및 취업 등으로 부모와 독립하는 시기에 청년들은 주거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높은 월세를 내기 위해 월수입의 큰 부분을 주거비로 소비하며 장기적 자산형성에 실패하게 되고, 이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다음 생애주기로 넘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 요인이 된다. 이로 인한 저혼인·저출산 문제는 사회전체의 인구문제·고령문제·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전현희 2018).

청년계층의 주거문제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더욱 악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코로나19 시기 동안 청년들의 주거난과 고용불안은 심해지고 이는 그들의 경제적 기반과 주거 불안정으로 이어졌다(Qian et al. 2021). 특히, 서울과 경기 남부 주요 지역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해 무주택 청년계층의 주거상황은 악화되고 있다(변금선 2021). 이래혁(2021)에 따르면 청년층과 고령층이 코로나19로 인해 더 큰 불안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상황 악화와 주거비 부담의 증가는 청년계층의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변화는 그들의 주거만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황윤희·정재호(2023)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주거환경 변화가 그들의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만족도의 변화는 청년들의 주거이동 변수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시기 급등한 주택가격은 역설적으로 청년들로 하여금 마지막 주택

가격 상승 기회를 잡기 위한 패닉바이(Panic Buying) 현상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무리한 주택 구입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들의 조급한 주택 구매 과잉 현상을 두고 도덕적, 경제적 합리성 차원에서 판단하기보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글로벌경제 시장과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고려하여 생각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도 존재한다(김명수 2022).

주택시장의 급격한 변동과 함께, 대면 서비스업, 자영업의 침체는 청년계층의 실업난, 고용난과 경제적 열악화를 야기한다(Lee et al. 2020; Kim et al. 2021). 주택가격 급증과 청년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실질 소득 감소가 겹치면서 도시에서 주거비를 부담하기가 극도로 힘들어진 상황이 초래되었다(Tinson and Clair 2020; Jones and Grigsby-Toussaint 2020). 불안정한 주택시장 상황에 대응하여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은 청년의 주거불안을 개선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김강산(2021)은 청년 주거 여건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양적 측면의 공공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한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청년 주거지원 시 소득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전세 사기 등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강화를 주장하였다. 성미애 외(2020)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청년계층이 상대적으로 큰 사회·경제적 악영향을 받았으며, 이에 대응해 공공의 지원과 가족 관계성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지선(2020)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 주거지원 강화를 주장하였다. 공통적으로 코로나19 이후 불안정해진 주택시장에서 취약한 청년들의 주거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2. 청년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청년계층의 주거 상황은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이에 대응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왔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은 대표적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응할 수 있는 현물적 주거지원 방법이다(김도진 2021). 경제적 자산 형성과 주거 측면의 자립에 있어서 과도기적 단계에 있는 청년계층은 주거불안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는데, 코로나19 시기에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중앙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임대주택 품질 개선, 수요를 고려한 역세권 임대주택 공급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성진욱 외 2022). 그동안 공공의 주택지원 정책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의 연구와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선행 연구로 강미나(2016)는 청년 1인 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1인 가구의 증가세에 주목하고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배분 검토와 유형별 맞춤 공간설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송보람 외(2018), 임경지(2015) 등의 연구자들은 청년계층의 주거실태와 문제들을 진단하고 청년가구 특성을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필요성과 현 임대주택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김승수(2018), 이우형·서충원(2020), 최주희(2022)는 서울시 청년계층의 열악한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청년계층의 도심 거주 수요와 저렴한 주거를 가능케 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하였으나, 지역 상생의 측면에서 갈등 요소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또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제시하고 청년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디자인 계획 방향을 나타내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분양주

택 정책과 관련하여 이소영(2023)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의 균형 잡힌 공급을 통해 청년계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넓힐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중앙정부의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을 설명하면서 청년·서민의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회복하는데 공공임대주택 정책뿐 아니라 공공분양주택의 균형 잡힌 공급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 평가와 제언에 관련된 연구뿐 아니라 공공주택의 입주의향에 대한 연구들도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정혜·곽희종(2022)은 청년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의향에 미치는 요인 분석을 진행하였고, 청년의 소득, 주거비 수준, 소규모 주택 거주, 해당 지역의 전세가 지수 및 주택 공급물량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의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성·기윤환(2018)은 인천시 내 수요 특성별 공공임대주택 거주의향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청년계층의 경우 이사계획이 있을 때 입주의사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들 계층은 개인주의적 특성이 다소 있으나 지역주민들과의 물리적인 교류 공간 마련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권오규·강은택(2017)은 김천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거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들은 주거환경, 친밀도 요인들이 행복주택 거주사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무주택 청년가구의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의 향후 입주의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독립변수를 구성함에 있어서 상기의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가구특성, 경제특성, 주택특성 및 코로나19 영향 변수들을 고려하였다. 그간 청년계층의 공공주택에 대한 입주의향, 만족도 등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코로나19 시기를 경험하면서 이에 대한 청년가구의 입주의향과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인식의 변화, 고용 및 경제적 상황 변화 등 구체적인 충격을 고려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러 코로나19로 인한 청년계층의 경제, 고용, 주거, 심리적 요인들을 고려한 변수들을 포함하고 전통적인 주택 입주의향 특성 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하고,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입주의향 요인을 비교분석하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III. 연구 설계

1. 연구 방법 및 변수의 구성

연구 데이터는 2020년 LH토지주택연구원에서 진행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거현안과 미래정책대응 방향’과제에서 사용되었던 ‘수도권 주거인식 변화 설문조사’ 원시 데이터 2,135개 표본을 기본으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코딩 되었다. 설문조사의 기간은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심각하게 퍼지던 시기인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였으며, 코로나19의 감염 빈도와 그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인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19~39세 미만 무주택 청년 가구 데이터를 추출하고, 결측치를 제거한 결과 총 474개의 유효 표본을 획득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분양주택 입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표 1]과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가구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들로 성별, 연령, 서울 거주, 대출여부, 이사 의견 변수를 설정하였으며, 경제특성을 나타내는 요인들로 소득계층, 고용상태 변수를 설정하였다. 소득계층의 경우, 2020년 기준 가구원수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분위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저소득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중저소득은 70~100%, 중고소득

은 100~150%, 고소득은 150% 이상으로 설정하였다.¹⁾ 주택특성으로 주택유형, 주택면적 변수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공공주택 입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특성, 경제특성, 주택특성 변수들은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주요한 변수들로 적용되었다. 정기성(2018)의 연구에서 인천시 행복주택 입주의향에 미치는 독립변수로 연령, 성별, 월소득, 고용 상태, 이사계획, 주택유형, 부채(대출) 변수가 사용되었으며, 김주현·안용진(2016)의 신혼부부 가구의 공공주택 입주의향 의식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에서도 연령, 월소득, 점유형태 변수들이 적용되었다. 이정혜·곽희중(2022)의 최근 연구에서도 청년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월소득, 주택면적, 주택유형, 지역별 특성, 거주기간, 주택 가격지수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표 1] 변수 설정

구분				코딩
세부	변수	설명		
독립 변수	가구 특성	성별	응답자 성별	1=여성, 2=남성(참조)
		연령	응답자 연령(만)	연속변수
		서울 거주	현재 서울 거주 여부	1=맞다, 0=아니다(참조)
		대출여부	주택관련 기 대출여부	1=있다, 0=없다(참조)
		이사 의견	다른 집으로 이사 의견	리커트5점척도 (1=그렇다~5=아니다)

- 1) (1인 가구인 경우) ① 월평균 209만원 이하 ② 209만원 초과 299만원 이하 ③ 299만원 초과에서 448만원 이하 ④ 449만원 이상
 (2인 가구인 경우) ① 월평균 319만원 이하 ② 319만원 초과 456만원 이하 ③ 456만원 초과에서 683만원 이하 ④ 684만원 이상
 (3인 가구인 경우) ① 월평균 437만원 이하 ② 437만원 초과 624만원 이하 ③ 624만원 초과에서 935만원 이하 ④ 936만원 이상
 (4인 가구 이상인 경우) ① 월평균 496만원 이하 ② 496만원 초과 709만원 이하 ③ 709만원 초과에서 1,063만원 이하 ④ 1,064만원 이상

구분				코딩	
세부	변수	설명			
독립 변수	경제 특성	소득계층	현재 월소득 상태	1=저소득(참조), 2=중저소득, 3=중고소득, 4=고소득	
		고용상태	현재 고용 상태	1=상용근로자, 2=임시일용직, 3=자영업, 0=실직, 일하지 않음(참조)	
	주택특 성	주택유형	거주하는 주택 아파트 여부	1=아파트, 0=비아파트(참조)	
		주택면적	거주하는 주택의 면적이 84m ² 미만 여부	1=맞다, 0=아니다(참조)	
	코로나 19 충격	집 안전정도	코로나19 이후 집 안전에 대한 인식 정도	리커트5점척도 (1=안전하지않다 ~5=안전하다)	
		내집마련 의사	코로나19 이후 내집마련 의사 정도	리커트5점척도 (1=자가 필요~5=자가 불필요)	
		투자_거주가치	코로나19 이후 집의 가치 변화(투자or거주)	리커트5점척도 (1=거주~5=투자)	
		도심_외곽선호	코로나19 이후 주거지 선호 변화(도심or외곽)	1=도심, 0=외곽(참조)	
		고용상태 변화	코로나19 시기 동안 실직, 휴직 등 부정적 고용상태 변화 경험	1=있다, 0=없다(참조)	
		소득변화	코로나19 시기 동안 월소득 변화	1=증가, 2=감소, 0=변화없음(참조)	
		불안증가	코로나19 전후 주거환경 내 불안감 변화 정도	리커트5점척도 (1=불안감소~5=불안증가)	
	종속 변수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1=있다, 0=없다(참조)
		공공분양주택 입주의향			

코로나19 충격 부문 변수로 집 안전정도, 내집마련 의사, 투자_거주가치, 도심_외곽선호, 고용상태변화, 소득변화, 불안증가 변수를 설정하였다. 코로나19 시기를 통해 주택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며, 사람들의 주거 인식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특히 ‘영끌현상’, ‘빼닉바잉’으로 대변되는 강한 내집마련 현상이 나타났으며, 단순히 집을 거주한다는 의미에서 자산 증식의 수단 내지 투자의 가치로 보는 경향이 높아지는 시기를

경험하였다(임상빈 2022; 김명수 2022). 또한 코로나19 시기 확산되었던 재택문화로 인해 거주 지역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외곽 지역 거주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Jeong and Lim 2023). 뿐만 아니라 고용과 경제적 변화와 함께 주거환경 내 코로나 블루(Corona Blue) 현상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높아짐에 따라(정기성 2021) 이러한 변화들을 고려한 주요 변수들을 본 연구의 분석 모형에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특히,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주거 안정성, 그리고 안전한 주택의 측면에서 공공주택이 가지는 이점이 크기 때문에(김윤옥 외 2016; 권치홍·김주영 2012; 남영우·최민섭 2007) 상기의 핵심 변수들을 고려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기 청년들의 공공주택 입주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성된 변수들은 코딩의 작업을 거쳐 분석 모형에 적용되었다. 종속변수의 경우 공공주택에 입주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1'로 없다는 응답은 '0'으로 코딩되었다. 독립변수 중에서 범주형 변수의 경우 참조 값은 '0'으로 나머지 값들은 '1'로 코딩하였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시기 월소득 변화 변수의 경우, 변화없음(0,0), 증가(1,0), 감소(0,1)로 더미 변수화 코딩 작업을 거쳐 분석 모형에 적용하였다.

2. 연구 분석 모형

확률선택모형은 McFadden(1981)에 의해 개발된 이론적 모델로, 의사 결정 주체의 선택 행동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이 모델은 경제학, 도시계획, 사회학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각 개별 의사결정 주체는 가장 높은 효용을 가진 대안을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이 모델은 주거 선택, 교통수단 선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확률 분포의 가정에 따라 선형확률모형, 프로빗모형, 로짓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박미선 2013; 김

정수·이주형 2004).

이 중에서 확률적 효용이 가장 설득력 있는 와이블 분포를 기본으로 하며, 계산이 용이한 모델은 로짓모형이다. 종속변수가 이분형으로 선택될 수 있는 경우, 주택의 유형이나 주거의사와 같은 변수에 대해 이항 로짓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항 로짓모형에서 종속변수와 독립 변수 간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y^* = \ln\left[\frac{p}{1-p}\right] = \alpha + \beta_1\chi_1 + \beta_2\chi_2 + \dots + \beta_k\chi_k = \sum_{k=1}^K \beta_k\chi_k \quad (1)$$

변수 y^* 는 관찰이 불가능한 확률의 형태로 표현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이항 선택항 범주인 경우 사건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가정된다. 이때, 확률 p 는 독립변수 x 에 의존하며, 종속변수 값이 1이 나올 확률을 나타낸다. 성공확률을 나타내는 *odds*는 $p/(1-p)$ 로 표현할 수 있으며, (1)의 관계식은 이 *odds* 값에 자연로그를 취한 것이다.

회귀계수 β_k 는 (1)의 관계식에서 가정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 p 와 독립 변수 x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때, 확률 p 는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p = \text{prob}(y = 1) = \frac{e^{\sum_k \beta_k \chi_k + \alpha}}{1 + e^{\sum_k \beta_k \chi_k + \alpha}} = \frac{1}{1 + e^{-\left(\sum_k \beta_k \chi_k + \alpha\right)}} \quad (2)$$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입주의향에 대하여 있다 or 없다는 이분형 범주 형태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진행하였다.

IV. 실증분석

1. 기초통계량

수도권 무주택 청년 가구 응답자 데이터의 기초통계량은 [표 2]와 같다. 응답자 성별은 여성이 53.8%, 남성이 46.2%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평균 연령은 30.8세이다. 응답자 중 43.7%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56%가 주택 관련 대출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사 의견이 총 5점 대비 2.3점으로 이사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측면에서 저소득층은 전체 응답자의 50%, 고소득층은 4.6%로 저소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용상태는 69.8%가 상용근로자였으며 10.5%는 임시일용직, 3.8%는 자영업이었다. 실직이나 일하지 않는 청년 응답자는 15.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택특성으로 응답자 30%가 아파트에 거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약 88%가 주택면적 84㎡ 이하의 주거공간에 거주하고 있었다. 코로나19 충격 부문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내집에서 느끼는 안전함 정도가 5점(불안전) 만점 대비 3.1로 부정적인 면이 평균 이상이었다. 내집마련 의사는 약 1.8로 높았으며, 집에 대한 가치는 거주 가치보다 투자의 가치로 생각이 전환되었다는 응답자 비중이 소폭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2.79). 그리고 응답자의 75.3%가 코로나19 이후 도심을 더욱 선호할 것이라는 응답을 하였으며, 35%는 코로나19 기간동안 부정적인 고용상태의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팬데믹 기간동안 소득변화가 없었던 응답자가 54.6%, 증가한 비중은 10.8%, 감소한 비중은 34.6%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기간동안 주거환경 내에서 불안감이 증가되었다고 응답한 결과는 5점 대비 3.3으로 나와 평균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기초통계량

	변수	max	min	avg	std	
가구 특성	성별_여	1	0	0.538	0.499	
	연령	39	20	30.78	4.71	
	서울 거주	1	0	0.437	0.497	
	대출여부_있음	1	0	0.559	0.497	
	이사 의견	5	1	2.295	1.153	
경제 특성	소득계층_저소득	1	0	0.500	0.501	
	소득계층_중저소득	1	0	0.329	0.470	
	소득계층_중고소득	1	0	0.124	0.330	
	소득계층_고소득	1	0	0.046	0.211	
	고용상태_실직 및 일하지않음	1	0	0.158	0.365	
	고용상태_상용근로자	1	0	0.698	0.459	
	고용상태_임시일용직	1	0	0.105	0.308	
	고용상태_자영업	1	0	0.038	0.191	
주택 특성	주택유형_아파트	1	0	0.300	0.459	
	주택면적_84㎡이하	1	0	0.882	0.323	
코로나 19 충격	집 안전정도	5	1	3.103	0.949	
	내집마련 의사	5	1	1.759	0.956	
	투자_거주가치	5	1	2.791	1.143	
	도심_외곽선호	1	0	0.753	0.432	
	고용상태변화_있음	1	0	0.350	0.478	
	소득변화_변화없음	1	0	0.546	0.498	
		소득변화_증가	1	0	0.108	0.310
		소득변화_감소	1	0	0.346	0.476
	불안증가	5	1	3.300	1.103	

2. 분석결과

1) 연구 모형의 적합성 검증

이항 로짓모형의 적합성은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형의 카이제곱 값과 유의수준, Hosmer&Lemeshow 검정, 우도비(-2LogL) 검정, 설명력(Pseudo R²)을 통해 알 수 있다. 공공임대, 공공분양 모델 모

두 로짓 모형의 유의수준이 1% 이하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Hosmer&Lemeshow 검정의 p 값이 두 모형 각각 0.694, 0.830으로 0.05 이상으로 나와 결과 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도비(-2LogL) 검정의 결과 두 모형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²⁾ 모형의 설명력(Nagelkerke R^2)은 각각 32.2%(공공임대), 47.2%(공공분양)로 적절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두 모형 모두 분석에 있어 그 적합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표 3] 연구 모형 적합성 검정 결과

구분	공공임대	공공분양
모형의 카이제곱 χ^2 (자유도)	43.769(21), p=0.003	46.280(21), p=0.001
Hosmer&Lemeshow 검정	χ^2 =5.582, df=8, p=0.694	χ^2 =4.290, df=8, p=0.830
-2LogL	-2LL(0)=478.515, -2LL(k)=322.153 χ^2 =135.012, df=31, p=0.000	-2LL(0)=89.124, -2LL(k)=65.848 χ^2 =53.596, df=28, p=0.000
Pseudo R^2	Cox&Snell R^2 : 0.228 Nagelkerke R^2 : 0.322	Cox&Snell R^2 : 0.344 Nagelkerke R^2 : 0.472

2) 변수를 포함한 결과 모형이 절편만 포함한 모형보다 우도비 값이 작게 나타났다.

[표 4]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공공임대			공공분양				
		B	S.E.	유의확률	Exp(B)	B	S.E.	유의확률	Exp(B)
가구특성	성별.여	0.464*	0.243	0.056	1.591	0.526**	0.258	0.041	1.692
	연령	-0.060**	0.026	0.023	0.942	-0.030	0.027	0.273	0.970
	서울거주	0.234	0.244	0.338	1.263	0.328	0.261	0.210	1.388
	대출여부.있음	-0.424*	0.251	0.091	0.654	-0.191	0.264	0.470	0.826
	이사.이전	-0.019	0.123	0.878	0.981	-0.017	0.132	0.900	0.983
경제특성	소득계층.저소득			0.037				0.020	
	소득계층.중저소득	-0.562**	0.275	0.041	0.570	-0.173	0.288	0.548	0.841
	소득계층.중고소득	-0.262	0.401	0.513	0.769	0.612	0.502	0.222	1.845
	소득계층.고소득	-1.287**	0.514	0.012	0.276	-1.375**	0.538	0.011	0.253
	고용상태.실직 및 임하지않음			0.818				0.071	
주택특성	고용상태.상용근로자	0.187	0.367	0.611	1.205	0.073	0.372	0.845	1.076
	고용상태.임시일용직	0.281	0.515	0.585	1.324	0.725	0.550	0.188	2.064
	고용상태.자영업	-0.286	0.658	0.664	0.752	-1.126*	0.628	0.073	0.324
	주택유형.아파트	-0.922***	0.271	0.001	0.398	-0.138	0.299	0.644	0.871
	주택면적.84m ² 이하	0.564	0.360	0.117	1.758	0.710*	0.384	0.064	2.035
코로나19 충격	집.안전정도	-0.094	0.137	0.492	0.910	-0.310**	0.146	0.034	0.733
	내집마련.의사	0.074	0.140	0.600	1.076	-0.140	0.144	0.331	0.869
	투자.거주가지	-0.189*	0.106	0.074	0.828	-0.164	0.115	0.154	0.849
	도심.외곽신호	-0.208	0.297	0.484	0.812	-0.274	0.318	0.388	0.760
	고용상태변화.있음	-0.013	0.307	0.967	0.987	0.019	0.326	0.953	1.019
상수항	소득변화.변화없음			0.180				0.194	
	소득변화.증가	0.107	0.402	0.790	1.113	0.927*	0.537	0.084	2.526
	소득변화.감소	0.590*	0.320	0.065	1.804	0.293	0.330	0.375	1.340
	불안증가	0.171	0.119	0.149	1.186	0.271*	0.127	0.033	1.312
	상수항	3.478	1.219	0.004	32.393	3.044	1.252	0.015	20.980

자료(설명): *p<0.1, **p<0.05, ***p<0.001

2) 공공주택 입주의향 분석결과

먼저 무주택 청년계층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의향에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구특성에서 임대주택 거주의향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 연령, 대출여부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임대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는 의사가 높을 확률이 크게 나타났으며($Exp=1.591$, $p<0.1$),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청년일수록 입주의사가 높을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Exp=0.942$, $p<0.05$). 이는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공공임대주택 거주의향에 긍정적인 확률이 1.591배 높다는 의미이며, 청년 응답자 연령이 한 단계 높아질수록 0.942배 정도 임대주택 거주 의향 확률이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대출이 있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의향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Exp=0.654$, $p<0.1$).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소득계층 변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저소득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계층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는 의향이 낮을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상태 변수는 임대주택 입주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주택특성을 살펴보면 주택유형 변수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반면, 주택면적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xp=0.398$, $p<0.01$).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특성을 살펴보면, 코로나19를 경험하며 주택을 거주 가치보다 투자의 가치로 더 생각하는 응답자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사가 부정적인 확률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Exp=0.828$, $p<0.1$). 이는 주택을 거주가치로 생각하는 경우에 비해 0.828배 가량 임대주택 입주 의향 가능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코로나19 시기 소득 감소를 경험한 응답자의 경우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xp=1.804$, $p<0.1$). 이는 소득 변화가 없는 경우에 비해 소득 감소를 경험한 경우 1.804배 가

량 임대주택 입주의향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무주택 청년계층의 공공분양주택 거주의향에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구특성에서 임대주택 거주의향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이었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공공분양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는 의사가 높을 확률이 크게 나타났으며 (Exp=1.692, $p<0.05$),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공공분양주택 거주의향에 긍정적인 확률이 1.692배 높다는 의미이다.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소득계층과 고용상태 변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응답자 중 고소득 청년가구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공공분양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는 의향이 낮을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Exp=0.253, $p<0.05$). 이는 저소득층일 경우에 비해 고소득 청년가구 응답자는 0.253배 가량 공공분양주택 입주의향 가능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고용상태 중에서 실직이나 일하지 않은 응답자와 비교했을 때 자영업자들의 공공분양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는 의사가 낮을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Exp=0.324, $p<0.1$). 다음으로 주택특성을 살펴보면 주택면적 변수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84㎡ 이하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xp=2.035, $p<0.1$). 이는 상대적으로 좁은 집에 거주하는 응답자 그룹이 84㎡ 이상 면적에 거주하는 응답자 그룹에 비해 공공분양주택 거주의향에 긍정적인 확률이 2.035배 높다는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특성을 살펴보면, 집 안전정도, 소득변화, 불안증가 변수가 공공분양주택 거주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며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한 안전정도가 낮게 나타난 응답자는 공공분양주택 거주 의사가 긍정적인 확률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Exp=0.733, $p<0.05$). 이는 청년 응답자의 집에 대한 안전 인식 정도가 한 단계 높아질수록 0.733배 정도 분양주택 거주 의향 확률이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코로나19 시

기 소득 증가를 경험한 응답자의 경우도 공공분양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xp=2.526$, $p<0.1$). 이는 소득 변화가 없는 경우에 비해 소득 증가를 경험한 경우 2.526배 가량 공공분양주택 입주意向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코로나19 시기 동안 주거공간 안에서 경험하는 불안이 증가한 청년 응답자의 경우 공공분양주택 입주意向에 긍정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Exp=1.312$, $p<0.1$). 이는 응답자의 주거불안 정도가 한 단계 높아질수록 1.312배 정도 분양주택 거주意向 확률이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意向 모델과 공공분양주택 입주意向 모델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5) 첫째, 무주택 청년가구들의 가구특성 부분은 공공임대주택 입주意向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가운데 더 젊을수록 대출이 없는 청년가구일수록 임대주택 거주意向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청년계층의 연령이 젊을수록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선호와 입주意向이 높아지는 결과는 공공임대주택이 영구임대주택에서부터 가지던 낙인효과나 부정적인 인식이 청년계층에서는 낮아지고 있는 청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대출의 경우 기존에 전세 대출 등 은행권 대출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2년 단위(혹은 4년)의 계약 단위에 의해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점유형태 이동의 제약으로 부정적인 거주意向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 모두 고소득 무주택청년계층에게는 선택지로서 선호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이후 도입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 자격은 기존의 임대주택 기준보다 상향되어 세대의 월평균 소득 150%(기준 중위소득), 총자산은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2021년, 2.92억 원) 이하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LH 마이홈 홈페이지). 정부는 빈곤 저소득 계층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로써 임대주택의 범위에서 중산층 혹은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얻는 청년까지 대상으

로 포함시켜 주거복지의 범위를 높이는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공공분양주택은 전통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자산을 축적한 가구가 내집마련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최소한 중소득 이상의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타겟 소득계층의 배경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수도권 무주택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모두 부정적인 입주의향을 보였다. 이는 일정 소득수준 이상의 청년계층들은 공공주택보다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아파트 등)의 선호도가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셋째,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주거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정도가 실질적인 공공주택 입주의사에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시기 주택 가격의 급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주택의 상품으로서의 가치, 즉 투자로서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청년들은 집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는 가치가 큰 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의사가 부정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코로나19로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여러 가지 불안한 감정이 높아지는 응답자의 경우, 좀 더 넓고 안전하며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입주의사가 높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좁은 주택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공공분양주택 입주의사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결과와 연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실질적인 가계소득의 변화는 공공주택 선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득이 감소하여 주거비 부담을 더 크게 경험한 청년 응답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선호가 높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오히려 코로나19 기간동안 소득이 증가한 무주택 청년의 경우 내집마련이 가능한 공공분양의 입주의사가 높을 확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시기 동안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커져가는 동

안에 공공임대주택이 힘들어지는 계층들을 위한 주거안정망(safety net) 역할을 하고, 청년들의 내집마련의 발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김도진 2021; 김윤옥 외 2016).

[표 5] Model 별 분석결과 및 종합

Model 1(공공임대주택)	Model 2(공공분양주택)
<입주의향이 있을 확률이 높은 결과> • 성별(여성), 연령(어릴수록), 대출여부(없음) • 소득계층(상대적으로 낮을수록) • 주택유형(비아파트) • 거주가치(거주>투자), 소득변화(감소)	<입주의향이 있을 확률이 높은 결과> • 성별(여성) • 소득계층(고소득에 비해 저소득) • 주택면적(84m ² 이하) • 주택안전(낮을수록), 소득변화(증가), 주거불안(증가)
분석 종합	
• 무주택 청년가구들의 가구특성 부분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가운데 더 젊을수록, 대출이 없는 청년가구일수록 임대주택 거주향이 높음 •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 모두 고소득 무주택청년계층에게는 선택지로서 선호가 낮은 것을 확인 •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주거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정도가 실질적인 공공주택 입주의사에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	

V. 결론

본 연구는 수도권 무주택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향후 공공주택(임대·분양)의 입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의 중요도와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사용하였다.

연구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특성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향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연령이 낮은 청년일수록 입주의사가 높을 확률이 높았으며, 대출이 있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의향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양주택 입주의향에는 성별 변수(여성)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특성의 경우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공통적으로 저소득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소득계층의 입주의향이 낮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코로나19 이후 주택을 투자가치로 여기는 무주택 청년들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소득감소를 경험한 경우 입주의향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코로나19 시기 집의 안전을 우려하고 불안감을 느끼거나 소득 증가를 경험한 응답자의 경우 공공분양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분석결과 및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계층의 공공주택 지원은 여전히 중요하다. 코로나19 시기 심화된 양극화의 상처는 청년들의 주거분야에도 적용되었다(Qian et al. 2021).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줄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을 맞이하고 주거비 부담을 더 크게 느끼게 된 20대 청년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를 위해 적합한 공공임대주택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년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은 계층의 소득분위와 특성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설계되고 공급되어야 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모두 고소득 청년계층에게는 주거의 선택지로 선호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경제적 기반이 불안정한 저소득 청년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의사가 높은 결과는 청년계층 내에서도 다양한 수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청년계층 내에서도 경제적, 사회적 특성에 따라 고소득 청년은 민간시장에서 주택수요를 흡수하고 저소득 청년계층은 청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서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전략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해 심리적 영향을 받은 무주택 청년 주거취약계층을 고려한 공공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시기 좁고 열악한 환경의 주거공간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인식, 불안, 외로움 등의 감정적 스트레스 즉, ‘코로나 블루’를 겪는 청년계층이 상당히 늘어났다(정기성 2021).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청년의 주거환경 내 불안증가와 주택 안전성에 대한 우려 증가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의사를 높이는 데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청년들의 불안을 낮추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청년의 내집마련을 도와주는 공공주택 정책이 임대 부문과 분양 부문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수도권 무주택 청년계층을 대상으로 향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청년계층의 가구특성과 경제적 특성, 주택특성과 코로나19 충격 변수를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현행 공공주택 정책을 진단하고 청년계층의 주거안정에 맞는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가지는 의미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경제적 양극화의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은 청년계층들의 주거 인식을 확인하고 이들의 주거안정성을 위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을 코로나19 영향과 연관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공주택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상이한 소득 자산 기준을 세분화 하지 못하고 공공분양주택 기준을 중심으로 무주택청년의 월 소득기준에서 고소득층까지 포함하여 연구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만,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 월소득과 자산기준을 높이고 중산

층 혹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인 청년까지 정책 수혜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방향성을 보였는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무주택 청년 월소득에 상한을 두지 않았다. 또한 가구의 주거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응답자의 혼인여부와 해당 가구의 구성원수가 중요한 변수이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에서 이 부분이 구축되지 않아 적용하지 않는 부분은 연구의 한계로 둔다. 향후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연구의 한계들을 극복하여 세부적인 소득분위를 고려한 청년 공공주택 정책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강미나. 2016.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상의 과제」. 국토 422: 14-19.
- 권오규·강은택. 2017. 「대학생의 행복주택 입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천 시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부동산학회지 35: 161-176.
- 권치홍·김주영. 2012.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10(3): 33-46.
- 김강산. 2021. 「청년 주거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NARS 현안분석 제216호. 국회입법조사처.
- 김도진. 2021.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민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수. 2022. 「포스트-코로나 시대 주택투자 붐과 청년들의 '패닉 바이'행동」. 민주주의 이슈와 전망 75: 1-11.
- 김승수. 2018. 「역세권 청년주택: 상생협력을 모색하다」. 공존협력연구 4(1): 5-8.
- 김윤옥·박병남·김갑열. 2016. 「주거환경요인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부동산학보 64: 227-240.
- 김정수·이주형. 2004. 「가구특성에 따른 주택선택행태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9(1): 191-204.
- 김주현·안용진. 2016. 「공공 임대주택 입주의향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 신혼가구를 대상으로」. 국정관리연구 11(3): 241-259.
- 김지선. 2020. 「서울시 주거빈곤 청년 1인 가구의 건강 문제와 대응 전략에 관한 질적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영우·최민섭. 2007. 「국민임대주택 주거만족도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13(3): 89-103.
- 박미선·우지윤. 2021. 「1인가구 연령대별 주거취약성 보완 방안」. 국토연구원.
- 박미선. 2013. 「주택 점유형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시대적 변화 연구: 1990년~2010년을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6(3): 291-314.
- 변금선. 2021. 「서울 청년의 주거실태와 정책 과제」. 서울연구원.
- 성미애·진미정·장영은·손서희. 2020. 「코로나 19에 따른 1인 가구의 일상생활 변화 및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가족탄력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5(3): 3-20.
- 성진옥·송기욱·정기성. 2022. 「서울시 무주택 청년가구의 주거지원 정책이용 의

- 사 영향요인 분석: 가구 및 정책특성을 고려하여, LHI 저널 13(3): 57-68.
- 송보람·권오정·김동숙. 2018. 「수요자 맞춤형 행복주택 거주자의 만족도 조사연구: 가좌지구 행복주택 청년거주자를 대상으로」,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30(2): 471-474.
- 이래혁. 2021. 「코로나19 불안과 스트레스의 관련 요인: 인구학적 특성 및 거주지역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6): 71-80.
- 이소영. 2023. 「공공임대 + 공공분양' 균형 잡힌 공급으로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넓힌다」, 나라경제 34(1): 52-53.
- 이우형·서충원. 2020.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역세권 청년주택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1(2): 41-59.
- 이정혜·곽희중. 2022. 「청년 가구주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요인에 관한 연구」, 주택연구 30(4): 31-55.
- 임경지. 2015. 「청년 주거문제 실태와 현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한계」, 월간 복지동향 196: 5-11.
- 임상빈. 2022. 「영끌한 2030 세대와 주택가격 하락기 정책적 대안」, TAX ISSUE PAPER 76: 1-11.
- 임재빈·정기성. 2021. 「지역별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부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LHI 저널 12(2): 47-59.
- 전현희. 2018.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및 입법 동향과 과제」, 도시문제 53(597): 36-39.
- 정기성. 2018. 「인공신경망 분석을 활용한 인천시 주거취약계층의 행복주택 입주의향에 미치는 요인 분석」, 주택연구 26(3): 55-78.
- _____. 2021. 「신경망 분석을 활용한 비주택 거주 청년 1인 가구의 공유주택 거주 의사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주택연구 29(2): 37-58.
- 정기성·기윤환. 2018. 「수요 특성별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 분석: 인천광역시 청년, 육아가족, 노인 계층 중심으로」, 주택연구 26(4): 29-52.
- 최주희. 2022.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의 디자인 계획방향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윤희·정재호. 2023. 「주거환경특성이 주거만족도, 주거보유 의식과 주거이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코로나 19 시기의 MZ 세대를 중심으로」, LHI 저널 14(1): 47-66.

- Jeong, K., and Lim, J. 2023. "Would people prefer city-center living in the post-COVID era?: Experience, status, and attitudes to social disasters." *Environment and Planning B: Urban Analytics and City Science* 50(7): 1932-1946. DOI: <https://doi.org/10.1177/23998083221149424>.
- Jones, A., and Grigsby-Toussaint, D. S. 2020. "Housing stability and the residential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 *Cities & health* 1-3.
- Kim, D., Yun, J., Kim, K., and Lee, S. 2021. "A Comparative Study of the Robustness and Resilience of Retail Areas in Seoul, Korea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Outbreak, Using Big Data." *Sustainability* 13(6): 3302.
- Lee, J., Chin, M., and Sung, M. 2020. "How has COVID-19 changed family life and well-being in Korea?"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51(3-4): 301-313.
- Qian, X., Qiu, S., and Zhang, G. 2021. "The impact of COVID-19 on housing price: Evidence from China." *Finance Research Letters* 43: 101944.
- Tinson, A., and Clair, A. 2020. "Better housing is crucial for our health and the COVID-19 recovery." *The Health Foundation* 1-25.
- "한국 출산율 0.78...서울 0.59 더 쇼크." 중앙일보. 2023.2.2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2530#home>(검색일: 2023년 6월 14일)
- "2020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2021.2.24.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20100&bid=204&tag=&act=view&list_no=388265&ref_bid=(검색일: 2023년 7월 12일)
- "2021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2.12.21.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7649(검색일: 2023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통계청(<http://kosis.kr>)

한국토지주택공사(<https://www.lh.or.kr/>)

LH 마이홈(<https://www.myhome.go.kr>)

국문 초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년계층의 공공주택 입주의향 분석:
수도권 무주택 청년계층을 중심으로

정기성(LH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었던 수도권 무주택 청년계층의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입주의사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무주택 청년가구 474개 샘플을 대상으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고 공공임대 모형과 공공분양 모형으로 적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젊고 대출이 없는 청년일수록 임대주택 거주향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공공임대·분양주택 모두 고소득층에게는 선호가 낮았다. 셋째,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집에 대한 인식변화가 공공주택 입주의사에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무주택 청년 월 소득에 상한을 두지 않은 점을 한계로 둔다. 향후 연구를 통하여 세부적인 소득분위를 고려한 청년 공공주택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주제어: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입주의향, 청년계층, 수도권

Abstract

Analysis of Young People's Intention to Move to Public Housing in the Post-COVID Era:

Focus on the Young Generation with Non-Homeownership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Jeong, Kiseong(Research fellow, Land and Housing Research Institut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ntion to reside in public rental housing and public ownership housing for non-homeowner young generations in metropolitan areas and the influencing factors. The study used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a sample of 474 young non-homeowner households, and compared and analyzed public rental and public ownership model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young people with no loans and lower age had a greater intention to reside in rental housing. Second, both public rental and owned housing were less preferred by high-income groups. Third, it was confirmed that changes in perception of housing after the COVID-19 pandemic affected the intention to reside in public housing compared to before the pandemic. However, this study did not set an upper limit for the monthly income of young non-homeowners. Therefore, future research should consider detailed income distribution to conduct a policy study on public housing for young people.

Key words: Public Rental Housing, Public Housing, Intention to Reside, Young Generation, Seoul Metropolitan Area.

메타버스 시대 스마트관광도시 인천의 관광플랫폼(인천e지) 정보공유의도 연구:

확장된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2)과
자기결정이론(SDT)의 이론통합적 분석*

김규미**, 한진석***

김
규
미
·
한
진
석

I. 서론

II. 이론적 고찰

1. 확장된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2)
2. 자기결정이론(SDT)
3. 정보공유의도(S)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IV. 분석결과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2. 측정도구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3. 연구모형 적합도 및 가설 검증

V. 결론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B5A16055124).

** 강원도립대학교 동해안지역발전연구소 연구교수

*** 동국대학교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MICE관광산업연구소 연구교수, 교신저자(E-mail: noljs@nate.com)

<http://doi.org/10.34165/urbanr.2023.24.129>

투고(접수)일 2023.8.26. 심사(수정)일 2023.9.14. 게재확정일 2023.12.14.

I. 서론

과학기술의 급속한 성장과 발전으로 인해 도시와 관광지는 진화하고 스마트해지고 있다(Encalada et al. 2017). 스마트도시는 기술 및 정보 기술(ICT)을 적용하여(박승빈 2020; Kummitha and Crutzen 2017) 자원 절약,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Datta 2015; Pencarelli 2020) 관광객에게 부가가치와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한다(Gretzel 2011). Encalada et al.(2017)이 말했듯 스마트도시가 채택한 정보기술은 관광객과 주민 모두에게 관광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따라서 스마트도시의 개발은 스마트관광도시의 출현을 촉진한다.

특히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스마트기술은 관광객과 주민에게 장소 정체성 및 장소 브랜딩(branding)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DMO¹⁾가 활용할 수 있는 핵심 도구이다(Aitken and Campelo 2011). 더불어 스마트함, 지속 가능성 및 기술 개발은 도시와 관광지 이미지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다(Encalada et al. 2017; Binkhorst and Den Dekker 2013; Neuhofer et al. 2012). 관광객들은 관광 목적지가 제공하는 스마트 기술과 서비스에 관심이 많고 이를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즉,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 관광 기술 개발은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스마트도시의 자원, 공간 및 기술로 상호 연결시킨다(Gretzel et al. 2016; Baggio et al. 2020). 또한, 스마트관광도시는 스마트 인프라를 관광지와 공유하여 관광객과 주민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과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Wang et al. 2013).

1) 지역관광추진조직(DMO: 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이란 지역관광을 홍보하는 조직의 개념이었으나, 최근에는 마케팅 조직에서 더 나아가 지역관광을 운영·관리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Hotel & Restaurant 2021/10/24).

인천은 2020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공모를 통해 국내 최초 제1호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중구청, 인천관광공사, 인천스마트시티(주) 등 9개의 민간 컨소시엄사와의 협력을 통해 스마트관광도시 통합플랫폼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2021년 7월 인천 스마트관광도시 출범식을 개최하였다(국토교통부 Smart City Korea 보도자료 2021/7/29). 이에 인천 개항장(開港場) 일대를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관광할 수 있는 ‘인천e지 스마트 관광플랫폼’ 운영을 시작했다.

인천e지 관광플랫폼의 주요 대상인 인천 중구 개항장 거리는 근대 문화유산의 중심지로 1883년 인천항 개항 이후 130여 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다. 이곳은 서구 각국과 일본, 청국들의 상사(商社)가 진출하고 각국의 영사관이 설치되는 등 근대 개항기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다양한 건축물과 문화시설이 즐비한 근대 역사 문화 관광지이다(인천광역시 중구 문화 관광 홈페이지). 이곳은 근대 역사와 문화가 상존하는 곳으로 문화 및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며 인천 지역발전 활성화에 있어 중요한 자산이다. 실제 인천 문화재로 등록된 185개 근대 건축물 중 129개(69.7%)가 중구에 집중되어 있다(왕치현 외 2013).

이렇듯 인천 중구 개항장 일대는 국내 최초 제1호 스마트관광도시 대상으로 선정되어 스마트한 문화 재생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인천 e지 어플리케이션은 인천 개항장 일대 여행을 위하여 개인화된 인공지능(AI) 추천 서비스, AR/VR 시간여행 콘텐츠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해결되는 편의 서비스, 무료 공공 와이파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인천 e지 어플리케이션과 공공와이파이를 통해 수집된 관광자의 데이터는 인천 스마트관광도시 플랫폼 내에 저장되고, 정제·통합 과정을 바탕으로 관광마케팅 및 인천 지역 인프라 개선 등을 위

한 목적으로 활용된다(뉴스로 2021/6/30).

새롭게 출시된 스마트관광도시 인천e지 관광플랫폼은 메타버스 시대 실감콘텐츠를 활용하여 새로운 관광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메타버스는 메타(meta)라는 초월 혹은 가상이라는 뜻과 특정한 유형의 경험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이다. 이러한 메타버스는 관광 마케팅이나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각광받고 있는데 AR/VR 게임의 활용으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지역을 홍보하기도 한다. 관광의 게임화는 메타버스 관광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으며 관광 기업과 관광객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 관광지나 관광기업 브랜드 등을 높일 수 있다(김규미 2023; Xu et al. 2017). 관광에서 메타버스는 몰입형 경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홍보효과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적이다(Buhalis and Karatay 2022). 이전의 인천 중구 개항장은 단순하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는 역사자원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직접 즐기며 체험하는 역사자원으로, 19세기 개항장 스토리를 메타버스의 AR/VR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생한 체험으로, 이러한 첨단기술을 도입한 관광 서비스로, ‘언택트 여행 성지’로 한국관광 중 최고 문화관광 아이콘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최초 스마트관광도시 인천e지 관광플랫폼에 대한 연구는 현재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기존의 스마트관광 및 스마트관광도시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스마트관광 플랫폼의 설계나 프로그램 및 기술 개발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Li 2022; Zhang et al. 2021)나 기술 준비도와 관련된 연구(김현규 외 2021; 민소라·김진아 2022) 등이 대부분이다. 또한, 이전의 연구는 스마트 기술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이용태도 및 이용의도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관광목적지를 방문하는 동안 관광객자가 제공하는 정보 및 콘텐츠를 공유하는 소셜 미디어의 효과나 이용의도에 관한 연구(김규미·김남조 2019; 문정호 외 2022; Dedeoğlu et al.

2020; Narangajavana Kaosiri et al. 2019)이다.

또한, '2021 인천관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시비로 각각 35억 원 씩 투입해 총 70억 들여서 개발한 인천e지 관광플랫폼의 인지율은 겨우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스마트폰에 친숙한 MZ세대의 인식율도 2.1%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인천e지 관광플랫폼에 대해 인식한 후 이용 의사는 57.6%로 절반을 넘기면서(인천일보 2022/8/2) 정작 홍보가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인천e지의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관광객이 인천e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가 필수적이다. 이로써 인천e지 플랫폼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향상시켜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공유의도(ISI: Information Sharing Intention)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 행동을 탐구하는데 가장 많이 적용되는 자기결정이론(SDT: Self Determination Theory)은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고 이용하려는 이용자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 요인을 조사하는 데 효과적인 프레임워크임이 입증되었다(Nikou and Economides 2017).

확장된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2: Extended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관련 이전 연구들(문정호 외 2022; Dedeoğlu et al. 2020; Narangajavana Kaosiri et al. 2019)은 어플리케이션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나 기존 사용자들의 후기를 읽고 따르려는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여행 관련 정보를 게시 또는 공유하려는 이용자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UTAUT2는 이용자 관점에서 기술 수용을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SDT는 이용자가 기술을 채택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이 두 개의 이론의 통합은 인천e지 관광플랫폼 이용자가 여행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공유하

러는 행동의도를 보여주는 포괄적인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다가오는 메타버스 시대에 인천e지 관광플랫폼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정보기술수용과 관련하여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확장된 UTAUT2와 SDT의 통합을 통해 정보공유의도와 영향 관계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토대로 인천e지 관광플랫폼의 지속가능성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확장된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2)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 1990년대에 접어들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이용자들이 기술을 수용하는 데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정병규 2018). 대표적인 이론이 Venkatesh et al.(2003)의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이다. UTAUT는 기술 수용과 관련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는 8개 이론을 통합한 이론이다(Fishbein and Ajzen 1975). UTAUT에 이용된 8개의 이론은 Ajzen and Fishbein(1988)의 합리적 행동이론(TRA: Theory of Reasoned Action),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 Davis et al.(1992)의 동기 부여 이론(MM: Motivational Model), Davis(1989)의 기술수용이론(TAM: Technology Accept Model), Thompson et al.(1994)의 PC활용이론(MPCU: Model of PC Utilization), Taylor and Todd(1995)의 확장된 결합기술수용이론 및 계획된 행동이론(c-TAM-TPB: combin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and Theory of Planned Behavior), Moore and Benbasat(1991)의 혁신확산이론(IDT: Innovation Diffusion Theory), 그리고 Compeau and Higgins(1995)의 사회인지이론(SCT: Social Cognitive Theory)이다(Kuriakose et al. 2022). 그러나 UTAUT는 주로 조직 내에서의 기술 수용에 대하여 치중한다는 한계가 있고, 변수들 간의 영향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Agrawal and Karahanna 2000) 일반 이용자의 기술 이용의도를 설명하기 위한 확장된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2)이 개발되었다(Venkatesh et al. 2012). UTAUT2는 행동의도의 예측 변수인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이라는 4가지 요인에 쾌락적 동기, 가격효용, 습관을 포함한 3가지 요인을 추가한 모델이다. UTAUT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기술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집중한 이론이었다면, UTAUT2는 개인의 변수를 파악할 수 있는 요인을 추가한 것이다. UTAUT2는 UTATU에 비하여 사용의도는 56%에서 74%로 18% 향상되었고, 기술수용은 40%에서 52%로 12% 향상되었다(Venkatesh et al. 2012).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문정호 외(2022)는 스마트 서비스를 도입한 호텔 및 리조트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과기대, 사회적 영향, 쾌락적 동기, 습관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노력기대와 촉진조건은 재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ssaker et al.(2020)은 UTAUT2를 적용하여 온라인 여행 리뷰를 이용자 생성 콘텐츠의 한 형태로 사용하려는 여행자 의도를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성과기대, 노력기대, 쾌락적 동기 요인은 여행자가 선호하는 정보의 원천이며 온라인 리뷰를 채택하려는 여행자의 의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을 밝혀내었다.

또한 Gupta and Dogra(2017)도 여행 중 모바일 매핑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려는 관광자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제안된 기술을 사용하려는 이용자 행동의도에 가장 중요한 선행 요인은 습관, 촉진조건, 성능기대, 쾌락적 동기였으며, 사회적 영향력과 가격효용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Palau-Saumell et al.(2019)은 UTATU2를 사용하여 레스토랑 검색 및 예약을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사용의도 동기는 습관, 인지된 신뢰성, 쾌락적 동기, 가격 절약 지향, 노력기대, 성과기대, 사회적 영향, 촉진조건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UTAUT2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적용되고 있으며 여러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입증됨을 알 수 있었다(이인엽·한진욱 2022; Kim and Hall 2020; Sharma et al. 2021).

2. 자기결정이론(SDT)

SDT는 인간의 동기 부여 행동을 연구하는 데 가장 많이 적용되는 이론 중 하나이다(이혜린·박근수 2020; Deci and Ryan 1985; Ryan and Deci 2000). 또한, 다양한 유형의 기술을 채택하려는 이용자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 요인을 밝히는 데 입증되었다(Nikou and Economides 2017). SDT는 인간 행동이 사회적 통합, 개인심리적 성장 및 웰빙을 위한 자기 규제, 외적 통합에 의해 내재적·외재적으로 동기화되는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다고 가정한다(Ryan and Deci 2000). 즉, 개인이 외부 영향 없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을 말한다(Deci and Ryan 1985).

SDT는 대표적인 동기이론으로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와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의 두 가지 동기를 기본 전제로 한다. 여기서 내재적 동기는 개인이 외부 영향 없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행동하는 동인을, 외재적 동기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동인을 말한다(심재명 2016). 내재적 동기는 이용자가 활동 자체를 즐기기에 때문에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행동하는 동기 유형으로 이용자가 본질적으로 흥

미롭고 즐거운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여 자기만족, 즐거움 또는 도전을 위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반면 외재적 동기는 보상 추구 또는 처벌, 회피 등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독립적인 결과를 위해 주어진 활동을 수행하고 완수하려는 이용자의 의도를 의미한다(Medeiros et al, 2022).

이러한 SDT는 모든 개인이 자율성, 관련성 및 역량이라는 세 가지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를 가지고 행동 동기를 결정한다고 본다. 여기서 자율성은 자신의 선택을 통제할 수 있고 자신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발전하려는 욕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개인의 감각을 말한다. 관련성은 개인이 사회 내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유사한 목표를 공유하는 것을 말하며, 역량은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공적으로 그 일을 해 내기 위한 필요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Ryan and Deci 2000). SDT의 이러한 동기 요인들은 인천e지 관광플랫폼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를 설명하기에 힘을 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Nikou and Economides(2017)는 SDT를 기술수용모델(Davis 1989)과 통합하여 모바일 기반 평가를 채택하려는 학생들의 의도를 조사하였는데, 연구결과 자율성, 유능성, 관련성 등의 내재적 동기요인이 모바일 평가 시스템 사용의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혀내었다. 마찬가지로 Huang et al.(2016)도 SDT와 기술수용모델을 통합하여 관광목적지를 탐험하기 위해 3D 가상세계 기술을 사용하려는 관광자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Tong et al.(2013)은 쇼핑 웹 사이트의 온라인 리뷰 정보공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SDT를 채택하였고, 연구결과 정보공유의도는 다른 소비자를 도우면서 얻는 만족감(내재적 동기), 판매자에게 영향을 미쳤을 때 얻는 만족감(내재적 동기), 자기 이미지 향상(외재적 동기)에 높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SDT

를 토대로 인천e지 관광플랫폼과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관광자의 동기를 조사하고자 한다.

3. 정보공유의도(SI)

최근 정보공유는 정보시스템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로 각광받고 있다(Huang and Kuo 2020; Ma et al. 2018). 정보공유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Jadin et al. 2013) 이 과정에서 재사용하기 위해 정보를 탐색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Chen and Hung 2010). 일부 연구자들은 정보공유가 전자 매체 및 컴퓨터의 급속한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밝혀냈다(Jarvenpaa and Staples 2000).

최근에 정보공유는 이용자가 SNS 상에서 정보를 공유하려는 의지의 강도를 의미한다(Sun et al. 2022). 이러한 SNS 내에서의 정보공유에는 뉴스, 제품, 음악 및 일부 개인의 경험 등을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및 기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에 공유하는 것을 포함한다(Shang et al. 2021; Hsiao 2020). 정보공유와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정보 공유는 개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하는 활동이기에 이용자의 동기 요인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홍인기·조은혜 2023; Okyere-Kwakye and Nor 2011).

한편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분야의 연구자들은 인간의 모든 행동이 이기심에서 비롯된다고 가정한다. 즉, 이용자는 다른 사람과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여 보상(예를 들어 긍정적 평판이나 인정)을 찾고자 한다(Lakhani and von Hippel 2003). 성과기대, 쾌락적 동기, 만족도 등의 요인과 공유 행동 사이에는 일정한 연관성 있으며 정보공유의도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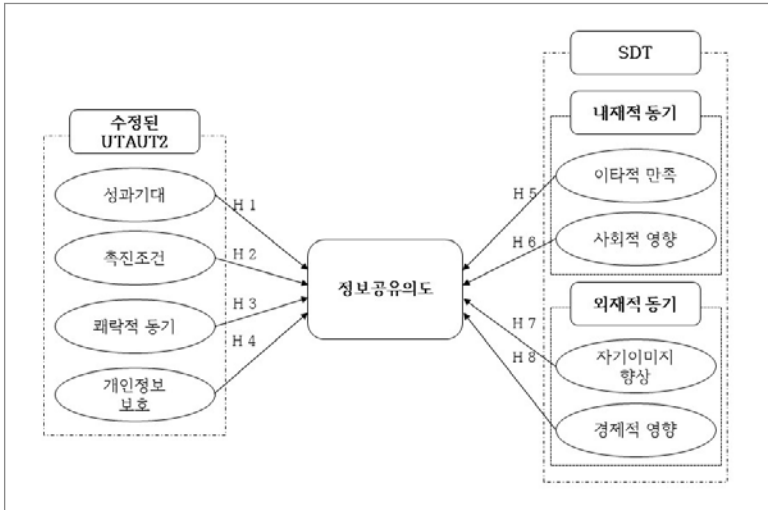
다(Ma et al, 2018; Shang et al, 2021; Huang and Kuo 2020).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본 연구의 분석틀로는 수정된 UTAUT2와 SDT를 통합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토대로 8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UTAUT2 모델의 수정 없이 반영할 경우 관광자의 정보공유의도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대상인 인천e지 관광플랫폼은 이용자에게 경제적 비용이 들지 않는 무료 플랫폼이자, 일상적이고 지속적 경험이 아닌 인천 지역에서의 단발성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성과기대, 가격효용, 습관요인은 본 연구에서 활용하지 않았다.

한편,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힘입어 위치기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세계적인 현상으로 부상하며 이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의 장점은 직·간접적인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 세계 여행, 관광 및 숙박 산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공개는 여전히 시급한 문제로 남아 있다(Rao and Minakakis 2003). 이에 인천e지 관광플랫폼을 사용하는 동안 이동 경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위치를 공개해야 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요인을 UTAUT2에 추가·수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1) 수정된 UTAUT2와 정보공유의도의 관계

(1) 성과기대(EE: Effort Expectancy)

성과기대는 이용자의 기술사용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Venkatesh et al, 2003; Venkatesh et al, 2012). 성과기대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용자가 생성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려는 이용자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과기대는 SNS에 이용자 생성 콘텐츠를 게시하고 공유하려는 행동의도와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Herrero and San Martín 2017).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H 1. 성과기대는 정보공유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촉진조건(FC: Facilitating Conditions)

촉진조건은 기술수용에 필수적이며(Venkatesh et al, 2003) SNS에 정보를 게시하고 공유하려는 의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Huang 2018). UTAUT2 관련 선행연구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촉진조건이 행동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Kim and Hall 2020; Lin et al, 2014). 따라서 촉진조건은 관광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공유하는 행위가 인천e지 관광플랫폼에서 사용가능한 자원이나 지원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용자의 정보공유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 2. 촉진조건은 정보공유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쾌락적 동기(HM: Hedonic Motivations)

쾌락적 동기는 자신의 기술사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SNS에 게시하는 것에 느끼는 즐거움이다(Assaker et al, 2020; Herrero and San Martín 2017; Huang 2018). 기존 연구에서는 이용자가 특정 기술의 쾌락적 동기를 더 높게 인식하면 기술사용에 대한 개인의 수용도가 높아짐이 밝혀졌다(Gupta and Dogra 2017). 인천e지 관광플랫폼을 통해 이용자는 관광 관련 정보를 이용하고 AR/VR 체험, 오디오가이드, 고스트도슨트 등의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들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독특한 경험과 쾌락적 동기는 관련된 정보공유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 3. 쾌락적 동기는 정보공유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개인정보보호(PIP: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개인정보포털 홈페이지)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수집·이용·처리·관리되도록 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함부로 수집되거나 이용·제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다(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인천e지 관광플랫폼은 위치 기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인천e지 홈페이지) 모바일 기기의 GPS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현재 위치에 따라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반서비스이다(Yun et al, 2013). 위치 프라이버시는 이용자의 현재 및 과거 위치에 대한 정보로 정의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과 공유되고 추적되기도 한다(Yun et al, 2013). 또한, 서비스 제공업체가 다양한 목적으로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문제가 발생한다(Zhang et al, 2013). 인천e지 관광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동안 자신의 위치를 공개해야 한다.²⁾ 실제로 Ozturk et al.(2017)은 모바일 호텔 예약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다 개인화된 예약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의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데 개인정보보호문제에 큰 영향을 미쳐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의도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기능은 정보공유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 4. 개인정보보호는 정보공유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예를 들어, AI가 이용자의 위치에 따라 여행지를 추천해 주고, AR/VR 시간여행이나 오디오 가이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는 GPS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2) 내재적 동기와 정보공유의도의 관계

(1) 이타적 만족(AS: Altruistic Satisfaction)

SNS 관련 연구에 따르면 동일한 가상 커뮤니티에 속한 다른 이용자를 돕는 생각은 정보공유 제공자의 내재적 동기 또는 자기만족적 보상의 결과로 나타났다(Tong et al. 2013). Okkonen(2019)은 사람들이 SNS에 음식사진을 공유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연구 결과, 사람들의 음식 셀카 공유는 기록을 위한 문서화와 개인적 만족(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한 만족)의 두 가지 동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Chae and Ko(2016)도 마찬가지로 SNS 내에서의 쇼핑 환경이 SNS 참여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서 이타적인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Wasko and Faraj(2005)도 SNS에 정보를 공유하는 동기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어떠한 상호주의도 기대하지 않고 순수하게 이타적 만족감을 얻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 5. 이타적 만족은 정보공유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사회적 영향(SI: Social Impact)

사회적 영향은 이용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소속된 정도에 따라 인지되는데(Henning-Thurau et al. 2004) 이러한 의미에서 이용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속하기 위해 온라인 리뷰 플랫폼 및 온라인 구전(e-WOM: electronic Word Of Mouth)에 여행 관련 정보공유를 제공하고자 한다(McWilliam 2000). 이용자는 온라인 리뷰 플랫폼에서 가치 있는 댓글과 의견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여행 관련 정보와 여행 경로를 공유하는 관광자는 가상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참여와 존재에 대한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영향은 다른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정보공유 제공자의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콘텐츠를 생성하고 공유하기 위해 SNS를 사용하는 이용자의 심리적 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Swani et al. 2017).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H 6. 사회적 영향은 정보공유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외재적 동기와 정보공유의도의 관계

(1) 자기이미지향상(ES: Enhance Self-image)

SDT에 따르면 자기이미지는 외부 세계의 통제 요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요소가 보는 성공에 기반한다(Deci and Ryan 1985). 즉,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중시하고(Cheon et al. 2016) 이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존경과 인정을 위해 정보를 공유할 동기를 부여받는다(Tong et al. 2013). 타인에게 받는 존경과 인정의 긍정적인 피드백은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이미지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Burrow and Rainone 2017). 여러 선행연구에서 개인 경험의 정보공유 시 긍정적인 이미지가 향상된다는 것이 밝혀졌다(Ehrenberg et al. 2008; Wu et al. 2020).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 7. 자기이미지향상은 정보공유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경제적 영향(EI: Economic Impact)

경제적 영향은 인간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Lawler 1984) 경제적 보상 체제는 이용자가 SNS에 정보를 공유할 동기를 부여한다

(Henning-Thurau et al. 2004), Tang et al.(2016)은 관광자에게 모바일 쿠폰이라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할 때 여행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공유할 의도가 높아짐을 밝혀내었다.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적용된다. 유튜버는 자신이 게시한 동영상이 특정 조회 수를 달성하면 경제적 보상을 받는다(Burgess and Green 2018).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 8. 경제적 영향은 정보공유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1] 설문문항의 구성 및 측정도구

구분	조작적 정의	근거	문항수
성과 기대	인천e지 관광플랫폼 이용자가 기술사용과 관련하여 느끼는 용이성 정도	Herrero and San Martín(2017), Venkatesh et al.(2003; 2012)	3
촉진 조건	인천e지 관광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지원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Huang(2018), Kim and Hall(2020), Lin et al.(2014), Venkatesh et al. (2003)	3
쾌락적 동기	인천e지 관광플랫폼 사용 시 파생되는 재미나 즐거움	Assaker et al.(2020), Gupta and Dogra(2017), Herrero and San Martín(2017), Huang(2018)	3
개인 정보 보호	인천e지 관광플랫폼 이용 시 개인의 위치정보가 함부로 수집되거나 이용·제공되지 않도록 받는 보장	Ozturk et al.(2017),Yun et al.(2013)	3
이타적 만족	인천e지 관광플랫폼 이용 경험 공유에 가치를 두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 충족하는 상태나 느낌	Chae and Ko(2016), Okkonen(2019), Tong et al.(2013), Wasko and Faraj(2005)	3
사회적 영향	인천e지 관광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속하여 느끼는 긍정적인 생각이나 행동	McWilliam(2000), Swani et al.(2017)	3
자기 이미지 향상	인천e지 관광플랫폼 이용 경험 공유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아 형성되는 긍정적인 이미지	Ehrenberg et al.(2008), Wu et al.(2020)	3
경제적 영향	인천e지 관광플랫폼 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상이나 정보 등을 받는 혜택	Burgess and Green(2018), Henning-Thurau et al.(2004), Tang et al.(2016)	3
정보 공유 의도	인천e지 관광플랫폼 이용 정보 및 경험 등을 공유하거나 온라인 등에 게시할 의향	Hsiao(2020),Huang and Kuo(2020),Lakhani and von Hippel(2003),Ma et al.(2018),Shang et al. (2021)	4
인구통계특성			5
연구자 작성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인천e지 관광플랫폼의 정보공유의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인천e지 관광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2023년 5월 15~16일 20부의 설문지를 배포 및 수거하였고, 측정항목 검수 과정에서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고 5월 23일부터 6월 21일 약 1달 간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 방법은 크게 대면 조사와 비대면 조사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는데 대면 조사는 몰 인터셉트(mall intercept) 유형의 대인 면접법인 설문지법을 활용하였고, 표본 추출은 편의표본추출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대면 조사는 조사기간 중 주말에 인천 개항장 근처를 직접 방문하여 인천e지 관광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본 연구의 목적이 기재된 안내문에 QR 코드를 삽입하여 배포하였다. 비대면 조사는 온라인 구글 설문지의 QR 코드를 SNS에 공유하여 인천e지 관광플랫폼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관광자를 대상으로 배포하였다. 설문지 배포에 있어서 서론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인천e지 관광플랫폼의 인식률과 인천 개항장 방문객 수 자체가 많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대면 및 비대면을 동시 진행하였다. 총 36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이 중 유효한 설문지 321부(89.1%)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SPSS 23.0과 AMOS 23.0을 이용하였고 빈도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산출, 구조모형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한 결과

남성이 155명(48.3%), 여성 166명(51.7%)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19세 이하 19명(5.9%), 20대 133명(41.4%), 30대 90명(28.0%), 40대 71명(21.1%), 50대 이상 8명(2.5%)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이하 126명(39.3%), 대학 재학 38명(11.8%), 대학 졸업 134명(41.7%), 대학원 재학 16명(5.0%), 대학원 졸업 7명(2.2%)이었고, 직업은 학생 73명(22.7%), 전문직 67명(20.9%), 회사원 102명(31.8%), 자영업 48명(15.0%), 기타 31명(9.7%)으로 회사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거주지를 묻는 질문에는 서울/경기/인천이 219명(68.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원도 7명(2.2%), 충청도 25명(7.8%), 전라도 10명(3.1%), 경상도 45명(14.0%), 제주도 4명(1.2%), 해외 11명(3.4%)의 분포로 나타났으며 이를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표본의 일반적 특성

구분	상세구분	명	%	구분	상세구분	명	%
성별	남성	155	48.3	직업	학생	73	22.7
	여성	166	51.7		전문직	67	20.9
학력	고졸 이하	126	39.3	회사원	102	31.8	
	대학 재학	38	11.8	자영업	48	15.0	
	대학 졸업	134	41.7	기타	31	9.7	
	대학원 재학	16	5.0	연령	19세 이하	19	5.9
	대학원 졸업	7	2.2		20대	133	41.4
거주지	서울/경기/인천	219	68.2		30대	90	28.0
	강원도	7	2.2		40대	71	21.1
	충청도	25	7.8	50대 이상	8	2.5	
	전라도	10	3.1	합계		321	100
경상도	45	14.0					
제주도	4	1.2					
해외	11	3.4					

2. 측정도구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변수들의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및 신뢰성 분석을 위해 AMOS 23.0을 이용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제거된 항목 없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적합도 지수 제한 기준을 충족($\chi^2=619.650$, $p=.000$, $df=314$, $RMR=.034$, $IFI=.954$, $TLI=.945$, $CFI=.954$, $NFI=.912$, $GFI=.878$, $AGFI=.843$)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3] 확인적 요인분석(CFA) 결과

요인명	측정항목	β	S.E	CR	AVE
성과 기대 (EE)	인천e지 관광플랫폼 이용은 유용함	.918	.067	.914	.750
	인천e지 관광플랫폼 이용은 편리함	.887	.065		
	인천e지 관광플랫폼 이용은 효율적임	.787	-		
촉진 조건 (FC)	인천e지 관광플랫폼 이용 시 차별된 이익(할인쿠폰, 예약 등)이 있음	.852	.059	.910	.631
	개인적으로 보유한 기기와 연계하여 인천e지 관광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음	.809	.059		
	인천e지 관광플랫폼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보유함		-		
쾌락적 동기 (HM)	인천e지 관광플랫폼의 AR/VR 체험은 즐거움	.844	.058	.910	.665
	인천e지 관광플랫폼의 오디오가이드, 고스트도슨트 이용은 재미있음	.839	.055		
	전반적으로 인천e지 관광플랫폼 이용은 기분이 좋아짐	.761	-		
개인 정보 보호 (PIP)	인천e지 관광플랫폼 이용 시 내 위치 정보의 노출이 걱정됨	.837	.063	.912	.674
	인천e지 관광플랫폼이 내 승인 없이 내 위치를 다른 이용자와 공유할까 걱정됨	.830	.066		
	전반적으로 인천e지 관광플랫폼에 내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함	.800	-		

요인명	측정항목	β	S.E	CR	AVE
이타적 만족 (AS)	인천e지 관광플랫폼 이용 경험을 통해 다른 관광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즐거움	.773	.068	.913	.583
	인천e지 관광플랫폼 이용 경험을 통해 다른 관광자가 더 많은 정보에 입각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에 만족함	.771	.068		
	인천e지 관광플랫폼 이용 경험을 통해 지인들이 인천e지 관광플랫폼을 이용하도록 돕고 싶음	.747	-		
사회적 영향 (SI)	인천e지 관광플랫폼을 통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나의 여행 경로 및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함	.870	.054	.910	.729
	인천e지 관광플랫폼을 통해 다른 여행자와 소통하는 것이 재미있음	.854	.053		
	인천e지 관광플랫폼을 통해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838	-		
자기 이미지 향상 (ES)	인천e지 관광플랫폼 이용 경험 공유는 나의 평판을 높일 수 있음	.869	.061	.910	.715
	인천e지 관광플랫폼 이용 경험 공유는 나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음	.845	.060		
	인천e지 관광플랫폼 이용 경험 공유는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더 많은 인지도를 얻을 수 있음	.822	-		
경제적 영향 (EI)	금전적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인천e지 관광플랫폼을 이용함	.929	.047	.908	.761
	여행 경로나 맛집 추천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인천e지 관광플랫폼을 이용함	.900	.040		
	입장권, 체험, 여행상품 등 예약·결제 가능해 인천e지 관광플랫폼을 이용함	.781	-		
정보 공유 의도 (ISI)	인천e지 관광플랫폼 이용 정보를 지인들과 공유할 것임	.869	.053	.907	.695
	인천e지 관광플랫폼 이용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것임	.868	.053		
	인천e지 관광플랫폼 이용 경험을 SNS에 게시할 의향이 있음	.808	.049		
	인천e지 관광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지인들과 공유할 의도가 있음	.786	-		

$\chi^2=619.650$, $p=.000$, $df=314$, $RMR=.034$, $IFI=.954$, $TLI=.945$,
 $CFI=.954$, $NFI=.912$, $GFI=.878$, $AGFI=.843$

자료(설명): β : 표준화 요인 부하량, S.E: 오차, CR: 개념신뢰도, AVE: 분산추출지수

본 연구의 모든 요인의 개념 신뢰도는 기준 값인 0.7 이상을 상회하였으며, 각 요인들의 분산추출지수 또한 기준 값인 0.5를 충족하여 각 구성 개념의 신뢰성과 내적일관성이 확보되었다(Hair et al. 2014).

또한, 각 요인 간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 산출을 이용하여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관관계분석은 한 변수가 변화함에 따라 대응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인천e지 관광플랫폼 사용 시 성과기대는 촉진조건($r=.519$), 쾌락적 동기($r=.652$), 개인정보보호($r=.606$), 이타적 만족($r=.407$), 사회적 영향($r=.457$), 자기이미지향상($r=.468$), 경제적 영향($r=.584$), 정보공유의도($r=.546$)와 상관이 있으며, 촉진조건은 쾌락적 동기($r=.587$), 개인정보보호($r=.515$), 이타적 만족($r=.633$), 사회적 영향($r=.601$), 자기이미지향상($r=.588$), 경제적 영향($r=.524$), 정보공유의도($r=.606$)와 상관이 있으며, 쾌락적 동기는 개인정보보호($r=.579$), 이타적 만족($r=.507$), 사회적 영향($r=.546$), 자기이미지향상($r=.528$), 경제적 영향($r=.610$), 정보공유의도($r=.569$)와 상관이 있고, 개인정보보호는 이타적 만족($r=.452$), 사회적 영향($r=.520$), 자기이미지향상($r=.497$), 경제적 영향($r=.612$), 정보공유의도($r=.564$)와 상관이 있음이 밝혀졌다. 내재적 동기 요인 중 이타적 만족은 사회적 영향($r=.596$), 자기이미지향상($r=.586$), 경제적 영향($r=.493$), 정보공유의도($r=.583$)와 상관이 있으며, 사회적 영향은 자기이미지향상($r=.653$), 경제적 영향($r=.532$), 정보공유의도($r=.583$)와 상관이 있다. 마지막으로 외재적 동기 요인 중 자기이미지향상은 경제적 영향($r=.616$), 정보공유의도($r=.615$)와 상관이 있고, 경제적 영향은 정보공유의도($r=.724$)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관계수 제공값과 분산추출지수의 비교를 통해 상관계수 제공값보다 분산추출지수가 모두 높게 나타남으로써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

3. 연구모형 적합도 및 가설 검증

가설 검증을 시도하기에 앞서 AMOS 23.0 프로그램으로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chi^2=1511.957$, $p=.000$, $df=336$, $RMR=.028$, $IFI=.824$, $TLI=.801$, $CFI=.823$, $NFI=.785$, $GFI=.713$ 등으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정된 UTAUT2와 정보공유의도 간의 관계 검증 결과, 성과기대(H 1: $\beta= .416$, $t= 10.498$), 촉진조건(H 2: $\beta= .185$, $t= 3.084$), 쾌락적 동기(H 3: $\beta= .139$, $t= 3.563$), 개인정보보호(H 4: $\beta= -.100$, $t= -1.473$)의 모든 가설이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SDT의 내재적 동기와 정보공유의도 간의 관계 검증 결과, 이타적 만족(H 5: $\beta= .154$, $t= 3.838$), 사회적 영향(H 6: $\beta= .122$, $t= 3.388$)은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SDT의 외재적 동기와 정보공유의도 간의 관계 검증 결과 자기이미지향상(H 7: $\beta= .097$, $t= 2.503$)은 지지되었으나 경제적 혜택(H 8: $\beta= .031$, $t= .485$)은 기각되었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연구모형 적합도 및 가설 검증 결과

가설	가설 경로	Coefficient	C.R.(t)	p	채택여부
H 1	성과기대 → 정보공유의도(+)	.416	10.498	.000***	지지
H 2	촉진조건 → 정보공유의도(+)	.185	3.084	.002**	지지
H 3	쾌락적 동기 → 정보공유의도(+)	.139	3.563	.000***	지지
H 4	개인정보보호 → 정보공유의도(-)	-.100	-1.473	.041*	지지(-)
H 5	이타적 만족 → 정보공유의도(+)	.154	3.838	.000***	지지
H 6	사회적 영향 → 정보공유의도(+)	.122	3.388	.000***	지지
H 7	자기이미지향상 → 정보공유의도(+)	.097	2.503	.012*	지지
H 8	경제적 혜택 → 정보공유의도(+)	.031	.485	.628	기각

$\chi^2=1511.957$, $p=.000$, $df=336$, $RMR=.028$, $IFI=.824$, $TLI=.801$,
 $CFI=.823$, $NFI=.785$, $GFI=.713$

자료(설명): * $p<0.05$ ** $p<0.01$ *** $p<0.001$

V. 결론

인천 중구 개항장 일대는 국내 최초 제1호 스마트관광도시 대상지로 선정되어 스마트한 문화 재생 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본 연구는 스마트 관광도시 인천에서 메타버스 범주에 속하는 인천e지 관광플랫폼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수정된 UTAUT2와 SDT를 통합하여 정보공유의도 간 영향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e지 관광플랫폼의 지속가능성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전략 수립에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정된 UTAUT2와 정보공유의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과기대, 촉진조건, 쾌락적 동기, 개인정보보호 모두 정보공유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 이는 UTAUT2와 정보공유의도 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본 기존의 선행연구들(Assaker et al, 2020; Gupta and Dogra 2017; Herrero and San Martín 2017; Huang 2018; Kim and Hall 2020; Ozturk et al. 2017)을 지지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둘째, SDT 중 내재적 동기인 이타적 만족과 사회적 영향 요인은 정보공유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Chae and Ko(2016), Henning-Thurau et al.(2004), Swani et al.(2017), Tong et al.(2013), Wasko and Faraj(2005)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셋째, SDT 중 외재적 동기인 자기이미지향상은 정보공유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관련 선행연구들(Burrow and Rainone 2017; Ehrenberg et al. 2008; Wu et al. 2020)과 맥락을 같이 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영향이 정보공유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들(Burgess and Green 2018; Henning-Thurau et al. 2004; Tang et al. 2016)과는 반대로 본 연구에서 경제적 영향은 정보공유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먼저 이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기존의 스마트 기술 서비스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이용자의 이용태도 및 이용의도, 기술 준비도, 기술수용모형 등과 관련된 연구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인천e지 관광플랫폼이 메타버스의 일부 유형을 활용한 AR/VR 어플리케이션임을 감안하여 기술 수용 맥락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존 연구 대부분이 다른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사용하려는 이용자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의 새로운 관광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고 이용하려는 이유가 아닌 타인에게 정보를 공유하려는 의도를 연구하려 시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기존 UTAUT2 관련 연구보다 깊이 있는 구체적인 행동의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정된 UTAUT2와 SDT를 채택하여 이론 통합적 분석을 시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겠다. 즉, UTAUT2의 프레임워크는 이용자 관점에서 기술 수용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SDT와 함께 이론을 통합한다면 기술 수용 및 채택에 대한 내재적·외재적 동기 요인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추후 스마트 기술 서비스 관련 연구 시 기술적 부분뿐만 아니라 동기 행동을 탐구하는 이론의 통합적 분석 연구의 토대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인천e지 관광플랫폼은 AR/VR 활용을 위하여 위치기반이 필수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UTAUT2에 개인정보 보호 요인을 추가하였다. 이는 UTAUT2 프레임워크를 확장하여 수정된 이론을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추후 위치기반 스마트 기술 관련 연구에 본 연구의 수정된 UTAUT2의 적용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정된 UTAUT2의 성과기대는 인천e지 관광플랫폼을 사용하기 쉽고 관광 경로를 자동으로 추적, 기록 및 게시할 수 있는 이용자 친화적 플랫폼이라고 생각하

여 인천e지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정보공유의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사진, 비디오 및 오디오 위치 태그 등을 사용하여 로드맵에 자동으로 배치하고 정확한 위치를 제공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 가능성을 쉽게 탐색하고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한 설계를 통해 혼란이나 피로도를 줄여야 할 것이다. 즉, 다른 이용자들에게 관광경험을 게시하고 공유하려는 노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술과 관련된 용이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촉진조건이 정보공유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토대로 인천e지 관광플랫폼을 활용해야만 하는 유리한 조건들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인천e지 관광플랫폼과 연계하여 주변 관광지 상권의 활성화 위한 마케팅 요소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촉진조건들은 또다시 이용자에게 긍정적 촉진조건이 되어 지역관광 활성화 및 이용자의 개인적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게 적극적인 마케팅이 요구됨을 시사하며 인천 개항장 일대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쾌락적 동기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메타버스 시대에 AR/VR을 활용한 체험적 즐거움이나 오디오가이드, 고스트도슨트 등 관광 중에 수행할 체험 활동 혹은 엔터테인먼트 지향적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인천e지 관광플랫폼에 재미있는 구성요소를 추가하는 것은 이용자의 쾌락적 동기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쾌락적 동기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메타버스의 한 유형인 게임화 전략 등을 활용하여 이용자끼리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개인정보보호가 정보공유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GPS 기능이 활성화된 인천e지 관광플랫폼이 개인의 위치 및 개인 데이터 정보를 더욱 민감하게 보호해야 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개인정보수집을 남용하는 것은 관광 관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플랫폼에 대한 이용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기도 한다(Tavakoli and Wijesinghe 2019). 이

러한 점에서 업계 전문가와 시스템 개발자는 관광자의 위치가 완전히 공개되지 않으면 인천e지 플랫폼의 AR/VR 체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를 완화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받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개인정보보호 정책 등 (Zhou 2017)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수정·삭제 등의 권리와 데이터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옵션과 같은 선택권 이외에 위치정보의 익명화나 플랫폼 자체의 보안 기능을 설명하는 가이드 제공 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모든 법적 및 운영 절차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타적 만족과 사회적 영향이 여행 관련 정보공유의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분석 결과는 관광자가 사회집단의 다른 구성원이 동일한 가상 커뮤니티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받으며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관광자가 다른 이용자와의 동일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통합을 통해 인천e지 관광플랫폼의 이용 정보나 경험 등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인천e지 관광플랫폼 개발자는 이용자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며 경험 공유 행위를 우선시하는 도구(예를 들어 실시간 이용자 간의 대화 및 사진 등을 공유하기 위한 대화창 등)를 개발하기 위한 시스템 기능을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새로운 관광자의 유입과 함께 인천e지 관광플랫폼 사용을 채택하게 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기이미지향상이 정보공유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관광자가 다른 관광자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음으로써 동기를 부여받기 때문에, 인천e지 관광플랫폼에서의 활동내역을 수치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설계가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각 이용자의 팔로우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과 유사하게 사회적 영향과 자기이미지 향상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기능을 채택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더 많은 팔로워를 확보하여 자기이미지를 향상하고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더 나은 관광 정보와 여행 경로 등을 게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상술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으므로 연구 결과를 주의 깊게 해석해야 한다. 첫째, 연구 대상이 인천e지 관광플랫폼 이용자로부터만 수집되었다. 이와 비슷한 관광플랫폼이나 보다 다양한 응답자 표본으로부터 실증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향후 연구는 보다 통찰력 있는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인식 기반 연구로 이용자의 실제 인천e지 관광플랫폼의 사용량은 측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응답자들이 설문조사 응답 전에 정의된 기간 동안 관광플랫폼을 사용해야 하는 향후 종단적 연구는 이러한 유형의 모바일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자 및 관광 관련 산업체에 보다 정확한 연구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UTAUT2 프레임워크의 확장이라는 이론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수의 요인을 활용하여 정보공유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다른 가능한 선행요인(노력기대, 가격효용, 습관, 개인화, 편의성, 이동성, 감정 등)과 함께 이용자의 행동의도를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김규미, 2023. 「뉴 노멀 시대 메타버스 관광 개념화 연구: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을 활용한 토픽모델링 분석」. 문화와융합 45(5): 747-759.
- 김규미·김남조, 2019. 「기술기반 셀프서비스(TBSS)에 대한 외식소비자의 이용태도 및 이용의도 분석: 기술준비수용모형(TRAM 모형)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31(3): 237-257.
- 김현규·정남호·부백, 2021. 「키오스크 사용 관광객의 기술준비도 성향에 따른 시장세분화 전략」. 관광연구저널 35(6): 121-134.
- 문정호·정석후·배준호, 2022. 「스마트 관광시대 도래에 따른 호텔·리조트 고객의 이용태도 연구: 확장된 통합기술수용모델(UTAUT2)을 중심으로」. 한국외식산업학회지 18(2): 109-120.
- 민소라·김진아, 2022. 「스마트공항의 긍정적 기술 준비도와 통합된 기술수용이론, 정보공유의도의 영향관계」. 관광진흥연구 10(2): 47-65.
- 박승빈, 2020. 「스마트 콜롬버스: 빈곤 지역의 모빌리티 증진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 도시연구 17: 403-419.
- 심재명, 2016. 「자기결정이론에 근거한 대학생의 학습동기와 여가동기: 동기프로파일과 동기의 영향」. 관광연구논총 28(1): 51-82.
- 정병규, 2018. 「기술수용 모델의 비교분석: UTAUT1과 UTAUT2를 중심으로」. 벤처혁신연구 1(2): 109-121.
- 왕치현·백승국·박지선, 2013. 「근대도시 르아브르와 인천의문화브랜딩 전략연구」. 프랑스문화연구 26: 327-364.
- 이인엽·한진욱, 2022. 「스크린골프장 이용의도가 골프장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확장된 통합기술수용모델(UTAUT2)을 바탕으로」.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27(4): 81-96.
- 이혜린·박근수, 2020. 「자기결정이론을 적용한 시니어 여행교육 모델 정립」. 관광레저연구 32(12): 371-390.
- 홍인기·조은혜, 2023. 「여성 소비자가 인지하는 외식 배달앱의 온라인 구전 품질이 정보 만족과 정보공유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산업혁신연구 39(1): 122-133.
- Agarwal, R., and Karahanna, E. 2000. "Time flies when you're having fun: Cognitive absorption and beliefs about information technology

- usage.” *MIS quarterly* 24(4): 665-694.
- Aitken, R., and Campelo, A. 2011. “The four Rs of place branding.” *Journal of Marketing Management* 27(9-10): 913-933.
- Assaker, G., Hallak, R., and El-Haddad, R. 2020. “Consumer usage of online travel reviews: Expanding the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2 model.” *Journal of Vacation Marketing* 26(2): 149-165.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Ajzen, I., and Fishbein, M. 1988. “Theory of reasoned action-Theory of planned behavior.” *University of South Florida* 2007: 67-98.
- Baggio, R., Micera, R., and Del Chiappa, G. 2020. “Smart tourism destinations: a critical reflection.”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Technology* 11(3): 407-423.
- Binkhorst, E., and Den Dekker, T. 2013. “Agenda for co-creation tourism experience research.” In *Marketing of tourism experiences*, 219-235. London: Routledge.
- Buhalis, D. and Karatay, N. 2022. “Mixed reality (MR) for generation Z in cultural heritage tourism towards metaverse.”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Tourism 2022: Proceedings of the ENTER 2022 eTourism Conference*, 16-27.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 Burgess, J., and Green, J. 2018. *YouTube: Online video and participatory culture*. John Wiley & Sons.
- Burrow, A. L., and Rainone, N. 2017. “How many likes did I get?: Purpose moderates links between positive social media feedback and self-esteem.”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69: 232-236.
- Chae, H., and Ko, E. 2016. “Customer social participation in the social networking services and its impact upon the customer equity of global fashion brand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9(9): 3804-3812.
- Chen, C. J., and Hung, S. W. 2010. “To give or to receive? Factors influencing members’ knowledge sharing and community promotion

- in professional virtual communities.” *Information & management* 47(4): 226-236.
- Cheon, S. H., Reeve, J., and Song, Y. G. 2016. “A teacher-focused intervention to decrease PE students’ amotivation by increasing need satisfaction and decreasing need frustration.”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38(3): 217-235.
- Compeau, D. R., and Higgins, C. A. 1995. “Application of social cognitive theory to training for computer skills.”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6(2): 118-143.
- Datta, A. 2015. “A 100 smart cities, a 100 utopias.” *Dialogues in Human Geography* 5(1): 49-53.
- Davis, F. D. 1989.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Al-Suqri, MN, Al-Aufi, AS: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and Technology Adoption* 205-219.
- Davis, F. D., Bagozzi, R. P., and Warshaw, P. R. 1992. “Extrinsic and intrinsic motivation to use computers in the workplace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2(14): 1111-1132.
- Deci, E. L., and Ryan, R. M. 1980. “Self-determination theory: When mind mediates behavior.” *The Journal of mind and Behavior* 1(1): 33-43.
- _____ . 1985. “The general causality orientations scale: Self-determination in persona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2): 109-134.
- Dedeoğlu, B. B., Taheri, B., Okumus, F., and Gannon, M. 2020.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that consumers attach to social media sharing(ISMS):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Tourism Management* 76: 103954.
- Ehrenberg, A., Juckes, S., White, K. M., and Walsh, S. P. 2008. “Personality and self-esteem as predictors of young people’s technology use.” *Cyberpsychology & behavior* 11(6): 739-741.
- Encalada, L., Boavida-Portugal, I., Cardoso Ferreira, C., and Rocha, J. 2017. “Identifying tourist places of interest based on digital imprints: Towards a sustainable smart city.” *Sustainability* 9(12): 2317.
- Fishbein, M., and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 Don Mills,

Ontario.

- Gretzel, U. 2011. "Intelligent systems in tourism: A social science perspective." *Annals of tourism research* 38(3): 757-779.
- Gretzel, U., Zhong, L., and Koo, C. 2016. "Application of smart tourism to cities."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Cities* 2(2). DOI: <https://doi.org/10.1108/IJTC-04-2016-0007>
- Gupta, A. and Dogra, N. 2017. "Tourist adoption of mapping apps: A UTAUT2 perspective of smart travellers." *Tourism and hospitality management* 23(2): 145-161.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and Tatham, R. L. 2014. *Pearson new international edition, Multivariate data analysis*(Seventh ed.), Pearson Education Limited Harlow, Essex.
- Hennig-Thurau, T., Gwinner, K. P., Walsh, G., and Gremler, D. D. 2004. "Electronic word-of-mouth via consumer-opinion platforms: what motivates consumers to articulate themselves on the internet?" *Journal of interactive marketing* 18(1): 38-52.
- Herrero, Á., and San Martín, H. 2017. "Explaining the adoption of social networks sites for sharing user-generated content: A revision of the UTAUT2."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1: 209-217.
- Hsiao, C. C. 2020. "Understanding content sharing on the internet: test of a cognitive-affective-conative model." *Online Information Review* 44(7): 1289-1306.
- Huang, X. 2018. "Social media use by college students and teachers: An application of UTAUT2." Ph.D. diss., Walden University.
- Huang, S. L., and Kuo, S. Y. 2020. "Understanding why people share in the sharing economy." *Online Information Review* 44(4): 805-825.
- Huang, Y. C., Backman, K. F., Backman, S. J., and Chang, L. L. 2016. "Exploring the implications of virtual reality technology in tourism marketing: An integrated research frame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18(2): 116-128.
- Jadin, T., Gnamb, T., and Batinic, B. 2013. "Personality traits and knowledge sharing in online communiti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9(1): 210-216.

- Jarvenpaa, S. L., and Staples, D. S. 2000. "The use of collaborative electronic media for information sharing: an exploratory study of determinants." *The Journal of Strategic Information Systems* 9(2-3): 129-154.
- Kim, M. J., and Hall, C. M. 2020. "What drives visitor economy crowdfunding? The effect of digital storytelling on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Tourism Management Perspectives* 34: 100638.
- Kummitha, R. K. R., and Crutzen, N. 2017. "How do we understand smart cities? An evolutionary perspective." *Cities* 67: 43-52.
- Kuriakose, A., Sajoy, P. B., and George, E. 2022. "Modelling the consumer adoption intention towards unified payment interface (UPI): An extended UTAUT2 model with relative advantage, add-on services and promotional benefits." In *2022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Technology and Management(IRTM)*, 1-7. The Conference held in Kolkata, India, 24-26 February.
- Lakhani, K. R., and Von Hippel, E. 2003. "How open source software works: "free" user-to-user assistance." *Research Policy* 32(6): 923-943.
- Lawler, E. E. 1984. "The strategic design of reward systems."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9(1): 7-16.
- Lin, T. H., Lu, H. P., Hsiao, K. L., and Hsu, H. H. 2014. "Continuance intention of Facebook check-in service users: An integrated model."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42(10): 1745-1760.
- Lun, T. C., and Hanafiah, M. H. 2021.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DETERMINANTS OF USER SATISFACTION AND ITS EFFECT ON ELECTRONIC WORD-OF-MOUTH ON ONLINE GROCERY." *International Journal of Infrastructure Research and Management* 9(2): 113-121.
- Li, Xiao. 2022. "Application exploration of Daqing smart tourism big data based on association rule mining and machine learning." In *2022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al Engineering, Big Data and Algorithms(EEBDA)*. The Conference held in Changchun, China, 25-27 February.
- Ma, L., Zhang, X., and Yan Ding, X. 2018. "Social media users' share

- inten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An empirical study based on WeChat.” *Online Information Review* 42(6): 784-801.
- McWilliam, G. 2000. “Building stronger brands through online communities.” *MIT Sloan Management Review* 41(3): 43-54.
- Medeiros, M., Ozturk, A., Hancer, M., Weinland, J., and Okumus, B. 2022. “Understanding travel tracking mobile application usage: An integration of self determination theory and UTAUT2.” *Tourism Management Perspectives* 42: 100949.
- Moore, G. C. and Benbasat, I. 1991.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the perceptions of adopting an information technology innovation.”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2(3): 192-222.
- Nafrees, A. C. M., and Shibly, F. H. A. 2021. “Smart technologies in tourism.” *A study using systematic review and grounded theory* 4: 8-13.
- Narangajavana Kaosiri, Y., Callarisa Fiol, L. J., Moliner Tena, M.Á., Rodríguez Artola, R. M., and Sánchez García, J. 2019. “User-generated content sources in social media: A new approach to explore tourist satisfaction.” *Journal of Travel Research* 58(2): 253-265.
- Neuhofer, B., Buhalis, D., and Ladkin, A. 2012. “Conceptualising technology enhanced destination experiences.” *Journal of Destination Marketing & Management* 1(1-2): 36-46.
- Nikou, S. A., and Economides, A. A. 2017. “Mobile-Based Assessment: Integrating acceptance and motivational factors into a combined model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echnology Acceptanc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68: 83-95.
- Okkonen, A. 2019. “Food selfies and impression management: Motivational drivers of food picture sharing on social media.” Bachelor’s Thesis., Aalto University.
- Okyere-Kwakye, E., and Nor, K. M. 2011. “Individual factors and knowledge sharing.”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3(1): 66-72.
- Ozturk, A. B., Bilgihan, A., Salehi-Esfahani, S., and Hua, N. 2017. “Understanding the mobile payment technology acceptance based on valence theory: A case of restaurant transactions.” *International*

- Journal of Contemporary Hospitality Management* 29(8): 2027-2049.
- Palau-Saumell, R., Forgas-Coll, S., Sánchez-García, J., and Robres, E. 2019. "User acceptance of mobile apps for restaurants: An expanded and extended UTAUT-2." *Sustainability* 11(4): 1210.
- Pencarelli, T. 2020. "The digital revolution in the travel and tourism industry." *Information Technology & Tourism* 22(3): 455-476.
- Rao, B., and Minakakis, L. 2003. "Evolution of mobile location-based services." *Communications of the ACM* 46(12): 61-65.
- Ryan, R. M., and Deci, E. L. 2000.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1): 54-67.
- Shang, L., Zhou, J., and Zuo, M. 2021. "Understanding older adults' intention to share health information on social media: the role of health belief and information processing." *Internet Research* 31(1): 100-122.
- Sharma, S., Singh, G., Pratt, S., and Narayan, J. 2021. "Exploring consumer behavior to purchase travel online in Fiji and Solomon Islands? An extension of the UTAUT frame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e,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15(2): 227-247.
- Sun, R., Li, C., Millet, B., Ali, K. I., and Petit, J. 2022. "Sharing news with online friends: A study of network homophily, network size, and news type." *Telematics and informatics* 67: 101763.
- Swani, K., Milne, G. R., Brown, B. P., Assaf, A. G., and Donthu, N. 2017. "What messages to post? Evaluating the popularity of social media communications in business versus consumer markets." *Industrial Marketing Management* 62: 77-87.
- Tang, Q., Zhao, X., and Liu, S. 2016. "The effect of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on mobile coupon sharing in social network sites: the role of coupon proneness." *Internet Research* 26(1): 101-119.
- Tavakoli, R., and Wijesinghe, S. N. 2019. "The evolution of the web and netnography in tourism: A systematic review." *Tourism Management Perspectives* 29: 48-55.
- Taylor, S., and Todd, P. A. 1995. "Understanding information technology usage: A test of competing models."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6(2): 144-176.

- Thompson, R. L., Higgins, C. A., and Howell, J. M. 1994. "Influence of experience on personal computer utilization: Testing a conceptual model."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11(1): 167-187.
- Tong, Y., Wang, X., Tan, C. H., and Teo, H. H. 2013. "An empirical study of information contribution to online feedback systems: A motivation perspective." *Information & Management* 50(7): 562-570.
- Venkatesh, V., Morris, M. G., Davis, G. B., and Davis, F. D. 2003.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Toward a unified view." *MIS quarterly* 425-478.
- Venkatesh, V., Thong, J. Y., and Xu, X. 2012. "Consumer acceptance and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extending the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MIS quarterly* 157-178.
- Wang, D., Li, X. R., and Li, Y. 2013. "China's "smart tourism destination" initiative: A taste of the service-dominant logic." *Journal of Destination Marketing & Management* 2(2): 59-61.
- Wasko, M. M., and Faraj, S. 2005. "Why should I share? Examining social capital and knowledge contribution in electronic networks of practice." *MIS quarterly* 35-57.
- Wu, S., Ren, M., Pitafi, A. H., and Islam, T. 2020. "Self-image congruence, functional congruence, and mobile app intention to use." *Mobile Information Systems* 1-17.
- Xu, F., Buhalis, D., and Weber, J. 2017. "Serious games and the gamification of tourism." *Tourism management* 60: 244-256.
- Yun, H., Han, D., and Lee, C. C. 2013. "Understanding the use of location-based service applications: do privacy concerns matter?" *Journal of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14(3): 220-230.
- Zhang, K., Zhu, J., Huang, X., Wang, H., Dina, V., Kumushai, K., Zhao, Z., and Zeng, P. 2021. "Research o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Sanya Smart Tourism Information Platform Based on Federated Migration Algorithm." In *2021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gital Society and Intelligent Systems(DSInS)*, 312-318. The Conference held in Chengdu, China, 3-4 December.

Zhang, R., Chen, J. Q., and Lee, C. J. 2013. "Mobile commerce and consumer privacy concerns." *Journal of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53(4): 31-38.

Zhou, T. 2017. "Understanding location-based services users' privacy concern: An elaboration likelihood model perspective." *Internet Research* 27(3): 506-519.

"대한민국 제 1호 스마트 관광플랫폼 '인천e지' 출시." 뉴스로. 2021.6.30. <https://www.newsro.kr/대한민국-제1호-스마트-관광플랫폼-인천e지-출시>(검색일: 2022년 3월 14일)

"인천시 국내 최초 스마트관광도시로 공식 출범." 국토교통부 Smart City Korea 보도자료. 2021.7.29. <https://smartcity.go.kr/2021/07/29/17910>(검색일: 2022년 3월 14일)

"한국형 지역관광추진조직(DMO), 글로컬 지역관광 플랫폼 강원 DMO." Hotel & Restaurant, 2021.10.24. <http://hotelrestaurant.co.kr/mobile/article.html?no=9491>(검색일: 2022년 3월 17일)

"70억 들여 개발한 여행앱 '인천e지' 내국인 1.9%만 안다." 인천일보. 2022.8.2.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5337>(검색일: 2023년 9월 19일)

개인정보포털(<https://www.privacy.go.kr/front/contents/cntntsView.do?contsNo=27>)

서울특별시(https://www.seoul.go.kr/helper/privacy_faq.do#)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 관광(<https://www.icjg.go.kr>)

인천e지(<https://m.incheoneasy.com>)

국 문 초 록

메타버스 시대 스마트관광도시

인천의 관광플랫폼(인천e지) 정보공유의도 연구:

확장된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2)과 자기결정이론(SDT)의 이론통합적 분석

김규미(강원도립대학교 동해안지역발전연구소 연구교수)

한진석(동국대학교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MICE관광산업연구소 연구교수)

본 연구는 다가오는 메타버스 시대에 인천e지 관광플랫폼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정보기술수용과 관련하여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확장된 통합기술수용이론의 수정된 버전과 자기결정이론의 통합을 통해 정보공유의도와 영향 관계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천e지 관광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2023년 5월 23일부터 6월 21일 약 1달간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23.0과 AMOS 23.0을 이용하였고, 빈도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산출, 구조모형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수정된 UTAUT2의 하위요인과 SDT 중 경제적 혜택을 제외한 요인 모두는 정보공유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계점을 논의하였고, 인천e지 관광플랫폼의 지속가능성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메타버스 시대, 스마트관광도시, 정보공유의도, 확장된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2), 자기결정이론(SDT)

Abstract

A Study on the Intention to Share Information of Incheon's Tourism Platform (Incheon easy AR), a Smart Tourism City in the Metaverse Era:

Theoretical Integration Analysis of UTAUT2 (the extended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and SDT (self-determination theory)

Kim, Kyumeo(Research Professor, East Coast Regional Development Institute,
Gangwon State University)

Han, Jinseok(Research Professor, Department of Hotel Tourism and Restaurant
Management, Dongguk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tourism platform (Incheon easy AR) in the upcoming Metaverse era. To this end, the influence of the intention to share information was identified through the integration of self-determination theory (SDT) and a modified version of UTAUT2 (the extended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which has a high explanatory power in relation to information technology acceptance. To achieve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from May 23, 2023, to June 21, 2023, targeting Tourism Platform (Incheon easy AR) users.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23.0 and AMOS 23.0, and frequency, factor, correlation, and structural model analyses were perform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ll subfactors of the UTAUT2 and SDT, except for economic benefi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ntion to share information. Based on the results, the limitations are discussed, and plans and implications for the sustainability and revitalization of the Tourism Platform (Incheon easy AR) were presented.

Key words: Metaverse Era, Smart Touris City, Intention to Share Information, UTAUT2(the extended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SDT(self-determination theory)

Agile Management to Agile Collaboration in the Nonprofit Sector: Cas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iwon Suh* · Jenifer Reiner** · Jung Wook Kim***

I . Introduction

II . Literature Review

1. Agile Management
2. Agile Collaboration
3. COVID-19 Pandemic and its First Large-scale Wave in South Korea

III . Methodology

1. Interviews
2. News Article Search
3. Analysis Process

IV . Findings: Agile Management and Collaboration

1. Agile Management Routines
2. Agile Collaboration: Procedural Simplicity
3. Agile Collaboration: Adaptive Structure

V . Discussion and Conclusions

* Assistant Professor,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 PhD Student,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공동저자

*** Assistant 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교신저자(E-mail: jungwookkim@uos.ac.kr,
Tel: 02-2670-2716)

<http://doi.org/10.34165/urbanr.2023.24.169>

투고(접수)일 2023.3.22. 심사(수정)일 2023.4.11. 게재확정일 2023.12.14.

I. Introduction

Since the concept of agile was first introduced to the public and nonprofit sectors several decades ago,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have increased attention to its application over the past few years(Kirkpatrick et al, 2021; Mergel et al. 2021). Even more recently, the concept of agile nonprofit management has received significant consideration. Since rapidly changing uncertainties exist as a result of the COVID-19 pandemic, organizational agility has become critical to the nonprofit sector enabling them to respond to the crisis, provide necessary services to the public quickly and effectively as well as to survive in such difficult environments(Edwards and Ott 2021). During the pandemic, the demand for service provision increased whereas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for the nonprofits were exacerbated(Shi et al, 2020). Considering that nonprofit organizations are more likely to have mission-oriented cultures that lead them to be more flexible and innovative(Ott and Dicke 2012; Suh et al. 2018), nonprofits might also be more readily eligible to adopt agility.

In this sense, the concept of ‘agile’ helps us to explore how best to prepare for unexpected and unpredictable crise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While the role of nonprofits in response to a crisis is essential, especially to local governments, much of the literature focuses on the roles of nonprofits in natural disasters and the role of nonprofits in infectious diseases-related crises remains largely unexplored(Kim and Jung 2016; Shi et al. 2020). Also,

we know little about the extent to which nonprofits adopt agile management in their service provision. To our knowledge, there is no study that specifically focuses on the nonprofits, using the concept of 'agile.' For these reasons, we focus on cas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o study agile practices in the nonprofit sector.

This paper uses a case study approach and aims to answer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 What characteristics of agility can be considered for nonprofit management and collaboration in crisis management? By collecting cases in South Korea during the initial stages of the pandemic, this study explores how South Korean nonprofit organizations quickly adapted to new or modified service demands, continued seamless provision of primary services, and effectively worked with both governments and other nonprofits.

We first review the concept of agile and its application in management and collaboration and then provide background information regarding the South Korean context during the COVID-19 crisis. Next, we discuss the methodology and findings, respectively. Finally, we conclude with a presentation of our findings and the implications for application of the agile approach in the nonprofit sector.

II. Literature Review

The concept of agile is rooted in software development, where it was developed to respond to rapidly changing and unpredictable software markets(Rigby et al. 2016). One of the hallmark characteristics of agile management of software development is the deliberately incremental and iterative approach in contrast to traditional waterfall management of product delivery of the final product(Janssen and van der Voort 2016; Mergel 2016). Recently, agile management has been translated from the private sector to use in operations of public and third sector agencies(Mergel 2016; Mergel et al. 2021). Responsiveness is fundamental to agile management, prioritizing the needs of the customer over process. Further, agile management acknowledges timely response, continual improvement, and simple and sustainable solutions provided by a multi-disciplinary team which highlights self-organization and reflection throughout the process(Denning 2016). As an overarching management approach, agile acknowledges the need for flexibility and resiliency within an organization to maintain operational and organizational integrity, and promotes evolving management through collaboration between self-organizing, cross-functional teams(Denning 2016; Duchek 2020; Mergel et al. 2021).

Although the term ‘agile’ has recently begun to be used explicitly, a great deal of research dedicated to examining and evaluation of crisis management has adopted the concept of agile management

over the past decades. For example, McLoughlin(1985) outlined four components of the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System(IEMS) - Mitiga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 and argued that emergency management should be managed in an integrated manner, including collaboration with various community groups. Utilization of agile can also reinforce all activities within the IEMS approach through incremental assessment and implementation of responses that minimize risk(mitigation), develop emergency scenarios(preparedness), activate flexible solutions(response), and provide continuity of vital systems(recovery)(McLoughlin 1985).

Additionally, Comfort(2007) proposed 4Cs - Cognition, Communication, Coordination, and Control. This approach highlights the essential roles of cognition and coordination in timely identification of the risk and coordinates the response internally. Agile is uniquely suited for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4Cs model by Comfort(2007) using incremental actions, frequent feedback and empowered practitioners to identify and communicate the threat, then coordinate the response and control the crisis. More recently, Darkow(2019) categorized resilience into the three types of organizational crisis management - “the plan to resist approach, the containing crisis approach, and integral, capability-based understanding approach”(Darkow 2019, 149). The first two categories are common approaches that are largely based on preparation and mitigation; however, the integrated approach includes iterative evaluation inherent in agile management.

As such, agile is incorporated into the steps and frames of these crisis management practices but is not specifically described or explained. Therefore, the following sections focus on the agile concept, by specifically highlighting two aspects: 1) routines of agile management, and 2) structure and process of agile collaborations as an expanded area.

1. Agile Management : Sensing, Interpreting, and Responding Routines

Reviewing literature from a wide range of disciplines, Kirkpatrick and her colleagues(2021, 69) defined Organizational Agility(OA) as “the capacity to adapt quickly and effectively in response to, or in expectation of, changes in the organization’s environment”. Keywords demonstrating potential application of agile management include ‘adaptive,’ ‘flexible,’ ‘responsive,’ and ‘resilient’(Beekharry et al. 2016; Duchek 2020; Duit 2016; Janssen and van der Voort 2016; Kirkpatrick et al. 2021; Lee et al. 2020a; Lee et al. 2020b; Moon 2020).

The strategic deployment of intra-agency agility leads to flexible and adaptive coordination of resources, allowing the response to break from set procedures in order to address immediate and evolving needs. Adaptive and flexible management varies by organization and situation(Janssen and van der Voort 2016); however, it generally focuses on the internal structure of an organization and how it performs at either end of the structural

spectrum between rigid hierarchy procedures and empowered decision-making through information sharing and use of technology(Chen 2012; Crichton et al, 2009; Duchek 2020; Janssen and van der Voort 2016; Kapucu et al, 2010a; Mergel et al, 2021; Smith 2010; Yap et al, 2014).

Agile highlights organizations that better cope with situations that keep changing(Mergel et al, 2021; Moon 2020). Lessons learned from previous crises are an important part of being flexible and adaptive(Lee et al, 2020a; Lee et al, 2020b) as organizations use a reflexive feedback process to improve response to the current crisis and prepare for the next one with improved procedures and connections to resources. While each disaster or crisis has a unique set of circumstances, the benefit of prior experience strengthens collaboration and promotes innovative responses as the current situation unfolds.

Aspects of agile management are evident in each of the models previously discussed. One commonality is that each addresses the role of routine procedures internal to organizational operations and structure. Kirkpatrick further identifies three types of routines - 1) Sensing, 2) Interpreting, and 3) Responding - that support agility and are specified constructs of “Governmental Organizational Agility Assessment(GOAA)” -(Kirkpatrick et al, 2021). Situational awareness is a key component of agile routines. Sensing is linked to the ability to anticipate environmental changes, opportunities and evolving threats(Felipe et al, 2016; Overby et al, 2006; Teece et al, 2016). Therefore, sensing requires certain procedures that

include routine surveys of the external environment in anticipation of emerging opportunities and threats. In particular, “strategic sensitivity”(Doz and Kosonen 2010, 371) is a continual process that is embedded at all levels of the organization and is a component of the organizational culture(Butler and Surace 2015; Doz and Kosonen 2010; Sambamurthy et al, 2003; Worley et al, 2014). In other words, regardless of their positions, all the members within an organization are proactively and continuously involved in collecting and sharing information about perceived environmental changes.

While sensing and interpreting are coterminous routines which require balance of external dynamics and internal structure(Brueller et al, 2014; Edmondson 1999; Harraf et al, 2015; Hopkin 2014; Kirkpatrick et al, 2021), interpreting specifically involves using external dynamics to reflect on internal structures and the provision of services to external customers. Paired with sensing, interpreting involves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the unique competencies of the organization and its ability to adapt to the emerging crisis(Dyer and Shafer 2003; Harraf et al, 2015).

Finally, organizational responsiveness is built on the foundation of sensing and interpreting routines(Brueller et al, 2014; Nejatian and Zarei 2013; Overby et al, 2006; Zhang and Sharifi 2000). Communication of external perceptions requires information sharing(Alavi et al, 2014; Barbaroux 2011; Bonilla 2015; Breu et al, 2002; Butler and Surace 2015; Edmondson 1999; Gren et al, 2015; Nijssen and Paauwe 2012; Pellissier 2012) which ultimately results in “experiment[ing] and prototyping” rapid response

scenarios(Kirkpatrick et al. 2021, 72). Information sharing and internal management enable adaptive routines and rapid response through an established organizational culture that builds employee readiness(Alavi et al. 2014; Butler and Surace 2015; Harraf et al. 2015; Holsapple and Li 2008; Hopkin 2014; Jaaron and Backhouse 2014; Zhang 2011). Agile organizational management considers a variety of alternative responses, but implements tactical action appropriately scaled to the environmental changes(Barbaroux 2011; Hamel and Valikangas 2003; Harraf et al. 2015; Holsapple and Li 2008; Nijssen and Paauwe 2012; Overby et al. 2006; Teece et al. 2016). The upper part of [Figure 1] summarizes the above indications of agile management: 1) all employees at all levels are involved, 2) continuously collecting and sharing information, 3) sensitivity to external environments, 4) experimenting rapid responses scenarios, and 5) continuously changing ongoing implementation.

2. Agile Collaboration

From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perspective, nonprofits are viewed as partners with their horizontal networks and are involved in decision making, resulting in democratic accountability(Hutton et al. 2016; Kettl 2000). As a proactive form of collaborative governance, coproduction enables nonprofits to influence as well as build ownership on specific policy practices(Steen and Brandsen 2020; Whitaker 1980). As such, partnerships of shared knowledge

and resources furthers provision of both regular services as well as emergency responses(Ansell and Gash 2008; Jeong and Kim 2021). Effective operations during a crisis rely on interdependency which is based on establishing inter- and intra-agency trust prior to the event(Crichton et al. 2009; Kapucu et al. 2010a; kapucu et al. 2010b). Notwithstanding, we often see inflexible management and a lack of coordination in response to disasters(kapucu et al. 2010b).

Thomson and Perry(2006, 24) identified five key dimensions of the collaboration process that include 1) governance, 2) administration, 3) organizational autonomy, 4) mutuality, and 5) norms of trust and reciprocity and argued that “two are structural dimensions(governing and administering), two are dimensions of social capital(mutuality and norms), and one is an agency dimension(organizational autonomy)” Of the structural dimensions, the governance dimension highlights the essential roles of shared power and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through which agreements and commitments are made while the administration dimension focuses on the administration side of practices such as leadership and competencies.

The governance dimension describes that as the collaboration process entails a series of interactions and negotiations between parties, “collaboration evolves…over time”(Thomson and Perry 2006, 22). To establish each party’s commitment with clear roles and responsibilities, thus, it is highly likely that reaching an agreement may require lengthy communication and negotiation(Babiak and Thibault 2009; Jang et al. 2015; Thomson and Perry 2006). Such a

lengthy process may become a challenge for effective collaboration in a crisis that demands a quick respon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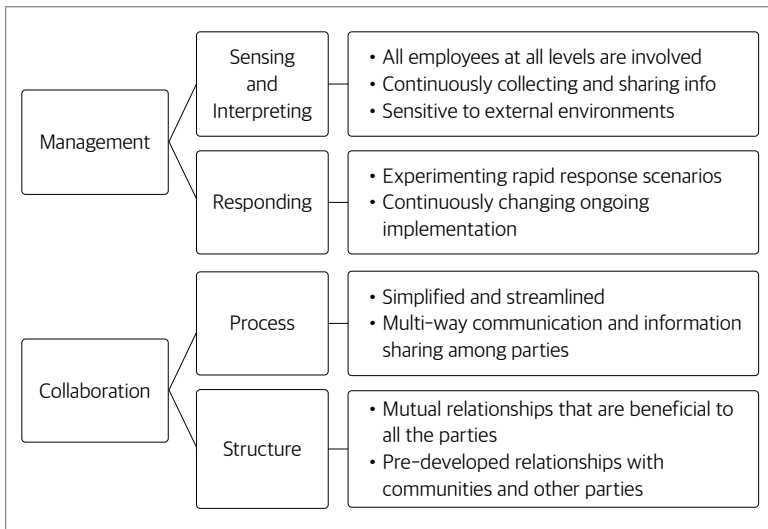
In this sense, the concept of agile benefits both governments and nonprofits, promoting more effective collaboration as well as coordination of appropriate responses to specifically complex crisis situations(Janssen and van der Voort 2016). Agile assumes a degree of failure, accepts trial and error, and encourages learning and improvement from trials(Edwards and Ott 2021; Lee et al, 2020a; Lee et al. 2020b). The core agile principle of reflection regularly considers how to improve the process. Its application is not linear but iterative and reflective; leading organizations to try new tactics and innovative responses without fear of failure(Lee et al. 2020a; Mergel 2016). Applying such an agile approach, parties quickly make a decision, then focus on the innovation necessary to adequately address immediate needs rather than waiting to reach mutual agreements. However, continuous learning and improvement, especially in a collaborative activity, may become challenging with the hassles of lingering processes. Therefore, simplified and streamlined procedures are necessary to enable such agile practices.

The third dimension, organizational autonomy, talks about the tension between self-interest and the collective interest among the parties, whereas the last two dimensions, mutuality and norms, describe trust and relationships that are mutually beneficial to every party(Thomson and Perry 2006). These dimensions emphasize the essential roles of communication, including sharing

information and face-to-face dialogue(Ansell and Gash 2008; Babiak and Thibault 2009; Wood and Gray 1991). Particularly in a crisis, multi-way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are critical for faster and more flexible response because delivered information tends to be inaccurate and emotional(Beekharry et al. 2016). Since agile focuses on empowering all responders and stakeholders to collaborate to find solutions in a very timely manner, communication between organizations at the front-line level can result in transparent information sharing with other organizations as well as with the public(Jeong and Kim 2021).

As noted earlier, hierarchical organizations which depend on a sequence of rigid procedures are not very adaptive and, therefore, not well suited to manage an intense and growing crisis. In a crisis that is constantly changing and unpredictable, collaborative practices should move faster than can be done with waterfall approaches. An agile approach is not dependent upon hierarchical approval and emphasizes bottom-up change based on the discretion available to all actors(Mergel et al. 2021). These characteristics are also essential elements of effective collaboration which requires horizontal and interdependent relationships(Thomson and Perry 2006). In this sense, it is worth noting that the relationship among organizations needs to be developed during a normal time to then quickly respond during a time of crisis. Pre-developed networks with constant communication among organizations enable collaborative activities to respond to public needs more effectively in a crisis. In sum, applying the concept of agility to collaboration

can result in policies that are more responsive and more closely aligned to public needs(Mergel et al, 2021). From the literature review, we propose two areas - process and structure - which can adopt agile practices as shown in [Figure 1]



[Figure 1] Theoretical Framework

3. COVID-19 Pandemic and its First Large-scale Wave in South Korea

Based on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2015 MERS outbreak, South Korea improved its health reporting system. When information emerged about an unknown pneumonia in China in December 2019(Kim et al. 2020),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n issued the first alert on January 3 and correspondingly raised the national alert level to Level I. By the time the first case was

confirmed on January 20, 2020, protocols were already set up at 118 institutions. Eight days later, 288 selective care facilities were activated. Rapid development and approval of a COVID-19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RT-PCR) test on February 4 was an extraordinary, coordinated effort between public and private entities.

By February 23, 2020, less than 60 days after the first alert, the country was at the highest alert level.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coordination with the health care system and citizens, actively deployed an aggressive response specifically adapted to address the outbreak in Daegu and North Gyeongsang province(Moon 2020). According to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KCDC), the first large-scale wave started on February 18, 2020, when the positive cases surged abruptly with community transmission caused by a religious group Shincheonji in Daegu. The nation responded to the needs of the province(Lee et al. 2020b). As South Korea adapted to control the outbreak, management of the crisis was maintained at the national level.

To summarize, the South Korean response included proactive acknowledgment of the potential threat which in turn triggered coordinated response at the local and national levels and activated innovative methods to quickly create a test. “This was possible due to widely distributed cognition and crisis management capabilities cultivated from years of shared experience, repeated interactions, routinized practices, and continued structural reform”(Lee et al. 2020b, 732). South Korea put the country on alert on January

3, then continually and critically evaluated the crisis. It issued multiple updates to case definition as the crisis unfolded and with increased knowledge about the disease(Kang et al, 2020). Innovative and expedient responses came from collaboration between several government agencies, private sector companies, nonprofit organizations, and citizens. Integrated coordina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agencies led to the quick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testing. Support of the governmental efforts were reinforced by a culture focused on community and volunteerism. An estimated 246 volunteer centers provided community service in the first six months of 2020, providing disinfection, supporting public information campaigns, and distributing meals(Jeong and Kim 2021).

III. Methodology

By adopting a case study approach that allows us to explore how organizations react in a specific way under a specific context, this study explores how nonprofit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responded to problems as they arose with the spread of COVID-19 or what kinds of challenges the organizations encountered under the condition of COVID-19(Yin 2018). Cases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by conducting interviews with nonprofit leaders and by reviewing news articles that pertained to nonprofit activities dealing with COVID-19. Review of the interviews and news articles helped us to understand and analyze how nonprofit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responded to the COVID-19 at the onset of the outbreak of the pandemic. The approaches used to collect data are essential because the cases of agile management and collaboration may not be fully detectable through publicly available data. We focused on the first large-scale wave(2nd wave) of the pandemic in South Korea([Table 1]). This wave started on February 18, 2020, and ended in early May 2020, but several small outbreak clusters occurred until August 2020.

[Table 1] COVID-19 Waves in South Korea

Wave	Dates	Note
1st wave	01/20/2020-02/17/2020	
2nd wave	02/18/2020-05/05/2020	1st large scale
3rd wave	05/06/2020-08/11/2020	
4th wave	08/12/2020-11/12/2020	2nd large scale

Source: Suh et al.(2023)

1. Interviews

We conducted unstructured interviews with senior staff members of nonprofit organizations in Seoul and Incheon between June 1 and June 11 and between September 22 and 29, 2020. We chose two mega-cities, City of Seoul and City of Incheon, for the case study interviews with nonprofit organizations for the following reasons. The combined region of Seoul(the capital and the biggest city in South Korea) and Incheon(3rd biggest city of South Korea) is a representative area to understand social activities and the nonprofit sector in South Korea. These two cities are located close to each other and their combined region accounts for 27 percent of GDP in

South Korea(E-index of South Korea Website). Also, 25 percent of the total nonprofit organizations are registered in these two local governments(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Website). Furthermore, because traveling to a different part of the country was discouraged between February and September 2020, we decided to focus on these two mega-cities where one of the authors works.

Selecting the nonprofits. This study chose two types of nonprofit organizations for the interviews. The first type, intermediary centers, are mainly funded by local governments to support nonprofits in the region(Kim et al. 2019). These centers play several supporting roles by providing incubating programs for nonprofits and education programs for their staff members. In addition, the centers build networks with their local communities, other nonprofits, and social enterprises, acting as an information hub. Because of their established networks, they know more cases than other types of nonprofits. Further, they can objectively answer the interview questions as a third party. Among the 55 intermediary centers located in Seoul and Incheon, three centers in Seoul and two centers in Incheon were finally selected.

One of the biggest nonprofit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was also selected for the interview because their services cover most of the country, by providing human services through a large number of branches nationwide. This large nonprofit also plays a role in funding other small nonprofits. To select the five intermediary centers and the one large nonprofit organization, the referral sampling technique was used based on nonprofit leaders, public

officials, and academic researchers' recommendations(Singleton and Straits 2010). The referees evaluated these six nonprofit organizations as the most proactively involved nonprofits in the reg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Conducting interviews. For each nonprofit organization, we chose an executive director or a manager whose main role is to regularly communicate with other nonprofits in the region. In June 2020, we interviewed two executive directors of intermediary centers in Incheon(Interviewee #1, #2) and a manager of the nonprofit organization in Seoul(Interviewee #3). Then, we interviewed executive directors of three intermediary centers in Seoul(Interviewee #4, #5, #6). All the interviews were conducted in person by visiting the nonprofit offices. [Table 2] describes interviewee profiles and their organizations.

[Table 2] Interview Participants

Interviewee	Position	Organization Type	Service Area	Location
1	Executive Director	Intermediary Center for Community Organization	Metropolitan	Incheon
2	Executive Director	Intermediary Center for Social Economy	Metropolitan	Incheon
3	Manager	Nonprofit	Nationwide	Seoul
4	Executive Director	Intermediary Center for Community Organization and Social Economy	District	Seoul
5	Executive Director	Intermediary Center for Community Organization and Social Economy	District	Seoul
6	Executive Director	Intermediary Center for Community Organization and Social Economy	District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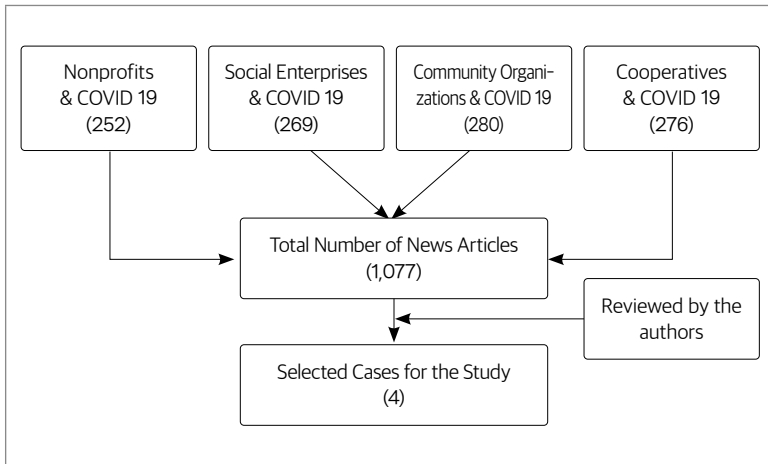
The unstructured interview employed an initial broad question, and each interview lasted approximately 30-60 minutes. To broadly understand and examine how nonprofits responded to the problems caused by COVID-19, we used a question: ‘Can you tell us any stories or cases you have known any nonprofit organizations have done to respond to COVID-19?’ For further investigation of nonprofits’ activities, we also asked follow-up questions: ‘Can you tell us cases you have known or heard of any collaborations between nonprofit organizations and local government, or among nonprofit organizations to deal with COVID-19?’, and ‘Can you tell us cases you have known or heard of any difficulties or challenges in the collaboration between nonprofit organizations and local government, or among nonprofit organizations to address problems caused by COVID-19?’

2. News Article Search

We used the Google search interfaces to search for relevant news articles written in Korean that were published between February 22 and June 11, 2020, to fully cover and focus on the period of the first large-scale wave of the pandemic. We reviewed articles from all news sections, including business and political news, local news, opinions, and so on from nationwide and regional newspapers. We chose Google as a search engine to investigate nonprofit actions handling COVID-19 because it provides a comprehensive access to news articles written in Korean with a duplication removal function,

Both DAUM and NAVER are the most usable search engine in South Korea; however, these engines do not provide a duplication removal function or a filter function for keyword searches. For example, the engines provide all of the news articles including either “social” or “enterprise” when we search “social enterprise,” while Google only provides news articles on social enterprise.

This study adopted a two-keyword combination method(Xu and Huang 2020) using a combination of the two keywords in Korean: 1) one of the terms that indicate the types of organizations: nonprofit organization, community organization, social enterprise, or cooperatives and 2) COVID-19. The method allowed us to comprehensively capture nonprofit activities to respond to COVID-19 while not omitting any important articles. [Figure 2] describes the process of selecting news articles. From the news article search using the above keywords, we found a total of 1,077 news articles during the search period. Since news articles generally appear in several places across newspaper websites, we also used a duplication removal function to delete duplicates. We then reviewed the articles in light of our theoretical framework depicted in [Figure 1].



[Figure 2] News Article Search Process

3. Analysis Process

The constructed theoretical framework in [Figure 1] was used to analyze all the collected cases from the interviews and news articles. First, all the interviews were recorded and one of the authors reviewed and coded the interviews to classify the cases. Then, another author reviewed the coded cases. Based on the authors' agreement, the authors confirmed the cases as agile activities of nonprofit organizations. The final number of cases that were used in this study is thirteen. Next, to identify agile cases from the news articles, one of the authors read all the articles and classified them. A significant number of news articles were filtered out in this process because the same story was used by several news outlets. And then, the other author reviewed the coded content of the article. When the authors agreed on the

coded content based on the framework, they chose those cases as agile activities. As a result, four cases from the news articles were selected. Finally, reviewing the 17 cases led us to identify codes of each theme and to classify them into the three categories. Because the two authors are native Koreans, all the data was stored written in Korean, a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in Korean without translation. The next section discusses each category in detail.

IV. Findings : Agile Management and Collaboration

Reviewing the collected cases, we classified them into three themes: 1) Agile management(five cases), 2) Agile collaboration: process(nine cases), and 3) Agile collaboration: structure(three cases). [Table 3] describes the categories and the corresponding codes for each theme that can be applied to the nonprofit sector. These categories emphasize agile responses to the pandemic that are defined by the proactive and entrepreneurial participation of nonprofits in horizontal relationships with governments. Also, these categories and codes provide a useful framework to assess the organizational readiness for any crises that may arise. From the findings, we further argue that these categories and codes can help nonprofit organizations apply agility in their management and collaboration practices.

[Table 3] Summary of Findings

Theme	Category	Code	Cases(Sources)
Agile Management: Sensing, Interpreting, and Responding Routines	Entrepreneurial Service Provision and Flexible Implementation	Rapidly changing the way of providing services	Human service organizations A(Interviewee #3)
		Quickly shifting services	Social enterprise B(Interviewee #2) Cooperatives C and D(News Articles)
		Inventing new services using their capabilities to meet the social needs	Nonprofit E(News article)
Agile Collaboration: Process	Procedural simplicity	Changing to streamlined procedures	Community organization F, G, H(Interviewees #1, #4, #6)
		Rigid due process of government(reverse code)	Local Nonprofits I, J, K(Interviewees #4, #5, #6)
		Rigid budgeting process of government(reverse code)	Community organizations L, M, N(Interviewee #1, #4, #5)
Agile Collaboration: Structure	Adaptive structure in collective actions	Horizontal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s and nonprofits	Local Nonprofits and Local government of Yeosu-gu(News Article)
		Initiatives taken by nonprofits	International NGO O(Interviewee #3) Local community nonprofits in Incheon(Interviewee #1)

1. Agile Management Routines: Entrepreneurial Service Provision and Flexible Implementation

Generally, when organizations deal with uncertainties, “adherence to prescribed plans, procedures and rules is not feasible”(Janssen and van der Voort 2016, 3). Instead, it is thus necessary to expedite the transition of services by accelerating decision making(Rigby et al. 2016). This first category aligns with the argument by Shi and colleagues(2020) that services must rapidly change to deal with problems caused by unforeseen circumstances. During the pandemic, for example, human service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faced abrupt disruptions of their service delivery. In response to the disruption, they found new ways to provide their services and otherwise exhibit agility in responding to the pandemic.

When there was an abrupt surge of confirmed cases in the City of Daegu, human service organization ‘A’(Interviewee #3) had to shut down their facilities in compliance to a local executive order(Comfort et al, 2020) making their services unavailable to the community. The organization that had provided lunch programs quickly pivoted from providing lunches to seniors inside their facilities to delivering lunches to their customers’ homes. This shift happened so fast that employees of these organizations initially cooked the meals at their respective facilities. They then shifted to an approach considered to be safer - delivering frozen meals purchased at stores.

“Because COVID-19 spreads, the government keeps people away from gathering in the public or social facilities. So, people who use the lunch program provided by local nonprofit organizations could not eat their lunch. However, some people said that the crisis is an opportunity. I heard that a nonprofit organization in Daegu initiated a delivery service for lunch boxes to seniors. The organization delivers frozen lunch boxes to the seniors for them to eat lunch using microwave.”(Interviewee #3)

In another case, social enterprise ‘B’ pivoted away from its traditional services to address the shortage of medical supplies(Interviewee #2). Prior to the pandemic, this organization, located in the City of Incheon, provided handmade eco-friendly goods to teenagers in low-income families(e.g., sanitary pads). In the early stages of the pandemic, there was a severe shortage of masks in South Korea as a majority of Koreans considered masks to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types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PPE) to protect themselves from the virus(Moon 2020). To respond to this shortage of mask supplies, social enterprise ‘B’ decided to temporarily produce and provide handmade eco-friendly masks to people.

“I heard the news that a social enterprise located in Seo-gu, Incheon has produced cotton masks since last week. The company originally makes sanitary goods of cotton for teenagers. Nowadays, people worried that it is hard to get masks. So, the company began to

produce the masks.”(Interviewee #2)

Similar pivots by organizations in the capital City of Seoul also occurred. For example, it was reported that Cooperatives ‘C’ and ‘D’ originally produced and sold leather bags and health gear for the elderly. These cooperatives rapidly shifted to production and provision of masks to low-income families in order to help address the severe shortage of mask supplies(Sijung News 2020/3/29; Seoul News 2020/5/21).

Some nonprofits also quickly started to provide new services. Because wearing a mask was required for everyone, including teachers and students in school, some students were inadvertently placed in a difficult position. Students who have hearing problems communicate not only with sign language but also by reading lips. Wearing a mask thus became a huge barrier. To remove this barrier, Nonprofit ‘E’ in the City of Daejeon invented masks with a window that allow people to see the user’s mouth. Nonprofit ‘E’ has since provided these masks to schools(Yonhapnews 2020/4/9).

These cases show that nonprofit organizations quickly responded to the changing needs of people through flexible and entrepreneurial service provision. These cases are well aligned with the factors shown in [Figure 1], especially three items(sensitive to external environments, experimenting rapid response scenarios, and continuously changing ongoing implementation). Organizations in these cases changed their method of service delivery, transformed the type of services provided, and developed new

services to specifically address challenges caused by the pandemic. From the case analysis, we argue that nonprofit organizations who exhibit agility are sensitive to the needs in their communities and flexibly make decisions to address local needs.

2. Agile Collaboration: Procedural Simplicity

Although nonprofit organizations have innovative ideas and are willing to collaborate with the government, this would not be possible if governments strictly adhered to bureaucratic procedures. This category thus emphasizes the simplicity essential to agility (Mergel et al., 2021). Simplified processes help nonprofit organizations focus on service provision without spending too much time on paperwork and worrying about procedures. For example, governments may not request reports or simplify internal procedures to approve certain services during times of crisis.

In some cases during the pandemic, local governments streamlined the contract negotiation process with nonprofits in response to the crisis. Local governments generally have prerequisite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such negotiations, usually including a series of meetings and documentation requirements designed to hold private organizations accountable in government projects. However, processes such as on-site evaluations or in-person meetings were no longer encouraged to protect people from COVID-19 better. Instead, face-to-face contacts were replaced with video conferences or documentation. A couple of center directors

mentioned that using online conferences helped community organizations 'F', 'G', and 'H' focus more on care services and saved time and cost of communication(Interviewees #1, #4, #6).

“A manager of the community organization [F] said that it is good to have a video conference with the department instead of face-to-face meeting in order to avoid spreading COVID-19. It helps them a lot because they could save their time for commuting and protect them from being infected.”(Interviewee #1)

“He told me that their public official requested a video-conference call for meeting. It feels awkward at first. But, it is really good for me because he could save the time and focus on our care service.”(Interviewee #4)

“Originally, we should submit the proposal document and then make a presentation for the grant proposal. Due to the COVID-19, the administrative process was streamlined. We submitted the document to the department only,’ a staff member of the community organization said.”(Interviewee #6)

Despite these changes, when nonprofit programs involved contractual collaboration with the government, there were still challenges to their program operations. These issues stemmed from bureaucratic rigidity, which required nonprofits to stop their service provision at the initial outbreak and resume them

later per government guidelines. Each subsequent new upsurge in reported cases often resulted in repeated shutdown and re-opening cycles because of the rigid budgeting process practiced by local governments. For example, the strict budgeting process did not allow the nonprofit organizations 'I', 'J', and 'K' to cancel their programs, thereby hindering them from initiating newer programs in direct response to the pandemic(Interviewees #4, #5, #6).

“A local nonprofit having government grant could not initiate a new program to respond to the outbreak because the organization could not cancel their granted program.”(Interviewee #4)

“I heard that an organization could not design a new program to deal with COVID-19 because they needed to work on the program that has been already granted by the government.”(Interviewee #5)

“Nonprofit organization K could not afford to do a new project. This is because they could not cancel the grant project,’ a staff member said.”(Interviewee #6)

Similarly, community organizations dealt with the financial constraints imposed by their government grants. Community organizations 'L', 'M', and 'N' that received a government grant in Fiscal Year 2020(FY 20) were unable to spend their grant money because the relevant government programs were halted during the pandemic in FY 20(Interviewees #1, #4, #5). In addition, the rigidity

of government budgeting precluded nonprofit organizations from using grant monies for any other programs or services because the government did not change or amend the relevant regulations to reflect current realities on the ground. Several nonprofit leaders in Seoul said that they could have used the grant to deal with social and health problems resulting from COVID-19 if they had been able to spend the allocated grant funds on another area(Interviewees #1, #4, #5). The previously arranged and approved grants limited their COVID-19 response. These cases show the importance of simplified and streamlined processes in agile collaboration as depicted in [Figure 1].

“I know that the community organization [L] received a government grant this year. But they could not use the money due to the social distancing policy which prohibits people gathering.”(Interviewee #1)

“I heard that the community organization [M] could not operate their programs due to the COVID-19. Unfortunately, they could not use the grant money for another program or service because the grant was limited to be used only for the granted program.”(Interviewee #4)

“A staff member told me that they could not run their social programs. They wanted to do another program for the youth to respond to the needs caused by the outbreak. But they could not do it. This is because the fund should be used only for the original program.”(Interviewee #5)

3. Agile Collaboration: Adaptive Structure

One of the central tenets of agile is “customer collaboration over contract negotiation”(Mergel et al. 2021, 162). This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proactive involvement by nonprofit organizations that have close ties with their communities. Although research has shown that local cooperative effort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nonprofits is effective in addressing national crises, governments have traditionally centralized control away from other organizations, including nonprofits(Kapucu et al. 2010b). Given that governmental efforts alone are neither sufficiently impactful nor sufficiently fast, a more effective approach to contending with the virus may be building or strengthening horizontal relationships with nonprofit organizations and flexibly accepting offers and proposals from nonprofits.

For example,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collaborated with nonprofit organizations to supply masks to the public and, in particular, to the populations most vulnerable to the virus. Providing masks became a public service early in the COVID-19 outbreak because of the government mandate to wear masks in public spaces. Since local governments did not produce masks, they identified nonprofits that could produce and supply PPE to the public. For instance, the local government of Yeonsu-gu in the City of Incheon partnered with nonprofit organizations and social enterprises to produce and deliver masks to residents in the region(Incheon today 2020/3/3).

On the other hand,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O'(NGO 'O') that runs human service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initiated an emergency program to address the crisis before even receiving a request from the government or waiting to build a partnership with government(Interviewee #3). In February 2020, the NGO deemed the COVID-19 outbreak a national crisis, allocated a certain portion of their budget to crisis response, and quickly purchased emergency kits. They then requested that local governments and schools collaborate in providing masks, hand sanitizer, and other equipment.

“Our organization usually thought that we are going to have a project for emergency response or preparedness. We have a budget for doing this. When suddenly COVID-19 outbreak has occurred we bought emergency kits for dealing with problems. And then we searched for organizations that we can work with. We contacted schools and local governments to provide necessity for COVID-19.”(Interviewee #3)

Local community nonprofits in the City of Incheon also initiated collaborations together to respond to the needs of low-income families(Interviewee #1). Collectively, these nonprofits initiated a new program and provided boxed lunches to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in their communities. As the outbreak continued, several grass-roots nonprofit organizations continued to engage in such collaborative efforts. A leader from one of these

community nonprofits explained that such collaborations were available because the local community nonprofit leaders had built important relationships prior to the crisis. These cases are well aligned with the factors in our framework (Figure 1) and show adaptive structures for collective actions addressing local needs during the pandemic. As the theme of agile highlights, continuous communication among nonprofits and with governments enables them to be more responsive to the local needs. Further, governments do not have to be initiators of such actions.

“I heard a case. The local nonprofit and community organizations jointly provide boxed lunches to children in their local area. I think this is possible because the organizations have previously interacted with other organizations.” (Interviewee #1)

V. Discussion and Conclusions

Nonprofit organizations tackle social issues that are not typically addressed by the public sector (Salamon 1987). While government organizations are likely to be slow and inflexible due to rigid structures and rule constraints, nonprofit organizations tend to be entrepreneurial and relatively adaptable (Chen 2012; Suh et al. 2018). The role that the nonprofit sector played in response to the first large-scale wave of the COVID-19 pandemic in Korea is particularly indispensable (Kim and Jung 2016), a crisis into which the theme of

agility gives us essential insights.

In this paper, we found three categories of agile management and collaboration that are particularly useful in a national crisis. Compared to natural disasters,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last longer and have more ambiguous endpoints(Edwards and Ott 2021). These differences require organizations that are structurally and culturally prepared specifically for the exigencies of an outbreak. Our first category ‘entrepreneurial service provision and flexible implementation’ requires nonprofits to innovate new approaches which still align with their organizational missions and service communities. Such new approaches do not have to be large scale. Rather, it is more important to be able to quickly shift to smaller scale activity and to be able to change the response over time. This category also reflects a key principle of agile in software development, that “the most important benchmarks are working software”(Mergel et al. 2021, 162), as nonprofit organizations must focus on outcomes, not procedures.

The second category ‘procedural simplicit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simplicity to agile collaboration and the continuing challenges that the nonprofit sector still needs to address. The last category ‘adaptive structure in collective actions” emphasizes a bigger role for nonprofit organizations and the construction of horizontal relationships with the government prior to a national crisis. The category suggests that nonprofit organizations consider 1) developing horizontal relationships with governments and other nonprofits and 2) initiating, rather than waiting, for direction from government.

Close contact with their local community is especially valuable, enabling nonprofits to better understand what the public needs and effectively act upon those needs.

Like any other study, this study has limitations. We reviewed articles from newspapers by using web-search interface and interviewed several nonprofit leaders to examine the cases of agile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However, the selected cases are not considered as exhaustive. There may be other examples of agile management and collaboration that were not reported in a news article or were not known or recognized by the interviewees. Similarly, we did not find any cases about multi-way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among parties that was identified as an agile structure from the literature review. Also, as an exploratory study, this study shows agile practices of nonprofit organizations during a crisis and does not provide any antecedents or subsequent factors of agile practices. Furthermore, the agile concept needs to be studied more as it can be used with similar concept, such as flexibility and resiliency. Therefore, we suggest these research topics be addressed by future studies.

Despite its limitation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current state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literature by connecting the agile management theme to the nonprofit sector. Although this theme has been studied extensively in the field of business studies, it is rarely studied in the public and the nonprofit sectors. To our knowledge, there are only a few studies focusing on the public sector and none on the nonprofit sector, regarding crisis management. The cases

we investigated are specific to nonprofit organizations during the worldwide pandemic in the South Korean context. Furthermore, we argue that leadership is critical to culturally transforming an organization, for instance, in adopting agility in their management. Although this study did not find a specific case of leadership, the three categories cannot be applied without leader support. Leadership brings together a variety of stakeholders, builds trust, facilitates communication, and welcomes innovation(Ansell and Gash 2008; Comfort 2007; Kapucu et al. 2010b; Lee and Jung 2019; Lee et al. 2020a; Mergel et al. 2021; Suh et al. 2018). Organizational agility can be fostered by leadership and its incorporation into the bureaucracy is increasingly more common. Therefore, we suggest future research delves more into leadership roles in promoting organizational agility.

Mergel and colleagues(2021, 163) argued that “agile is a mind-set that initiates a cultural change in bureaucratic command and control organizations”. This study suggests nonprofit practitioners adopt the agile approach to nonprofit management and collaboration. Moreover, we also argue that practitioners in nonprofits and governments should revisi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ectors. Such changes are imperative to preparing for the post Coronavirus era and, as the study illustrates, there are already some practitioners in the public and nonprofit sector that are adapting to this new normal.

References

- Alavi, S., Wahab, D. A., Muhamad, N., and Shirani, B. A. 2014. "Organic structure and organisational learning as the main antecedents of workforce ag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Research* 52(21): 6273-6295.
- Ansell, C., and Gash, A. 2008.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8(4): 543-571.
- Babiak, K., and Thibault, L. 2009. "Challenges in multiple cross-sector partnership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8(1): 117-143.
- Barbaroux, P. 2011. "A design-oriented approach to organizational change: Insights from a military case study." *Journal of Organizational Change Management* 24(5): 626-639.
- Beekharry, M. D., Blanks, M., Rameezdeen, R., and Ma, T. 2016. "An Agile approach to Natural Disaster Managemen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roject Management* : November.
- Bonilla, M. 2015. "Building Resilience in Small Nonprofits." *OD Practitioner* 47(1): 8-15.
- Breu, K., Hemingway, C. J., Strathern, M., and Bridger, D. 2002. "Workforce agility: The new employee strategy for the knowledge economy."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17(1): 21-31.
- Brueller, N. N., Carmeli, A., and Drori, I. 2014. "How Do Different Types of Mergers and Acquisitions Facilitate Strategic Agility?" *California Management* 56(3): 39-57.
- Butler, B., and Surace, K. 2015. "Call for organisational agility in the emergent sector of the service industry." *Journal of Business Management* 10: 4-15.
- Chen, C. 2012. "Explaining the Difference of Work Attitudes Between Public and Nonprofit Managers: The Views of Rule Constraints and Motivation Styles."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42(4): 437-460.

- Comfort, L. K. 2007. "Crisis management in hindsight: Cognition, communication, coordination, and control."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7(Special Issue): 189-197.
- Comfort, L. K., Kapucu, N., Ko, K., Menoni, S., and Siciliano, M. 2020. "Crisis Decision-Making on a Global Scale: Transition from Cognition to Collective Action under Threat of COVID-19."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80(4): 616-622.
- Crichton, M. T., Ramsay, C. G., and Kelly, T. 2009. "Enhancing organizational resilience through emergency planning: Learnings from cross-sectoral lessons." *Journal of Contingencies and Crisis Management* 17(1): 24-37.
- Darkow, P. M. 2019. "Beyond "bouncing back": Towards an integral, capability-based understanding of organizational resilience." *Journal of Contingencies and Crisis Management* 27(2): 145-156.
- Denning, S. 2016. "How to make the whole organization "Agile"." *Strategy and Leadership* 44(4): 10-17.
- Doz, Y. L., and Kosonen, M. 2010. "Embedding strategic agility: A leadership agenda for accelerating business model renewal." *Long Range Planning* 43(2-3): 370-382.
- Duchek, S. 2020. "Organizational resilience: a capability-based conceptualization." *Business Research* 13(1): 215-246.
- Duit, A. 2016. "Resilience Thinking: Lessons for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94(2): 364-380.
- Dyer, L., and Shafer, R. A. 2003. "Dynamic Organizations: Achieving Marketplace And Organizational Agility with People." In Center for Advanced Human Resource Studies, Working Paper 03-04.
- Edmondson, A. 1999. "Psychological safety and learning behavior in work team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4(2): 350-383.
- Edwards, F. L., and Ott, J. S. 2021. "Governments' Responses to the COVID-19 Pandemic."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44(11-12): 879-884.
- Felipe, C. M., Roldán, J. L., and Leal-Rodríguez, A. L. 2016. "An explanatory and predictive model for organizational agility."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9(10): 4624-4631.

- Gren, L., Torkar, R., and Feldt, R. 2015. "The prospects of a quantitative measurement of agility: A validation study on an agile maturity model." *Journal of Systems and Software* 107: 38-49.
- Hamel, G., and Valikangas, L. 2003. "The Quest for Resilience." *Harvard Business Review* 81(9): 52-63.
- Harraf, A., Wanasika, I., Tate, K., and Talbott, K. 2015. "Organizational agility." *Journal of Applied Business Research* 31(2): 675-686.
- Holsapple, C. W., and Li, X. 2008. "Understanding Organizational Agility: A Work-Design Perspective." In *13th International Command and Control Research and Technology Symposium Proceedings*. The Symposium held in Seattle, WA, 17-19 June 2008.
- Hopkin, P. 2014. "Achieving enhanced organisational resilience by improved management of risk: Summary of research into the principles of resilience and the practices of resilient organisations." *Journal of Business Continuity & Emergency Planning* 8(3): 252-262.
- Hutton, N. S., Tobin, G. A., and Whiteford, L. M. 2016. "Modeling Nonprofit Resilience in Long-Term Recovery in Christchurch, New Zealand." *Professional Geographer* 68(4): 603-612.
- Jaaron, A. A. M., and Backhouse, C. J. 2014. "Service organisations resilience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vanguard method of systems thinking: A case study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Research* 52(7): 2026-2041.
- Jang, H. S., Valero, J. N., Kim, J. W., and Cramb, K. 2015. "Understanding Nonprofit Collaborations: A Case Study of Communities in Schools of North Texas and its Partner Organizations." *Journal of Public and Nonprofit Affairs* 1(2): 100-117.
- Janssen, M., and van der Voort, H. 2016. "Adaptive governance: Towards a stable, accountable and responsive government."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33(1): 1-5.
- Jeong, B. G., and Kim, S. J. 2021.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Collaboration against COVID-19 in South Korea: A Single or Multiple Actor Play?" *Nonprofit Policy Forum* 12(1): 165-187.

- Kang, J. H., Jang, Y. Y., Kim, J. H., Han, S. H., Lee, K. R., Kim, M., and Eom, J. S. 2020. "South Korea's responses to stop the COVID-19 pandemic." *American Journal of Infection Control* 48(9): 1080-1086.
- Kapucu, N., Arslan, T., and Collins, M. L. 2010a. "Examining intergovernmental and interorganizational response to catastrophic disasters: Toward a network-centered approach." *Administration and Society* 42(2): 222-247.
- Kapucu, N., Arslan, T., and Demiroz, F. 2010b. "Collaborative emergency management and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network." *Disaster Prevention and Management* 19(4): 452-468.
- Kettl, D. F. 2000. "The Transformation of Governance: Globalization, Devolution, and the Role of Govern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0(6): 488-497.
- Kim, J. W., Jin, S. M., and Yeo, K. 2019. "Implications from Local Government Support for Nonprofit Organizations: the Cases of Intermediary Organizations in Metropolitan Cities."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31(2): 55-79.
- Kim, J. W., and Jung, K. 2016. "Does voluntary organizations' preparedness matter in enhancing emergency management of county governments?" *Lex Localis* 14(1): 1-17.
- Kim, Y., Oh, S. S., and Wang, C. 2020. "From Uncoordinated Patchworks to a Coordinated System: MERS-CoV to COVID-19 in Korea."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50(6-7): 736-742.
- Kirkpatrick, S. A., Miller, S. C., Terragnoli, A., and Sprenger, A. 2021. "Development of an Organizational Agility Assessment for Government and Nonprofit Organizations." *Organization Development Journal* 39(2): 67-81.
- Lee, K. M., and Jung, K. 2019. "Factors Influencing the Response to Infectious Diseases: Focusing on the Case of SARS and MERS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6(8): 1-19.
- Lee, Sabinne, Hwang, C., and Moon, M. J. 2020a. "Policy learning and crisis policy-making: quadruple-loop learning and COVID-19 responses in South Korea." *Policy and Society* 39(3): 363-381.

- Lee, Seulki, Yeo, J., and Na, C. 2020b. "Learning From the Past: Distributed Cognition and Crisis Management Capabilities for Tackling COVID-19."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50(6-7): 729-735.
- McLoughlin, D. 1985. "A Framework for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Special Issue): 165-172.
- Mergel, I. 2016. "Agile innovation management in government: A research agenda."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33(3): 516-523.
- Mergel, I., Ganapati, S., and Whitford, A. B. 2021. "Agile: A New Way of Governi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81(1): 161-165.
- Moon, M. J. 2020. "Fighting Against COVID-19 with Agility, Transparency, and Participation: Wicked Policy Problems and New Governance Challeng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80(4): 651-656.
- Nejatian, M., and Zarei, M. H. 2013. "Moving towards organizational agility: Are we improving in the right direction?" *Global Journal of Flexible Systems Management* 14(4): 241-253.
- Nijssen, M., and Paauwe, J. 2012. "HRM in turbulent times: How to achieve organizational ag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23(16): 3315-3335.
- Ott, J. S., and Dicke, L. A. 2012. *Understanding nonprofit organizations: Governance, leadership, and management*(2nd ed.). Boulder, CO: Westview Press.
- Overby, E., Bharadwaj, A., and Sambamurthy, V. 2006. "Enterprise agility and the enabling role of information technology." *European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15(2): 120-131.
- Pellissier, R. 2012. "A proposed frame of reference for complexity management as opposed to the established linear management strategies." *International Journal of Organizational Innovation* 5(2): 6-67.
- Rigby, D. K., Sutherland, J., and Takeuchi, H. 2016. "Embracing Agile." *Harvard Business Review* 94(5): 41-50.
- Salamon, L. M. 1987. "Of market failure, voluntary failure, and third-party government: Toward a theory of government-nonprofit relations in the modern welfare state."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16(1-2): 29-49.

- Sambamurthy, V., Bharadwaj, A., and Grover, V. 2003. "Shaping agility through digital options: Reconceptualizing the role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contemporary firms." *MIS Quarterly* 27(2): 237-264.
- Shi, Y., Jang, H. S., Keyes, L., and Dicke, L. 2020. "Nonprofit Service Continuity and Responses in the Pandemic: Disruptions, Ambiguity, Innovation and Challeng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80(5): 874-879.
- Singleton, R. A., and Straits, B. C. 2010. *Approaches to Social Research* (5th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mith, S. R. 2010. "Hybridization and nonprofit organizations: The governance challenge." *Policy and Society* 29(3): 219-229.
- Steen, T., and Brandsen, T. 2020. "Coproduction during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Will It Las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80(5): 851-855.
- Suh, J., Harrington, J., and Goodman, D. 2018. "Understanding the Link Between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and Innovation: An Examination of Public, Nonprofit, and For-Profit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Public Personnel Management* 47(2): 217-244.
- Suh, J., Kim, H., and Han, A. 2023. "Policy Confidence in Crises: An Examination Across Waves of the COVID-19 pandemic."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28(2): 221-241.
- Teece, D., Peteraf, M., and Leih, S. 2016. "Dynamic Capabilities and Organizational Agility: Risk, Uncertainty, and Strategy in the Innovation Economy."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58(4): 13-35.
- Thomson, A. M., and Perry, J. L. 2006. "Collaboration Processes: Inside the Black Box."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6(December): 20-32.
- Whitaker, G. P. 1980. "Coproduction: Citizen participation in service deliver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0(3): 240-246.
- Wood, D. J., and Gray, B. 1991. "Toward a comprehensive theory of collaboration."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27(2): 139-162.
- Worley, C. G., Williams, T., and Lawler, E. E. I. 2014. "Organizing for Agility." In *The Agility Factor: Building Adaptable Organizations for Superior Performance*, edited by C. G. Worley, T Williams, and E.

- E. Lawler III, 25-52.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Xu, J., and Huang, G. 2020. "The Relative Effectiveness of Gain-framed and Loss-framed messages in charity advertising." *International Journal of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Marketing* 25(4): 1-11.
- Yap, M. N. K., Bakar, A. Z. A., Kamalrudin, M., and Sidek, S. 2014. "A Review on Agile Decision Making in Crisis." *International Symposium on Research in Innovation and Sustainability* 26(4): 1535-1539.
- Yin, R. K. 2018. *Case Study Research and Applications: Designs and Methods*(6th ed.). Los Angeles, CA: Sage Publications.
- Zhang, D. Z. 2011. "Towards theory building in agile manufacturing strategies - Case studies of an agility taxonomy."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Economics* 131(1): 303-312.
- Zhang, Z., and Sharifi, H. 2000. "A methodology for achieving agility in manufacturing organis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Operations and Production Management* 20(4): 496-512.

"선생님 입이 보여요 청각장애학생 위한 특별한 마스크." Seoul News. 2020.5.2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21500005&wlog_tag3\(검색일: 2020년 7월 8일\)](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521500005&wlog_tag3(검색일: 2020년 7월 8일))

"'시민이 백신' 연수구 마을공동체 코로나 19 극복 나눔활동 '눈길.'" Incheon Today. 2020.3.3.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913\(검색일: 2020년 7월 9일\)](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913(검색일: 2020년 7월 9일))

"양천구, 사회적경제기업 '마스크 제작' 팔 걸어." Sijung News. 2020.3.29. [http://www.sij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349\(검색일: 2020년 7월 7일\)](http://www.sij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349(검색일: 2020년 7월 7일))

"인천 연수구-사회적기업, 공공마스크 직접 만든다." Yonhap News. 2020.4.9.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9128900065?input=1179m\(검색일: 2020년 7월 7일\)](https://www.yna.co.kr/view/AKR20200409128900065?input=1179m(검색일: 2020년 7월 7일))

E-index of South Korea 지표누리(<https://www.index.go.kr>)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 정보시스템(<https://npas,mois.go.kr>)

Appendix

[Appendix Table 1] List of Interviewees and Cases

Source Type	Interviewees			Case	
	Org. Type	Interviewee #	Location	Case Org. ID	Case
Interview	Nonprofit	Interviewee #3	Seoul	A	Nonprofit
Interview	Intermediary Center	Interviewee #2	Incheon	B	Human service organizations
News Article				C	Social enterprise
News Article				D	Cooperatives
News Article				E	Cooperatives
Interview	Intermediary Center	Interviewee #1	Incheon	F	Nonprofit
Interview	Intermediary Center	Interviewee #4	Seoul	G	Community organization
Interview	Intermediary Center	Interviewee #6	Seoul	H	Community organization
Interview	Intermediary Center	Interviewee #4	Seoul	I	Community organization
Interview	Intermediary Center	Interviewee #5	Seoul	J	Local Nonprofits
Interview	Intermediary Center	Interviewee #6	Seoul	K	Local Nonprofits
Interview	Intermediary Center	Interviewee #1	Incheon	L	Local Nonprofits
Interview	Intermediary Center	Interviewee #4	Seoul	M	Community organizations
Interview	Intermediary Center	Interviewee #5	Seoul	N	Community organizations
News Article					Local Nonprofits in Yeonsu-gu
Interview	Nonprofit	Interviewee #3	Seoul	O	International NGO
Interview	Intermediary Center	Interviewee #1	Incheon		Local community nonprofits in Incheon

국문 초록

비영리조직의 민첩한 대응에서 협력까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사례 연구

서지원(텍사스주립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제니퍼 라이너(텍사스주립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김정욱(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조교수)

애자일은 비영리조직이나 공공기관이 긴급하게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비영리조직이 빠르게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집단행동에 참여함으로써 민첩하게 관리하거나 협력하는 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례연구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비영리조직이 민첩한 관리나 협력을 행사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정부의 절차로 인해 한계와 경직성을 마주한 사례 또한 확인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경험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 우리는 애자일 관리와 협력에 대해 1) 기업가적 서비스의 공급과 유연한 실행, 2) 절차의 간결성, 3) 집단행동의 참여 등 세 가지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제어: 애자일 관리, 애자일 협력, 코로나 19 팬데믹, 사례연구

Abstract

Agile Management to Agile Collaboration in the Nonprofit Sector:

Cas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Suh, Jiwon(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ffairs and Plann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Reiner, Jenifer(Ph.D. Student, Department of Public Affairs and Planning,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Kim, Jung Wook(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Seoul)

The concept of agility refers to the rapidity with which nonprofit and public organizations respond to social problems. Using a case-study approach, we find several cases wherein nonprofit organizations exhibited agility in their response to the pandemic by quickly transitioning their services and adapting to collective action. However, this study also finds that nonprofit organizations still face inflexibility and limitations from government procedures that hinder their agility. Based on these findings, we propose three categories of agile management and collaboration based on South Korea's experience during the first large-scale wave of the COVID-19 pandemic. The three categories are: 1) entrepreneurial service provision and flexible implementation, 2) procedural simplicity, and 3) adaptive structure in collective actions.

Key words: Agile Management, Agile Collaboration, COVID-19 Pandemic, Case Study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운영실태 비교분석: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윤난**, 김부열***

윤
난
·
김
부
열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주거복지센터의 등장
2. 주거복지센터 선행연구 고찰
3.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4. 자원의존이론

III. 연구방법

1. 연구 분석 틀
2. 연구대상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IV. 연구결과

1.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외부환경
2.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내부역량
3. 서울시 주거복지센터가 받는 제도의 영향

V. 결론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요약하여 작성하였음.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부교수, 교신저자(E-mail: booyuel@snu.ac.kr, Tel: 02-880-5650)

<http://doi.org/10.34165/urbanr.2023.24.215>

투고(접수)일 2023.4.30. 심사(수정)일 2023.5.31. 게재확정일 2023.12.14.

I. 서론

주거취약계층이 직면하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 개보수, 금융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이러한 서비스가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크다. 2021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주거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주거복지 상담과 정보제공 서비스를 인지하는 경우가 17.5%에 불과했다. 2017년 국토교통부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설문 참여 주거취약계층의 92%가 주거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으며, 그 이유는 서비스를 잘 알지 못하거나 지원 자격 여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비영리단체들은 2007년 처음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실현과 주거복지서비스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인정하며 2015년 주거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주거권 보장,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집중해 왔다. 정부는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령에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과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포함하였으며, 주거복지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고자 주거복지센터 전국화를 추진하고 있다. 즉, 주거복지센터는 지역의 주거 서비스 수요와 문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지원기관으로 주거복지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남원석·김수경 2019).

법 제정 이후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하기 시작하였으나 주체마다 다양하게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서비스 제공의 형태와 업무 혼선 문제도 나타났다(박근석·주관수 2016).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운영 주체별 다른 운영방식으로 인한 혼란은 주거문제 해결이 시급한 수요자에게 주거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거복지센터를 포함한 주거복지 전달체

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김혜승 외 2014; 오정석·박홍철 2016; 이종권·김경미 2016; 방혜선·이현정 2017; 최훈호 2019).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는 공적 자원인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등의 주거복지정책 집행과 행정을 담당하므로 자원 집행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다(이종권·김경미 2016). 하지만 지역사회 기반의 활동 제약으로 서비스 수요를 맞추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반면 민간은 지역사회 기반으로 활동하며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방혜선·이현정 2017). 그러나 안정적인 재정 수급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도 중요하며 두 부문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협력할 때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남철관 2007; 남원석 2010).

주거복지센터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공공 또는 민간 하나의 주체를 대상으로 하여 공공이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와 민간이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사례를 통해 주거복지센터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공공과 민간 운영 주체에 따른 비교분석을 시도한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주거복지센터 전국화를 논의할 때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본 연구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공공과 민간 운영 주체별 실태를 분석하여 주거복지센터 개선방안과 효과적인 주거복지 전달체계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두 위탁운영 방식에 따른 운영실태를 비교하기 위해 자원의존이론 모형을 적용하여 주거복지센터의 외부환경, 내부역량 및 제도적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거복지센터 운영 주체별 장단점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주거복지센터의 등장

지역사회의 주거문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비영리단체는 주거복지사업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안하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역사회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2007년 서울시 강북구·성동구·성북구, 대구시 서구, 경기도 부천시, 전라북도 전주시에 6개의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하였다. 이후 2009년 강원도 원주시, 2010년 인천시 등에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과 연관된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되었으며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지역에서 직접 설치하였다.

공공도 민간주거복지센터 서비스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주거복지서비스 사업을 시작했다.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2011년 8월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서울시는 2012년 5월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 계정을 이용하여 주거취약계층 통합지원 사업으로 주거복지센터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서울시도 조례를 제정하며 2013년부터 10개 권역에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시작하였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인 조례제정은 2015년 ‘주거기본법’ 제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법에 주거복지센터 설치조항이 포함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주거기본법 제정 이후,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주거기본조례를 제정하며 점차 주거복지센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중앙정부는 2020년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를 통해 2025년까지 전국 모든 시 및 기초지자체에 주거복지센터 설치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2년 9월을 기준으로 주거복지센터는 전국에 44개소가 있다(김강산 2022). 이 중 서울시는 26개소를 운영하며 가장 많은 주거복지센터가 있다, 이 밖에 경기도 5

개소, 대구시 3개소, 부산시, 인천시, 제주도 각 2개소, 광주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북도의 경우 각 1개소가 있다. 주거복지센터 운영 주체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비영리단체 또는 지방공사에 위탁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경기도 고양시)와 시에서 설립한 재단이 운영하는 사례(경기도 수원시)도 있다.

2. 주거복지센터 선행연구 고찰

주거복지센터 관련 선행연구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함께 진행된 경우가 다수이며, 주거복지센터만을 중점으로 한 선행연구는 주거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남원석 2010; 이지숙 2015), 업무 범위 및 평가체계를 정의하는 연구(남원석 외 2016), 종사자에 관한 연구(이희연 2021) 등이 있다.

남원석(2010)은 민간주거복지센터 활동을 평가하고 주거복지 전달체계에서 기초지자체와 주거복지센터의 협력적 관계를 제안하였다. 기초지자체는 행정적 지원과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주거복지센터는 지역 내 주거지원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인 주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지숙(2015)은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과 민간단체의 자료를 통해 주거복지센터의 업무를 조사하고 분석하였으며 주거복지사업과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주거복지센터의 업무를 지역별로 차별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하였다.

남원석 외(2016)는 주거복지센터별 서비스 편차를 최소화하며 상향평준화를 유도하고, 공공과 민간의 활동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위해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평가체계를 제안하였다. 주거복지센터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를 제시하고, 역량향상을 지원하여 주거복지센터의 질적 발전을 모색하였다. 최훈호(2019)는 부산시 주거복지정책의 전달체계와 부

산시민의 주거복지 수요 해결방안을 위해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거복지센터의 효율성을 확인하며 부산시에도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통해 부산시민의 주거지원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문소현·이건학(2020)은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입지적 특성을 파악하고 주거복지 수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최적의 주거복지센터 지역 선정을 위해 P-Median 모델을 활용하여 입지를 분석하였다. 수요자의 분포를 고려하여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센터 입지를 제안하였다. 이희연(2021)은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종사자의 사례관리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주거복지 사례관리의 정체성 확립, 사례관리 지침 개발,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원체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거복지센터 관련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주거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민관 협력, 종사자 역량 강화, 표준화된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거복지센터의 위탁운영과 운영 주체인 공공과 민간을 함께 비교분석을 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3.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정부는 직접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 SH공사에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공공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SH공사는 이 중 일부 주거복지센터를 민간에게 재위탁하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

1) 민간위탁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갖지만, 서비스 공

급주체는 정부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영리 또는 비영리) 혹은 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Savas 1987). 우리나라도 공공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민간자원을 활용하며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민간위탁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민간조직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민간이 가진 창의성, 전문성, 효율성, 인력 운용의 유연성의 장점을 활용하여 정부가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Salamon 1987; 문병호 2021). 정부는 민간위탁을 도입하여 조직, 인력, 예산 감축을 할 수 있다.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의 양을 늘릴 수 있고, 공공의 책임성은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김정해 외 2015).

김영중(2017)은 민간부문 수탁자가 공공부문 위탁자에 재원을 의존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에 불균형하게 힘이 쏠릴 수밖에 없지만, 민간부문 수탁자들의 전문성, 개방성, 청렴성, 지역성 등이 강화된다면 공공부문과 대등한 관계 형성에 활용될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문병호(2021)는 민간위탁은 효율적이며, 서비스의 질도 비용대비 좋고, 민간부문을 활성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관리 감독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정부의 책임성과 공공성 저하, 정부의 서비스 전문성 감소 등의 부작용도 있음을 주장하였다. 종합하면 민간위탁은 정부실패의 대안으로 전문성, 효율성,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 나타났으나 사회적 비용 증가, 공공의 전문성 저하와 같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2) 공공위탁

위탁운영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면서 공공서비스는 정부가 직접 제공해야 한다는 민간위탁의 'back in' 현상이 나타났다(박민정 2009). 공공서비스를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 또는 직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나타났

다(김효주 외 2011). 공공위탁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에 사무 일부를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설립하기도 한다. 공공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한계에 대응하고 정책집행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이동기 2020). 기존 공공의 역량만으로는 사회문제 해결이 어려워서 비교적 예산과 인력 활용이 원활한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공공서비스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다(윤옥민 2021).

권오철·강영주(2015)는 공공위탁을 통한 협력은 비용 절감과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고 민간의 정치적 거부감으로 인한 대립도 줄일 수 있어 공공위탁 활성화를 주장하였다. 남용현(2018)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례로 위탁사무 내용, 추진체계와 실태 및 성과를 분석하여 공단이 업무수행의 공평성, 효율성,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공단이 지속해서 위탁사무를 수행해야 함을 밝혔다. 종합하면 정부는 공공기관을 활용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증대하기 위해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 감독 부재, 예산 의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자원의존이론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으로 운영되는 주거복지센터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며 원활한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자원연계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주거복지센터는 예산, 인력, 자원 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환경과 끊임없이 거래하고 의존해야 한다. 따라서 자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을 적용하는 것은 위탁운영 주체별 조직을 비교분석하는 데 뒷받침이 될 수 있다.

자원의존이론을 통해 설명되는 조직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 외부환경과 자원 모두 상호의존한다(Pfeffer and Salancik 1978; 김준기 2000). 조직은 협력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보완하며,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외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획득하려고 노력한다(김시영·노인만 2004). 따라서 조직은 생존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외부 자원과의 상호의존을 통해 대응력과 적응력을 높여 나간다(Pfeffer and Salancik 1978; 조희진 외 2018; 이동기 2020).

자원의존이론에서 외부환경이란 ‘조직 외부에 존재하는 모든 실체 (Lawrence and Lorsch 1967)’ 또는 ‘조직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사회적 요인들의 총합(Duncan 1972)’으로 정의될 수 있다(이광훈 외 2014). 여기서 자원은 재정적, 물질적인 것을 넘어 기술자본, 인적 자본, 정보, 전문성, 창의성, 연계, 정치적 지원, 정책 결정 과정의 접근성, 정당성 등과 같은 무형자본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Hall and Tolbert 1994; Pike et al. 2005; Saidel 1991; Skelcher 1998; 박상희·김병섭 2012; 이광훈 외 2014 재인용)

자원의존이론을 활용하여 정부와 비영리조직 간의 관계, 정부와 공공기관의 관계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설명할 수 있다. 비영리조직은 사회적 가치 추구에 더 관심을 두기 때문에 재정 자주성이 취약한 경우가 많다. 조직의 생존과 목표 달성을 위해 가용자원을 개인, 상위 비영리조직, 기업, 정부와 같은 외부 자원 제공자에게 의존한다. 이에 비영리조직의 생존과 조직행태, 목표는 공공을 포함한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서정옥·김보경 2015). 즉, 정부는 비영리조직에 필요한 활동에 대한 행정과 재정지원, 업무위탁을 요청하고, 비영리조직은 정부 정책에 대한 활동, 아이디어 및 정보제공, 전문인력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호의존 및 협력관계가 형성된다(남원석 2010).

공공기관 역시 행정기관과 재정지원, 전문성, 정보의 접근 및 활용에

대한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박상희·김병섭 2012; 이동기 2020).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정부부처 관리 아래 내부 자율성과 재량을 갖고 있으며 환경의 영향 속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지니기 때문에 자원의존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박상희·김병섭 2012; 이광훈 외 2014).

자원의존이론을 활용하여 민간과 공공기관의 사회서비스 조직의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선행연구는 다양하다. 정규진 외(2013)는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내부역량과 환경적, 제도적 요인을 규명하였으며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밝혔다. 민윤경(2016)은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의 지원체계를 파악하기 위해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으로 지원경험을 분석하였다. 자원의존이론이 강조하는 조직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과 자율성을 통제하는 주체로 지원조직을 중심으로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이광훈 외(2014)는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기관 성과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조직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 정책기여도는 연구역량 및 연구기관 원장의 재임 기간, 출신배경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자원의존이론을 통해 조직의 생존가능성 및 지속가능성을 외부 자원과의 협력관계, 내부역량,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제도적 요인 등으로 파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분석 틀

본 연구에서 위탁운영 주체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의 운영실태 비교를

위해 자원의존이론을 활용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연구 분석 틀을 구성하였다(그림 1) 참고). 자원의존이론을 통해 조직과 외부환경의 영향, 정부와 민간의 관계, 정부와 공공기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민간위탁 주거복지센터와 공공위탁 주거복지센터의 외부환경은 주거복지서비스 제공환경, 외부기관과의 자원연계와 네트워크 활동에 대해 파악하였다. 주거복지센터의 내부역량은 서비스 제공방식과 인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거복지센터가 받는 제도적 영향 관련해서는 정부예산과 위탁 운영방식의 변화, 정책결정과정 참여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림 1] 연구 분석 틀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자치구 25개에 있는 지역주거복지센터의 외부환경, 내부역량, 제도적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서울시는 2018년 모든 자치구에서 지역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여 민간위탁 16개 센터, 서

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위탁 9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2021년 9월 민간위탁운영 철회를 결정하며 2022년부터 SH가 모든 센터를 운영하도록 결정하였다. 하지만 SH가 다시 민간위탁 운영 주체에게 재위탁하면서 기존 위탁 운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2년 9월 기준, 전국 44개소 주거복지센터가 운영 중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인 25개소가 서울에 설치되어 있어 주거복지센터를 논의하는 데 대표적 사례로 고려된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주거복지센터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우 서비스 특성으로 인해 단위당 서비스에 대한 정의와 투입되는 비용과 산출 결과를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여 문제나 특성에 구체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례연구가 적합하다. 사례연구는 조직의 배경, 현재 상황, 환경적 특성, 상호작용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오단이 2013).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라는 조직의 운영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 문헌조사와 심층 면접을 포함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은 문헌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자료, 예산과 성과 및 해당하는 관련 1차 자료를 수집하였다. 하지만 자료가 한정되어 있고 의미를 파악하는 데 문헌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심층 면접을 함께 시행하였다. 연구자는 2022년 11월 9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심층 면담을 연구참여자 주거복지센터에서 직접 수행하였다. 면담 시간은 참여자에 따라 1회 60분에서 120분이 소요되었다. 연구목적에 알맞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업무 총괄 책임을 담당하는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최종 연구참

여자는 총 25개소 중 10개소 센터(민간 7개소, SH 3개소)의 11명의 종사자로 [표 1]과 같다.

주요 질문 내용은 자원의존이론을 기반으로 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연구 분석 틀에 맞게 외부환경, 내부역량, 제도와 관련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반복적 비교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단위로 분리하고, 분리된 단위를 재분류하고 범주화하였다. 연구문제와 관련한 자료에 직접 코딩하고 분류하는 개방코딩을 활용하여, 자료가 외부환경, 내부역량, 제도 크게 세 가지 범주에 잘 반영되었는지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범주화된 자료를 전사자료와 비교하여 자료의 내용과 의미가 잘 설명되었는지 확인하였으며, 수정과 보완을 통해 최종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표 1] 심층 면접 참여자 목록

운영주체	센터	직책 ¹⁾	성별	연령	주거복지센터 경력	사회복지경력 ²⁾	자격증
SH	A	과장	여	50대	4년 7개월	15년	사회복지사/주거복지사
	B	과장	여	40대	4년 7개월	20년	사회복지사
	C	과장	여	40대	1년 8개월	9년	사회복지사
민간	A	센터장	남	40대	2년 9개월	20년	사회복지사
	B	센터장	여	50대	4년	16년	사회복지사
	C	센터장	남	40대	3년	4년	사회복지사
	D ³⁾	팀장	남	30대	3년 7개월	4년	사회복지사
		활동가	남	30대	2년 8개월	3년	사회복지사
	E	센터장	여	40대	2년 7개월	11년	사회복지사
	F	센터장	여	50대	6년	20년	사회복지사
G	센터장	여	50대	10년	20년	사회복지사	

자료(설명): 1) SH센터는 과장이 실질적 주거복지센터 실무 총괄 담당(SH센터장은 권역센터와 겸직)

2) 주거복지분야를 포함한 전체 사회복지경력

3) D센터는 센터장 부재로 팀장과 활동가 인터뷰 동시 수행

IV. 연구결과

1.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외부환경

자원의존이론에서 조직은 외부환경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획득하려고 한다(Pfeffer and Salancik 1978).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구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주거 문제에 대응하고, 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심층 면접 결과, 위탁 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주거복지센터는 자치구 특성에 맞는 주거 문제에 대응하고 있어서 자치구와의 협력관계가 주거복지센터의 운영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외부기관과의 자원연계와 네트워크에서는 민간주거복지센터와 SH 주거복지센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자치구와의 협력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운영 환경

위탁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자치구와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경우 주거복지센터 운영이 좀 더 수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청에서 필요한 자료를 직접 제공하고, 주거복지센터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하지만 자치구의 협조가 없을 때는 주거복지센터가 직접 나서서 더 많은 연계 활동을 수행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로는 주거복지센터 예산이 구가 아닌 서울시에서 집행되고 있어서 구청에서 쉽게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구청 주무관의 역량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협력관계가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은 자치구 주거 문제와 자치구 내의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치구의 협조가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자치구와 협력이 잘 되는 경우〉

“지난 몇 년간 ○○구랑 밀접하게 한 몸처럼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같이 비주택 사업하다 보니까 우리가 서울시 사무위탁 기관인데 이제는 ○○구 기관처럼 (일하고 있어요).”

- 민간 C센터 센터장 -

〈자치구와 협력이 잘 안되는 경우〉

“구청은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자활센터, 복지관, 경로당 활성화 사업, 건강 가족 지원센터 등의 사업 들은 구를 통해서 집행되는 사업이에요. 보건복지부 사업들이 중앙, 광역을 통해서 지자체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자체가 관리 책임이 있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져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자체를 통하지 않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 민간 E센터 센터장 -

2) 자원연계와 네트워크

주거복지센터는 지역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주거복지 협력체계 구축,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연계한 지원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내외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주거문제를 가진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홍인옥 2013). 연구참여자들은 사례관리 수행을 위한 사업의뢰 협력관계, 주거비 지원을 위한 연계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통한 네트워크 활동과 주거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위탁운영 주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 활동은 주거비 지원 연계와 다른 자치구 주거복지센터와의 협력관계에서 나타났다.

(1) 민간재단을 활용한 주거비 지원 연계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경우 사업예산이 부족하여 주거비 직접지원을 위한 외부 자원 발굴 노력이 이뤄지고 있었다. 민간주거복지센터와 SH 주거복지센터는 다양한 민간재단과의 연계를 통해 주거비 지원을 하고 있었다. 민간주거복지센터는 후원금을 직접 받을 수 있으므로 민간재단에서 제공한 지원금을 직접 수요자에게 제공하거나 후원금을 활용한 추가 지원을 하고 있어서 민간재단 연계기관의 종류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SH 주거복지센터는 직접 후원금을 받을 수 없어서 민간재단에 사례를 신청하여 연계할 수 있는 부분까지의 업무만 수행하고 있었다. 이에 운영 주체에 따른 민간재단 연계기관의 수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재단 같은 기관과 협력하면 돈을 주고 우리가 지출해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관리비, 전기세 내드리는 방식도 있고요. (중략). 사업예산 전체를 우리한테 주는 곳도 있고…”

- 민간 A센터 센터장 -

“저희 예산이 다 소진되었으면 동주민센터나 복지관에 있는 희망 온돌같은 여러 가지 SOS 돌봄 서비스 연결을 해야 하겠죠. (중략). 저희는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중략).”

- SH A센터 과장 -

(2) 다른 자치구 주거복지센터와의 협력

주거복지센터 이용자가 다른 자치구로 이사할 때 이관업무를 통해 사례를 공유하고 연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주거복지센터와 SH 주거복지센터는 서울시 주거복지 통합상담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스템

과 전화, 공문을 활용하여 이관업무를 하고 있다. 추가로 민간주거복지센터 16개소의 경우 서울시주거복지센터협회¹⁾로 함께 활동하고 있어 정보 공유, 사업의뢰, 후원 물품 공유, 교육 등 연계가 이뤄지고 있다. SH 주거복지센터는 후원 물품과 후원금 공유가 안 되어 민간주거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었다. 위탁운영 주체에 따라 공유되는 정보가 다르며, 센터마다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물품, 지원금 등이 상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주거복지센터 간의 협력관계〉

“민간은 16개 센터가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협회에 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해요. 제일 많이 협력하는 건 긴급 임시주택. (중략). 서로 자기 구에 임시주택이 비면 알려주고... (중략). 공동사업 같은 것도 하고, 정보 교류 제일 많이 하죠.”

- 민간 B센터 센터장 -

“저희가 비영리민간단체이다 보니까 이렇게 외부기관에서 후원금들이 좀 들어와요. (중략). 그래서 16개 센터와 나눔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 민간 F센터 센터장 -

〈후원금 활용의 어려움〉

“SH 센터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자원연계인데 후원금 처리를 못 해서 저희가 받아서 직접 지원한 적이 있어요. ○○에서 ◇◇복지재단 보증금 지원

1) 서울시주거복지센터협회는 2014년 창립되었으며 민간위탁센터들의 자발적인 모임이다. 서울시와의 협의기구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2018년 중앙주거복지센터 설치 이후에는 외부자원 연계 공동사업, 제도개선 촉구, 교육을 통한 주거권 옹호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정두영 2021).

인데 SH센터 통장으로 받을 수가 없어서 우리 법인이 후원금 받아서 수혜자에게 직접 드리는 걸로... SH에서 발굴도 다 했고 신청서 썼는데 지원은 저희가 한 거죠.”

- 민간 B센터 센터장 -

2.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내부역량

자원의존이론에서 외부환경의 상호의존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가진 내부역량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송낙길 2014). 외부 자원의존성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조직 내부역량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Pfeffer and Salancik 1978).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서비스 제공방식과 인력 현황을 민간주거복지센터와 SH 주거복지센터로 나눠 비교하였다.

1) 주거복지서비스 제공방식

주거복지센터 기본사업은 주거상담 및 사례관리, 주거비 직접지원, 자원연계, 주거복지 네트워크, 주거복지 교육 등이 포함된다. 지역 상황에 맞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자치구 특화사업과 자치구 실태조사도 부가사업으로 포함된다. 주거복지센터의 내부역량을 비교하기 위해 기본사업 중 주거상담 제공방식과 직접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1) 주거취약계층의 욕구를 파악하는 주거상담

주거상담 건수는 지역별로 주거취약계층과 지역의 편차가 있으므로 지역 특수성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운영 주체인 SH와 민간의 서비스 제공 인력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위

탁운영 주체에 따른 단순 비교를 위해 주거복지센터별 평균 주거상담 내용을 살펴보았다.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주거복지센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SH 주거복지센터는 평균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상담이 많았다. 민간주거복지센터는 주거비 지원, 공공부조, 주택금융에 관한 상담 비율이 SH 주거복지센터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SH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관련 주거상담에 특화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민간에서 주거비보조 관련 사업에 대해 더 많은 상담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2] 참고).

[표 2]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주체별 주거상담 내용

연도	주체	구분	상담 건수	상담내용				
				주거비지원	임대주택	공공부조	주택금융	기타 ¹⁾
2019	SH	합계	25,639	3,201	19,696	280	197	2,265
		평균	2,849	356	2,188	31	22	252
	민간	합계	26,892	6,007	12,630	777	609	6,869
		평균	1,681	375	789	49	38	429
2020	SH	합계	30,168	4,502	18,602	316	425	6,323
		평균	3,352	500	2,067	35	47	703
	민간	합계	44,732	8,557	22,361	1,504	1,998	10,312
		평균	2,796	535	1,398	94	125	645

자료(설명): 1) 기타에는 법률상담, 주택 및 거처 물색, 이사지원, 정서적지지 등 포함
 자료(출처): 서울정보소통광장 결재문서(2020/5/14, 2021/3/19)

상담이 선행된 후에 사례관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주거상담 방법을 조사하였다. 주거상담은 전화상담이 가장 많았으며 센터내방, 가구방문, 찾아가는 이동상담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심층 면접 시 연구참여자들이 제시한 자료와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센터마다 전화상담을 제외한 내방상담과 방문상담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구방문이 어려워져 SH 주거복지센터의 경우는 민

간주거복지센터와 비교하면 가구방문이 더 적게 이뤄졌음을 확인하였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공공기관인 SH의 업무수행 방법의 제한이 더 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²⁾

“전화상담이 가장 많고 필요하면 내방.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세대 방문은 웬만하면 잘 안 했었어요. 1인 가구 주택관리 서비스는 가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해야 해서 세대 방문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 (중략)”

- SH A센터 과장 -

“전화로 상담하는 것만 하지는 않아요. 임대주택을 알려드려도 전화로 그 많은 이름과 신청 날짜를 모를 수도 있고 코로나 시기에는 (SH, LH) 공사가 아예 직접 받는 걸 다 중지했어요. 우편 아니면 인터넷이라는 거예요. (중략). 저희 센터 선생님 컴퓨터 옆에 앉혀놓고 같이 신청하고 이런 사례가 작년, 제작년에 진짜 많아서 내방 건수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저희 행정 동행도 같이해드리거든요.”

- 민간 G센터 센터장 -

(2) 주거비 직접지원은 위탁운영 주체에 따른 차이 발생

주거비 직접 지원사업은 주거 박탈 위기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액 임대보증금, 연체 임대료, 연료비 또는 난방비, 간편 집수리 비용 등이 포함된다. SH 주거복지센터의 긴급주거비 지원실적 평균을 살펴본 결과, 시사업비 지원 금액이 민간주거복지센터에 비해 더 높다(표 3) 참고). 하지만 후원금 및 자원연계 지원 평균을 보면 민간주거복지센터가 더 높다(표 4) 참고). 시사업비는 SH 주거복지센터가 센터별로 사용할

2) SH는 공공임대청약신청 접수를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해 전면 인터넷 접수로만 진행하였다.

수 있는 금액이 민간주거복지센터보다 더 많았다. 민간은 비영리조직으로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거지원을 하고 있었다. SH 주거복지센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후원금 및 기부금을 받을 수 없어서 후원금 및 자원연계 지원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3] SH 주거복지센터 주거비 지원 사항(2018~2021년)

SH		시사업비 지원		후원금 및 자원연계 지원	
연도	구분	금액(천원)	지원건수	금액(천원)	지원건수
2018	합계	261,901	668	21,974	246
	평균	29,100	74	7,325	49
2019	합계	190,654	635	86,928	379
	평균	21,184	71	9,659	42
2020	합계	242,261	451	156,058	598
	평균	26,918	50	17,340	66
2021 (상반기)	합계	90,971	135	56,137	242
	평균	10,108	15	6,237	27

자료(출처): 서울정보소통광장 결재문서(2019/1/22, 2020/5/14, 2021/3/19), 정두영(2021)

[표 4] 민간주거복지센터 주거비 지원 사항(2018~2021년)

민간		시사업비 지원		후원금 및 자원연계 지원	
연도	구분	금액(천원)	지원건수	금액(천원)	지원건수
2018	합계	241,884	614	455,702	1,674
	평균	15,118	38	32,550	105
2019	합계	336,662	926	431,269	2,573
	평균	21,041	58	26,954	161
2020	합계	324,139	1,037	636,407	2,726
	평균	20,259	65	39,775	170
2021 (상반기)	합계	137,874	339	298,699	3,189
	평균	8,617	21	18,669	199

자료(출처): 서울정보소통광장 결재문서(2019/1/22, 2020/5/14, 2021/3/19), 정두영(2021)

직접 주거비 예산의 소모 시기는 민간주거복지센터와 SH 주거복지센터 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민간주거복지센터는 예산이 연초에 모두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 외부 자원연계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SH 주거복지센터는 주로 10월 정도에 직접비가 모두 소진되고 있고, 직접비 예산 소진 시 추가 지원이 어렵거나 사례를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운영 주체에 따라 자치구 센터를 이용하는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자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직접비가 거의 500만 원 정도도 안 될 거예요. 인건비가 좀 많이 나가는 센터들은 500도 확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외부 후원을 계속 발굴을 해왔거든요… 서울시에서 준 사업비의 2배 이상을 저희는 민간 후원을 통해 진행했어요.”

- 민간 F센터 센터장 -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대부분 연초에 시작하면 한 3~4개월 하다 보면 예산이 다 소진되잖아요… (중략). 일찌감치 8월 예산 다 동결되고 없고, 그러면 없는 예산을 또 만들어서 쓸 수도 없고…”

- SH B센터 과장 -

2) 인력 관련 사항

사회서비스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에게 의해 수행되는 대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수행 인력이 중요하다(Bahle 2008). 따라서 주거복지센터의 내부 역량을 파악하는 데 있어 인력 현황을 알아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민간주거복지센터와 SH 주거복지센터 종사자들은 인력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위탁운영 주체에 따라 인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SH는 상근 인력의 차이가 있으며 업무의 지속성 유지 어려움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근무 인력을 확인한 결과, 민간주거복지센터의 상근 인력이 SH 주거복지센터보다 더 많은 것을 파악하였다. SH 주거복지센터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인력의 차이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SH 주거복지센터의 센터장은 SH 권역센터와 점직을 하고 있으며, SH의 공로연수 제도로 인해 실제 근무 인력의 부재가 더 크게 나타났다.

SH는 3년마다 순환보직이 수행되고 있어 인사발령으로 인해 업무의 지속성과 안정감이 부족하고, 업무수행을 하는 데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인력의 역량에 따라 주거복지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순환보직과 인사발령으로 인한 인력의 변화로 SH 주거복지센터 종사자의 내부역량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상근 인력의 차이〉

“저희 SH 직원 두 명도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직원이 아니라서 둘 다 나와서 일을 하는 거고, 나이가 정년이 되어 공로연수 가게 되면 다른 센터에 두 명이 할 일을 혼자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 SH B센터 과장 -

〈업무의 지속 어려움〉

“업무 특성상 지원 프로세스는 인수인계 통해서 배울 수 있지만, 네트워크라는 그레도 노하우가 중요해요. 그래서 3년마다 하는 게 옳은 건가… 근데 이걸 회사 방침이니까… 제가 작년에 와서 업무는 바로 투입되었지만, 네트워크라든가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익숙해지는 데는 최소 1년이 걸리더라고요.”

- SH C센터 과장 -

(2) 민간은 인력에 대한 열악한 처우개선이 시급함

서울시는 주거복지센터 근무인력에 대한 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 또는 주거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명시하며 '전문적인 지식과 활동 경험이 있는 인력을 배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근무경력은 2012년 '서울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시행 이후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근무 경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주거복지센터 종사자들은 낮은 급여 수준과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을 호소하였다. 전문성 있는 인력을 배치해야 하지만 열악한 처우로 인해 전문적인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이 어렵고, 전문인력이 수급되지 않으면 주거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수혜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데 어려워진다. 이러한 사회서비스 및 복지 인력에 관한 문제는 기존 선행연구부터 지금까지 지속해서 언급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시급하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으로 받고 있거든요. 서울시 생활 임금보다 조금 많은 정도인데… 문제는 경력 인정이 전혀 안 되니까 앞에 복지관 경력 인정 못하고… 문제가 심각한 게 돈도 돈이지만, 쓸 만한 인력을 수급하기도 힘들어요.”

- 민간 C센터 센터장 -

“항상 복지 쪽에 얘기하는 건 다른 사람들 복지는 챙겨주는데 우리 복지는 못 챙긴다는 거죠.”

- 민간 D센터 활동가 -

3. 서울시 주거복지센터가 받는 제도의 영향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조직은 정부와 정부 정책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다(김준기 2000). 정부는 비영리조직에게 행정 지원과 재정지원을 하

며 업무위탁을 요청하고, 비영리조직은 정부 정책에 대한 활동, 아이디어 및 정보제공, 전문인력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상호의존 및 협력 관계가 이뤄진다(김준기 2000; 남원석 2010). 공공기관 역시 행정기관과 재정지원, 전문성, 정보의 접근 및 활용에 대한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박상희·김병섭 2012; 이동기 2020). 따라서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경우 정부 정책, 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제도의 영향을 위탁운영 주체에 따라 비교한 결과, 예산의 변화, 정책결정 과정 참여도, 위탁운영 변화과정에서 민간주거복지센터와 SH 주거복지센터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1) 예산 집행의 차이

SH 주거복지센터의 2021년 사업비 정산자료를 검토한 결과, 2021년 교부액 대비 집행잔액이 민간주거복지센터에 비해 더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민간주거복지센터는 예산 집행률이 평균 98%로 집행된 예산을 대부분 모두 활용하고 있었으며 SH 주거복지센터는 평균 집행률 87%로 남은 예산을 다시 반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 면접 결과, 이러한 차이는 SH 주거복지센터의 인력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건비로 써야 할 예산이 쓰이지 않아 반납하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공공위탁으로 인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필요 인력 미충원으로 발생하고 있어 예산을 통해 위탁운영 주체에 따른 효율성을 비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서울시 1인가구 사업의 경우 인건비랑 사업비 예산 줬는데 직원 채용이 안 돼서 인건비 예산은 저희가 반납하는 거잖아요. 사업 진행을 하는데 사람은 없고…”

- SH B센터 과장 -

“(SH는) 인력 충원이 안 되고, 사업도 어떤 거는 안 하고 아예. 사업비 반납하는 액수를 서울시가 다 보내주거든요. 진짜 많이 반납해요… 작년 시가 정리해서 준 자료를 보면… 그런 거 보면 조금 안타깝죠.”

- 민간 G센터 센터장 -

2) 위탁운영 방식의 변화

서울시는 주거기본조례 제21조에 근거하여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 또는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주거복지센터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업무위탁은 2년 기준으로 하며 계약 만료 시에는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에 재위탁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21년 재계약 및 재위탁 추진을 위해 위탁기간 만료 5개월 전에 재위탁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전체 배점의 60% 이상이면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운영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2021년 7월 25개 전체 지역주거복지센터 성과평가를 수행하였으며, 민간주거복지센터들은 재위탁심의자료까지 제출하였다.

2019년도와 2021년도 평가점수표를 확인한 결과, 서울시가 제시하였던 배점 60% 미만인 센터는 전체 25개 주거복지센터 중 한 곳도 없었다. 그런데도 2021년 9월 서울시는 민간위탁 철회를 진행하였고, 2022년부터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는 SH 공공위탁으로 전환하면서 운영방식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SH는 기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센터와 다시 용역계약을 하였고, 제3자위탁방식으로 위탁운영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2023년 12월까지이며 그 이후의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는 SH 주거복지센터와 민간주거복지센터 종사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1) SH는 변화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

SH는 서울시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므로 서울시 결정에 따르는 처지이다. SH 주거복지센터 종사자들은 위탁 운영방식 변화에 대한 의견을 크게 표출하지 않으며 시 정책 방향을 따라가는 태도임을 밝혔다. 서울시나 SH 본사에서 주로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하향식(top-down) 운영을 하고 있어서 연구참여자들은 결정 권한이 없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에게 시나 본사에서 의견 조사를 수행하면 관련 의견을 표출할 의향이 있었다.

“이게 정책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좋다, 안 좋다 이런 생각이 없고...”

- SH A센터 과장 -

“직영 센터의 생각 여부를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조금 곤란한 거죠. 예를 들어서 주거복지 상담소를 SH가 처음 위탁운영 할 때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위탁이 꼭 필요하다 한 게 아니었었잖아요.”

- SH B센터 과장 -

그러나 SH 주거복지센터와 권역센터와의 통합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SH 주거복지센터는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며 주거상향, 주거비 지원, 임대주택 신청 등에 도움을 받지만, 권역센터에서는 이미 임대주택에 입주한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주거복지센터 서비스 대상자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력 충원 없이 업무가 더 가중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한 사항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리도 없고, 인원도 없고, 저희가 25개소를 직접 운영한다는 의미는 시설, 관리, 주거 상담, 3개가 돼야 하는데 지금 권역센터 시설하고 관리만 해도 인력이 엄청 부족해요… (중략). 차라리 지금처럼 분리되어 서로 각자 할 일 열심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 SH C센터 과장 -

(2) 민간은 운영변화로 인한 심리적 상처와 서비스 단절 우려

민간주거복지센터는 서울시의 민간위탁 철회방침으로 인해 심리적 상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서울시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효과가 없는 것을 확인하며 좌절감과 회의를 느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열악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해왔던 업무에 대해 인정받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상실감도 있었다. 고용승계나 용역계약 이후에 대한 명확한 방안과 해답이 나오지 않아 이로 인한 불안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했던 업무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자괴감도 들고, 심리적 상처도 있고…”

- 민간 B센터 센터장 -

“내년이면 우리가 1년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대책이 있냐고 물으니 없다고 해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답변했어요.”

- 민간 D센터 활동가 -

민간주거복지센터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민간이 그동안 구축해 온 주거복지서비스의 단절을 우려하고 있었다. 또한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주거취약계층과 일반 시민이 겪을 혼란에 대해서도 걱정하였다. 이에

따라 변화에 맞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가 했던 자원 연계 밀착 서비스 제공, 적극적인 대응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노인, 장애인, 주거약자들을 위한 밀착 서비스 제공도 다 사라지는 거고…”

- 민간 C센터 센터장 -

“전달체계가 혼선을 빚게 되면 혼란을 느끼는 거는 다 시민들 몫이거든요. 갑자기 주거복지센터라고 했다가 주거 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라고 했다가 이름들도 바뀌고, 혼란을 가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 민간 E센터 센터장 -

3) 정책결정 과정의 참여

(1)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아 어려움

민간주거복지센터는 주거기본법 제정 이전부터 주거권 실현,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인정하고 주거복지센터를 법령에 포함하며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심층 면접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다. 기존에 구축한 신뢰 관계도 없어지고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만 내려오고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민간주거복지센터 종사자들은 끊임없이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정부 조직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커진 것 같아요. 주거복지센터 사업이 민간에서 시작했잖아요. 서로 그동안 쌓아온 신뢰 관계라는 게 있는데 너

무 일방적으로 파괴해 버리니까…: (중략). 최소한 공청회라든지 직원들 의견 수렴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 민간 C센터 센터장 -

“지금 내고있는 정책은 순전히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해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놓은 과정인 거고 변화에 민감하게 현장도 돌아보고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요?”

- 민간 D센터 팀장 -

(2)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반영되고 있음

반면 SH 주거복지센터는 실무적인 부분에서 의견을 표출하였을 때 의견 수렴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적극적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지만, 간담회, 실무회의, 세미나 등에 참석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따라서 민간주거복지센터 종사자와 비교하면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저희가 따로 정책 결정 참여하는 게 없어요.”

- SH D센터 과장 -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의 의견을 물어봐요. (중략). 그러니까 우리의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하는 거죠. 수렴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거죠.”

- SH A센터 과장 -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외부환경, 내부역량, 제도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5] 민간위탁 및 공공위탁 주거복지센터 분석결과

구분		민간위탁 주거복지센터	공공위탁 주거복지센터
외부 환경	자치구 특성의 영향	(공통) 위탁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자치구의 주거취약계층 현황과 주거환경, 자치구와의 협조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	
	연계기관 차이	지원금을 직접 받아 대상자에게 전달 가능, 후원금 활용 가능, 연계기관 종류 많음	후원금이나 센터로 직접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다른 자치구 센터 연계 차이	협회를 통해 16개 센터가 주로 후원 물품, 정보 공유 등 다양한 협력관계 활동 및 유지	이관업무 이외에는 다른 자치구 센터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움
내부 역량	서비스 제공 방식	주거비 지원 상담 비율이 더 높으며 내방 및 방문 상담이 비율이 공공보다 높음	공공임대주택 상담 비율이 더 높으며 코로나19 이후 내방 및 방문 상담 감소
	인력 차이	상근인력이 더 많으나 사회복지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전문인력을 수급하는 것이 어려움	3년마다 순환보직, 공로연수제도로 인해 상근인력이 더 부족함
제도 영향	예산의 차이	사업비와 운영비가 부족하며, 기성금 청구방식으로 변화하여 예산 운용이 어려움	사업비가 더 많으나 인력충원이 되지 않아 예산(인건비)을 반납하고 있음
	위탁운영의 변화	상실감, 좌절감 등 심리적 상처 발생과 서비스 단절에 대한 우려	탐다운 방식의 운영으로 종사자 의견조사가 없으며 종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없음
	정책결정 참여	현장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으며 정부와의 소통이 어려움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이 되며, 공공기관으로 행정기관을 따르고 있음

V.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 사례로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으로 운영되는 주거복지센터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하였고, 효과적인 주거복지 전달체계 운영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직의 지속성과 상호의존성을 설명하는 데 활용되는 자원의존이론을 기반으로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주거복지센터의 외부환경, 내부역량 및 제도적 영향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는 위탁운영 방식에 상관없이 자치구의 환경과 협조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위탁운영 주체에 따라 직접 복지원 연계 기관 종류의 차이가 있었는데, 민간주거복지센터는 후원금과 직접 지원비를 받을 수 있어 SH 주거복지센터에 비해 더 많은 종류의 기관과 연계하고 있었다.

둘째, 위탁운영 주체에 따라 내부역량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민간주거복지센터의 경우 인력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인해 전문인력을 수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SH 주거복지센터의 경우 인력이 부족하여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 충원의 수요가 높았다. 이러한 인력 차이는 주거상담 방식의 차이로 이어졌는데, 민간주거복지센터는 SH 주거복지센터에 비해 가구방문과 내방상담을 더 많이 수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위탁운영 주체에 따라 제도적 영향이 다름을 확인하였다. 위탁운영 주체에 따라 예산 사용의 차이가 있었는데 SH 주거복지센터는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아 인건비를 반납해 왔으며, 민간주거복지센터는 사업비와 운영비가 부족하여 외부 자원연계와 후원금을 마련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위탁운영 방식의 변화로 인해 민간주거복지센터는 정책 결정의 참여 과정에서 의견 표출을 위해 많은 시도를 하고 있으나 수렴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SH 주거복지센터는 지방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결정 사항에 따라 일해야 하는 위치임을 밝혔다.

종합하면 민간위탁 주거복지센터는 협력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보완하며,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획득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위탁 주거복지센터는 재정이 부족하여 자원연계와 네트워크 활동에 집중하고 있었다. 공공위탁 주거복지센터는 행정기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정보의 접근이 더 수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부 자원연계와 네트워크 활동이 더 적었으며,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에서 복합적인 수요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지역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운영 주체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과 민간 운영 주체별 장단점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운영 주체만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 주체를 선정하여 사업 수행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마다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거복지센터와 기초지자체 간 협력관계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광역지자체는 일률적인 운영 주체를 직접 제시하기보다는 기초지자체가 지역상황에 맞는 운영 주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지역과 운영 주체에 따라 제공되는 주거복지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줄이고,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재정지원과 주거복지센터 업무에 관한 상세한 기준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같은 양질의 주거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일방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주거복지 네트워크 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통해 서비스 수요자의 요구가 주거복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시에서는 민간위탁 철회가 일방적으로 이뤄져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주거복지센터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 위탁운영 주체 모두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간은 정부와의 신뢰관계 단절, 업무의 회의감 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은 결정 권한이 없는 사항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밝혔다. 따라서 다양한 주거 문제 해결방안과 주거복지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실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운영

주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주거복지센터가 주거복지 전달체계에서 더 효율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력에 대한 업무 여건 개선, 사회복지경력 인정, 급여 개선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인력이다. 서울시 사례에서 공공위탁 주거복지센터는 필요한 인력이 수급되지 않고 있었으며 실제로 근무하는 인력도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위탁 주거복지센터는 사회복지사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급여를 알맞게 받을 수 없어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가 많았다. 주거복지 전문인력 수급의 어려움은 결국 주거복지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으로 운영되는 주거복지센터를 분석하기 위해 자원의존이론을 활용하여 위탁운영 주체의 차이를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으며, 주거복지센터의 문제가 운영 주체의 차이와 더불어 주거복지센터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뒷받침하는 사례를 제시하였다는 데 연구의 실천적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서울시 자치구 센터별 대표자를 전수조사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서울시와 중앙주거복지센터의 의견과 관련한 부서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에서 주거복지 전달체계 전체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증 자료를 토대로 추가적인 양적분석이 가능할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위탁운영 주체에 따른 효율성과 주거복지서비스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데 주거복지센터 이용자의 의견과 만족도를 담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후속 연구로 주거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서비스 수혜자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다면 주거복지센터의 성과 및 한계를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권오철·강영주. 2015.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위탁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7(3): 169-192.
- 김강산. 2022. 「주거복지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김시영·노인만. 2004. 「지방정부와 NPO 간 협력관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1): 203-227.
- 김영중. 2017.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와 민간위탁 제도 연구」. 보건사회연구 37(4): 406-442.
- 김정해·이혜영·임인선·권순도. 2015. 「민간위탁제도의 운영효율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김준기. 2000. 「정부-NGO 관계의 이론적 고찰: 자원의존모형의 관점에서」. 한국정책학회보 9(2): 5-28.
- 김혜승·강미나·박미선·제갈영. 2014. 「주거급여제도의 확대 개편과 향후 과제: 임차가구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국토정책 Brief (486): 1-8.
- 김효주·이은국·홍기원. 2011. 「지방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에 따른 효율성 변화분석: 민간위탁에서 직영전환으로의 변화」. 국정관리연구 6(1): 133-156.
- 남용현. 2018. 「공공기관 위탁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 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남원석. 2010. 「주거복지전달체계에서 주거복지센터의 활동 평가: 기초지자체와의 협력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1(5): 63-72.
- 남원석·김수경·백세나. 2016.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평가체계 개발」. 서울연구원.
- 남원석·김수경. 2019. 「주거복지센터 평가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30(4): 11-20.
- 남철관. 2007. 「비영리민간단체 주거복지활동 현황 및 과제; 비영리민간단체 주거복지활동의 필요성과 과제」. 도시와 빈곤 85: 5-15.
- 문병효. 2021. 「민간위탁의 공공성 확보방안과 재공영화 논의」. 강원법학 64: 15-66.
- 문소현·이건학. 2020. 「지역 제한 P-median 모델을 이용한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입지 분석 및 모델링」. 대한지리학회지 55(2): 197-206.
- 민윤경. 2016. 「이중멤버십 사회적기업가의 지원체계에 대한 경험 연구: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8(1): 53-85.
- 박근석·주관수. 2016. 「주거복지 전달체계에서 커뮤니티의 역할에 대한 탐색적

- 연구, LHI Journal 7(2): 103-111.
- 박민정. 2009. 「학교급식 민간위탁의 'Back-in'현상의 비판적 고찰: 신공공관리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5(1): 81-116.
- 박상희·김병섭. 2012. 「공공기관 임원의 인사에 관한 연구: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에서」, 한국행정연구 21(1): 39-72.
- 방혜선·이현정. 2017. 「공공과 민간 주거복지 현장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청주시 주거복지서비스 실태 및 개선요구 분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8(2): 35-45.
- 서정옥·김보경. 2015. 「사회적 혁신가정신이 비영리 조직의 자원의존패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자원다양성, 자원경쟁성, 자원의존성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3(4): 271-298.
- 송낙길. 2014. 「지방문화원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 자원의존이론을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9(2): 225-252.
- 오단이. 2013. 「자원의존이론과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사회적기업의 형성 및 성장에 관한 사례연구: 초기 인증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0(3): 269-297.
- 오정석·박홍철. 2016. 「서울시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지역거점 형성 및 운영방안」, 한국지역학회지 4(1): 31-48.
- 윤옥민. 202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증가 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훈·김권식·박순애. 2014. 「정부싱크탱크의 정책기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자원의존이론의 관점」, 행정논총 52(2): 91-117.
- 이동기. 2020. 「지방 에너지 공공기관 설립에 있어 사전 검토 요인의 상대적 중요성 분석: 자원의존이론과 제도적 조직이론의 적용을 통해」, 한국조직학회보 17(3): 95-124.
- 이종권·김경미. 2016. 「주거복지 공적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통합적 지역거점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7(4): 33-46.
- 이지숙. 2015. 「주거복지사업과 주거복지센터의 업무에 관한 연구」, 조형미디어학 18(4): 283-292.
- 이희연. 2021.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종사자의 사례관리 실천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인문사회 21 12(6): 2829-2844.
- 정규진·서인석·장희선. 2013.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2(1): 171-202.
- 정두영. 2021. 「주거복지 전달체계 예산분석」, 2022 서울시 예산 및 정책분석 토

론회 발표자료.

- 조희진·손선화·장용석. 2018. 「자원의존이론과 제도주의 조직론을 통해 본 기업의 고령자 고용 분석과 함의」. 한국정책학회보 27(1): 183-222.
- 최훈호. 2019. 「부산시 주거복지정책 전달 강화를 위한 중간조직 운영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21(4): 27-34.
- 홍인옥. 2013. 「주거복지 전달체계 현황과 개선방향」. 국토연구 385: 45-53.
- Bahle, Thomas. 2008. "The State and Social Services in Britain, France and Germany since the 1980s: Reform and Growth in a Period of Welfare State Crisis." *European Societies* 10(1): 25-47.
- Duncan, Robert. B. 1972.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al environments and perceived environmental uncertainty."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7(3): 313-327.
- Hall, H. Richard and P. S. Tolbert. 1994. *Organizations: Structures, Processes, and Outcomes*. N.J.: Prentice-Hall.
- Lawrence, P. R., and Lorsch, J. W. 1967. *Organization and environment managing differentiation and integration*. Irwin, Homewood.
- Pfeffer, Jeffrey and Salancik, Gerald. 1978. *The External Control of Organizations: A Resource Dependence Perspective*. New York: Harper & Row.
- Pike, Stephen, Roos, Gonran and Marr, Bernard. 2005. "Strategic Management of Intangible Assets and Value Drivers in R&D Organizations." *R&D Management* 35(2): 111-124.
- Saidel, R. Judith. 1991. "Resource Interdependence: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Agencie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1(6): 543-553.
- Salamon, M. Lester. 1987. "Of market failure, voluntary failure, and third-party government: Toward a theory of government-nonprofit relations in the modern welfare state." *Journal of voluntary action research* 16(1-2): 29-49.
- Savas, E. S. 1987. "Privatization and prisons." *Vanderbilt Law Review* 40: 889.
- Skelcher, Chris. 1998. *The Appointed State: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Democracy*. Open University Press.

- “중앙지역주거복지센터 2019년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 서울정보소통광장 결재문서. 2020.5.14.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20356656>(검색일: 2021년 8월 14일).
- “2018 중앙지역주거복지센터 추진실적 평가 및 정산결과.” 서울정보소통광장 결재문서. 2019.1.22.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17028689>(검색일: 2021년 8월 14일).
- “2021년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센터 운영계획.” 서울정보소통광장 결재문서. 2021.3.19.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22532536>(검색일: 2022년 9월 30일).

국 문 초 록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운영실태 비교분석: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윤난(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

김부열(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부교수)

본 연구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하여 주거복지센터와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와 11명의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하였다. 자원의존이론을 활용하여 주거복지센터의 외부환경, 내부역량, 제도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복지센터의 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지역의 주거취약계층 현황, 주거환경, 자치구와의 협조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 둘째, 위탁운영 주체에 따라 내부역량의 차이가 있어 자원연계, 센터 간 협력, 인력 상황이 달랐다. 셋째, 위탁운영 주체에 따라 예산, 운영방식 변화로 인한 영향, 정책결정 참여 과정에서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데 민간과 공공이 상호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주거복지센터 이용자를 포함한 연구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위탁운영 주체별 효율성과 성과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 공공위탁, 자원의존이론, 서울시

Abstract

Contracting Out Housing Welfare Centers to Non-profit versus Public Sector:

The case of Seoul, Korea

Yoon, Ran(Master of City Planning in Urban and Social Innov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Booyuel(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undertake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housing welfare centers in Seoul with the aim of suggesting recommendations to enhance their efficacy and proposing policy implications for the housing welfare delivery system. This research combines a literature review and in-depth interviews with 11 housing welfare center workers. Resource Dependence Theory was employed to analyze the centers' external environments, internal capacities, and institutional impac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highlight several key observations. First, irrespective of the operating entities, housing welfare centers in Seoul were primarily influenced by the status of vulnerable populations, housing environment, and cooperation with their district governments. Second, differences in internal capacities between the non-profit and public sectors were observed, affecting their ability to leverage resources, collaborate with other centers, and hire staff. Third, variations in budget usage, the impact of operational changes, and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were found to depend on the operating entities. This result shows the need for cooperation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in operating housing welfare centers. Thus, further extensive analysis is required to include the beneficiaries of housing welfare centers to

determine their performance.

Key words: Housing Welfare Center, Contracting Out, Public Service Commissioning, Resource Dependence Theor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통근이 거주지역 만족도와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 인천광역시 거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양은모*·배호중**

양은모 · 배호중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1. 인천광역시민의 통근
2. 지역만족도 및 지역소속감에 대한 이론적 논의
3. 지역만족도 및 지역소속감의 결정요인

III. 분석자료 및 변수구성

1. 분석자료: 「2020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2. 변수구성

IV. 통근이 거주지역 만족도와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

1. 기술통계분석
2. 통근이 거주지역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3. 통근이 거주지역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

V. 결론 및 제언

* 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 연구위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과생애연구본부 부연구위원, 교신저자(E-mail: baseball@kwidmail.re.kr, Tel: 02-3156-7145)

<http://doi.org/10.34165/urbanr.2023.24.257>

투고(접수)일 2023.4.10. 심사(수정)일 2023.4.27. 게재확정일 2023.12.14.

I. 서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필요하다. 그 중, 안정된 생활의 중심은 안정된 주거이다. 개인(가구)은 누구나 안정된 주거를 희망하는 가운데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개인에게 적합한 최적의 주거를 '선택'한다. 안정된 주거를 위한 결정은 집의 크기나 형태, 점유 형태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이루어지는데 '사는 곳(거주지)' 또한 만족도 높은 주거를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삶에 '사는 곳'이 갖는 의미는 크다. '사는 곳'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구별되기도 하고, 투표행태나 정책에 대한 관점과 같은 사고나 의식의 분야까지도 이와 관련지어 이야기된다(손낙구 2008;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2010). 일상적인 재화나 서비스와는 달리 주거는 한번 결정하면 자주 바꾸기 어렵고, 비교적 오랫동안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직주분리가 보편화된 현대사회에서 거주지는 거의 매일 발생하는 통근의 결정요인이고, 통근거리나 통근시간은 그로 인한 시간부족감, 체력 저하 등을 가져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거주지역은 개인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자, 그를 나타내는 중요한 특질로 인식된다. 따라서, 거주지역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다면 개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도 일정 수준 이상일 가능성이 크다. 지역의 입장에서조차 지역주민의 높은 지역 만족도와 소속감은 지역의 안정성을 높이고, 거주 존속 요인이 된다.

지역에 대한 높은 만족도 및 소속감은 개인뿐 아니라 거주지역에도 긍정적인 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역 만족도 및 소속감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은 지방정부 정책 목표가 되기 충분하다. 그리고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거주 중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엇이 거주 중인 지역에 대

한 만족도 및 소속감과 관련되어 있는지?)¹⁾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한된 표본자료를 이용해 거주 중인 지역에 대한 만족도나 소속감을 살핀 선행연구들이 있지만(장정순·임원선 2015; 유은영 2018; 최윤지·고순철 2020) 대표성 있는 대규모의 통계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주거 결정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 자명한 '통근'을 논의의 중심축으로 삼아 지역에 대한 만족도나 소속감을 이해하고자 한 연구는 더욱 드물다.

인천광역시민의 상당수는 서울 등으로 통근하고 있으며, 원거리 통근이나 교통체증에 따른 부담을 안고 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통근은 상당한 시간과 체력, 비용 등이 소요되는 활동이다.

따라서, 매일의 시간 사용을 비롯한 삶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근은 근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활동이므로 1차적으로는 근로활동 또는 직장과 관련한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통근으로 인한 시간소모나 체력소진은 여가 등 시간활용 양상이나 가사노동분담, 가구원과의 관계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다(양은모·배호중 2023). 나아가 통근은 그가 속해 있는 지역에 관한 생각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통해 '통근'을 논의의 중심축으로 삼아 거주 중인 지역에 대한 만족도나 소속감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지역 발전뿐 아니라 주민 삶의 질 고취를 위해 중요하다(이수범 2013; 이서연·조원지 2022)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의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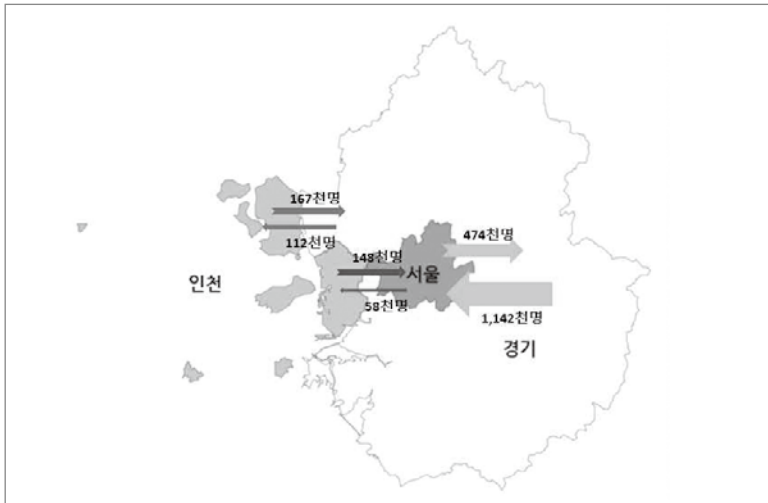
1) Tiebout(1956)의 '발로 하는 투표(voting with the feet)'나 Hirschman(1970)의 '지역에 대한 이탈, 항의, 충성도'는 지방정부의 서비스나 정책에 대한 만족감이 주민들의 행동 결정요인 중 하나가 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지방정부의 공동화 현상이 기존의 농어촌이나 중소도시뿐만 아니라 도심에까지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한 이슈는 지방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태도로서 지역만족도, 거주 의사, 지역소속감 등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강혜진 2018).

극적인 참여나 계속 거주 의사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보인 연구(김용진·김성희 2016; 이경영 외 2018; 최희용·정문기 2019; 이지은·이정은 2020)에 비추어 보아 인천광역시에 거주 중인 근로자들의 지역에 대한 만족도와 소속감에 어떠한 요인들이 관련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1. 인천광역시민의 통근

인천광역시민의 경우, 산업구조와 지가(주택가격) 등 지역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지역에 따른 통근양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수도권 통근 흐름은 [그림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림 1] 수도권 통근 흐름(2020년)

자료(출처): 통계청 보도자료(2021/11/29)

인천광역시 거주자의 경우 인천 내로 통근하는 이들이 1,042천 명, 서울과 경기도로 통근하는 수는 각각 148천 명과 167천 명이었으며,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는 6천 명이 통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인천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인천으로 통근하는 이들을 살펴보면 서울로부터는 58천 명, 경기도에서는 112천 명,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1천 명 수준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통근을 통해 인천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161천 명, 유출되는 인구는 321천 명으로, 통근을 통한 인천광역시의 순유출 인구는 유입의 2배에 가까운 160천 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표 1] 인천광역시의 통근 유·출입

(단위: 천 명)

거주지 \ 통근지	인천	서울	경기	수도권 외
인천	1,042	148	167	6
서울	58	3,920	474	35
경기	112	1,142	4,869	79
수도권 외	1	16	46	11,171

자료(출처): 통계청 보도자료(2021/11/29)

또 다른 통계자료 「지역별고용조사」(통계청 보도자료 2023/8/22)를 통해 2022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인천시민의 통근을 구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취업자(1,548.5천 명) 중 55.8%에 달하는 863.9천 명은 거주지 외의 타지역으로 통근하고 있다. 구별로 나누어 살펴볼 때 타지역 통근 취업자 비율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타시도와 멀고 섬이라는 특성이 있는 옹진군이나 강화군의 경우 타지역 통근 취업자 비율이 상당히 낮았으며, 중구나 서구의 경우에도 타지역 통근 취업자 비율이 50%를 밑돌았다. 반면, 계양구(65.2%)나 부평구(63.4%)를 비롯해 동구, 연수구, 미추홀구 등은 취업자 10명 중 6명 이상은 타지역으로 통근하고 있다.

[표 2] 시군구 타지역 통근 취업자

(단위: 천 명, %)

	취업자 수		타지역 통근 취업자 비율(%)
	거주지 내 통근	거주지 외 타지역 통근	
인천 중구	45.4	29.6	39.5
인천 동구	11.7	19.2	62.3
인천 연수구	75.0	123.3	62.2
인천 남동구	119.7	142.1	54.3
인천 부평구	93.9	163.0	63.4
인천 계양구	53.9	100.8	65.2
인천 서구	155.5	147.1	48.6
인천 미추홀구	84.7	132.6	61.0
인천 강화군	33.1	5.6	14.5
인천 옹진군	11.7	0.6	4.9

자료(출처): 통계청 보도자료(2023/8/22)

2. 지역만족도 및 지역소속감²⁾에 대한 이론적 논의

지역사회(community)는 대개 ‘일정한 지리적 구역을 전제조건으로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Ross는 지역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영역,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라는 세 가지

2) 지역만족도 및 지역소속감에 대해 통일된 정의는 없으며, 크게 보아서 두 용어 모두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으로 포괄될 수 있는 등 양자를 명확하게 구분할 근거나 정의는 없다. 지역이나 학교,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와 소속감을 살핀 연구 중 일부는 소속감은 만족도를 매개(혹은 만족도가 소속감을 매개)하는 변수로 간주하여 분석을 실시하기도 하였다(신종호 외 2011; 지갑성 2020; 김지현·강수진 2021; 김아영 2023). 다만, 두 개념에 대한 명확한 관계 설정이나 실증연구가 많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임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에서는 지역만족도 및 지역소속감과 관련한 요인들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각각을 종속변수로 삼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천광역시와 유사하게 수도권이라는 특성을 지닌 경기도 청년들에 대한 연구에서 경기도에 대한 소속감은 ‘서울 주변’이라는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 만족도와는 별개로 경기도에 대한 소속감은 높지 않게 나타남(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4)을 감안한다면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만족도에 대해 구분지어 살펴볼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참고로 분석에 이용한 표본의 지역만족도와 지역소속감 간의 상관계수는 [부록 표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0.309 수준이었다.

요건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일정의 지리적 영역 내의 구성원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의 유대를 형성하는 사람들의 집합체로 정의할 수 있다(황명주·김형수 2019).

본질적으로 공간적 존재인 인간에게 '지역'은 사회적으로 과거에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서 뿐 아니라 현재의 경제적 삶의 터전과 다양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네트워크의 장으로서 인간의 사회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범주이자 인간의 사회적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원천임에 틀림없다(박준식·김영범 2013). 따라서 개인의 생활이나 삶의 질에도 지역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역만족도 또는 지역소속감과 개인의 삶의 질을 살핀 연구에서는 이들 간의 정(+)의 관련성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이나 높은 정도의 소속감을 개인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기도 한다(Marans and Rodgers 1975; Rodgers 1980; Bernard 2015; Fitz et al. 2016; 오미영 2008; 황정임 외 2011; 김주진·나주몽 2021; 박보은·정선영 2020; 이서연·조원지 2022; 한국리서치 2022). 또한, 삶의 질에 대한 연구에서 지역의 사회적 네트워크, 지역공동체 소속감, 사회적 신뢰와 같은 관계적 변인을 반영하는 시각이 증가했는데(Helliwell and Putnam 2004; Koo et al. 2016; 박길성 2002) 이는 삶의 질을 논의할 때 지역사회의 사회적 기반도 개인의 행복과 삶의 만족을 높이는 주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의미한다(김이선·손명아 2018).

지역만족도는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가 개인의 요구를 얼마나 충족해주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의 정도로, 지역사회 안에서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정의할 수 있다(Matarrita-Cascante et al. 2010; Bernard 2015; 이서연·조원지 2022 재인용). 지역만족도는 삶의 질이나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참여도나 행태 등과도 연관지어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하며(서재호 외 2012; 김태훈 외 2014; 강혜진 2018; 최희용·정문기 2019; 박

보은·정선영 2020) 해당 지역에서의 계속 거주나 타지역으로의 이주의
향과 관련짓기도 한다(오미영 2008; 김용진·김성희 2016; 이지은·이정은
2020). 현대 국가의 주요 목표는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권미조 외 2018) 지역에 대한 만족 수준을 높이
는 것은, 해당지역 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거나 지역사회의 참여도를
높이고 계속 거주의를 높이는 등 자치단체의 상당한 정책 목표로도 기
능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역에 대한 높은 소속감 또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개
인 또는 가구에 그곳에서의 삶이 비교적 만족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것
이다. 따라서, 지역소속감 향상 방안을 찾는 것 또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계속 거주의를 높이는 노력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실
제로 통계청에서는 ‘국민 삶의 질’을 나타내는 71가지 지표 중 하나로 ‘지
역사회 소속감’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사회지표(총 270개 통계
치)’ 구성요소 중 하나로도 ‘지역사회 소속감’이 활용된다(국가지표체계
2023/4/4). 즉, ‘지역사회 소속감’은 그 자체로 지역사회의 사회통합이 얼
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측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기능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국민의 생활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발굴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갖는 지표이다.

3. 지역만족도 및 지역소속감의 결정요인

거주 중인 지역에 대한 만족도 및 소속감과 관련된 요인들을 밝히고자
한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개인적 요인(성별, 연령, 혼인
상태, 교육수준, 경제활동 참여 특성 등)과 가구특성(주거점유 형태, 가
구소득, 가구원 수 등)이 지역만족도 및 소속감과 관련 있음을 설명한다
(Kitchen et al. 2012; 장정순·임원선 2015; 윤우석 2017; 이정영·정문기

2021; 정영아·김윤지 2021).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 지역만족도나 소속감에 차이가 있으며(Brown et al. 2005; Kitchen et al. 2012; 장정순·임원선 2015; 조민지·임업 2016; 박관태 외 2022), 연령이 높고(Filkins et al. 2000; Brown et al. 2005; Kitchen et al. 2012; 장정순·임원선 2015; 강혜진 2018; Leviten-Reid et al. 2020; 정영아·김윤지 2021), 혼인상태에 있는 이들(유은영 2018; 최윤지·고순철 2020; 정영아·김윤지 2021)이나 높은 정도의 교육수준을 가진 경우(Filkins et al. 2000; 조민지·임업 2016; 강혜진 2018) 지역만족도나 소속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건강상태가 양호한 이들(Kitchen et al. 2012; Leviten-Reid et al. 2020)이나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경우(강혜진 2018; 정영아·김윤지 2021)에도 지역에 대한 만족도나 소속감이 높았다.

또한, 가구특성과 관련해서는 가구원 수가 많고(Miller and Crader 1979; 정영아·김윤지 2021) 가구소득이 높을수록(조민지·임업 2016; 정영아·김윤지 2021; 박관태 외 2022) 지역만족도와 소속감이 높았고, 자가에 거주하는 이들의 지역만족도 또한 상대적으로 높았다(Kitchen et al. 2012; 장정순·임원선 2015; 박관태 외 2022). 그밖에 해당 지역 거주 기간(장정순·임원선 2015; Leviten-Reid et al. 2020)이 길거나 지역규모(대도시 등) 및 대도시와의 거리 등에 따라서도(Kitchen et al. 2012; McKnight et al. 2019; Leviten-Reid et al. 2020) 지역만족도나 소속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통근 또한 지역만족도 및 지역소속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긴 통근시간은 각종 단체에 참여와 같은 사회참여의 시간을 감소시켜 사회자본 중에서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등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Besser et al. 2008; 유경빈 2017), 여가나 가족활동, 수면 시간을 저해하는 상당한 요인이 제시

되기도 한다(김준형 2016; 유재언 2016; 이윤영·차운아 2023 재인용). 여가나 가족활동이 대부분 거주 중인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긴 통근은 지역만족도 또는 지역소속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개인에게 지리적 특성이나 소속감 등이 행정구역을 단위로 체감될 가능성이 높고, 정책의 상당수는 행정구역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멀고/가까움 등의 거리적 체감도나 소속감 등은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거리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I: 통근시간이 길면 지역소속감이 낮을 것이다.

가설II: 통근시간이 길면 지역만족도가 낮을 것이다.

가설III: 통근거리가 멀면 지역소속감이 낮을 것이다.

가설IV: 통근거리가 멀면 지역만족도가 낮을 것이다.

Ⅲ. 분석자료 및 변수구성

1. 분석자료: 「2020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인천광역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통근이 거주지역(구/군)에 대한 만족도 및 소속감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2020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자료를 분석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 수립에 활용할 지역 맞춤형 자료 마련을 위해 건강, 가구와 가족,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등 10개 영역별로 시민의 평소 생각을 살펴 고자 매년 「사회조사」를 실시한다(인천광역시 2021). 본 연구는 2020년

11~12월에 걸쳐 인천시내 거주 표본 6,000가구(가주주 및 만 13세 이상 가구원)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³⁾

「2020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는 강화군, 옹진군 등 인천의 10개 구/군의 가구(구별 480~700가구)에 속해 있는 가구원 12,619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통근 여부와 함께 통근 소요 시간(편도 기준)을 묻고 있으며, 통근 지역에 대해서도 구(區) 단위까지 응답을 받고 있어 통근자들의 통근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당 통계는 충분한 대표성을 지닌 대규모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204010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천 전역에 거주 중인 근로자들의 ‘통근시간’뿐만 아니라 ‘통근거리’도 비교적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2020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를 분석에 적합한 자료라고 판단했다. 또한, 통근하고 있는 7,665명의 근로자 표본을 추려내어 이들의 통근(통근시간과 통근거리)이 그들이 사는 지역(구/군)에 대한 만족도 및 소속감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2. 변수구성

1) 종속변수: 거주지역(구/군)에 대한 만족도, 소속감

거주지역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개인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균형 잡혀 있음을 대변한다. 거주 중인 지역(구/군)에 대한 소속감 또한 해당 지역에서의 삶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우며, 지역에 대한 기여나 계속

3)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2021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가 최신의 자료이기는 하나 해당 조사에서는 광역시·도 수준에서의 통근지역에 대해서만 변수가 제공되고 있다. 본 연구는 (비록 추정을 통한 값이기는 하나) 통근거리 또한 연구의 중요한 설명변수로 설정하였기에 상대적으로 자세한 통근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2020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거주 의향 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본 연구에서는 ‘거주 중인 지역에 대한 만족도’와 ‘거주 중인 지역에 대한 소속감’의 두 가지 종속변수를 설정⁴⁾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거주 중인 지역(구/군)에 대한 만족도’는 「인천광역시 사회조사」의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구/군)의 전반적인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서 ‘①전혀 만족하지 않는다~⑩매우 만족한다’의 11점 척도로 측정된 응답 값을 사용하였다. 이와 함께 두 번째 종속변수로 사용한 ‘지역에 대한 소속감’은 “귀하는 현재 살고 계신 동네(구/군)에 대해 얼마나 소속감을 느끼십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5점 척도(①전혀 느끼지 않는다~⑤매우 많이 느낀다)로 측정된 값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2) 독립변수: 통근시간, 통근거리⁵⁾ 및 통근유형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나 만족도를 둘러싼 기존의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지 않았던 ‘통근’에 초점을 두고 통계자료를 이용해 실증적으로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인천광역시 사회

4)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삼은 지역만족도나 지역소속감의 경우 개인의 측면에서는 ‘삶의 질’과 유사한 수치를 나타낼 가능성도 있으며, 지역만족도나 지역소속감 간에도 유사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삶의 질에 비해 지역만족도나 지역소속감이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정책적 개입의 여지가 더욱 크다고 판단해 이를 종속변수로 삼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상관관계를 통해(부록 표 1)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둘을 각각 분석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할 만큼 높은 정도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아 지역만족도나 지역소속감 각각을 종속변수로 삼아 분석을 진행하였다.

5) 후술할 ‘간접적으로 산출한 통근거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낮으며, 통근시간과도 비례하는 경향을 보일 가능성도 상당해 분석의 중요한 축인 설명변수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인천광역시 사회조사」를 통해 측정된 통근시간의 경우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을 통해(자기기입식) 측정된 변수인만큼 오류의 가능성 등이 존재하며, 통근에 대한 실측 통계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의 측면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도출하였다는 한계는 있으나) 통근거리의 측면을 통해서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에서의 논의의 중심축인 통근에 대해 보다 선명하게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여 이를 활용한 분석도 함께 진행하였다.

조사]에 포함된 몇 가지 문항을 이용해 크게 '통근시간'과 '통근거리' 그리고 통근지에 따른 '통근유형'의 세 측면에서 통근을 구체화할 수 있는 변수를 생성하였다.

우선 '통근시간'의 측면에서는 「2020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에서 평균 소요시간(편도 기준)을 분 단위의 연속형 변수로 묻고 있어 이를 활용해 '통근시간'과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나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해보았다. 이어서 '통근거리' 또한 통근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측면으로 여기고 '통근거리'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근로자들의 이동양상을 단순화하면 '집→일터→집'으로 구성되므로 집과 일터의 위치를 알 수 있다면 양자 간의 거리를 통해 각자의 통근을 비교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집의 위치나 일터의 위치는 상당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대부분의 통계자료에서는 세부주소까지는 조사 또는 공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2020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에서는 가구 및 통근하는 지역에 대해서 시/구/군 수준까지는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이를 이용해 가구 및 일자리가 속한 최소 행정단위의 행정기관의 위치를 추출하여 가구와 일자리의 위치변수를 생성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코드북에 제시된 시/구/군청의 위치를 '위도경도찾기 홈페이지'를 통해 [그림 2]와 같이 위도·경도 정보로 변환하였으며, 변환된 위도·경도 정보를 이용하여 집과 일자리 간 직선거리(≒통근거리)를 산출하였다.



[그림 2] 구청 좌표의 획득 - 미추홀구청의 예

자료(출처): Esran 위도경도찾기 홈페이지

집과 일터가 다른 행정구역에 속해 있으면 각 행정기관 간 산출된 거리를 통근거리로 삼았으며,⁶⁾ 동일한 행정구역에 속해 있으면 통근에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한 문항의 응답값을 이용해 차량 등(자가용, 버스, 오토바이, 택시 등)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구축한 차량 평균속도 자료(한국교통연구원 View_T 홈페이지)에 통근시간에 대한 응답값을 곱한 수치를 통근거리로 간주⁷⁾하였고, 도보로 통근한다고 응답한 이들에 대해서는 시속 5km의 속도를 가정해 '5km×통근 소요시간' 만큼

6) 실제 이동경로가 아닌 집과 직장 간 수학적으로 산출한 '직선거리'를 활용했으므로 통근거리가 과소계산되었을 것이다. 또한 구별로 교통체증의 정도나 교통여건 등이 다르고 구(區) 자체도 상당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 구 단위로 통근을 살펴보았다고 할지라도 실제 통근거리와는 차이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집과 일터의 주소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이를 온전히 알 수 있는 대규모 자료의 활용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는 통근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증연구가 드문 이유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통근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변수를 생성하고자 고민하였는데 그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가구 및 일터가 속한 최소 행정단위인 시/구/군청의 좌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통근거리를 산출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7) 출·퇴근 시간대가 하루 중 가장 혼잡할 가능성이 높음을 감안해 응답자가 속한 구의 도로들의 혼잡시 평균속도를 이용하였으며, 동일구로 통근한다고 응답한 만큼 각 구의 면적과 동일한 원의 지름을 초과할 수는 없도록 상한을 두고 통근거리의 추정값을 산출하였다. 다만, 해당자료는 2019년이 이용가능한 최신자료라는 아쉬움이 있다.

을 통근거리로 삼았다.



[그림 3] 도로 평균속도 자료의 획득

자료(출처): 한국교통연구원 View_T 홈페이지

이밖에 '통근시간'과 '통근거리' 뿐만 아니라 통근지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기도 하였는데 간단히 '동일 구 통근'과 '그 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동일 구 통근', '인천 내 다른 구 통근', '인접 시 통근', '근접 시 통근', '서울로 통근', '기타 지역 통근'의 6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본 모형도 설정하였다.

3) 통제변수: 개인특성 및 가구특성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나 지역만족도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나 지역만족도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된 요인들을 바탕으로 통제변수를 설정하였는데 「2020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개인특성과 가구특성으로 구분해 통제변수들을 설정하였다.

개인특성과 관련해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건강상태를 포함하였으며, 통근에 초점을 둔 연구인만큼 일과 관련해 일과 여가 중 어느 부분에 더 집중하고 있는지도 함께 고려하였다. 이와 함께 종사상 지위도 각각을 구분하는 가변수를 생성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가구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가구원 수, 주거점유형태, 가구소득을 고려하였다. 주거점유형태와 가구소득은 몇 가지 범주로 구분짓는 더미변수를 생성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통근이 거주지역 만족도와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

1. 기술통계분석

인천광역시민의 통근이 지역만족도 및 지역에 대한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기 위한 자료의 기초통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2020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자료를 통해 통근근로자 7,665명에 대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들의 지역에 대한 소속감은 평균 3.55점으로 '보통이다'와 '비교적 느낀다'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지역만족도는 평균 6.63점으로 보통(5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통제변수로 이용한 변수 중 개인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60.9%에 해당하는 4,668명은 남성이었고, 평균 연령은 48.1세였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4.9%는 고졸미만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고졸과 전문대졸이 각각 44.3%와 17.6%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62.6%는 가구주였으며, 미혼은 15.7%, 배우자가 있는 이들은 76.8%였다.

5점 척도로 측정된 주관적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신체건강 상태와 정신건강 상태의 평균이 각각 3.75점과 3.83점이었고, 5점에 가까울수록 여

가에 더 집중하는 것으로 측정한 일과 여가 중시정도는 평균 2.57점으로 '여가에 더 집중' 쪽에 위치해 있었다.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가 가장 많았고(61.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6.9%)와 임시근로자(10.4%)가 뒤를 이었다.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가구원 수는 2.69명이었다. 주거점유형태는 자가 62.8%로 가장 높았고, 전세와 월세의 비중은 각각 31.4%와 5.5%였다. 응답자의 55.1%는 부채가 있다고 응답했고, 가구소득은 400~500만 원 미만 범주에 속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1/4정도(25.9%)로 가장 많았으며, 300~400만 원 미만과 500~600만 원 미만이 각각 19.9%와 19.0%를 차지했다. 600만 원이 넘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6.0%였고, 5.0%는 가구소득이 2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이자 설명변수로 삼은 통근을 살펴보면 통근 소요시간(편도 기준)은 평균 30.3분이다.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면 15.5%는 통근시간이 15분 미만이었으며, 31.6%는 통근시간이 15~30분이었으며, 35.3%는 30~45분 사이에 속하였으며, 7.3%는 45~60분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근 소요시간이 1시간을 넘는 이들의 비율은 10.3%였다.

가구와 일터가 속한 구/군청의 좌표 및 통근 소요시간 등을 통해 산출한 통근거리의 평균값은 7.85km였다. 이를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면 34.8%는 5km 미만 범주에 속하였고, 42.5%는 5~10km 범위에 일터가 위치해 있었다. 11.5%는 10~15km 범주에, 11.3%는 15km를 넘었다.

일터의 소재지에 따른 통근유형을 살펴보면 절반에 가까운 47.1%는 집과 동일한 구에 위치한 일터로 통근한다고 응답하였고, 38.4%는 인천광역시 내 다른 구로 통근하고 있었다. 부천, 시흥 등 인천과 접한 지역으로 통근하는 비율은 4.1%였으며, 서울로 통근하는 이들은 8.6%를 차지하였다.⁸⁾

8) 분석에 이용한 표본의 변수 간 다중공선성 점검을 위해 연속형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를 [부록 표 1]에 제시하였다. 다중공선성이 우려될 정도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표 3] 분석에 이용한 변수 설명 및 기술통계

변수 특성	변수명	변수설명	평균 또는 %	표준편차 또는 빈도		
종속 변수	지역에 대한 소속감	5점 척도로 측정된 지역(구/군)에 대한 소속감	3.554	0.745		
	지역만족도	11점 척도로 측정된 지역(구/군)에 대한 만족도	6.625	1.325		
통제 변수	개인 특성	성별	남성=1, 여성=0	60.9	4,668	
		연령	응답자의 연령(세)	48.079	13.466	
		연령제곱	연령제곱÷100	24.929	13.287	
		교육 수준	고졸미만	고졸미만=1, 그 외=0	4.9	373
			고졸	고졸=1, 그 외=0	44.3	3,397
			전문대졸	전문대졸=1, 그 외=0	17.6	1,349
			대졸 이상	대졸 이상=1, 그 외=0	33.2	2,546
		가구주 여부	가구주=1, 그 외=0	62.6	4,800	
		혼인 상태	미혼	미혼=1, 그 외=0	15.7	1,202
			유배우	배우자 있음=1, 그 외=0	76.8	5,884
			사별·이혼	사별·이혼=1, 그 외=0	7.6	579
		주관적 신체건강 상태	5점 척도로 측정된 신체건강 (①매우 나쁘다~⑤매우 좋다)	3.746	0.702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5점 척도로 측정된 정신건강 (①매우 나쁘다~⑤매우 좋다)	3.830	0.720	
		일 vs. 여가 (여가중시 정도)	①일에 더 집중~⑤여가에 더 집중	2.566	0.839	
		증사 상 지위	상용근로자	상용근로자=1, 그 외=0	61.8	4,739
			임시근로자	임시근로자=1, 그 외=0	10.4	799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1, 그 외=0	2.8	216
고용원有 자영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		5.4	413		
고용원無 자영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		16.9	1,293		
기타	무급가족종사자 및 기타=1		2.7	205		

변수는 없으며, 본문에는 미제시된 분산팽창계수(VIF)도 0.2 이하의 값을 나타내는 변수는 없었다. 즉, 다중공선성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구별로 응답자의 통근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부록 표 2]에 부가적으로 제시하였다.

변수 특성	변수명		변수설명	평균 또는 %	표준편차 또는 빈도	
통제 변수	가구 특성	가구원 수		전체 가구원 수(명)	2,692	0,934
		주거 점유 형태	자가	자가=1, 그 외=0	62.8	4,814
			전세	전세=1, 그 외=0	31.4	2,404
			월세	월세=1, 그 외=0	5.5	424
			기타	무상 및 기타=1, 그 외=0	0.3	23
		부채유무		부채 있음=1, 없음=0	55.1	4,221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미만=1, 그 외=0	5.0	383
		200~300만 원		200~300만 원 미만=1, 그 외=0	14.1	1,081
		300~400만 원		300~400만 원 미만=1, 그 외=0	19.9	1,529
		400~500만 원		400~500만 원 미만=1, 그 외=0	25.9	1,987
		500~600만 원		500~600만 원 미만=1, 그 외=0	19.0	1,456
		600만 원 이상		600만 원 이상=1, 그 외=0	16.0	1,229
설명 변수	통근시간		통근 소요 시간(편도 기준, 분)	30.341	19.022	
	통근 시간 범주	0~15분 미만		0~15분 미만=1, 그 외=0	15.5	1,190
		15~30분 미만		15~30분 미만=1, 그 외=0	31.6	2,424
		30~45분 미만		30~45분 미만=1, 그 외=0	35.3	2,705
		45~60분 미만		45~60분 미만=1, 그 외=0	7.3	558
		60분 이상		60분 이상=1, 그 외=0	10.3	788
	통근 거리(km)		일터까지의 거리(km) (집↔일터 소재지 간 거리)	7.849	7.572	
	통근 거리 범주	0~5km 미만		0~5km 미만=1, 그 외=0	34.8	2,665
		5~10km 미만		5~10km 미만=1, 그 외=0	42.5	3,255
		10~15km 미만		10~15km 미만=1, 그 외=0	11.5	881
		15km 이상		15km 이상=1, 그 외=0	11.3	864
	동일 구(區)내 통근 여부		동일 구 통근=1, 그 외=0	47.1	3,608	
	통근 유형	동일 구 통근		동일 구 통근=1, 그 외=0	47.1	3,608
		인천 내 다른 구		인천 내 다른 구로 통근=1	38.4	2,945
		인접 시 통근		인접 시(부천, 시흥, 김포)로 통근=1	4.1	317
		근접 시 통근		근접 시(광명, 안산, 군포, 안양, 고양, 과천, 의왕) 통근=1	0.9	71
서울로 통근		서울로 통근=1	8.6	662		
기타 지역 통근		인천, 서울, 인근접 외의 지역 통근=1	0.8	62		
N			7,665			

2. 통근이 거주지역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근로자의 특성 및 그가 속한 가구의 특성들을 동시에 고려한 상태에서 통근과 지역만족도의 관련성을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통제변수들은 동일하게 통제하고, 통근을 나타내는 변수들만 다르게 구성한 다양한 모형을 설정하였다. '통근시간(표 4)', '통근거리(표 5)', '통근유형(표 6)'을 설명변수로 삼아 분석하였다. 통근시간은 연속형 변수를 그대로 쓴 모형(모형I)과 이를 몇 가지 범주로 구분해 각 범주에 해당하는 더미변수를 이용한 모형(모형II)으로 설정하였다. 통근거리 또한 추정된 통근거리를 연속형의 변수로 반영한 모형(모형III)과 통근거리를 범주로 구분해 각각의 범주에 해당하는 더미변수를 이용한 모형(모형IV)으로 구성하였다. 통근유형 또한 동일 구 통근 여부로 구분한 모형(모형V)과 통근지역을 몇 가지 범주로 구분한 모형(모형VI)을 통해 통근이 지역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변수를 중심으로 [모형I]의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과 연령제곱항이 각각 (-)와 (+)의 계수값을 나타낸다. 미분값을 통해 이를 분석해보면 43세까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역만족도가 낮아지다가 이후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만족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지만 기준변수인 고졸인 이들에 비해 대졸 이상인 이들의 지역만족도가 높았으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배우자가 있는 이들에 비해 미혼 또는 사별·이혼 상태에 있는 이들의 지역만족도가 낮았다.

이와 함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할수록 지역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났다. 다른 조건을 통제한 상태라면 여가를 중시하는 경향이 짙은 이들일수록 지역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종사상 지

[표 4] 통근시간이 지역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 I]		[모형 II]			
		B	S.E.	B	S.E.		
상수항		5.168***	0.256	4.905***	0.258		
통제 변수	개인 특성	성별	-0.004	0.038	-0.004	0.038	
		연령	-0.056***	0.009	-0.053***	0.009	
		연령제곱	0.066***	0.009	0.062***	0.009	
		교육수준 (ref.=고졸)	고졸미만	-0.069	0.073	-0.064	0.073
			전문대졸	-0.032	0.043	-0.029	0.043
			대졸 이상	0.138***	0.039	0.137***	0.039
		가구주 여부	0.036	0.041	0.043	0.041	
		혼인상태 (ref.=유배우)	미혼	-0.180***	0.052	-0.179***	0.052
			사별·이혼	-0.290***	0.062	-0.287***	0.062
		주관적 신체건강 상태	0.314***	0.026	0.318***	0.026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0.317***	0.025	0.311***	0.025		
	일 vs. 여가(여가 중시 정도)	0.087***	0.017	0.083***	0.017		
	종사상 지위 (ref.=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0.059	0.050	-0.063	0.050	
		일용근로자	-0.151†	0.090	-0.175†	0.090	
		고용원有 자영업	0.059	0.065	0.055	0.065	
		고용원無 자영업	0.103*	0.044	0.083†	0.044	
		기타	0.154†	0.091	0.131	0.091	
	가구 특성	가구원 수	0.011	0.019	0.010	0.019	
		주거점유 형태 (ref.=월세)	자가	0.235***	0.065	0.233***	0.065
			전세	0.203**	0.066	0.198**	0.066
기타			0.708**	0.263	0.690**	0.263	
부채유무		-0.261***	0.030	-0.258***	0.030		
가구소득 (ref.=400~500만 원)		200만 원 미만	-0.441***	0.078	-0.445***	0.078	
		200~300만 원	-0.131*	0.051	-0.130*	0.051	
		300~400만 원	-0.143***	0.042	-0.136*	0.042	
	500~600만 원	-0.142***	0.042	-0.136*	0.042		
	600만 원 이상	-0.051	0.045	-0.050	0.045		
설명 변수	통근시간	통근시간(평균기준, 분)	-0.004***	0.001			
		통근시간 범주 (ref.=30~45분)	0~15분 미만			0.306***	0.046
			15~30분 미만			0.107**	0.035
			45~60분 미만			0.049	0.057
			60분 이상			-0.016	0.050
<i>F-value</i>		51.46***		47.16***			
<i>R²</i>		0.1587		0.1607			
<i>Adj. R²</i>		0.1557		0.1573			
<i>N</i>		7,665					

자료(설명): † p<0.1, * p<0.05, ** p<0.01, *** p<0.001

위와 관련해서는 상용근로자에 비해 임시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의 지역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의 지역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월세에 거주 중인 이들에 비해 자가 또는 전세로 살고 있는 이들의 지역만족도가 높았다. 이와 함께 다른 조건이 같다면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이들의 지역만족도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0.261점 낮았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기준변수로 삼은 400~500만 원 범주에 속해 있는 이들에 비해 다른 범주에 속한 이들의 지역만족도가 낮았고, 가구소득이 200만 원에 미만일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통근과 관련해서는 통근시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계수값을 나타내어 통근시간이 길수록 지역만족도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모형Ⅲ]의 결과 또한 통제변수들의 계수값이나 유의도 등은 [모형Ⅰ]과 비슷하게 나타났고 짧은 정도의 통근시간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계수값이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기준변수로 삼은 30~45분 미만 범주에 속한 이들에 비해 통근시간이 15분 미만인 이들 및 15~30분 범주에 속하는 이들의 경우 지역만족도가 각각 0.306점과 0.107점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서 [표 5]에는 통근거리에 초점을 두고 이것이 지역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Ⅰ], [모형Ⅲ]와 동일한 통제변수들을 사용했고, 통근시간 대신 연속형의 통근거리([모형Ⅲ])와 통근거리 범주([모형Ⅳ])를 분석하였다.

[모형Ⅲ]~[모형Ⅳ]의 경우, 개인 및 가구특성을 나타내는 통제변수들의 계수값 크기와 통계적 유의도가 유사하게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통근거리가 멀수록 지역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모형Ⅲ]에서 일터까지의 거리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값을 나타내어 다

[표 5] 통근거리가 지역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Ⅲ]		[모형Ⅳ]				
		B	S.E.	B	S.E.			
상수항		5.124***	0.256	5.130***	0.256			
통 제 변 수	개 인 특 성	성별	-0.006	0.038	-0.003	0.038		
		연령	-0.056***	0.009	-0.055***	0.009		
		연령제곱	0.067***	0.009	0.065***	0.009		
		교육수준 (ref.=고졸)	고졸미만	-0.076	0.073	-0.075	0.073	
			전문대졸	-0.028	0.043	-0.024	0.043	
			대졸 이상	0.141***	0.039	0.143***	0.039	
		가구주 여부	0.036	0.041	0.042	0.041		
		혼인상태 (ref.=유배우)	미혼	-0.192***	0.052	-0.187***	0.052	
			사별·이혼	-0.297***	0.062	-0.296***	0.062	
		주관적 신체건강 상태	0.314***	0.026	0.320***	0.026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0.319***	0.025	0.315***	0.025		
		일 vs. 여가(여가 중시 정도)	0.087***	0.017	0.083***	0.017		
		종사상 지위 (ref.=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0.052	0.050	-0.055	0.050	
	일용근로자		-0.144	0.090	-0.159†	0.090		
	고용원有 자영업		0.068	0.065	0.067	0.065		
	고용원無 자영업		0.111*	0.044	0.098*	0.044		
	기타		0.166†	0.091	0.145	0.091		
	가 구 특 성	가구원 수	0.007	0.019	0.006	0.019		
		주거점유 형태 (ref.=월세)	자가	0.237***	0.065	0.235***	0.065	
			전세	0.206**	0.066	0.205**	0.066	
기타			0.691**	0.263	0.659*	0.263		
부채유무		-0.266***	0.030	-0.264***	0.030			
가구소득 (ref.= 400~500만 원)		200만 원 미만	-0.435***	0.078	-0.431***	0.078		
		200~300만 원	-0.133**	0.051	-0.133**	0.051		
		300~400만 원	-0.140***	0.042	-0.135**	0.043		
	500~600만 원	-0.140***	0.042	-0.135**	0.042			
	600만 원 이상	-0.041	0.045	-0.046	0.045			
설 명 변 수	통 근 거 리 (ref.=5km 미만)	통근거리	-0.011***	0.002	X			
		통근거리 범주 (ref.=5km 미만)	5~10km 미만				-0.169***	0.034
			10~15km 미만				-0.162**	0.050
			15km 이상				-0.263***	0.051
<i>F</i> -value		51.44***		48.28***				
<i>R</i> ²		0.1587		0.1595				
<i>Adj. R</i> ²		0.1556		0.1562				
<i>N</i>		7,665						

자료(설명): † p<0.1, * p<0.05, ** p<0.01, *** p<0.001

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일터가 먼 곳에 있을수록 지역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터까지의 거리를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본 [모형Ⅳ]에서는 기준변수로 삼은 집단(5km 미만)에 비해서 그보다 먼 정도의 집단을 나타내는 더미변수가 모두 (-)의 계수값을 나타내고 있어 일터까지의 거리가 멀면 상대적으로 직장만족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계수값의 크기 또한 거리에 완전히 비례하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다른 조건이 같다면 5~10km 범주에 속하는 이들의 지역만족도는 (기준변수로 삼은 5km 미만 집단에 비해) 0.169점 낮았으며, 10~15km 집단에 속하면 0.162점 낮았다. 가장 먼 정도의 집단인 15km 이상에 속하면 가장 낮은 정도인 0.263점 낮았다.

[표 6]은 통근유형을 설명변수로 삼아 앞선 분석과 동일한 통제변수를 사용해 지역만족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여기서도 이분형(0/1)으로 구성한 동일 구내 통근 여부([모형Ⅴ])와 동일 구, 인접 시, 근접 시, 서울 등 여섯 개의 통근지역으로 구분한 더미변수([모형Ⅵ])의 두 가지 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Ⅴ]와 [모형Ⅵ] 또한 통제변수들의 계수값의 크기나 통계적 유의도가 유사하고, 통근 관련 변수의 계수값들을 살펴보면 통근에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거리가 멀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통근하는 이들의 지역만족도가 낮음이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동일한 구에 속해 있는 일터로 통근하는 이들의 지역만족도가 다른 지역으로 통근하는 이들에 비해 0.147점 높았다([모형Ⅴ]).

끝으로 [모형Ⅵ]의 결과를 살펴보면 동일 구(區)내 통근하는 이들에 비해 ‘인천 내 다른 구’, ‘인접 시 통근’, ‘근접 시 통근’, ‘서울로 통근’, ‘기타지역 통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계수값을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지역만족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계수값의 크기로 미루어 보아(동일 구 내 통근 > 인천 내 다른 구 통근 > 인접 시 통근 > 근접 시

[표 6] 통근유형이 지역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V]		[모형VI]			
		B	S.E.	B	S.E.		
상수항		4.958***	0.258	5.090***	0.256		
통제 변수	개인 특성	성별	-0.005	0.038	0.005	0.038	
		연령	-0.056***	0.009	-0.056***	0.009	
		연령제곱	0.066***	0.009	0.066***	0.009	
		교육수준 (ref.=고졸)	고졸미만	-0.075	0.073	-0.073	0.073
			전문대졸	-0.030	0.043	-0.026	0.043
			대졸 이상	0.137***	0.039	0.147***	0.039
		가구주 여부	0.040	0.041	0.037	0.041	
		혼인상태 (ref.=유배우)	미혼	-0.193***	0.052	-0.186***	0.052
			사별·이혼	-0.300***	0.062	-0.290***	0.062
		주관적 신체건강 상태	0.321***	0.026	0.317***	0.026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0.311***	0.025	0.316***	0.025		
	일 vs. 여가(여가 중시 정도)	0.086***	0.017	0.086***	0.017		
	종사상 지위 (ref.=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0.054	0.050	-0.065	0.050	
		일용근로자	-0.140	0.090	-0.147†	0.090	
		고용원有 자영업	0.063	0.065	0.052	0.065	
		고용원無 자영업	0.110*	0.044	0.105*	0.044	
		기타	0.162†	0.091	0.167†	0.091	
가구 특성	가구원 수	0.006	0.019	0.010	0.019		
	주거점유 형태 (ref.=월세)	자가	0.248***	0.065	0.247***	0.065	
		전세	0.214**	0.066	0.214**	0.066	
		기타	0.694**	0.263	0.704**	0.263	
	부채유무	-0.260***	0.030	-0.257***	0.030		
	가구소득 (ref.=400~500만 원)	200만 원 미만	-0.448***	0.078	-0.445***	0.078	
		200~300만 원	-0.134**	0.051	-0.134**	0.051	
300~400만 원		-0.141***	0.043	-0.139**	0.042		
500~600만 원		-0.140***	0.042	-0.136**	0.042		
600만 원 이상		-0.044	0.045	-0.038	0.045		
설명 변수	통근 유형 (ref.=동일 구 통근)	동일 구(區)내 통근 여부	0.147***	0.031			
		인근 내 다른 구 인접 시 통근 근접 시 통근 서울로 통근 기타지역 통근				-0.098**	0.032
						-0.285***	0.073
						-0.694***	0.147
						-0.252***	0.055
						-0.518***	0.157
<i>F-value</i>		51.18***		46.00***			
<i>R²</i>		0.1580		0.1617			
<i>Adj. R²</i>		0.1549		0.1582			
<i>N</i>		7,665					

자료(설명): † p<0.1, * p<0.05, ** p<0.01, *** p<0.001

통근 등) 먼 지역으로 통근하는 이들의 지역만족도가 더 낮은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다만, 서울로 통근하는 이들의 경우 지역만족도의 계수값이 인천 내로 통근하는 이들에 비해서는 낮았으나 타지역으로 통근하는 이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의 높은 주택가격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해 해석해보면 자가보유의 가능성이나 동일한 가격대비 넓고 쾌적한 주거를 누릴 수 있는 인천 거주를 '선택'한 이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3. 통근이 거주지역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

원거리 또는 장시간의 통근은 지역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낮출 가능성도 상당할 것이다. 과도한 통근에 따른 피로감이나 가정과 일터가 속한 지역 간의 이질성은 거주 중인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낮출 수 있다. 이에 여기서는 앞선 지역만족도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0~10점 척도를 통해 측정한 응답자들의 지역소속감에 대해 통근시간(표 7), 통근거리(표 8), 통근유형(표 9)을 달리한 6가지의 분석모형을 통해 인천광역시에 거주 중인 근로자들의 통근과 지역(군/구)에 소속감 간의 관련성에 대해 보다 면밀히 분석해보았다.

우선 통근시간이 지역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 [표 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변수를 중심으로 [모형 I]의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과 연령제곱항이 각각 (-)와 (+)의 계수값을 나타내었는데 미분값을 통해 이를 분석해보면 61세까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역소속감이 낮아지다가 이후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소속감도 높은 양상을 보였다. 교육수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혼인상태와 관련해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배우자가 있는 이들에 비해 미혼 또는 사별·이혼 상태에 있는 이들의 지역소속감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 통근시간이 지역소속감에 미치는 영향

		[모형 I]		[모형 II]			
		B	S.E.	B	S.E.		
상수항		2.617***	0.145	2.418***	0.146		
통제 변수	개인 특성	성별	-0.022	0.021	-0.022	0.021	
		연령	-0.018***	0.005	-0.016**	0.005	
		연령제곱	0.032***	0.005	0.029***	0.005	
		교육수준 (ref.=고졸)	고졸미만	-0.067	0.041	-0.062	0.041
			전문대졸	0.042†	0.024	0.044†	0.024
			대졸 이상	0.085	0.022	0.084***	0.022
		가구주 여부	0.005	0.023	0.009	0.023	
		혼인상태 (ref.=유배우)	미혼	-0.150***	0.029	-0.146***	0.029
			사별·이혼	-0.086*	0.035	-0.082*	0.035
		주관적 신체건강 상태	0.071***	0.015	0.073***	0.015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0.155***	0.014	0.150***	0.014	
		일 vs. 여가(여가 중시 정도)	0.082***	0.010	0.079***	0.010	
		종사상 지위 (ref.=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0.073**	0.028	-0.075**	0.028
			일용근로자	-0.270***	0.051	-0.291***	0.051
			고용원有 자영업	0.003	0.037	-0.001	0.037
			고용원無 자영업	0.068**	0.025	0.051*	0.025
			기타	0.129*	0.051	0.107*	0.051
		가구 특성	가구원 수	0.035***	0.011	0.035***	0.011
주거점유 형태 (ref.=월세)	자가		0.045	0.037	0.040	0.037	
	전세		0.063†	0.037	0.058	0.037	
	기타		0.081	0.149	0.062	0.148	
부채유무	-0.125***		0.017	-0.123***	0.017		
가구소득 (ref.=400~500만 원)	200만 원 미만		-0.143**	0.044	-0.147***	0.044	
	200~300만 원		0.000	0.029	0.000	0.029	
	300~400만 원		0.015	0.024	0.020	0.024	
	500~600만 원	-0.019	0.024	-0.014	0.024		
	600만 원 이상	0.063*	0.026	0.065*	0.025		
설명 변수	통근시간	통근시간	-0.004***	0.000			
		통근시간 범주 (ref.=30~45분)	0~15분 미만			0.249***	0.026
			15~30분 미만			0.057**	0.020
			45~60분 미만			0.054†	0.032
			60분 이상			-0.066*	0.028
<i>F-value</i>		48.13***		45.24***			
<i>R²</i>		0.1500		0.1552			
<i>Adj. R²</i>		0.1469		0.1518			
<i>N</i>		7,665					

자료(설명): † p<0.1, * p<0.05, ** p<0.01, *** p<0.001

또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할수록 지역소속감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다른 조건을 통제한 상태라면 일보다는 여가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지역소속감이 높았다. 종사상 지위와 관련해서는 상용근로자에 비해 임시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의 지역소속감이 낮았으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의 지역소속감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가구특성과 관련해서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지역소속감이 높았으며, 다른 조건이 같다면 부채를 보유한 이들의 지역소속감이 미보유자들에 비해 0.125점 낮았다. 또한, 가구소득이 200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기준변수로 삼은 400~500만 원 집단에 비해) 지역소속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았으며, 600만 원을 넘을 경우 지역소속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통근과 관련해서는 연속형의 통근시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계수값을 나타내어 통근시간이 길수록 지역소속감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통근시간이 10분 증가할수록 지역소속감은 0.04점 낮았다.

[모형I]과 동일한 통제변수를 활용하되 통근시간을 다섯 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설명변수로 삼아 분석한 [모형II]의 결과 또한 통제변수들의 계수값이나 유의도 등은 [모형I]과 유사하였으며, 설명변수인 통근시간 범주 더미변수와 관련해서는 짧은 정도의 통근시간에 속할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계수값을 나타내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기준변수로 삼은 30~45분 미만 범주에 속한 이들에 비해 통근시간이 15분 미만일 경우 지역소속감이 0.249점, 15~30분 범주에 속할 경우 0.057점 높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통근시간이 1시간을 넘을 경우 지역소속감이 0.066점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 [표 8]에는 통근거리에 초점을 두고 이것이 거주 중인 지역(군/구)

[표 8] 통근거리가 지역소속감에 미치는 영향

		[모형Ⅲ]		[모형Ⅳ]			
		B	S.E.	B	S.E.		
상수항		2.578***	0.145	2.598***	0.145		
통제변수	개인특성	성별	-0.033	0.021	-0.029	0.021	
		연령	-0.020***	0.005	-0.018***	0.005	
		연령제곱	0.033***	0.005	0.031***	0.005	
		교육수준 (ref.=고졸)	고졸미만	-0.074†	0.041	-0.074†	0.041
			전문대졸	0.039	0.024	0.043†	0.024
			대졸 이상	0.079***	0.022	0.081***	0.022
		가구주 여부	0.003	0.023	0.010	0.023	
		혼인상태 (ref.=유배우)	미혼	-0.167***	0.029	-0.164***	0.029
			사별·이혼	-0.095**	0.035	-0.095**	0.035
		주관적 신체건강 상태	0.072***	0.015	0.076***	0.015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0.155***	0.014	0.152***	0.014	
	일 vs. 여가(여가 중시 정도)	0.081***	0.010	0.079***	0.010		
	종사상 지위 (ref.=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0.060*	0.028	-0.065*	0.028	
		일용근로자	-0.254***	0.051	-0.271***	0.051	
		고용원有 자영업	0.017	0.037	0.013	0.037	
		고용원無 자영업	0.086***	0.025	0.072**	0.025	
		기타	0.144**	0.051	0.123*	0.051	
가구특성	가구원 수	0.031**	0.011	0.031**	0.011		
	주거점유 형태 (ref.=월세)	자가	0.046	0.037	0.043	0.037	
		전세	0.067	0.037	0.065†	0.037	
		기타	0.074	0.149	0.043	0.149	
	부채유무	-0.133***	0.017	-0.131***	0.017		
	가구소득 (ref.=400~500만원)	200만 원 미만	-0.136**	0.044	-0.135**	0.044	
		200~300만 원	0.001	0.029	0.000	0.029	
		300~400만 원	0.015	0.024	0.017	0.024	
500~600만 원		-0.019	0.024	-0.014	0.024		
600만 원 이상	0.067**	0.026	0.065*	0.026			
설명변수	통근거리	통근거리	-0.005***	0.001			
		통근거리 범주 (ref.=5km 미만)	5~10km 미만			-0.137***	0.019
			10~15km 미만			-0.105***	0.028
			15km 이상			-0.124***	0.029
<i>F-value</i>		46.25***		44.51***			
<i>R²</i>		0.1450		0.1489			
<i>Adj. R²</i>		0.1419		0.1455			
<i>N</i>		7,665					

자료(설명): † p<0.1, * p<0.05, ** p<0.01, *** p<0.001

에 대한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전의 분석과 동일한 통제변수들을 사용하였고, 연속형의 통근거리([모형Ⅲ])와 통근거리 범주([모형Ⅳ])의 두 가지 모형을 구성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모형Ⅲ]과 [모형Ⅳ]의 경우에도 개인 및 가구특성을 나타내는 통제변수들의 계수값 크거나 통계적 유의도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통근거리와 관련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의 계수값을 나타내어 다른 조건을 통제할 때 통근거리가 멀수록 지역소속감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터까지의 거리를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본 [모형Ⅳ]에서도 기준 집단(5km 미만)에 비해서 그보다 먼 집단은 모두 (-)의 계수값을 나타내고 있어, 일터까지의 거리가 멀면 지역소속감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조건을 통제할 때, 5~10km 범주에 속하는 이들의 지역소속감은 (기준변수인 5km 미만 집단에 비해) 0.137점 낮았으며, 10~15km 집단은 0.105점, 15km 이상인 이들은 약 0.124점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끝으로 [표 1]의 통근유형과 지역소속감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여기서도 이분형(0/1)으로 구성된 동일 구(區)내 통근 여부([모형Ⅴ])와 동일 구, 인접 시, 근접 시, 서울 등 여섯 개의 통근지역으로 구분한 더미변수([모형Ⅵ])의 두 가지 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Ⅴ]와 [모형Ⅵ] 또한 통제변수들의 계수값 크기와 통계적 유의도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먼 곳 또는 통근에 많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 이들의 지역소속감이 낮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동일 구(區)에 속한 일터로 통근하는 이들은 다른 지역으로 통근하는 이들에 비해 지역소속감이 0.092점 높았다([모형Ⅵ]).

[모형Ⅵ]의 결과를 살펴보면 동일 구(區)내 통근하고 있는 이들에 비해 '인천 내 다른 구', '인접 시 통근', '근접 시 통근', '서울로 통근', '기타지역 통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 계수값을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이

[표 9] 통근유형이 지역소속감에 미치는 영향

		[모형V]		[모형VI]			
		B	S.E.	B	S.E.		
상수항		2.475***	0.146	2.546***	0.145		
통제 변수	개인 특성	성별	-0.028	0.022	-0.023	0.022	
		연령	-0.019***	0.005	-0.019***	0.005	
		연령제곱	0.033***	0.005	0.032***	0.005	
		교육수준 (ref.=고졸)	고졸미만	-0.073†	0.041	-0.071†	0.041
			전문대졸	0.041†	0.024	0.044†	0.024
			대졸 이상	0.080***	0.022	0.084***	0.022
		가구주 여부	0.006	0.023	0.005	0.023	
		혼인상태 (ref.=유배우)	미혼	-0.165***	0.029	-0.158***	0.029
			사별·이혼	-0.095**	0.035	-0.091**	0.035
		주관적 신체건강 상태	0.076***	0.015	0.075***	0.015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0.151***	0.014	0.154***	0.014	
		일 vs. 여가(여가 중시 정도)	0.081***	0.010	0.081***	0.010	
		종사상 지위 (ref.=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0.064*	0.028	-0.069***	0.028
	일용근로자		-0.256***	0.051	-0.259	0.051	
	고용원有 자영업		0.011	0.037	0.005	0.037	
	고용원無 자영업		0.080**	0.025	0.078**	0.025	
	기타		0.139**	0.051	0.139**	0.051	
	가구 특성	가구원 수	0.031**	0.011	0.033**	0.011	
		주거점유 형태 (ref.=월세)	자가	0.053	0.037	0.054	0.037
전세			0.072†	0.037	0.072†	0.037	
기타			0.073	0.149	0.083	0.149	
부채유무		-0.127***	0.017	-0.126***	0.017		
가구소득 (ref.=400~500만 원)		200만 원 미만	-0.145***	0.044	-0.143**	0.044	
		200~300만 원	-0.001	0.029	0.000	0.029	
		300~400만 원	0.015	0.024	0.016	0.024	
	500~600만 원	-0.018	0.024	-0.016	0.024		
	600만 원 이상	0.067**	0.026	0.069**	0.026		
설명 변수	통근 유형 (ref.=동일 구 통근)	동일 구(區)내 통근 여부	0.092***	0.017			
		인천 내 다른 구	인접 시 통근			-0.066***	0.018
			근접 시 통근			-0.212***	0.041
			서울로 통근			-0.152†	0.083
			기타지역 통근			-0.159***	0.031
						-0.163†	0.089
<i>F-value</i>		46.65***		41.55***			
<i>R²</i>		0.1461		0.1484			
<i>Adj. R²</i>		0.1429		0.1448			
<i>N</i>		7,665					

자료(설명): † p<0.1, * p<0.05, ** p<0.01, *** p<0.001

들의 지역소속감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수값의 크기로 미루어보아 '동일 구 통근 > 인천 내 다른 구 통근 > 근접 시 통근 > 서울로 통근'과 같이 먼 지역으로 통근하는 이들의 지역소속감이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분석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지역만족도나 지역소속감은 혼인 상태, 건강상태, 여가 중시 정도, 가구소득 등과 같이 기존의 논의에서 비교적 널리 언급되었던 개인 및 가구특성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통근(통근시간, 통근거리, 통근유형) 또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근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거나 먼 지역으로 통근할수록 지역만족도가 낮았으며, 거주 중인 지역(군/구)에 대한 소속감 또한 낮음이 확인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통근은 근로활동을 위해 근로일에 반복적이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활동이다. 과거에는 통근을 지극히 개인적이고 불가피한 일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주를 이루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직종과 직무에 무관하게 국내 대다수의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경험한 이후로 '통근 없는 삶'을 경험했고, 거주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통근이 개인 및 지역 사회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깨달았다. 특히, 평균 30분 이상을 통근에 소요하는 인천광역시민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개발계획수립을 위해서도 거주자 개인의 통근과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의 관계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통근(통근시간 및 거리)이 개인의 거주 지역(구/군)에 대한 만족도 및 소속감과 어떠한 관

련을 갖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통근 소요시간이 짧을수록 지역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통근거리가 짧은 근로자, 즉, 일터와 거주지가 가까운 근로자일수록 지역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일터의 소재지와 거주지 행정구역을 비교해본 결과 거주지와 동일한 구의 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지역만족도가 인천 내 다른 구로 통근하거나, 서울로 통근하거나, 혹은 인접 시로 통근하는 근로자들의 지역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만족도에 대한 분석과 유사하게 통근시간이 짧거나 일터가 거주지와 근거리에 위치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지역소속감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통근이 지역만족도와 지역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특히, 통근을 시간(분)과 거리(km)로 구분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연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분석결과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근시간이 길수록 지역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근시간의 범주별로는 통근시간이 30~45분 미만인 근로자에 비해 통근 소요시간이 15분 미만, 15~30분인 근로자의 지역만족도가 더 높았다. 둘째, 다른 조건을 통제한 상태라면 통근의 물리적 거리가 멀수록 개인의 지역만족도 또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근거리 범주별로는 5km 미만에서 통근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5km 이상인 근로자의 지역만족도가 더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동일 구에 속한 직장으로 통근하는 근로자는 다른 지역으로 통근하는 근로자들에 비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지역만족도가 0.147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일 구 내 통근하는 근로자의 지역만족도가 근접시로 통근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지역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통근시간이 길수록 지역소속감이 낮았다. 통근

시간 범주에 따라서는 30~45분 미만인 근로자들과 비교했을 때 통근시간이 1시간을 넘을 경우 지역소속감이 0.066점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통근거리가 멀수록 지역소속감이 낮음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통근거리가 5km 미만인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통근거리가 15km 이상인 근로자는 지역소속감이 약 0.124점 낮았다. 여섯째,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동일 구에 속한 일터로 통근하는 근로자는 타지역으로 통근하는 이들에 비해 지역소속감이 0.092점 높았다. 또한, 동일 구 내 통근하는 근로자들이 인천 내에 거주하면서 서울로 통근하는 근로자들에 비해 지역소속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긴 통근시간이나 거리는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나 소속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도 확인되었다. 이는 통근여건의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지역애착이나 계속 거주 의사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통근거리의 경우 일자리의 위치에 의해 정해지는 일인 만큼 무엇보다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확충에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교통망 확충이나 대중교통 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통근시간 감소 정책(교통체증 문제 완화)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역만족도와 지역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와 같은 차이에 주목하여 어떠한 이유로 인천광역시 거주를 '선택'하고 어떠한 요인들이 만족하게 만드는지 또는 소속감을 공고히 하는지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연구와 함께 축적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 지역밀착형 정책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통근과 지역만족도나 지역소속감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를 이용해 인천에 거주 중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지역만족도 및 지역소속감은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복합적인 감정이므로 보다 다채로운 특성을 변수화하여 반영한다면 설명력 높은 연구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개인의 특성만 고려하였을 뿐 인천광역시 및 개별 구/군이 가진 지역적 특성을 분석에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특성(예컨대 주거환경을 이루는 다양한 요인인 주택유형과 면적, 병원 등 지역 내 편의시설 확충 정도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분석에 활용한 변수들만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계산했다는 한계를 담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법인 다층모형 등을 이용한 후속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단순한 통근 소요시간이나 통근의 물리적 거리도 중요하지만, 거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 용이성이나 도로 편의성은 통근의 질을 높이거나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통근수단이나 통근 시간 대도 매우 중요한 요인임이 분명하지만 본 연구는 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넷째, 통근시간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그 자체, 임금수준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인천광역시 사회조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질문은 포함되지 않아 분석결과의 활용에 상당한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⁹⁾

이처럼 많은 한계점을 담고 있지만 본 연구는 시간적 차원에서뿐 아니라 공간적 차원에서 통근문제를 고민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동일 구 내로 통근하는 근로자들과 인천 내 다른 구, 인접 시,

9) 이는 분석결과에서 높지 않은 정도의 R^2 값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 물론 여러 특성을 가진 개인들에 대한 분석(개인단위의 분석)인 만큼 전체적인 지표나 지수화한 값 또는 지역별 평균 등과 같이 분산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료에 대한 분석에 비해 R^2 가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향후 근로시간, 임금수준, 여가시간, 통근에 대한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이나 주거특성 등을 보다 다채롭게 살핀 자료가 생산된다면 보다 설명력 높은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근접 시, 서울로 통근하는 근로자들을 구분하여 고려해 보는 과정을 통해서 행정구역이 근로자들의 심리적 부담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무엇보다 지역만족도나 지역소속감을 개인의 문제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차지하는 불가피한 통근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장소에착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가지는 장소에 대한 애착정도가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이수범 2013). 이러한 심리적 안정감은 개인의 정체성을 공고히 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지역만족도 및 지역소속감을 향상하는 일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고민해야 하는 몫이기도 하다.

지역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는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첫째, 인천광역시 내 충분한 일자리를 유지해서 인천이 베드타운으로서만 역할하는 것을 넘어서 생산기능을 갖춘 중심업무지구로 기능해야 한다. 지역 내 일자리가 충분하다면 거주지와 근무지 사이의 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다. 이는 자치단체의 발전뿐 아니라, 지역 내 거주자들의 지역만족도 및 지역소속감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통근의 질을 높여야 한다. 통근이 하루 일과 중 일정 시간 이상을 반드시 소요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개인의 통근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예컨대 동일한 통근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쾌적한 광역버스에 승차인원 모두 착석하여 이동하는 것과 여러 번 환승하고 이동하는 것은 개인의 만족도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노선을 확충하고, 운행간격을 단축해 다른 구 및 인접 시로의 이동을 원활하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인천시민의 통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고속 광역교통 수단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¹⁰⁾

셋째, 여가 중시정도가 지역만족도 및 소속감과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나타난 만큼 이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자치단체 내 종합운동장이나 지역센터를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여가 및 운동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 내 공원에서 시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거주민들의 지역 만족도 및 소속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 내 종합운동장 시설을 활용하여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 거주민들의 건강 유지와 만족도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역소속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컨대 인천은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2025년)’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는 지역의 인지도 및 브랜드가치 향상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APEC 정상회의 개최로 인해 관련 인프라 투자, 참가자·관광객 소비지출 및 관광 증대로 1.5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함께 2만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인천광역시 공식포스트 2023/2/8). 인천광역시는 이미 2014년 인천아시아게임, 2016년 제6차 OECD 세계포럼을 개최했고, 2023년 5월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인천총회를 개최하는 등 국제 행사 개최를 통한 도시의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

10) 통근시간에 적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지역만족도와 지역소속감이 높음을 알 수 있는데 (통근거리의 경우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만큼) 통근시간을 줄이고 통근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제법 멀리 떨어진 지역일 수 있는 서울로 통근하는 이들의 만족도 등이 비교적 양호함에 비추어보면 인천→서울 간 어느 정도 양호한 교통연결망이 긍정적 작용을 한 것일 수도 있다. 향후 통근자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통근자들의 통근양상이나 수요를 충분히 염두에 두고 수도권 광역순환철도망의 확충과 같은 중·장기적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인천광역시가 다수가 거주를 희망하는 글로벌 광역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에 거주 중인 근로자들의 지역(구/군)에 대한 만족도나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통근을 살펴보고 있다. 향후 본 연구결과는 인천광역시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혜진. 2018.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기대불일치가 주민들의 지역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2(2): 67-99.
-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2010. 『어디 사세요? 부동산에 저당 잡힌 우리시대 집 이야기』. 서울: 사계절.
- 권미조·이준영·최낙혁. 2018. 「사회적 통합과 삶의 만족도: 경기도 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6(1): 339-363.
- 김아영. 2023. 「다양성 특성은 소속감, 직업만족도,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서울시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용진·김성희. 2016. 「신도시 거주민의 계속거주의사 결정 요인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7(5): 405-411.
- 김이선·손명아. 2018. 「경기도의 지역 특성과 지역사회 경험에 거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학 19(3): 199-228.
- 김주진·나주몽. 2021. 「한국 청년의 지역 만족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비수도권 도시 내 지역 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24(1): 211-232.
- 김준형. 2016. 「통근시간이 노동활동과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연구」. 1-18차년도 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지현·강수진. 2021. 「서울시민의 계속거주의향에 미치는 요인분석: 지역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한부동산학회지 39(3): 5-26.
- 김태훈·서인석·기영화. 2014. 「커뮤니티웰빙 평가요소로서 지방행정서비스요인의 적합성분석: 경쟁시설모형들의 신뢰성 및 타당성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8(2): 81-109.
- 민보경. 2021. 「수도권 주민의 행복과 영향요인 탐색 연구」. 도시연구 20: 147-182.
- 박관태·정보영·정문기. 2022. 「공동체의식이 지역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31(1): 157-186.
- 박길성. 2002.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 아세아연구 45(2): 109-139.
- 박보은·정선영. 2020. 「대기오염에 대한 객관적 농도와 지역사회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33: 255-291.

- 박준식·김영범. 2013. 「지역격차 문제의 인식 지형과 변화의 전망: 영호남에서 수도권·비수도권 균열로」, *지역사회학* 14(2): 83-103.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4. 「경기도내 2-30대의 의식분석과 도정의 연계 방안 연구」.
- 서재호·김혜정·이승중. 2012. 「지방정부의 가치지향으로서 커뮤니티 웰빙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6(1): 33-57.
- 손낙구. 2008. 『부동산 계급사회』, 서울: 후마니타스.
- 신중호·연은모·이유경·정은경·김명섭. 2011. 「성취목표지향성, 학교소속감 및 학교생활만족도 간의 관계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2(4): 271-292.
- 양은모·배호중. 2023. 「통근이 직장만족도 및 이직의향에 미치는 영향: 대졸 신규입직자를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26(1): 73-111.
- 오미영. 2008.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관계가 지역민의 지역사회 유대, 지역사회 만족 그리고 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8(1): 327-350.
- 유경빈. 2017. 「통근시간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학위논문*.
- 유은영. 2018. 「농촌 주민의 지역사회 만족 영향요인」, *농촌지도와 개발* 25(1): 15-30.
- 유재연. 2016.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평일 저녁 가족공유시간 영향요인: 요일별 퇴근시간, 귀가시간, 출퇴근시간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8(3): 32-59.
- 윤우석. 2017. 「지역애착의 영향요인 파악을 위한 다수준 검증」, *한국경찰학회보* 19(3): 107-151.
- 윤상훈·이재영. 2016. 「주거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한 인천광역시 주거환경만족도 영향요인 규명」, *도시연구* 10: 69-97.
- 이경영·김범석·정문기. 2018. 「주거환경만족도가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지역 애착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7(1): 89-118.
- 이경영·정문기. 2021. 「지방정부 서비스 만족도가 정주성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 간 경제력 격차에 따른 차이 분석: 전라북도 경제활동인구(만 25세~49세)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30(2): 203-228.
- 이서연·조원지. 2022. 「가족관계 및 지역사회 만족도가 노년기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관련 지역사회 안전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 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33(3): 441-454.
- 이수범. 2013. 「인천시민의 인구사회학적 속성이 인천의 지역성과 애착에 미치는

- 영향, 인천학연구 18: 133-172.
- 이윤영·차운아. 2023. 「수도권 근로자의 통근시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시간부족감과 피로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62(1): 213-242.
- 이지은·이경은. 2020. 「주거환경만족도와 지역주민의 정주의도: 연령집단 간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4(2): 57-86.
- 인천광역시. 2021. 『2020 인천의 사회지표』. 인천광역시.
- 장정순·임원선. 2015. 「지역사회 애착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경기도 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5(2): 101-125.
- 정영아·김윤지. 2021. 「머무르고 싶은 지역이란?: 지방정부 서비스와 재정이 지역애착과 거주기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3(3): 55-76.
- 조민지·임엽. 2016. 「거주지역의 소득혼합수준이 시민 자부심으로서의 장소애착심에 미치는 영향: 서울서베이를 활용하여」. 지역연구 32(3): 3-15.
- 지갑성. 2020. 「주거환경요인이 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지역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4(2): 238-263.
- 최윤지·고순철. 2020. 「지역사회 만족도 영향요인」. 농촌지도와 개발 27(4): 199-210.
- 최희용·정문기. 2019. 「지역사회애착도가 주민참여의지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5대 생활권 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1(4): 855-878.
- 한국리서치. 2022. 「지방자치제도가 지역소속감 및 지역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 한국리서치 주간 리포트 여론 속의 여론 제180-1호. 한국리서치.
- 황명주·김형수. 2019. 「지역사회조직과 연계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축 방안: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4(2): 207-227.
- 황정임·최윤지·조현민·윤순덕. 2011. 「농촌 이주 도시민의 지역사회 참여활동 실태 및 생활 만족도와와의 관계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18(4): 729-764.
- Bernard, J. 2015. "Community satisfaction in Czech rural communities: A multilevel model." *Sociologia Ruralis* 55(2): 205-226.
- Besser, L. M., Marcus, M., and Frumkin, H. 2008. "Commute time and social capital in the U.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4(3): 207-211.
- Brown, R. B., Dorins, S. F., and Krannich, R. S. 2005. "The boom-bust-

- recovery cycle: dynamics of change in community satisfaction and social integration in Delta, Utah.” *Rural Sociology* 70(1): 28-49.
- Filkins, R., Allen, J. C., and Cordes, S. 2000. “Predicting community satisfaction among rural residents: An integrative model.” *Rural sociology* 65(1): 72-86.
- Fitz, B. M., Lyon, L., and Driskell, R. 2016. “Why people like where they live: individual-and community-level contributors to community satisfac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6: 1209-1224.
- Helliwell, J. F., and Putnam, R. D. 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Biological Sciences* 359(1449): 1435-1446.
- Hirschman, A. O. 1970. *Exit, voice, and loyalty: Responses to decline in firms, organizations, and states*(Vol. 25). Harvard university press.
- Kitchen, P., Williams, A., and Chowhan, J. 2012. “Sense of community belonging and health in Canada: A regional analysi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7: 103-126.
- Koo, H., Yee, J., Nam, E. Y., and Kim, E. S. 2016. “Dimensions of social well-being and determinants in Korea: Personal, relational, and societal aspects.” *The Senshu social well-being review* 3: 37-58.
- Leviten-Reid, C., Matthew, R., and Wardley, L. 2020. “Sense of community belonging: exploring the impact of housing quality, affordability, and safety among renter households.” *Journal of Community Practice* 28(1): 18-35.
- Marans, R. W., and Rodgers, W. L. 1975. “Toward an understanding of community satisfaction.” In Hawley, A., and V. Rock (Eds.) *Metropolitan America in Contemporary Perspective*, 299-352. New York: Halsted Press.
- Matarrita-Cascante, D., Brennan, M. A., and Luloff, A. E. 2010. “Community agency and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The case of La Fortuna, Costa Rica.”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8(6): 735-756.
- McKnight, M. L., Gibbs, B. G., Sanders, S. R., Cope, M. R., Jackson, J. E., and Park, P. N. 2019. “Small towns and urban centers: The relationship of distance and population size to community satisfaction.” *Community*

development 50(4): 389-405.

Miller, M. K., and Crader, K. W. 1979. "Rural-urban differences in two dimensions of community satisfaction." *Rural sociology* 44(3): 489-504.

Rodgers, W. 1980. "Residential satisfaction in relationship to size of plac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3(4): 436-441.

Tiebout, C. M. 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5): 416-424.

"지역사회 소속감." 국가지표체계. 2023.4.4.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8&idxCd=8073>(검색일: 2023년 7월 22일)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 인구 특성 항목 여성, 출산력, 아동, 인구이동, 통근·통학." 통계청 보도자료. 2021.11.29.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20200&bid=203&act=view&list_no=415274(검색일: 2023년 3월 1일)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통계청 보도자료. 2023.8.22.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30300&bid=211&act=view&list_no=426749(검색일: 2023년 10월 21일)

"2025 APEC 정상회의가 인천에 유치된다면 생기는 이점들은?" 인천광역시 공식 포스트. 2023.2.8.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5386963&memberNo=10791453&vType=VERTICAL>(검색일: 2023년 7월 20일)

한국교통연구원 View_T 홈페이지(<https://viewt.ktdb.go.kr>)

Esran 위도경도찾기 홈페이지(<http://map.esran.com>)

과
목

[부록 표 1] 분석에 이용한 주요 변수들 간 상관관계 (N=7,665)

	가	나	다	라	마	바	사	하	차	카
가	1.000									
나	0.309***	1.000								
다	0.211***	0.050***	1.000							
라	0.218***	0.063***	0.990***	1.000						
마	0.135***	0.278***	-0.268***	-0.260***	1.000					
바	0.188***	0.291***	-0.157***	-0.150***	0.627***	1.000				
사	0.120***	0.109***	-0.044***	-0.025*	0.117***	0.103***	1.000			
하	0.001	0.013	-0.213***	-0.250***	0.081***	0.026*	-0.029*	1.000		
차	-0.150***	-0.084	-0.266***	-0.275***	0.054***	0.040***	-0.003	0.138***	1.000	
카	-0.096***	-0.070***	-0.231***	-0.241***	0.060***	0.060***	0.000	0.113***	0.744***	1.000

자료(설명): ㉑: 지역에 대한 소속감, ㉒: 지역만족도, ㉓: 연령, ㉔: 연령제곱, ㉕: 주관적 신체건강 상태, ㉖: 주관적 정신건강 상태, ㉗: 일 vs. 여가(여가중시 정도), ㉘: 가구원 수, ㉙: 통근시간, ㉚: 통근거리

[부록 표 2] 구별 응답자의 통근 양상

(단위: 분, km, %)

	통근시간 (평균기준, 분)	통근거리 (km)	통근유형(통근지역)					
			동일 구	다른 구	인접 시	근접 시	서울	기타지역
중구	31.65	8.34	50.4	39.8	3.2	-	6.5	0.2
동구	28.18	6.39	43.4	45.3	4.2	0.3	6.4	0.4
연수구	33.81	10.71	35.4	44.2	5.2	3.2	9.9	2.2
남동구	27.18	7.04	48.2	41.8	3.1	-	6.4	0.4
부평구	34.40	7.80	31.2	41.1	10.3	0.9	15.1	1.3
계양구	31.15	7.67	48.2	37.0	2.8	1.5	9.7	0.9
서구	36.91	10.49	36.8	42.1	3.4	1.8	14.8	1.1
미추홀구	30.83	6.90	44.2	46.4	2.2	0.3	6.3	0.5
강화군	23.78	8.74	91.4	2.8	3.9	0.3	1.7	-
옹진군	12.36	2.04	92.4	7.4	0.2	-	-	-

국 문 초 록

통근이 거주지역 만족도와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

인천광역시 거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양은모(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 연구위원)

배호중(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과생애연구본부 부연구위원)

거주지역은 개인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통근은 근로자의 거주 지역 만족도 및 소속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지역에 대한 높은 만족도 및 소속감은 개인은 물론, 거주 지역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에 대한 만족도 및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20년 인천광역시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인천 거주 근로자들의 통근이 거주 지역(구/군)에 대한 만족도 및 소속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일터와 거주지가 가까운 근로자일수록 지역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동일 구 내로 통근하는 근로자의 지역 만족도가 인천 내 다른 구 또는 다른 지역으로 통근하는 근로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시간과 공간적 차원에서 통근문제를 고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인천광역시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인천광역시, 지역만족도, 지역소속감, 통근

Abstract

Commuting and Community Satisfaction:

The case of Incheon

Yang, Eunmo(Research Fellow, Gangwon Institute)

Bae, Hojoong(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whether commuting affects the community satisfaction and sense of regional belonging to the region where individuals live, using the data from the '2020 Incheon Social Survey', which was surveyed on a sample of 6,000 households in Incheon. Commuting is defined in terms of time and distance. The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highlight the fact that long commuting hours negatively affect individual community satisfaction. The results showed that physical travel distance between work and residence also affects individual community satisfaction. Additionally, the community satisfaction of workers commuting to the same district was higher than that of workers commuting to nearby cities. This study differs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considers both commuting hours and distan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urban planning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Key words: Community Satisfaction, Commuting Time, Sense of Regional Belonging

상권 방문객의 혁신성 식별과 혁신성 결정요인 분석연구

류새배*·김새힘**·김승훈***·이명훈****

류
새
배
·
김
새
힘
·
김
승
훈
·
이
명
훈

I. 서론

II. 선행연구 검토

1. 상권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2. 소비자 혁신성에 관한 연구
3. 연구의 차별성

III. 연구 자료 및 방법론

1. 연구의 범위
2. 지표 선정
3. 방법론

IV. 분석 결과

1. 혁신성 수준에 따른 상권 방문객 유형화
2. 상권 방문객의 혁신성 결정요인 분석

V. 결론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박사수료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박사 박사후연구원, 공동저자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석사과정, 공동저자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교수, 교신저자(E-mail: mhlee99@hanyang.ac.kr)

<http://doi.org/10.34165/urbanr.2023.24.305>

투고(접수)일 2023.5.3. 심사(수정)일 2023.5.26. 게재확정일 2023.12.14.

I. 서론

상권 간의 생존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SNS를 통해 다양한 상권이 소개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이애리·이주원 2018; Shen et al. 2022; 조휘형 2022). 그 결과, 오프라인 상권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상권 간의 과도한 경쟁은 자영업자들의 높은 폐업률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는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폐업률의 증가는 국내 사회 및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한국과 같이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을 경우, 자영업자 폐업률의 증가가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욱 크다(남윤미 2017).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속 가능한 상권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지속 가능한 상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권 방문객들의 오프라인 상업 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 새로운 소비 트렌드, 그리고 선호 요인을 고려하여 적절한 상권 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권 방문객들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지속 가능한 상권을 위해 상권의 생존을 및 폐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었다(박진백·김민섭 2022; 노화봉·정남기 2016).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상권 내 업종 간의 다양성과 같은 상권의 물리적 요인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으며, 상권을 직접 방문하는 소비자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김동준 외 2019; 임수명 외 2020; 정동규·윤희연 2017).

그러나 상권의 활성화와 성장, 쇠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권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특히, 혁신성이 높은 방문객은 다른 방문객들보다 최신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고, 새로운 장소를 더 빠르게 방문하려는 경향이 있다(Vandecasteele and Geuens 2010). 따라서

이들은 상권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소비자로 간주된다.

지속 가능한 상권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혁신성이 높은 방문객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성이 높은 방문객들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방문객의 혁신성을 측정하고, 방문객의 혁신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권 방문객들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특히 상권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혁신성이 높은 방문객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권 이용자들의 혁신성을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권 방문객을 분류하였다. 더불어, 상권 방문객들의 측정된 혁신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상권 방문객에 대한 이해와 지속 가능한 상권 관리에 필요한 상권의 운영 및 전략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1. 상권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상권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상권의 입지적 특성과 같은 물리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이 수행되었다(김동준 외 2019; 임수명 외 2020). 그러나 새로운 상권이 활성화되고 상권의 장소성이 형성될 때, 인적요인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권 방문객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본 절에서는 상권 방문객의 상권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크게 장소의 특성과 SNS 사용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장소의 특성은 개인의 장소 선택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개

인이 장소의 특성 중 어떠한 요소를 중요시하는지는 상업시설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윤미현·김영신 2007). 그리고 이때 상업시설 방문과 관련해 방문객들이 고려하는 요인들은 주로 접근성과 같은 편의성, 가격, 품질과 같은 기능적인 측면과 유행, 특색과 같은 유희적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Pardeshi and Khanna 2021; Rajamma et al. 2007; 임유선·김미숙 2013; 이영선·고순화 2014).

SNS 사용 특성 또한 장소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최근 많은 사람이 여가 시간에 SNS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SNS를 통해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공유할 수 있다(Siegel and Wang 2019; 이욱·엄서호 2017). 일상에서 빈번하게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SNS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접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개인의 SNS 사용 목적 또한 장소 선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때, SNS 사용 목적은 크게 정보탐색, 상호작용, 자기의 표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보탐색 목적은 SNS를 통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자 하는 동기이다. 사람들은 SNS를 사용하여 자신이 선호하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Kim et al. 2017). 상호작용목적은 SNS의 사용 목적이 SNS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자 하는 동기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방문한 장소에 대한 게시물을 SNS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들의 게시물에 반응하는 등 SNS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싶어 하는 동기를 갖고 있다(장현미 외 2012).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SNS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목적은 사람들이 SNS 안에서 자신의 취향을 표현할 수 있는 장소를 방문하는 행위와 연결되어 있다(오세진·장원호 2022; 김미영·김지희 2018).

2. 소비자 혁신성에 관한 연구

본 절에서는 소비자 혁신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이를 상권에 적용한 개념을 살펴본다. 소비자의 혁신성은 남들보다 신제품을 더 빨리 그리고 자주 구매하는 경향을 의미한다(Midgley and Dowling 1978).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들은 신제품에 대한 매력을 더 크게 느끼는 얼리어답터(early adopter)이다. 이들은 신제품에 빠르게 접근하여 신제품의 확산과 일반 소비자들이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촉매 역할을 수행한다(Steenkamp et al. 1999).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들은 시장의 핵심적인 소비자로서, 이들의 니즈와 선호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혁신성 개념을 상권을 소비하는 방문객에게 적용한다면, 혁신성이 높은 방문객들은 일반적인 방문객들보다 유행에 민감하고, 새로운 상권 등의 상업 공간을 방문하는 이들로 볼 수 있다. 그 예로 상권 방문객 중에서는 상업 젠트리파이어(gentrifier) 방문객들이 다른 방문객들보다 혁신성이 높은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 집단은 독특한 자신만의 취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취향에 맞는 새로운 장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경향이 있다(유민태·박태원 2020). 이 과정에서 상업 젠트리파이어 방문객들은 트렌드를 선도하거나 새로운 유행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한정훈 2010). 혁신성이 높은 상권 방문객들은 상권의 활성화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아직 방문객들의 혁신성을 측정하고 방문객들의 혁신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소비자학 및 마케팅 분야에서는 소비자의 혁신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Midgley and Dowling 1978; Raju 1980). 소비자 혁신성에 관한 연구 중 일부에서는 혁신성을 선천적인 개인의 성격 특성으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소비자의 혁신성

을 소비자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와 같이 소비자가 가진 선천적인 성격으로써 혁신성을 정의 내리고, 상위 수준에서의 혁신성을 측정하려고 시도하였다(Leavitt and Walton 1975; Kirton 1976; Hurt et al. 1977). 이러한 관점은 혁신성이 단순히 개인의 소비활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관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성에 대한 접근법은 혁신성을 너무 광범위한 범주로 보기 때문에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있다(Foxall and Goldsmith 1988). 개인의 선천적인 성격으로 접근한 혁신성 정의는 개인의 특정 분야에 대한 소비 행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소비자의 혁신성을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측정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Ajzen 1991; Buss 1989; Lastovicka and Joachimsthaler 1988). 혁신성을 구체적인 수준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소비자의 혁신성을 좀 더 구체적인 개념인, '특정 관심 영역 내에서 신제품에 대하여 배우고 선택하는 성향'으로 정의한다(Goldsmith et al. 1995). 이러한 관점을 상권 방문객의 혁신성에 적용한다면, 혁신성은 방문객이 상권을 방문하여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행동과 관련된 특성으로 볼 수 있다.

특정 영역에서 소비자의 혁신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는 해당 분야에서 특정 제품을 사용하는 빈도이다. 관련 제품을 평소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는 소비자의 혁신성 정도와 관련이 있다(Gatignon and Robertson 1985; Taylor 1977). 특정 제품을 자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해당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집단으로 볼 수 있다(Citrin et al. 2000). 제품의 사용 빈도가 높은 이들은 새로운 제품에 대한 정보를 더 빠르게 접근하고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상권 방문과 관련해서는, 상권을 자주 방문하거나 다양한 상권을 방문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상권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의 혁신성 측정에 사용되는 다른 척도는 유희적 혁신성(Hedonist innovativeness)과 사회적 혁신성(Social innovativeness)이다. 유희적 혁신성은 새로운 제품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즐기는 등 신제품을 사용하는 데 오는 정서적 만족감과 관련이 있다(Roehrich 1994; Vandecasteele and Geuens 2010). 유희적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들은 새로운 제품을 시도해보는 것 자체를 즐기는 이들이다. 사회적 혁신성은 차별화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와 관련이 있다(Roehrich 1994; Vandecasteele and Geuens 2010). 사회적 혁신성은 소비자들이 신제품을 소비함으로써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고 남들과 구별 짓는 사회적 위치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개념을 상권 방문객들에게 적용하면, 유희적 혁신성이 높은 방문객들은 새로운 상권을 탐방하는 것을 즐기고, 정보를 탐색하여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이들로 볼 수 있다. 사회적 혁신성이 높은 방문객들은 남들보다 빠르게 새로운 상권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새로운 상권을 남들보다 빠르게 방문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혁신성이 높은 방문객들은 다른 장소를 방문함으로써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상권 방문객 관점의 연구이다. 상권 방문객의 특성을 분석하여, 그들의 선호 요소를 파악하는 것은 상권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상권 운영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기존의 상권 관련 연구에서는 상권의 물리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다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부족한 상권 방문객의 특성 파악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며, 이를 통해 상권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상권 발전을 위한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상권 방문객 중 혁신성이 높은 상권 방문객들의 특징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특정 분야에서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는 해당 시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집단이다. 본 연구는 ‘혁신성 수준에 따라 구분되는 방문객 집단은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가?’라는 연구 질문에 답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았던 ‘혁신성’이라는 개념을 상권 방문객에게 적용하였다. 그리고 상권 방문객의 혁신성 수준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 그룹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셋째, 선행연구에서는 SNS의 일상화가 상권 방문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방문객의 성향, 특히 방문객의 혁신성 수준에 미치는 SNS 사용 특성의 영향은 살펴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문객의 혁신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연구 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SNS 사용 특성이 상권 방문객 혁신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Ⅲ. 연구 자료 및 방법론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한국의 수도인 서울은 높은 인구 밀집도를 보이며, 다양한 산업과 문화가 집중되어 있는 한국의 문화와 유행의 중심지이다. 또한 서울은 다양한 상권과 상권 내 다양한 업종과 매장이 모여 있다. 이는 서울의 상권 방문객들이 다양한 취향과 경험을 갖고 있으며, 혁신적인 소비 행태를 보이는 상권 방문객들도 많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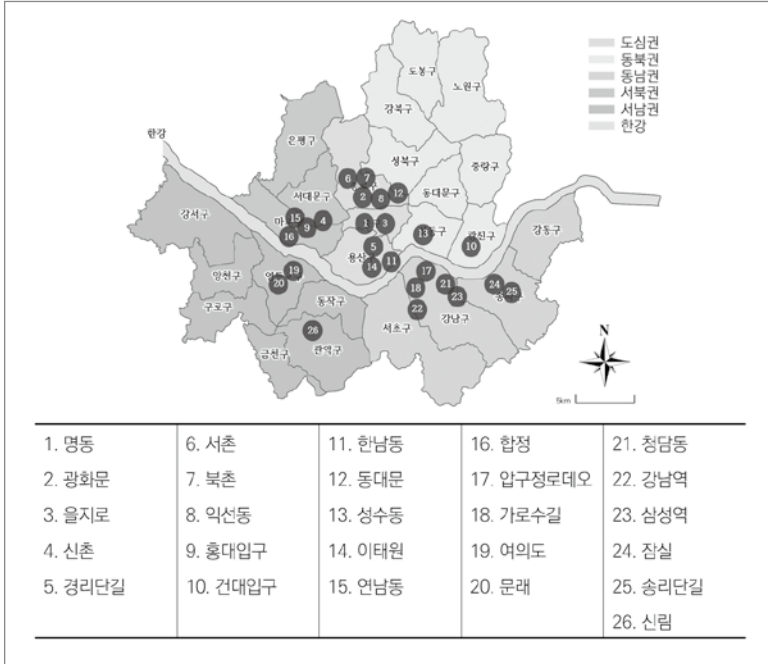
서울을 연구의 적합한 공간적 범위라고 판단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진행한 설문조사의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전문 설문업체를 통해 2022년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약 10일 동안 웹 기반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20~50대로 설정하였다. 설문의 응답자는 서울시 5대 생활권인 서북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북권(도봉구, 성동구, 성북구 등), 동남권(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서남권(영등포구, 관악구, 강서구 등),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과 성별, 연령대로 계층별로 나눈 층화표본추출법으로 수집하였다.

[표 1] 응답자 특성

구분		빈도(%)
생활권	도심권	204(19.5)
	동남권	214(20.5)
	동북권	213(20.4)
	서남권	209(20.0)
	서북권	204(19.5)
성별	남성	521(49.9)
	여성	523(50.1)
연령	20대	253(24.2)
	30대	259(24.8)
	40대	267(25.6)
	50대	265(25.4)
N		1,044

이를 토대로 일상 속 SNS 사용 특성이 상권 방문객의 혁신성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SNS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1,079명의 응답자 데이터 회수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자라고 판단한 35명의 데이터를 제외한 1,044명의 응답자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림 1] 연구의 범위

2. 지표 선정

1) 혁신성 관련 지표

본 연구에서는 서울 상권 방문객의 혁신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혁신성 척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적합한 척도를 선택하여 상권 방문객의 혁신성을 측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소비자의 혁신성을 남들보다 신제품을 시도하는 것을 즐기고, 남들과 차별화된 소비를 원하는 정도로 정의 내리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권 방문객의 혁신성을 새로운 상업 공간을 방문하는 것을 즐기고,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를 방문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를 추구하는 경향성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에 따르면, 소비자의 제품 이용 빈도와 같은 제품 이용 특성이 혁신성과 관계가 있었다(Gatignon and Robertson 1985). 본 연구는 상권 이용과 관련해 상권방문을 위한 외출 빈도, 방문 상권의 다양성, 방문 상권 거리를 측정하였다. 이때 상권의 방문은 여가 목적의 소비 활동과 관련된 혁신성을 측정하기 위해, 여가에 소비활동 목적으로 상권을 방문한 경우로 제한하였다. 외출 빈도의 경우 응답자에게 한 달간 여가 목적으로 상권을 방문하기 위해 외출한 수를 물었다. 그리고 방문 상권 다양성의 경우 최근 한 달간 방문한 상권의 수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서울의 26개 주요 상권을 선정하였다(정의석 외 2020; 경신원·정규리 2019; 이슬기·성현곤 2017; Ryu et al. 2022). 그 후에 '기타'를 포함한 총 27개의 상권 목록을 제시한 뒤, 설문 대상자들에게 최근 한 달간 방문한 상권을 선택하도록 하여 방문한 상권의 수를 측정하였다. 방문 상권 거리는 응답자가 얼마나 먼 거리에 위치한 상권까지 방문할 의향이 있는가에 관한 내용이다. 서울 내에서 여가를 보낼 상권을 선택할 때 소요되는 이동시간 기준(편도)으로 얼마나 먼 장소까지 방문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응답자의 방문 상권 거리의 경우 응답자의 주거지와 방문한 상권 근처의 지하철 거리를 측정할 연구도 있었다(이슬기·성현곤 2017).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여가 목적의 상권 방문은 동반인이 있을 확률이 높기에 응답자들이 동반인의 위치를 고려한 절충지에 방문한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이슬기·성현곤 2017; 최막중·이재우 1999). 따라서 본 연구는 상권을 선택할 때, 소요되는 이동시간(편도) 기준으로 얼마나 먼 장소까지 방문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방식으로 방문 상권 거리를 측정하였다. 이 방식의 경우 동반인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이동시간을 고려하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감내하고자 하는 응답자의 성향을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유희적 혁신성과 사회적 혁신성은 Roehrich(1994), Vandecasteele and Geuens(2010)의 지표를 수정 및 보완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측정한 각 항목 값들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와 함께 관련 문항들이 일관성 있게 측정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Cronbach's α 의 값이 0.6 이상 나와 각 항목은 내적일관성을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2] 혁신성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내용	신뢰도
유희적 혁신성	나는 골목 등에 숨겨진 새로운 가게를 방문하는 것을 즐긴다.	0.792
	나는 여가에 새로운 카페나 맛집 등의 장소를 방문하고는 한다.	
	나는 프랜차이즈와 같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곳보다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브랜드 매장, 카페나 식당 등의 새로운 상업 공간을 찾아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평소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게 등 새로운 장소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는 것을 좋아한다.	
사회적 혁신성	나는 보통 새로운 장소(새로운 식당, 카페 등)를 방문해보는 편이다.	0.802
	나는 남들에 비해 최근 인기 있는 카페나 음식점 등의 상업 공간을 잘 아는 편이다.	
	나는 새로운 맛집, 카페 등의 장소를 먼저 가보고 주변인들에게 추천해주곤 한다.	
	나는 내가 방문하던 카페나 식당이 유명해져서 방문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자신의 취향에 맞는 새로운 가게를 찾으러 가는 편이다.	

2) SNS 사용 특성 관련 지표

본 연구에서는 SNS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와 같이 글, 이미지, 영상 등을 통해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망을 구축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로 정의하였다(Boyd and Ellison 2007). 상권 방문객의 SNS 사용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먼저 SNS 사용 정도와 관련하여 하루 평균 SNS 사용 시간, 사용하는 SNS 수, 한 달 평균 SNS에 게시물을 올리는 빈도 그리고 최근 한 달간 SNS를

활용하여 상업시설을 방문한 빈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NS 사용 특성 중 SNS 활용 정도 외에도 SNS 사용 목적을 측정하였다. SNS 사용 목적은 상권 방문객들이 평소 어떤 동기를 가지고 SNS를 사용하는지와 관련된 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SNS 사용 목적을 정보탐색 목적, 상호작용 목적, 자기표현 목적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이 평소 SNS를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그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장소특성 관련 지표

개인이 장소와 관련해서 어떠한 요소를 중요시하는지는 개인의 장소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김찬영 외 2014). 본 연구에서는 장소특성 관련 지표로써, 응답자가 평소 여가에 방문할 상업시설을 선택할 때 각 장소의 특성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측정하였다. 장소의 특성은 가격, 접근성, 유행, 특색, 품질로 구분하였다. 각 장소의 특성에 대하여 응답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바탕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Pardeshi and Khanna 2021; Rajamma et al. 2007; 임유선·김미숙 2013; 이영선·고순화 2014).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측정한 각 설문 문항 값들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해당 문항들이 일관성 있게 측정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Cronbach's α 의 값이 0.6 이상 나왔고, 각 항목은 내적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3] 장소특성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내용	신뢰도
가격	나는 여가 목적으로 방문할 상업 공간을 고를 때, 무엇보다 가격을 우선시하는 편이다.	0.731
	나는 여가 목적으로 방문할 상업 공간을 고를 때,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편이다.	
	나는 집 외의 장소에서 여가를 보낼 때, 비교적 합리적인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나는 여가 목적으로 방문할 상업 공간에서 제공되는 상품/서비스의 가격이 비쌀 경우 다른 부분이 마음에 들어도 방문하지 않는 편이다.	
품질	나는 여가를 보낼 상업 공간을 고를 때,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질이 중요하다.	0.704
	나는 집 외의 장소에서 여가를 보낼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의 상품의 품질 혹은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나는 여가 목적으로 방문할 상업 공간을 고를 때 무엇보다 장소에서 제공되는 상품/서비스의 질을 우선시하는 편이다.	
접근성	나는 여가를 보낼 상업 공간을 선택할 때,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소는 선택하지 않는 편이다.	0.647
	나는 여가에 방문할 상업 공간을 선택할 때, 찾기 힘든 곳은 선호하지 않는 편이다.	
	나는 여가를 보낼 상업 공간을 선택할 때, 집과 가까운 곳으로 선택하는 편이다.	
유행	나는 여가를 보낼 장소를 고를 때, 주변 사람, SNS 등에서 유행하는 곳을 가보는 편이다.	0.829
	나는 여가에 유행하는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평소에 최근 유행하는 장소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고는 한다.	
특색	나는 평소 여가 목적으로 방문한 장소를 선택할 때,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특색이 있는 곳을 중요시하는 편이다.	0.816
	나는 여가에 특색 있는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즐긴다.	
	나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가게들이 있는 상권을 선호하는 편이다.	
	나는 종종 여가에 방문할 특색 있는 장소를 찾아보는 편이다.	

4) 개인 및 가구 특성 관련 지표

개인 및 가구 특성 지표에서 응답자 특성으로 응답자의 성별, 연령, 직업, 근로일수, 개인소득, 학력, 결혼 여부, 맞벌이 유무, 자가용 소유 여부,

건강 상태, 여가 동반인을 측정하였다. 이때 성별, 직업, 학력, 결혼 여부, 맞벌이 유무, 자가용 소유 여부, 여가 동반인, 근로일수는 범주형으로 측정하였다. 여가 동반인은 집 외의 장소에서 여가를 보낼 때 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를 물었다. 근로일수는 응답자의 일주일 평균 근로일수를 3일 미만, 3~4일, 5일, 6일 이상으로 범위를 나누어 측정하였다. 연령은 응답자가 주관식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응답자의 소득의 경우 실 수령액 기준으로 1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상까지 100만 원 단위로 범위를 나누어 보기를 제시한 뒤, 응답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건강 상태는 응답자가 느끼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표 4] 변수 설명

Variable	변수 설명
외출 빈도	최근 한 달간 여가 목적으로 상권을 방문하기 위해 외출한 수
방문 상권 다양성	최근 한 달간 여가 목적으로 방문한 상권의 수
이동시간	상권을 방문하기 위해 감내할 수 있는 이동시간(편도기준) (단위: 분)
유희적 혁신성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즐기는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값들의 평균값
사회적 혁신성	새로운 장소를 방문함으로써 남들과 구별되고자 하는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값들의 평균값
SNS 사용 시간	하루 평균 SNS 사용 시간 (단위: 분)
사용 SNS 수	현재 사용하고 있는 SNS 수
게시글 업로드 수	평균 한 달간 SNS에 게시글을 올리는 빈도
SNS 활용 빈도	최근 한 달간 SNS를 활용하여 상업시설을 방문한 수
정보탐색목적	SNS를 통해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편이다. (1=매우 아니다~5=매우 그렇다)
상호작용목적	SNS를 통해 타인과 교류하려고 하는 편이다. (1=매우 아니다~5=매우 그렇다)
자기표현목적	SNS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려는 편이다. (1=매우 아니다~5=매우 그렇다)
가격	여가에 방문할 상업시설 선택 시 판매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중요시하는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값들의 평균
품질	여가에 방문할 상업시설 선택 시 판매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중요시하는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값들의 평균

Variable	변수 설명
접근성	여가에 방문할 상업시설 선택 시 장소의 접근성을 중요시하는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값들의 평균
유행	여가에 방문할 상업시설 선택 시 장소의 유행을 중요시하는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값들의 평균
특색	여가에 방문할 상업시설 선택 시 장소의 특색을 중요시하는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값들의 평균
성별	0=남성, 1=여성
연령	응답자 연령
직업	1=사무직, 2=학생, 3=생산·서비스직, 4=무직, 5=기타
근로일수	1=3일 미만, 2=3~4일, 3=5일, 4=6일 이상
개인소득	월평균 실소득을 100만 원 단위로 1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이상까지 보기를 제시하여 측정
학력	1=고졸 이하, 2=대학교 재학, 3=대학교 졸업 이상
결혼 여부	0=미혼, 1=기혼
맞벌이 여부	0=아니오, 1=예
자가용 소유 여부	0=미소유, 1=소유
건강 상태	응답자가 느끼는 건강 상태(1=매우 나쁨~5=매우 좋음)
여가 동반인	1=혼자, 2=연인, 3=지인, 4=가족, 5=기타

[표 5] 기술통계

Variable	평균/빈도	Std. Dev./ %	Min	Max
외출 빈도 (no./month)	8.48	6.30	1	31
방문 상권 다양성 (no./month)	4.32	3.45	1	26
이동시간 (maximum minute)	68.72	26.99	8	150
유희적 혁신성	3.61	0.71	1	5
사회적 혁신성	3.41	0.70	1	5
SNS 사용 시간 (minute/day)	93.38	88.79	3	608
사용 SNS 수	3.24	1.35	1	7
게시물 업로드 수 (no./month)	4.63	7.66	0	70
SNS 활용 빈도 (no./month)	4.56	4.47	0	30
정보탐색목적	3.74	0.87	1	5
상호작용목적	3.36	0.99	1	5
자기표현목적	3.03	1.11	1	5

Variable		평균/빈도	Std. Dev./ %	Min	Max
가격		3.54	0.64	1	5
품질		3.81	0.61	1	5
접근성		3.59	0.69	1	5
유행		3.32	0.78	1	5
특색		3.49	0.73	1	5
성별(1=여자)		0.50	0.50	0	1
연령		39.53	10.94	20	59
직업	사무직	583	55.84	-	-
	학생	92	8.81		
	생산·서비스직	142	13.6		
	무직	89	8.52		
	기타	138	13.22		
근로일수	3일 미만	157	15.04	-	-
	3~4일	83	7.95		
	5일	725	69.44		
	6일 이상	79	7.57		
개인소득		4.49	2.60	1	11
학력	고졸 이하	87	8.33	-	-
	대학교 재학	129	12.36		
	대학교 졸업 이상	828	79.31		
결혼 여부(1=기혼)		0.50	0.50	0	1
맞벌이 여부(1=맞벌이)		0.31	0.46	0	1
자가용 소유 여부(1=소유)		0.63	0.48	0	1
건강 상태		3.34	0.76	1	5
여가 동반인	혼자	144	13.79	-	-
	연인	238	22.8		
	지인	335	32.09		
	가족	322	30.84		
	기타	5	0.48		
N		1,044			

3. 방법론

본 연구의 목적은 상권 방문객들의 혁신성을 측정하고, 방문객의 혁신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사용하여 설문 응답자의 혁신성 수준에 따라 집단을 나누고, 각 응답자를 해당 집단에 확률적으로 할당하였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은 집단을 유형화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분석 방법이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은 모집단의 구성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잠재 집단을 분류하는 데 사용된다(Gibson 1959). 잠재 프로파일 분석은 연속형 관찰 변수를 대상으로 특성 정보들을 도출하고, 이에 근거해 기존에 관찰되지 않았던 잠재 집단을 찾아내는 분석 방법이다(박강현·하성규 2022; Henry and Muthén 2010). 잠재 프로파일 분석에 대한 수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f(x_i | \theta) = \sum_1^k \pi_k f_k(x_i | \theta_k)$$

이때 π_k 는 연속 변수 $x_i (i = 1, \dots, n)$ 에 대해 잠재 집단 k 에 속할 확률을 나타내는 값이며, $f_k(x_i | \theta_k)$ 는 특정 잠재 집단 k 의 정규 분포 밀도 함수를 나타낸다. 각 잠재 집단에 속할 확률의 총합은 1이며, 이는 잠재 집단들이 상호 배타적임을 의미한다. 또한, 정규 분포 함수 f_k 는 각 잠재 집단의 평균 벡터와 공분산 행렬($\theta_k = \pi_k, \Sigma_k$)의 분포를 가지게 된다(이민주·박민지 2022; Tein et al. 2013).

잠재 프로파일 분석은 단순히 관찰된 값을 통해 집단을 분류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달리, 통계적으로 도출된 적합 지표를 바탕으로 좀 더 객관적인 잠재 집단 분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김영서·홍세희 2021). 잠재 계층 수 추정에 사용되는 지표는 보편적으로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a)가 활용되며, 그 수치가 낮을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Collins et al. 1993; Nylund et al. 2007). 하지만 집단의 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수치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 가능성과 집단의 샘플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단의 수를 결정한다(Berlin et al. 2014).

잠재 프로파일 분석으로 상권 방문객들의 혁신성 수준별로 집단을 나눈 뒤, 방문객의 혁신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순서형 프로빗 모형은 종속변수가 순서형 변수일 때 사용되는 방법으로, 종속변수의 순서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여 분석한다(Becker and Kennedy 1992).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한 방문객의 혁신성 수준은 순서를 지닌 변수로,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종속변수인 y 가 0, 1, 2, ..., k 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순서형 프로빗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begin{aligned}
 y &= \beta x_i + \epsilon_i, \epsilon_i \sim N[0,1] \\
 y &= 0 \text{ if } y \leq 0 \\
 y &= 1 \text{ if } 0 < y \leq \mu_1 \\
 y &= 2 \text{ if } \mu_1 < y \leq \mu_2 \\
 &\dots \\
 y &= y_i \text{ if } \mu_{y-1} < y
 \end{aligned}$$

이때 y 는 상권 방문객 혁신성 수준(종속변수)이며, x_i 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들이다. μ 는 추정계수 β 와 함께 추정하는 한계값(threshold)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각 대안에 대한 선택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각 대안이 선택될 확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때 ϕ 는 표준정규분포의 누적 확률 함수를 나타낸다.

$$\begin{aligned} \text{prob}[y = 0] &= \phi(-\beta x) \\ \text{prob}[y = 1] &= \phi(\mu_1 - \beta x) - \phi(-\beta x) \\ \text{prob}[y = 2] &= \phi(\mu_2 - \beta x) - \phi(\mu_1 - \beta x) \\ &\dots \\ \text{prob}[y = y_i] &= 1 - \phi(\mu_{y_{i-1}} - \beta x) \end{aligned}$$

IV. 분석 결과

1. 혁신성 수준에 따른 상권 방문객 유형화

잠재 프로파일 분석 결과, 상권 방문객을 혁신성 수준에 따라 3가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AIC 및 BIC 지표를 살펴봤을 때 분류하는 집단의 수가 증가할수록 두 지표의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표의 값이 낮을수록 더 높은 모델 적합도를 의미하지만, 집단의 수가 증가할수록 각 집단마다 할당되는 표본의 수는 감소하였다. 잠재 집단의 수가 많아질 경우, 각 집단별로 할당되는 표본의 수가 지나치게 적어져 유의미한 해석이 힘든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모형의 적합도 지표를 절대적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형의 적합도와 해석 가능한 집단 수 사이에서 절충하여 사용한다(Lee et al. 2019). 본 연구 또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3가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집단은 혁신성이 하위인 집단으로 혁신성과 관련된 5가지 지표들의 값들이 가장 낮은 집단이다. 전체 응답자 중 약 29.6%가 이 집단에 해당한다. 이 집단은 한 달 평균 외출 빈도가 6.06회이며 한 달 동안 평균 2.41개의 상권을 방문했다. 그리고 이 집단은 여가 목적으로 방문할 상권을 선택할 때 편도로 평균 62.11분 걸리는 상권까지 방문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희적 혁신성은 평균 2.82점, 사회적 혁신성

이 평균 2.64점으로 나타났다. 이 그룹에 속한 이들은 혁신성이 가장 낮은 방문객들로 여가를 즐기기 위해 상권을 방문한 빈도가 낮으며, 새로운 상권을 시도하는 것을 즐기지 않고 거주지와 멀지 않는 상권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이라고 볼 수 있다.

[표 6] 혁신성 수준 집단별 기술통계

Variable	하위집단(N=309)	중위집단(N=645)	상위집단(N=90)	
	평균/빈도(S.D./%)	평균/빈도(S.D./%)	평균/빈도(S.D./%)	
외출 빈도 (no./month)	6.06(4.70)	8.57(5.92)	16.14(7.51)	
방문 상권 다양성 (no./month)	2.41(1.63)	4.05(2.09)	12.79(3.59)	
이동시간 (maximum minute)	62.11(25.75)	69.84(25.88)	83.40(31.88)	
유희적 혁신성	2.82(0.54)	3.93(0.46)	3.97(0.53)	
사회적 혁신성	2.64(0.54)	3.71(0.48)	3.88(0.47)	
SNS 사용 시간 (minute/day)	84.72(88.16)	93.83(88.48)	119.81(88.77)	
사용 SNS 수	2.83(1.24)	3.30(1.31)	4.19(1.45)	
게시물 업로드 수 (no./month)	3.50(7.89)	4.71(7.28)	7.90(8.56)	
SNS 활용 빈도 (no./month)	2.51(3.01)	4.74(4.01)	10.31(6.19)	
정보탐색목적	3.34(0.87)	3.87(0.81)	4.20(0.75)	
상호작용목적	3.07(0.10)	3.43(0.97)	3.87(0.82)	
자기표현목적	2.50(0.99)	3.20(1.09)	3.67(0.97)	
가격	3.44(0.65)	3.61(0.62)	3.39(0.65)	
품질	3.45(0.62)	3.95(0.53)	4.07(0.56)	
접근성	3.61(0.72)	3.61(0.66)	3.39(0.80)	
유행	2.71(0.70)	3.55(0.65)	3.77(0.69)	
특색	2.87(0.66)	3.72(0.57)	3.91(0.60)	
성별(1=여자)	0.52(0.50)	0.49(0.50)	0.48(0.50)	
연령	40.39(10.95)	39.68(11.03)	35.48(9.41)	
직업	사무직	137(44.34)	377(58.45)	69(76.67)
	학생	29(9.39)	56(8.68)	7(7.78)
	생산·서비스직	53(17.15)	83(12.87)	6(6.67)
	무직	39(12.62)	48(7.44)	2(2.22)
	기타	51(16.5)	81(12.56)	6(6.67)

Variable		하위집단(N=309)	중위집단(N=645)	상위집단(N=90)
		평균/빈도(S.D./%)	평균/빈도(S.D./%)	평균/빈도(S.D./%)
근로일수	3일 미만	68(22.01)	83(12.87)	6(6.67)
	3~4일	28(9.06)	51(7.91)	4(4.44)
	5일	185(59.87)	462(71.63)	78(86.67)
	6일 이상	28(9.06)	49(7.6)	2(2.22)
개인소득		3.85(2.46)	4.71(2.62)	5.17(2.05)
학력	고졸 이하	40(12.94)	44(6.82)	3(3.33)
	대학교 재학	40(12.94)	78(12.09)	11(12.22)
	대학교 졸업 이상	229(74.11)	523(81.09)	76(84.44)
결혼 여부(1=기혼)		0.48(0.50)	0.53(0.50)	0.41(0.50)
맞벌이 여부(1=맞벌이)		0.26(0.44)	0.33(0.47)	0.37(0.49)
자가용 소유 여부(1=소유)		0.55(0.50)	0.66(0.47)	0.63(0.49)
건강 상태		3.14(0.77)	3.41(0.75)	3.56(0.69)
여가 동반인	혼자	64(20.71)	70(10.85)	10(11.11)
	연인	49(15.86)	149(23.1)	40(44.44)
	지인	94(30.42)	219(33.95)	22(24.44)
	가족	100(32.36)	204(31.63)	18(20)
	기타	2(0.65)	3(0.47)	-

두 번째 집단은 혁신성과 관련된 5가지 지표들의 값들이 3개의 그룹 중 중간 수준인 그룹이다. 이 집단은 전체 응답자 중 약 61.78%를 차지해 가장 많은 이들이 이 그룹에 속한다. 이 그룹은 한 달 평균 외출 빈도는 약 8.57번이며 한 달 평균 약 4.05개의 상권을 방문하였다. 상권 방문 시 평균적으로 편도 69.84분 소요되는 상권까지 방문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희적 혁신성 평균 점수는 약 3.93점, 사회적 혁신성의 평균 점수는 약 3.71점으로 나왔다. 이 집단에 속한 이들은 혁신성이 중간 정도인 방문객들로, 일반적인 상권 방문객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집단은 혁신성이 상위인 집단으로 혁신성과 관련 관련된 지표들의 값들이 가장 높은 그룹이다. 이 그룹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은 전체

의 약 8.62%이다. 이 집단의 한 달 평균 외출 수는 약 16.14회이며 한 달 평균 약 12.79개의 상권을 방문하였다. 여가 목적으로 방문할 상권을 선택할 때 편도를 기준으로 평균 약 83.4분이 걸리는 곳까지 방문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희적 혁신성 점수는 평균적으로 약 3.97점, 사회적 혁신성 점수는 약 3.88점으로 나타났다. 이 그룹은 혁신성이 높은 방문객들로 다양한 상권을 방문하고, 더 자주, 더 멀리까지 이동하는 방문객들이다. 이들은 남들보다 먼저 새로운 상권을 방문한 뒤, 일반 방문객들의 상권방문을 유도하는 상권의 핵심적인 방문객이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나누어진 세 집단을 각각 ‘하위집단’, ‘중위집단’, ‘상위집단’으로 정의하였다.

2. 상권 방문객의 혁신성 결정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는 상권 방문객의 혁신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이용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종속변수는 방문객의 혁신성 수준으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분류된 ‘하위집단’, ‘중위집단’, ‘상위집단’을 0, 1, 2 순으로 코딩하였다. 그리고 SNS 사용 특성, 장소 선택요인 그리고 개인 및 가구 특성을 독립변수로 구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모형의 설명력은 약 32.2%(Pseudo-R²=0.3221) 수준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의 경우 VIF 값이 3.83 이하로 나타나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SNS 관련 변수의 상관관계가 낮은 것은 SNS 사용자들의 행동 패턴이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SNS 사용자들은 다양한 목적과 용도로 SNS를 활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SNS 사용 시간은 길지만 게시물 업로드 수는 적거나, SNS 사용 시간은 짧지만 사용하는 SNS의 수는 많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SNS 사용자들의 개인

적인 성향에 따라 SNS 이용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순서형 프로빗 모형과 같은 비선형 모형에 해당하는 이산적 선택 모형에서는 독립변수의 변화가 선택(혁신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석은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사용한다(이선영 외 2020). 한계효과는 편미분을 통해 각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른 선택(혁신성 수준)의 변화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한계효과 분석을 함께 진행하였다. [표 기은 순서형 프로빗 모형분석 결과와 한계효과를 함께 정리한 내용이다.

분석 결과, SNS 사용 특성 중에서는 사용하는 SNS 수, SNS를 활용한 방문 빈도가 혁신성 수준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하는 SNS의 수가 1개 증가할 때 혁신성 수준이 중위 집단과 상위집단에 속할 확률이 각각 0.84%, 0.71%씩 증가하였다. 그리고 SNS를 활용한 방문 빈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혁신성 수준이 중위 집단, 상위집단에 속할 확률이 0.98%, 0.83% 증가하였다. 분석을 통해 혁신성이 높은 방문객들은 SNS를 사용해 상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여가 목적으로 방문할 상권을 결정할 때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SNS 사용 시간과 게시물 업로드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SNS 사용 목적과 관련된 지표 중에서는 정보탐색목적과 자기표현목적이 혁신성 수준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상호작용목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정보탐색목적이 한 단위 증가할 때 혁신성 수준이 중위집단과 상위집단에 속할 확률은 각각 1.42%, 1.21%씩 증가하였다. 자기표현목적이 한 단위 증가할 때 혁신성 수준이 중위집단과 상위집단에 속할 확률은 1.51%, 1.28%씩 증가하였다. 혁신성이 높은 방문객들은 남들과 구별될 수 있는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선호하며, 이러한 심리는 SNS상에서 자신이 방문한 장소를 보여주는 행위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혁신성이 높은 방문객들에게는 SNS 자체가 상권 방문의 목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장소 선택요인 중에서는 품질, 유행, 특색이 방문객 혁신성 수준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에 대한 중요성이 한 단위 증가할 때 혁신성 중위집단과 상위집단에 속할 확률은 3.44%, 2.92% 증가하였다. 장소의 유행에 대한 중요성이 한 단위 증가할 때 혁신성 수준이 중위집단과 상위집단에 속할 확률이 4.58%, 3.88%씩 증가하였다. 장소의 특색을 중요시하는 정도가 한 단위 증가할 때, 혁신성 수준이 중위집단과 상위집단에 해당할 확률이 각각 8.1%, 6.87%씩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혁신성 수준이 높은 방문객들이 일반적인 장소나 상품보다는 유니크(unique)하고 특색있는 장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SNS를 통한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혁신성 수준이 높은 방문객들은 자신이 방문한 유니크한 장소를 SNS를 통해 공유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혁신성이 높은 방문객들의 SNS를 통한 정보공유가 다른 상권 방문객들의 상권 방문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매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장소 선택요인 중 접근성과 가격의 계수는 음(-)의 값을 가졌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개인 및 가구 특성 관련 지표에서는 소득과 여가 동반인만 혁신성 수준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혁신성 수준이 중위집단과 상위집단일 확률이 0.66%, 0.56% 증가하였다. 여가 동반인의 경우 집 외의 장소에서 여가를 보낼 때 주로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이들과 비교했을 때, 연인과 주로 시간을 보내는 이들일수록 혁신성이 높을 확률이 높았다. 연인과 여가를 보내는 이들은 주로 혼자 여가를 보내는 이들과 비교했을 때, 혁신성이 중위집단과 상위집단에 속할 확률이 3.98%, 3.28% 높았다.

[표 7] 순서형 프로빗 회귀분석 결과

Variable	Coef.	z	Marginal effect			
			하위집단	중위집단	상위집단	
SNS 사용 시간 (minute/day)	4.37E-04	0.87	-0.00010	0.00005	0.00005	
사용 SNS 수	0.067*	1.98	-0.01542	0.00835	0.00708	
게시물 업로드 수 (no./month)	-0.007	-1.28	0.00177	-0.00096	-0.00081	
SNS 활용 빈도 (no./month)	0.079***	7.43	-0.01811	0.00980	0.00831	
정보탐색목적	0.114*	2.04	-0.02629	0.01423	0.01206	
상호작용목적	-0.050	-0.95	0.01158	-0.00627	-0.00531	
자기표현목적	0.121**	2.34	-0.02786	0.01508	0.01278	
가격	-0.104	-1.43	0.02382	-0.01289	-0.01093	
품질	0.277**	3.30	-0.06358	0.03441	0.02917	
접근성	-0.081	-1.23	0.01852	-0.01002	-0.00850	
유행	0.368***	5.20	-0.08462	0.04580	0.03883	
특색	0.651***	7.79	-0.14963	0.08098	0.06865	
성별(여=1)	-0.011	-0.11	0.00248	-0.00134	-0.00114	
연령	-0.005	-0.89	0.00112	-0.00061	-0.00051	
직업 (ref.사무직)	학생	-0.313	-1.39	0.07435	-0.04372	-0.03063
	생산·서비스직	-0.103	-0.76	0.02370	-0.01261	-0.01108
	무직	-0.125	-0.56	0.02878	-0.01550	-0.01328
	기타	-0.182	-1.26	0.04243	-0.02352	-0.01891
근로일 수 (ref.3일 미만)	3~4일	-0.138	-0.69	0.03208	-0.01805	-0.01403
	5일	-0.021	-0.13	0.00484	-0.00256	-0.00227
	6일 이상	-0.039	-0.19	0.00901	-0.00483	-0.00418
개인소득	0.053**	2.66	-0.01210	0.00655	0.00555	
학력 (ref.고졸 이하)	대학교 재학	0.008	0.03	-0.00177	0.00097	0.00080
	대학교 졸업 이상	0.019	0.12	-0.00437	0.00238	0.00199
결혼 여부(기혼=1)	-0.199	-1.23	0.04555	-0.02464	-0.02092	

Variable	Coef.	z	Marginal effect			
			하위집단	중위집단	상위집단	
맞벌이 여부(예=1)	0.179	1.26	-0.04056	0.02112	0.01944	
자가용 소유 여부 (소유=1)	-0.024	-0.22	0.00567	-0.00306	-0.00262	
주관적 건강 상태	0.071	1.23	-0.01622	0.00878	0.00744	
여가 외출 동반인 (ref.혼자)	연인	0.313*	2.12	-0.07259	0.03977	0.03282
	지인	0.201	1.45	-0.04743	0.02748	0.01995
	가족	0.044	0.30	-0.01063	0.00658	0.00405
	기타	0.040	0.06	-0.00976	0.00605	0.00371
Model Statistics	LR chi ² (22)	584.52				
	Prob > chi	0.000				
	Pseudo-R ²	0.3221				
	N	1,044				

자료(설명): *** p<0.001, ** p<0.01, * p<0.05

V. 결론

상권 간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상권이 지속적으로 생존하는 데 있어 상권 방문객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지속 가능한 상권 운영을 위해서는 상권 방문객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상권의 핵심적 소비자인 혁신성이 높은 방문객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상권 방문객들의 혁신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혁신성은 소비자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구매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상권 방문객들에게 적용하여, 혁신성 수준에 따라 방문객을 3가지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방문객의 혁신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상권 방문객들의 혁신성에 SNS 사

용 특성과 장소 선택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SNS 사용 특성 중에서는 SNS 사용 개수, SNS를 활용하여 상업시설을 방문한 빈도가 증가할수록 방문객의 혁신성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SNS를 정보탐색 목적, 자기표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들일수록 혁신성이 증가하였다. 장소특성 중에서는 장소의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장소의 유행 정도, 장소의 특색을 중요시하는 응답자일수록 혁신성이 증가하였다. 개인 및 가구 특성에서는 여가 동반인, 소득만이 혁신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상권 소비자에 대한 이해와 지속 가능한 상권 관리에 필요한 방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상권 방문객들의 특성과 소비 트렌드를 파악함으로써, 상권 운영자들은 더욱 효과적인 상권 운영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지속 가능한 상권을 유지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역 개발자, 도시 계획가, 상권 운영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상권 방문객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방문객의 세분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분석 결과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방문객 혁신성 수준이 달라졌으며, 이것은 다양한 개인의 특성에 따라 각 상권의 핵심적인 소비자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상권은 해당 상권의 주요 소비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이들에 맞는 운영 전략을 세워야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 결과는 상권 입지적 특성의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분석 결과, 혁신성이 높은 방문객들은 평소 SNS의 활용도가 높았으며, 혁신성이 높은 방문객들의 장소 선택에 SNS가 미치는 영향이 큰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혁신성이 높은 방문객들은 SNS를 사용하여 먼 거리를 이동하여 다양한 상권을 방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혁신성이 높은 방문객들이 상권을 방문한 후, SNS에 공유한 상권 관련 정보는 일반 방문객들의 상권 방문으로 이어진다. 상권 방문객들의 이러한 방문 형태는 최근 나타나는 상권들이 상권의 접근성과 무관하게 다양한 입지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Kim et al., 2021).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SNS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SNS는 사람들이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상권 방문객들의 관심사나 행동양식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혁신성이 높은 상권 방문객일수록 상업지역의 이용이 SNS 사용과 관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혁신성이 높은 상권 방문객들이 생성하는 상권의 정보가 SNS를 통해 확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본 연구의 결과는 SNS를 통해 상권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상권 방문객의 상업지역 이용 특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SNS 속 도시민들의 일상과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상업지역의 특성과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혁신성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상권 방문객의 특성을 파악하고,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상권 운영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전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방문객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이 분석에 포함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방문객의 혁신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SNS 사용 특성, 장소특성, 그리고 개인 및 가구 특성 관련 지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방문객의 특성을 더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한다면, 혁신적인 상권 방문객에 대한 특성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후 진행될 연구들에서는

방문객들의 혁신성을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혁신성 척도의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상권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경신원·정규리, 2019. 「이태원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서울도시연구 20(2): 1-17.
- 김동준·이창호·이승일, 2019. 「서울시 발달상권과 골목상권의 일반음식점 생존 특성 연구», 국토계획 54(5): 76-90.
- 김미영·김지희, 2018. 「인스타그램(Instagram)을 통해 본 과시적 자기표현 공간으로서 서울 고급호텔», 서울도시연구 19(1): 95-113.
- 김영서·홍세희, 2021. 「학교 밖 청소년의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여가학연구 19(1): 23-49.
- 김찬영·백현·김용진·김진화, 2014.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소비자 쇼핑매체 선택의 적소분석 연구», e-비즈니스연구 15(4): 103-125.
- 남윤미, 2017. 「국내 자영업의 폐업을 결정요인 분석», BOK 경제연구 제2017-5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 노화봉·정남기, 2016. 「한국과 독일 그리고 일본의 폐업 자영업자 정책비교 분석», 질서경제저널 19(1): 69-84.
- 박강현·하성규, 2022. 「청소년의 여가참여 빈도에 따른 활동 참여 유형과 유형별 주관적복지감(Subjective well-being)과 행복감의 차이 분석: 잠재프로파일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중심으로», 대한작업치료학회지 30(2): 1-15.
- 박진백·김민섭, 2022. 「코로나19 발생 전후 상권 생존을 변화 분석: 서울 강남구와 대구 수성구를 중심으로», 문화기술의 융합 8(6): 121-126.
- 오세진·장원호, 2022. 「소셜미디어를 통해 본 서울시 핫 플레이스 카페의 공간소비 양상 분석: 인스타그램 내 카페 관련 게시물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 26: 177-210.
- 유민태·박태원, 2020.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방문소비자 유형화와 계층별 장소 선택 특성 비교분석», 도시부동산연구 11(2): 115-141.
- 윤미현·김영신, 2007. 「대형할인점 이용 소비자의 쇼핑동기에 따른 쇼핑결과», 소비문화연구 10(2): 171-195.
- 이민주·박민지, 2022. 「서울 청년의 행복격차: 잠재프로파일분석의 적용», 도시연구 21: 227-271.
- 이선영·한상진·정연식, 2020. 「순서형 프로빗모형을 이용한 강우 시 고속도로 교통사고 심각도 분석», 교통연구 27(1): 1-11.

- 이슬기·성현곤, 2017. 「ICTs의 일상적 활용이 방문상권을 다양화하고 집으로부터 그 거리를 증가시키는가?」, *국토계획* 52(3): 171-184.
- 이애리·이주원, 2018. 「소셜 빅 데이터를 이용한 상권 확장 트렌드 및 소비 트렌드 분석」, *e-비즈니스연구* 19(6): 401-413.
- 이영선·고순화, 2014. 「온/오프라인 브라우징에 따른 소비자 집단의 쇼핑성향과 구매행동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8(3): 321-333.
- 이욱·엄서호, 2017. 「관광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써 재현배우의 유산관광지 체험 속성과 체험만족, 태도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관광학회 관광학연구* 42(6): 43-62.
- 임수명·김동준·이승일, 2020. 「서울시 골목상권 특성이 일반음식점의 성장단계별 생존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집적경제의 매개효과 검증」, *부동산학연구* 26(3): 45-62.
- 임유선·김미숙, 2013. 「쇼핑성향에 따른 서울 패션상권의 선호요인과 상권 이용도」, *복식문화연구* 21(2): 167-182.
- 장현미·김은미·이준웅, 2012. 「블로그에서 자기표현적 글쓰기와 읽기 선호도가 대인적 및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6(2): 48-71.
- 정동규·윤희연, 2017. 「발달상권과 골목상권에 위치한 음식점의 생존과 폐업 비교」,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3(3): 57-68.
- 정의석·김병석·황조혜, 2020.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핫플레이스 이미지 연구: 서울특별시 지역별 맛집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44(6): 9-31.
- 조휘형, 2022. 「코로나19 팬데믹이 온라인쇼핑 상품군 거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컨설팅연구* 22(2): 243-254.
- 최막중·이재우, 1999. 「비주거인구 및 역세권 인구에 의한 상권 점유 규모와 수요특성」, *국토계획* 34(1): 51-64.
- 한정훈, 2010. 「삼청동 소비공간의 형성과 도시경험」, *도시연구* 4: 133-183.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DOI: [https://doi.org/10.1016/0749-5978\(91\)90020-T](https://doi.org/10.1016/0749-5978(91)90020-T)
- Becker, William E., and Kennedy, Peter E. 1992. "A graphical exposition of the ordered probit." *Econometric theory* 8(1): 127-131. DOI: <https://doi.org/10.1017/S0266466600010781>

- Berlin, K. S., Williams, N. A., and Parra, G. R. 2014.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mixture modeling (part 1): overview and cross-sectional latent class and latent profile analyse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9(2): 174-187. DOI: <https://doi.org/10.1093/jpepsy/jst084>
- Boyd, Danah M., and Ellison, Nicole B. 2007. "Social network sites: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3(1): 210-230. DOI: <https://doi.org/10.1111/j.1083-6101.2007.00393.x>
- Buss, A. H. 1989. "Personality as traits." *American psychologist* 44(11): 1378-1388. DOI: <https://doi.org/10.1037/0003-066X.44.11.1378>
- Citrin, A. V., Sprott, D. E., Silverman, S. N., and Stem, D. E. Jr. 2000. "Adoption of Internet shopping: the role of consumer innovativeness." *Industrial Management & Data Systems* 100(7): 294-300. DOI: <https://doi.org/10.1108/02635570010304806>
- Collins, L. M., Fidler, P. L., Wugalter, S. E., and Long, J. D. 1993. "Goodness-of-fit testing for latent class model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8(3): 375-389. DOI: https://doi.org/10.1207/s15327906mbr2803_4
- Foxall, G. R., and Goldsmith, R. E. 1988. "Personality and consumer research: Another look." *Journal of the Market Research Society* 30(2): 111-125.
- Gatignon, H., and Robertson, T. S. 1985. "A propositional inventory for new diffusion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1(4): 849-867. DOI: <https://doi.org/10.1086/209021>
- Gibson, Wilfred A. 1959. "Three multivariate models: Factor analysis, latent structure analysis, and latent profile analysis." *Psychometrika* 24(3): 229-252. DOI: <https://doi.org/10.1007/BF02289845>
- Goldsmith, R. E., Freiden, J. B., and Eastman, J. K. 1995. "The generality/specificity issue in consumer innovativeness research." *Technovation* 15(10): 601-612. DOI: [https://doi.org/10.1016/0166-4972\(95\)99328-D](https://doi.org/10.1016/0166-4972(95)99328-D)
- Henry, K. L., and Muthén, B. 2010. "Multilevel latent class analysis: An application of adolescent smoking typologies with individual and contextual predictor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7(2): 193-215. DOI: <https://doi.org/10.1080/10705511003659342>

- Hurt, H. Y., Joseph, K., and Cook, C. D. 1977. "Scales for the measurement of innovativenes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4(1): 58-65. DOI: <https://doi.org/10.1111/j.1468-2958.1977.tb00597.x>
- Kim, D., Seo, D., and Kwon, Y. 2021. "Novel trends in SNS customers in food and beverage patronage: An empirical study of metropolitan cities in South Korea." *Land Use Policy* 101: 105214. DOI: <https://doi.org/10.1016/j.landusepol.2020.105214>
- Kim, S. E., Lee, K. Y., Shin, S. I., and Yang, S. B. 2017. "Effects of tourism information quality in social media on destination image formation: The case of Sina Weibo." *Information & management* 54(6): 687-702. DOI: <https://doi.org/10.1016/j.im.2017.02.009>
- Kirton, M. 1976. "Adaptors and innovators: A description and measur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1(5): 622-629. DOI: <https://doi.org/10.1037/0021-9010.61.5.622>
- Lastovicka, J. L., and Joachimsthaler, E. A. 1988. "Improving the detection of personality-behavior relationships in consumer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4(4): 583-587. DOI: <https://doi.org/10.1086/209138>
- Leavitt, C., and Walton, J. 1975. "Development of a Scale For Innovativenes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2(1): 545-554.
- Lee, Y., Circella, G., Mokhtariana, P. L., and Guhathakurta, S. 2019. "Heterogeneous residential preferences among millennials and members of generation X in California: A latent-class approach."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D: Transport and Environment* 76: 289-304. DOI: <https://doi.org/10.1016/j.trd.2019.08.001>
- Midgley, D. F., and Dowling, G. R. 1978. "Innovativeness: The concept and its measurement."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4): 229-242. DOI: <https://doi.org/10.1086/208701>
- Nylund, K. L., Asparouhov, T., and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4): 535-569. DOI: <https://doi.org/10.1080/10705510701575396>

- Pardeshi, V. H., and Khanna, V. 2021. "Factors influencing online apparel shopping orientation among women in Mumbai." *Journal of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28: 1-12. DOI: <https://doi.org/10.1086/208701>
- Rajamma, R. K., Paswan, A. K., and Ganesh, G. 2007. "Services purchased at brick and mortar versus online stores, and shopping motivation." *Journal of Services Marketing* 21(3): 200-212. DOI: <https://doi.org/10.1108/08876040710746552>
- Raju, P. S. 1980. "Optimum stimulation level: Its relationship to personality, demographics, and exploratory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7(3): 272-282. DOI: <https://doi.org/10.1086/208815>
- Roehrich, G. 1994. "Innovativités hédoniste et sociale: proposition d'une échelle de mesure." *Recherche et Applications en Marketing (French Edition)* 9(2): 19-42. DOI: <https://doi.org/10.1177/076737019400900202>
- _____. 2004. "Consumer innovativeness: Concepts and measurement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7(6): 671-677. DOI: [https://doi.org/10.1016/S0148-2963\(02\)00311-9](https://doi.org/10.1016/S0148-2963(02)00311-9)
- Ryu, S., Kim, S., Cho, M. J., and Lee, M. H. 2022. "Defining the "Hip Factor": Analysis of Location Properties, SNS Usage, and Other "Hip-Place" Characteristics That Influence Visitor Satisfaction." *Sustainability* 14(10): 6026. DOI: <https://doi.org/10.3390/su14106026>
- Shen, H., Namdarpour, F., and Lin, J. 2022. "Investigation of online grocery shopping and delivery preference before, during, and after COVID-19." *Transportation Research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s* 14: 100580. DOI: <https://doi.org/10.1016/j.trip.2022.100580>
- Siegel, L. A., and Wang, D. 2019. "Keeping up with the joneses: emergence of travel as a form of social comparison among millennials."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36(2): 159-175. DOI: <https://doi.org/10.1080/10548408.2018.1499579>
- Steenkamp, J. B., Hofstede, F., and Wedel, M. 1999. "A Cross-National Investigation into the Individual and National Cultural Antecedents of Consumer Innovativeness." *Journal of Marketing* 63(2): 55-69. DOI: <https://doi.org/10.2307/1251945>

- Taylor, J. W. 1977. "A striking characteristic of innovator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4(1): 104-107. DOI: <https://doi.org/10.2307/3151066>
- Tein, JY., Coxe, S., and Cham, H. 2013. "Statistical power to detect the correct number of classes in latent profile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0(4): 640-657. DOI: <https://doi.org/10.1080/10705511.2013.824781>
- Vandecasteele, B., and Geuens, M. 2010. "Motivated consumer innovativeness: Concept, measurement, and valid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Marketing* 27(4): 308-318. DOI: <https://doi.org/10.1016/j.ijresmar.2010.08.004>

국 문 초 록

상권 방문객의 혁신성 식별과 혁신성 결정요인 분석연구

류새배(한양대학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박사수료)

김새힘(한양대학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박사후연구원)

김승훈(한양대학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석사과정)

이명훈(한양대학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상권 방문객들을 혁신성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혁신성 수준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방문객을 혁신성 수준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활용해 혁신성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SNS 사용 특성 중 SNS 사용 개수, SNS를 사용해 상업시설을 방문한 빈도, 정보탐색 목적 그리고 자기표현 목적이 혁신성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장소특성 중에서는 품질, 유행, 특색이 혁신성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개인 및 가구 특성 중에서는 응답자의 소득, 여가동반인만 혁신성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SNS 사용 특성, 장소 특성, 개인 및 가구 특성을 혁신성 영향요인으로 고려하였으며,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해 추가 독립 변수를 고려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상권 방문객, 혁신성, SNS, 순서형 프로빗 모형, 잠재 프로파일 분석

Abstract

Analysis of Innovativeness Identification and
Determinants of Innovativeness for Commercial
District Visitors

Ryu, Saebae(Ph. D. Candidate, Department of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Hanyang University)

Kim, Saehim(Postdoctoral researcher, Department of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Hanyang University)

Kim, Seunghun(Master Student, Department of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Hanyang University)

Lee, Myeong-hun(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Hanyang University)

In this study, commercial district visitors were grouped based on their level of innovativeness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ir innovativeness were analyzed. A survey of Seoul citizens in their 20s to 50s provided the data for the analysis. Latent profile analysis was used to categorize visitors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ir innovativeness level. Ordered probit models were used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innovativenes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SNS(Social Network Service) use, the number of SNS usages and the frequency of visiting commercial facilities through SNS increased the innovativeness score. Visitors' innovativeness scores also increased when SNS was used to obtain information and for self-expression. Second, among the place characteristics variables, quality of service or products, trendiness, and uniqueness increased the innovativeness score. Third,

among the personal and household characteristics, only two factors significantly increased innovativeness - the respondent's income and type of accompanying person when visiting the commercial facility.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to supplement additional independent variables to describe the attributes of visitors with high innovativeness in commercial districts in greater detail.

Key words: Commercial District Visitor, Innovativeness, SNS, Ordered Probit Model, Latent Profile Analysis

기업의 지역이동에 관한 연구:

경기도 화성시의 기업 유출입을 중심으로

김규환*·이덕**·오근상***

김
규
환
·
이
덕
·
오
근
상

- I. 서론
- II. 기업이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 III. 화성시 산업현황 및 구조
 - 1. 화성시 일반 및 산업현황
 - 2. 화성시 산업구조
- IV. 연구방법
 - 1. 자료수집 방법
 - 2. 자료분석 방법
- V. 화성시 기업 유출입 분석
 - 1. 기업 유출입 분석
 - 2. 업종 유출입 분석
- VI. 경영환경 요인에 관한 설문결과
 - 1. 설문개요
 - 2. 설문결과
- VII. 연구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 연구요약
 - 2. 정책적 시사점

*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연구교수, 교신저자(E-mail: therute@korea.ac.kr, Tel: 02-3290-5330)

** 화성산업진흥원 전략기획팀 팀장, 공동저자

*** (前)화성산업진흥원 혁신전략팀 책임, 공동저자

<http://doi.org/10.34165/urbanr.2023.24.345>

투고(접수)일 2023.3.14. 심사(수정)일 2023.3.31. 게재확정일 2023.12.14.

I. 서론

기업의 지역이동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사적 행동으로서, 사업규모 확장, 새로운 사업기회 모색, 사업성과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며(Knoben 2008), 이동으로 인한 비용(cost)보다 편익(benefit)이 더 클 때 발생한다(강동우 2019). 즉, 기업이 지역을 이동하는 이유는 이동으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지역을 이동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공급자와의 네트워크 형성, 기술 및 인적자본의 활용, 비용절감 등의 이점이 더 많기 때문이다(Pellenbarg et al. 2002).

최근 국내에서 나타나는 기업의 지역이동에는 몇 가지 특징이 보인다. 첫째,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같은 지역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 인접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상당히 희박하다고 알려져 있다(이유진·한영숙 2020; 송창현 외 2022). 둘째,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늘고 있는데(김대영 2010), 그중에서도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의 이동이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본격화된 시점부터 이러한 기업의 지역이동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이유진·한영숙 2020). 셋째, 기업의 지역이동은 지역 및 산업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안영수·이승일 2014; 이유진·한영숙 2020; 송창현 외 2022; 최준영·오규식 2012). 이는 첨단기술산업군에 속한 기업이 지역을 이동하는 원인과 전통제조산업군에 속한 기업이 지역을 이동하는 원인이 다를 수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산업정책 맥락에 따라서도 기업이동의 원인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업의 지역이동은 지역의 생산량 증가, 일자리 창출, 지역 내 전후방산업 연계를 통한 승수효과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안영수·이승일 2014; 송창현 외 2022). 이와 더불어 새로운 기업이 유입

되는 지역에서는 신규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단지나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도 있다. 반대로 기업의 유출은 생산성 저하, 일자리 감소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송창현 외 2022). 기업의 유출이 때로는 새로운 산업의 유입으로 대체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지역산업구조가 재정비될 수 있다(이유진·한영숙 2020). 이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때, 기업의 지역이동을 연구하는 것은 지역산업구조의 변화를 이해하고 산업특화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 성장의 드라이브 역할을 하는 산업정책 수립에 있어서 어떤 산업의 기업들이 유입되고 유출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처럼 도시계획 및 지역산업정책 수립에 있어 기업이동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면밀하게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게다가 기존 연구들은 주로 정태적 관점에서 기업 분포를 살펴보고 있으며, 동태적 관점에서 기업이동을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한계점을 감안한다면, 송창현 외(2022)의 연구는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수도권 시군구 지역 간 기업이동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지리적으로 규모가 큰 기초자치단체는 그 내부 지역별로 산업구조의 특징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까지는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정 시군구 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 내 세부지역별로 기업 유출입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산업 및 기업지원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대상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를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화성시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도 기존 전통제조업에서부터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들이 입지하고 있는 도시이다. 화성시는 2015년 맥킨지가 '2025년 세계 7대 부자도시' 중

하나(화성시 4위)로 선정할 만큼 지역내총생산(GRDP) 등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전통제조업이 강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기아의 생산 및 연구시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시설 등이 입지하고 있다. 둘째, 화성시는 수도권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세부지역별로 산업 특성이 차별화된 도시이다. 2022년 말 기준으로 화성시에는 21개의 산업단지와 44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서부 및 남부지역에는 주로 부품·장비 중심의 전통제조업체들이, 동부지역에는 ICT 제조·서비스업체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화성시를 권역별로 구분해 어떤 산업이 유입되고 유출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화성시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특례시를 목표로 지역경제 성장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 성장의 견인 역할을 하는 기업유치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 및 산업정책은 화성시에 중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기업이동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화성시의 일반 및 산업현황을 비롯하여 산업구조를 살펴보았으며, 제4장에서는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을 설명하였다. 제5장에서는 화성시를 크게 세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에서의 기업 및 업종 유출입을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기업 유출입과 경영환경 요인 간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화성시 기업을 대상으로 이동유형 및 입지권역에 따른 경영활동 요인 만족도와 주요 경영활동 요인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I. 기업이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기업이동은 내부적 요인(internal factors), 외부적 요인(external factors), 입지지역 차별성(location factors)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안영수·이승일 2014; 이유진·한영숙 2020; 송창현 외 2022; 최준영·오규식 2012).

내부적 요인에는 산업(업종)유형, 기업규모 및 업력 등이 포함된다. 먼저, 산업유형은 기업이동이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첨단기술산업군에 속한 기업들은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지원 및 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안영수·이승일 2014). 다음으로 기업규모와 업력에 따른 특징을 살펴보면, 규모가 작고 업력이 짧을수록 이동하려는 성향이 크고, 기업규모가 클수록 이동하려는 성향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Brouwer 2004; Brouwer et al. 2004; Stam 2007; Van Dijk and Pellenbarg 2000; Weterings and Knobben 2013). Weterings and Knobben(2013)에 따르면 기업규모 확대에 의해 발생하는 이동에서는 장거리 이동보다 단거리 이동이 더 빈번히 나타날 수 있다. 업력에 따른 이동은 기업 생애주기와 관련이 있는데, 성숙기나 안정기 이전의 기업은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발휘하여 새로운 산업을 모색하거나 조직규모를 확장하며, 연구개발주체 간 네트워크를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즉, 이 시기의 기업들은 정책적 지원과 같은 외부 여건의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성숙기 및 안정기에 진입한 기업보다 더 빈번하게 이동할 수 있다(송창현 외 2022).

외부적 요인으로는 노동시장, 산업구조, 정부지원정책 등이 있다. 먼저, 노동시장과 산업구조로 인한 이동은 주로 산업집적과 이에 따른 노동시장의 외부효과로 설명되는데, 이는 집적에 따른 외부효과가 기업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Holl(2004)의 분석에 따르면 산업집적 비율, 서비스업 비율 등 지역 수준의 산업집적이 기업유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Weterings and Knoben(2013)도 지역의 산업집적, R&D 집약도 등의 요소가 장거리 기업이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Duranton and Puga(2001), Arauzo-Carod and Manjón-Antolín(2012), Hong(2014) 등은 집적의 외부효과에 따른 기업이동의 경우 신생기업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외부적 요인 중 정부지원정책이 기업이동에 미치는 영향은 제도주의로 설명될 수 있다. 제도주의에서는 기업이동을 능동적 행동이 아니라 구조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수동적 행동으로 설명하는데(이유진·한영숙 2020), 이러한 관점에서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둘러싸고 있는 제도적 맥락을 중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과 같은 정책들이 여기에 포함된다(Brouwer et al. 2004; 전경구 2015).

입지지역 차별성에는 교육시설, 교통시설, 편의시설, 임대료 등이 있을 수 있다(안영수·이승일 2014). 박동규 외(2015)는 교육수준, 도로연장, 임대료 등이 제조업체 이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였으며, 최준영·오규식(2012)은 교통, 기반시설, 교육수준이 ICT 기업의 지역 간 이동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홍일영(2008)의 연구에서는 지식교환을 위한 네트워크와 교육수준이 소프트웨어업체의 이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교통, 기반시설, 교육, 임대료, 지식교환 네트워크 등의 지역적 특징이 기업의 지역이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III. 화성시 산업현황 및 구조

1. 화성시 일반 및 산업현황

2020년 말 기준 화성시는 총인구가 88만 명으로 경기도에서 다섯 번째로 인구가 많다(표 1 참조). 그리고 경기도 내 총인구 상위 지역 중에서

총인구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화성시 총인구의 연평균 증가율(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은 7.7%이다.

【표 1】 경기도 총인구 상위 지역

(단위: 천 명,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CAGR
수원시	1,207.0	1,217.0	1,218.8	1,215.0	1,210.2	0.3%
용인시	982.6	996.3	1,026.1	1,052.5	1,067.0	2.1%
고양시	999.1	1,005.1	1,007.0	1,024.6	1,045.5	1.1%
성남시	951.5	944.3	931.4	919.9	922.0	-0.8%
화성시	655.4	708.6	777.3	838.6	880.9	7.7%

자료(설명): 2020년 기준 경기도 내 총인구 상위 5개 지역을 나타냄.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화성시 지역내총생산 수준은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으며, 2016년 52.9조 원에서 2020년 81.9조 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1.5%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표 2 참조). 2019년 그 수준이 약간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화성시 지역내총생산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2】 경기도 지역내총생산 상위 지역

(단위: 조 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CAGR
화성시	52.9	68.1	77.7	74.5	81.9	11.5%
성남시	39.6	41.0	42.3	44.1	46.8	4.3%
용인시	30.8	33.4	30.5	30.2	33.3	2.0%
수원시	31.8	33.9	35.4	36.6	33.0	1.0%
평택시	26.5	30.9	33.8	32.0	31.6	4.5%

자료(설명): 당해년가격을 기준으로 2020년 경기도 내 지역내총생산(GRDP) 상위 5개 지역을 나타냄.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화성시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에서 성남시와 더불어 상위권에 속한다

([표 3] 참조). 2016~2020년을 보더라도 경기도의 다른 지역과 달리 꾸준히 60% 이상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다. 비교 범위를 전국 시군구 지역으로 넓히더라도 화성시는 대체로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중구 등과 재정자립도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을 보인다.

[표 3] 경기도 재정자립도 상위 지역

(단위: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화성시	61.5	64.3	60.1	68.9	66.3
성남시	56.8	58.7	59.2	58.1	60.5
용인시	54.8	58.1	55.5	53.0	50.2
수원시	51.4	51.9	49.3	48.1	45.9
하남시	45.5	45.6	44.1	43.5	45.7

자료(설명): 2020년 기준 경기도 내 재정자립도 상위 5개 지역을 나타냄.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2020년 기준으로 화성시는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사업체수(10.5만 개)가 많은 지역이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체수가 연평균 17.7% 증가하였다([표 4] 참조). 또한, 종사자수 측면에서 화성시는 2018년에 수원시를, 2019년에 성남시를 앞서기 시작하여, 2020년 기준 경기도에서 종사자수가 가장 많다([표 5] 참조).

[표 4] 경기도 사업체수 상위 지역

(단위: 천 개,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CAGR
수원시	70.0	71.9	73.4	74.0	109.3	11.8%
고양시	63.6	66.6	69.3	69.7	107.5	14.0%
화성시	54.7	58.2	62.5	66.8	105.0	17.7%
성남시	64.0	64.2	65.5	66.3	97.5	11.1%
용인시	48.1	49.6	52.7	55.8	95.7	18.7%

자료(설명): 2020년 기준 경기도 내 사업체수 상위 5개 지역을 나타냄.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표 5] 경기도 종사자수 상위 지역

(단위: 천 명,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CAGR
화성시	405.5	430.0	460.4	492.0	549.7	7.9%
성남시	434.1	448.8	462.1	467.6	515.6	4.4%
수원시	411.8	423.6	449.5	438.6	478.0	3.8%
용인시	308.1	314.1	337.5	351.0	408.9	7.3%
고양시	305.9	319.4	332.9	334.8	371.5	5.0%

자료(설명): 2020년 기준 경기도 내 종사자수 상위 5개 지역을 나타냄.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과거 화성시에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닌, 중소기업의 기업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모인 군락 형태의 집적지가 다수 형성되었다. 기업들은 낮은 지가, 넓은 부지 등을 위해 화성시로 이동하였는데, Schmiedeberg(2010)의 혁신클러스터 형성과정처럼, 화성시의 기업집적지들은 ‘공동공간(co-location)’과 ‘군집하기(clustering)’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화성시는 전반적으로 제조업의 특화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서, 산업 잠재력을 갖춘 지역이기도 하다. 화성시 동부의 동탄지역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캠퍼스(반월동)와 함께 ICT 제조업체들이 입지하고 있고, 서부에는 현대자동차·기아 남양연구소(남양읍),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율주행차 전용시험장 K-City(송산면) 등 자동차 연구개발 및 시험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으며, 남부에는 기아 화성공장(우정읍)과 제약단지(향남읍)를 기반으로 하여 자동차부품 및 의약품·화장품 제조업체들이 입지하고 있다(화성산업진흥원 2022). 산업단지의 경우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화성시에는 21개(국가산단 2개, 일반산단 18개, 도시첨단산단 1개)가 이미 조성되어 있거나 현재 조성 중이다.¹⁾ 지식산업센터는 44개(이 중 8개는

1) 남양읍, 양감면, 정남면, 반월동, 화산동, 동탄5동(도시첨단산단), 동탄6동에는 각각 1개 산단이, 우정읍(국가산단 1개 포함), 향남읍, 마도면, 송산면(국가산단 1개 포함),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에는 각각 2개 산단이 있다.

건설 중)가 있는데(경기데이터드림 홈페이지), 이 중에서 3개를 제외한 나머지 지식산업센터들이 모두 동탄에 있다. 이처럼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다수 제조업체의 영세성,²⁾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상대적 부족, 동부 이외의 지역에서의 정주 노동인력 부족과 열악한 교통여건 등은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화성산업진흥원 2022).

「2035년 화성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화성시는 6개 도심을 발전 축으로 두고 있다. 6개 도심은 동탄, 병점, 남양, 송산, 봉담, 향남이며(화성시 2019a), 동탄·병점은 동부권역, 남양·송산은 서부권역, 봉담·향남은 각각 중부 및 남부권역으로 분류된다. 이후 「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에서는 [표 6]과 같이 화성시를 세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동부권역의 발전 방향은 우수한 창업생태계 조성 등을 통한 ‘문화·교육수요 대응 및 고급일자리 창출’, 서부권역은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조성³⁾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남부권역은 지속 가능한 산업 창출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이다(화성시 2019b).

이러한 방향성을 기반으로 두고, 기존 전통제조산업에서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할 목적으로, 화성시는 장기적인 지역산업전략으로서 반도체, 미래차, 제약·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하는 권역별 클러스터(테크노폴)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화성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hipa.hscity.go.kr)’을 기반으로 기업지원을 확대하고 그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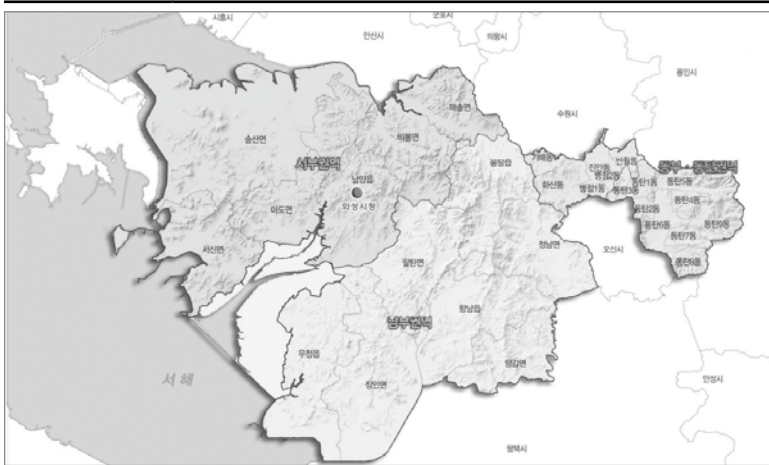
2) 2021년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화성시의 경우 제조업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체수(18,109개사)의 비중이 65.6%이다(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이 비중은 다른 경기도 내의 시군구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5인 미만 사업체수 자체는 가장 많다.

3) 이는 한국수자원공사(사업시행자)가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일원(시화호 남측간석지)에 조성 중인 송산그린시티(사업면적: 55.64km², 사업기간: 2007~2030년)를 염두에 둔 것이다. 송산그린시티에는 주거, 관광·레저, 상업, 산업, 국제테마파크 등이 입지할 예정이며, 전체 사업지구 중에서 남측지구(송산면 삼촌리 일원, 6.59km²)에는 국가산단이 조성되고 있다.

하려 하고 있다. 또한, 현재 관교에서 형성되어 있는 'R&D 남방한계선'(매일경제 2022/4/8)을 남쪽으로 더 내리기 위해, 지식산업센터가 밀집된 동탄지역을 중심으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표 6] 화성시 권역 구분

구 분	권역별 행정구역
동부권역	동탄1-8동, 기배동, 반월동, 병점1-2동, 진안동, 화산동
서부권역	남양읍, 마도면, 매송면, 비봉면, 서신면, 송산면, 새솔동
남부권역	봉담읍, 양감면, 우정읍, 장안면, 향남읍 정남면, 팔탄면



자료(출처): 화성시(2019b)

2. 화성시 산업구조

[표 기은 화성시에서 경기도 대비 및 전국 대비 특화도(LQ: Location Quotient)가 높은 업종을 나타낸 것이다. 화성시는 정보통신, 금융·보험, 물류, 연구개발, 과학기술 등의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특화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특화도가 상당히 높은 업종(경기도 대비 및 전국 대비의 사업체수 LQ와 종사자수 LQ가 모두

2.0 이상)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다. 경기도 내 지역내총생산 상위 8개 지역(2020년 기준)을 대상으로 특화도가 높은 업종들을 비교해보면(표 8 참조), 화성시의 산업구조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종의 특화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7] 화성시 업종별 특화도(LQ)

구 분	사업체수 LQ		종사자수 LQ	
	경기도 대비	전국 대비	경기도 대비	전국 대비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43	1.92	1.28	1.70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87	3.68	1.49	2.79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57	3.71	2.01	2.38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8	3.59	3.09	4.94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6	5.05	2.31	3.69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1	1.60	1.26	1.45
C24. 1차 금속 제조업	2.87	3.73	2.04	1.67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3.09	4.16	2.44	3.37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85	3.87	2.33	5.00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98	2.78	1.48	2.70
C28. 전기장비 제조업	1.60	2.64	1.57	2.18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7	4.66	2.58	4.00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94	3.83	3.92	3.64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85	1.60	3.04	3.50
E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2.09	2.41	1.33	1.60

자료(설명): 2021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통해 도출한 것이며, 경기도 대비 및 전국 대비의 사업체수 LQ와 종사자수 LQ가 모두 1.2 이상인 업종만을 나타내었음.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표 8] 경기도 주요 지역의 특화 업종

구 분	화성	성남	용인	수원	평택	이천	안산	고양
A01. 농업						◎		
C11. 음료 제조업						○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	
C21.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C24. 1차 금속 제조업	○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8. 전기장비 제조업	○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		
E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	
E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			
E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		
J58. 출판업		◎						
J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J63. 정보서비스업		◎						
K65. 보험 및 연금업				○				
L68. 부동산업			○					
M70. 연구개발업		○	○	◎				
M71. 전문 서비스업		○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구 분	화성	성남	용인	수원	평택	이천	안산	고양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정 서비스업				○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				
N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		○
P85. 교육 서비스업			○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자료(설명): 2021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통해 도출한 것이며, '○'은 경기도 대비 및 전국 대비의 사업체수 LQ와 종사자수 LQ가 모두 1.2 이상인 업종을, '◎'은 이 네 가지 LQ가 모두 2.0 이상인 업종을 나타내었음.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IV.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평가데이터(KoDATA)의 기업데이터를 유료로 구독하여 기업 유출입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 화성시에 입지한 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정보 데이터와 기업개요 데이터를 활용했는데, 전자는 데이터수집 날짜,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구분코드, 사업장 주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자는 사업자등록번호, 표준산업분류 코드, 기업형태, 기업규모, 본사 주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의 이동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의 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소와 정보가 부재하거나 잘못 입력된 기업은 자료에서 삭제하였고, 해외 사업장의 경우에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분석기간 동안 하나의 기업(또는 사업장)이 여러 번 이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동한 기업의 수가 아닌 이동 건수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2011~2020년의 기간동안 3번 움직였다면 3번의 이동이 발생한 것

으로 간주하였다. 단, 기존의 기업이 다른 지역에 새로운 사업장을 추가 설립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가 화성시의 지역산업 및 기업지원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화성도시기본계획,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등에서 산업발전 방향성과 관련성이 있는 업종(제조, 정보통신, 지식, 물류, 연구개발 등)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와 거리가 먼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부동산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자료분석 방법

기업의 지역이동은 해당 지역의 측면에서 보면 기업유입이나 기업유출로 분류될 수 있다. 화성시에서 발생하는 기업 유출입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화성시가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기 때문에⁴⁾ 몇 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분석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역 구분을 준용하여 화성시를 동부·서부·남부권역으로 구분하였다. 화성시 외부 지역의 경우에는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제주권⁵⁾ 등의 경제권역으로 구분하였다. 단, 화성시로 유입되거나 화성시에서 유출된 기업의 다수가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으로 다시 세분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화성시 권역(동부, 서부, 남부)과 타권역(화성시 외부) 간의 기업 유출입, 그리고 화성시 내부(화성시 권역 간)에서의 유출입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업 유출입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추가 분석을 수행하였다.

4) 2020년 기준 화성시 면적은 698.18km²로 서울(605.23km²) 대비 15.4% 더 넓다(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5) 경제권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권(강원), 충청권(충남, 충북, 대전, 세종),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대구, 경북),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제주권(제주)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기업데이터 분석 외에도, 기업 유출입과 경영환경 요인 간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화성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화성시 기업의 이동유형(이동 없음, 화성시 내부에서 이동, 화성시 외부에서 유입) 및 입지권역(동부, 서부, 남부)에 따라 경영환경 요인 만족도와 주요 경영환경 요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설문조사의 방법 및 내용과 관련된 내용은 제6장에 기술하였다.

V. 화성시 기업 유출입 분석

1. 기업 유출입 분석

1) 화성시와 타권역 간 기업 유출입 분석

[표 9]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화성시 권역과 타권역(화성시 외부) 간의 기업 유출입 현황이다. 화성시의 기업유입을 보면 대부분 수도권(경기 73.8%, 서울 10.7%, 인천 6.6%)에서의 유입이며, 다음으로 충청에서 4.8%가 유입되었다. 기업유출의 경우 경기 70.4%, 충청 11.2%, 서울 6.2%, 인천 4.5% 순이다. 화성시와 기업 유출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은 경기이다.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과의 기업 유출입에서는 화성시로의 유입이 많이 발생하지만, 충청, 대경, 호남, 강원 등과의 유출입에서는 유입과 유출이 비슷한 수준이다. 즉, 화성시로의 기업 순유입(=유입-유출)은 주로 수도권, 특히 경기에서의 기업유입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9] 화성시 권역과 타권역 간 기업 유출입

(단위: 건수, %)

구 분	권 역	동부권역		서부권역		남부권역		전 체	
		N	%	N	%	N	%	N	%
유 입	서울	200	14.8	80	7.0	196	10.2	476	10.7
	경기	1,008	74.4	867	75.5	1,394	72.3	3,269	73.8
	인천	34	2.5	138	12.0	119	6.2	291	6.6
	강원	5	0.4	6	0.5	14	0.7	25	0.6
	충청	59	4.4	31	2.7	122	6.3	212	4.8
	호남	19	1.4	4	0.3	22	1.1	45	1.0
	대경	12	0.9	14	1.2	31	1.6	57	1.3
	동남	14	1.0	9	0.8	30	1.6	53	1.2
	제주	3	0.2	-	-	1	0.1	4	0.1
	총계	1,354	100.0	1,149	100.0	1,929	100.0	4,432	100.0
유 출	서울	43	7.1	18	5.5	50	5.8	111	6.2
	경기	472	78.0	213	65.1	580	67.1	1,265	70.4
	인천	11	1.8	33	10.1	37	4.3	81	4.5
	강원	7	1.2	3	0.9	10	1.2	20	1.1
	충청	45	7.4	39	11.9	118	13.7	202	11.2
	호남	7	1.2	6	1.8	25	2.9	38	2.1
	대경	15	2.5	10	3.1	27	3.1	52	2.9
	동남	5	0.8	3	0.9	15	1.7	23	1.3
	제주	-	-	2	0.6	2	0.2	4	0.2
	총계	605	100.0	327	100.0	864	100.0	1,796	100.0

자료(설명): '경기'는 화성시를 제외한 경기지역임.

자료(출처): 한국평가데이터(KoDATA)

화성시 권역별로 보면, 동부와 남부권역에 비해 서부권역은 기업 유출입이 약간 저조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기업유입 측면을 살펴보면, 동부 및 남부권역으로의 유입은 경기(동부 74.4%, 남부 72.3%), 서울(동부 14.8%, 남부 10.2%), 충청(동부 4.4%, 남부 6.3%) 순인 반면, 서부권역으로의 유입은 경기(75.5%), 인천(12.0%), 서울(7.0%) 순이다. 서부권역이 다른 권역에 비해 기업 유출입 수준이 낮은 것은, 1~2인의 고령가구의 비중

이 높고 정주여건이 양호하지 못하여 구인이 어렵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다(화성산업진흥원 2022, 243). 또한, 서부권역은 다른 권역과 달리 충청보다 인천에서의 유입이 더 많은데, 이는 인천과 상대적으로 인접해 있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기업유출 측면의 경우, 동부 및 남부권역은 경기(동부 78.0%, 남부 67.1%), 서울(동부 7.1%, 남부 5.8%), 충청(동부 7.4%, 남부 13.7%) 순이며, 서부권역은 경기(65.1%), 충청(11.9%), 인천(10.1%) 순이다. 서부권역에서의 유출입을 종합해 볼 때, 경기와의 유출입을 제외한다면, 인천→화성시 서부권역→충청·인천으로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표 10]을 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화성시의 기업유입 건수는 4,432건, 기업유출 건수는 1,796건으로, 이들 간 비율은 대략 70 대 30이며 권역 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서부권역은 이보다 유입 비율이 더 높고 유출 비율이 더 낮다. 순유입의 경우 남부권역이 1,065건으로 다른 권역에 비해 많은 편이다. 남부권역에 속해 있는 정남면, 팔탄면, 향남읍, 봉담읍 등이 화성시에서 사업체가 가장 많은 지역인 만큼(화성산업진흥원 2022, 42), 높은 수준의 순유입은 이러한 기업집적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0] 화성시 권역별 기업 유출입

(단위: 건수)

구 분	유입(A)	유출(B)	순유입(A-B)	A:B
동부권역	1,354	605	749	69.1:30.9
서부권역	1,149	327	822	77.8:22.2
남부권역	1,929	864	1,065	69.1:30.9
전 체	4,432	1,796	2,636	71.2:28.8

자료(출처): 한국평가데이터(KoDATA)

[표 11]은 시기별 화성시 기업 유출입의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반적으로 유입 및 유출이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화성시 전체의 순유입은 2015년까지 점차 증가하다가 그 이후 소폭 감소하였고, 2020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서부 및 남부권역의 2020년 순유입은 2015~2017년 수준을 회복한 정도이지만, 동부권역의 경우는 2015~2017년 수준보다 약 2배 정도 큰 규모이다. 즉, 동부권역은 2010년대 후반기에 기업 순유입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11] 화성시 권역별 기업 유출입 추이

(단위: 건수)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 체	
전 체	유입	83	215	266	305	418	517	569	590	672	797	4,432
	유출	15	42	43	54	82	226	259	295	404	376	1,796
	순유입	68	173	223	251	336	291	310	295	268	421	2,636
동 부	유입	19	43	66	81	111	105	136	214	261	318	1,354
	유출	5	14	11	10	27	60	73	93	158	154	605
	순유입	14	29	55	71	84	45	63	121	103	164	749
서 부	유입	21	54	60	79	116	150	175	160	161	173	1,149
	유출	1	8	11	11	10	43	55	48	79	61	327
	순유입	20	46	49	68	106	107	120	112	82	112	822
남 부	유입	43	118	140	145	191	262	258	216	250	306	1,929
	유출	9	20	21	33	45	123	131	154	167	161	864
	순유입	34	98	119	112	146	139	127	62	83	145	1,065

자료(출처): 한국평가데이터(KoDATA)

[표 12]는 시기별 화성시 권역과 타권역 간 기업 유출입의 변화를 보여 준다. 경기에서의 유입은 서부 및 남부권역에서 2015~2017년 증가하고 그 이후 소폭 감소하였으나, 동부권역에서는 2018년부터 급증하였다. 그리고 2017년까지는 남부권역에서 서울에서의 유입이 가장 많았으나, 그 이후에는 동부권역에서 가장 많다. 또한, 모든 화성시 권역에서 2016년 이후 유

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경기로의 유출이 두드러진다.

[표 12] 화성시 권역과 타권역 간 기업 유출입 추이

(단위: 건수)

구 분	연도	유 입									유 출								
		서 울	경 기	인 천	강 원	충 청	호 남	대 경	동 남	제 주	서 울	경 기	인 천	강 원	충 청	호 남	대 경	동 남	제 주
동 부	2011	2	15	-	-	1	-	-	1	-	-	4	-	-	1	-	-	-	-
	2012	10	30	1	-	-	1	-	1	-	-	12	-	-	-	1	1	-	-
	2013	12	47	2	-	2	1	1	-	1	-	9	-	1	-	-	1	-	-
	2014	6	70	3	-	2	-	-	-	-	1	8	-	-	-	-	-	1	-
	2015	4	85	6	1	10	2	2	1	-	1	20	-	2	3	-	1	-	-
	2016	11	82	1	-	6	2	-	2	1	2	48	-	1	8	-	-	1	-
	2017	23	103	3	-	3	3	-	1	-	3	56	2	1	8	2	1	-	-
	2018	27	174	1	-	10	-	1	1	-	9	78	1	-	2	1	2	-	-
	2019	43	187	7	2	12	4	2	3	1	13	120	7	1	11	2	3	1	-
	2020	62	215	10	2	13	6	6	4	-	14	117	1	1	12	1	6	2	-
서 부	2011	2	16	2	-	1	-	-	-	-	1	-	-	-	-	-	-	-	
	2012	7	34	9	-	4	-	-	-	-	6	-	1	-	-	1	-	-	
	2013	3	52	1	-	-	-	4	-	-	2	8	-	-	-	1	-	-	-
	2014	4	57	12	2	1	1	1	1	-	-	10	-	-	1	-	-	-	-
	2015	6	86	17	1	-	1	4	1	-	1	9	-	-	-	-	-	-	-
	2016	11	109	19	2	7	1	-	1	-	-	30	6	1	3	1	-	1	1
	2017	8	138	21	-	4	-	2	2	-	2	33	6	-	9	1	4	-	-
	2018	8	123	21	-	4	-	1	3	-	5	31	5	-	3	2	1	1	-
	2019	12	117	26	1	4	-	-	1	-	7	50	11	1	7	1	1	-	1
	2020	19	135	10	-	6	1	2	-	-	1	35	5	-	16	-	3	1	-
남 부	2011	7	31	-	-	3	-	1	1	-	-	5	-	-	2	1	-	-	1
	2012	14	90	4	-	4	3	1	2	-	4	11	-	-	2	1	2	-	-
	2013	15	97	12	-	7	2	7	-	-	3	13	1	-	2	1	1	-	-
	2014	16	99	14	2	6	1	2	5	-	1	23	2	2	4	1	-	-	-
	2015	21	138	16	1	11	-	-	4	-	4	27	1	-	7	2	2	2	-
	2016	27	182	22	1	20	2	4	4	-	7	82	7	2	14	5	5	1	-
	2017	25	187	17	4	14	3	2	6	-	4	90	5	-	22	5	3	2	-
	2018	18	160	10	2	17	1	4	3	1	9	112	5	3	15	2	6	1	1
	2019	20	187	15	1	17	4	4	2	-	11	110	9	1	24	2	5	5	-
	2020	33	223	9	3	23	6	6	3	-	7	107	7	2	26	5	3	4	-

자료(설명): '경기'는 화성시를 제외한 경기지역임.

자료(출처): 한국평가데이터(KoDATA)

2010년대 후반에 늘어난 유출 기업이 경기 내의 어떤 시군구 지역으로 이동했는지는 권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동부권역에서는 수원·용인, 서부권역에서는 시흥·안산, 남부권역에서는 평택·수원으로의 유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대 중반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면서 ‘비수도권 제조공장, 수도권 연구·개발’의 공간구분이 모호하게 되었는데(경향신문 2021/10/6), 이러한 맥락에서 규모가 큰 제조업체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다수의 소규모 업체도 이러한 흐름을 고려하여 이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화성시 권역 간 기업 유출입 분석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화성시 권역 간 기업 유출입(화성시 내부 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표 13]과 같다. 화성시 내부에서 발생한 3,238건의 기업이동 중에서, 기업이 원래 입지하고 있었던 권역 안에서 이동한 경우는 62.2%(2,106건=611건+286건+1,209건)이다. 다른 권역보다 남부권역 내에서 발생한 기업이동이 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13] 화성시 권역 간 기업 유출입

(단위: 건수)

유출 \ 유입	동부권역	서부권역	남부권역	전 체
동부권역	611	27	339	977
서부권역	28	286	291	605
남부권역	206	241	1,209	1,656
전 체	845	554	1,839	3,238

자료(출처): 한국평가데이터(KoDATA)

동일 권역 내에서의 이동을 제외할 경우, 동부 및 서부권역에서는 남부권역으로의 기업이동이 많은 편이다.⁶⁾ 그리고 남부권역에서 동부 및 서

6) 동부권역에서 서부 및 남부권역으로의 이동 건수 간 비율은 7 대 93이며, 서부권역에서 동부 및 남부권역으로의 이동 건수 간 비율은 9 대 91이다.

부권역으로의 이동 규모(447건=206건+241건)는 남부권역 내의 이동 규모(1,209건)의 37.0%이다. 즉, 화성시 내부에서는 남부권역으로의 기업이동(남부권역 내의 이동을 포함)이 절대적으로 많으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 간의 이동 규모는 작다.

[표 14]는 시기별 화성시 권역 간 기업 유출입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동일 권역 내에서의 기업이동은 세 권역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화성시 내부에서의 기업이동은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권역으로의 기업이동을 보면 동부권역은 점점 기업 순유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달리, 서부권역은 순유출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남부권역은 일정 수준의 순유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표 14] 화성시 권역 간 기업 유출입 추이

(단위: 건수)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 체
동 부	내부	4	38	40	41	77	47	69	88	103	104	611
	유입	1	6	13	25	21	26	24	34	39	45	234
	유출	6	29	13	22	25	43	48	46	65	69	366
	순유입	-5	-23	-	3	-4	-17	-24	-12	-26	-24	-132
서 부	내부	4	16	22	22	20	34	36	28	51	53	286
	유입	6	9	7	15	21	37	46	38	44	45	268
	유출	4	17	18	27	35	39	41	44	49	45	319
	순유입	2	-8	-11	-12	-14	-2	5	-6	-5	-	-51
남 부	내부	22	70	59	85	111	152	178	170	148	214	1,209
	유입	9	45	27	46	56	76	78	82	104	107	630
	유출	6	14	16	37	38	57	59	64	73	83	447
	순유입	3	31	11	9	18	19	19	18	31	24	183

자료(출처): 한국평가데이터(KoDATA)

2. 업종 유출입 분석

1) 화성시 권역과 타권역 간 업종 유출입 분석

[표 15]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화성시 권역과 타권역(화성시 외부) 간 유출입이 많은 상위 10개 업종을 나타낸 것이다. 타권역에서 화성시 동부권역으로 유입 건수가 많은 업종은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J58(출판업)⁷⁾이며, 서부 및 남부권역에서는 C29,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의 유입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C29의 유입이 높지만, 동부권역은 C26 및 J58(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와 같은 ICT 제조·서비스업종의 유입도 많다. 반면, 동부권역에서 유출이 높은 업종은 C29, C26, C28(전기장비 제조업)이며, 서부권역은 C29, C25, C22, 남부권역은 C29, C25, C28이다. 요컨대, 서부 및 남부권역은 부품·장비 제조업종이 주로 유입되는 반면, 동부권역은 ICT 제조·서비스업종의 유입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이러한 업종 유출입 현황은 화성시 권역별 산업현황의 특징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5] 화성시 권역과 타권역 간 업종 유출입

(단위: 건수)

유 입								유 출							
동부권역		서부권역		남부권역		전 체		동부권역		서부권역		남부권역		전 체	
KSIC	N	KSIC	N	KSIC	N	KSIC	N	KSIC	N	KSIC	N	KSIC	N	KSIC	N
C29	232	C29	309	C29	414	C29	955	C29	138	C29	76	C29	191	C29	405
C26	146	C25	185	C25	223	C25	432	C26	68	C25	35	C25	89	C25	154
J58	103	C22	68	C22	171	C26	336	C28	36	C22	31	C28	66	C26	139
M72	94	C20	67	C26	147	C28	271	C27	35	C28	20	C20	63	C28	122
C28	87	C28	61	C28	123	C22	266	C25	30	C30	18	C26	59	C20	95

7) 화성시에서 J58(출판업) 유출입의 대부분(85% 이상)은 J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다.

유 입								유 출							
동부권역		서부권역		남부권역		전 체		동부권역		서부권역		남부권역		전 체	
KSIC	N	KSIC	N	KSIC	N	KSIC	N	KSIC	N	KSIC	N	KSIC	N	KSIC	N
C27	82	C30	61	C20	107	C20	213	J58	30	C27	15	C22	48	C22	88
M71	57	C24	52	C24	72	C27	175	M72	26	C20	14	C30	40	C27	77
N75	52	C26	43	C30	71	C30	143	M71	20	C26	12	C24	32	C30	67
C20	39	C17	35	C27	60	M72	142	C20	18	C10	9	C27	27	M72	46
H49	35	C27	33	C10	55	C24	131	N74	16	M72	9	C10	22	C24	45

자료(설명): 권역별로 유입 또는 유출이 많은 상위 10개 업종을 나타냄.

자료(출처): 한국평가데이터(KoDATA)

[표 16]은 시기별 화성시 주요 업종의 순유입 변화를 나타낸다(유입 및 유출 변화는 [부록 표 1] 참조). 먼저, C29와 C25의 경우 2010년대 중반까지 순유입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⁸⁾ J(정보통신업) 업종은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순유입이 증가하였다. 특히 J58은 상대적으로 순유입의 증가세가 크며, J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및 J63(정보서비스업)은 2016~2017년부터 순유입이 조금씩 늘고 있다.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업종 역시 2010년대 후반부터 순유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M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는 2018년에, M71(전문 서비스업)은 2019년에 큰 증가폭을 보였다.

[표 16] 화성시 주요 업종의 순유입 추이

(단위: 건수)

구분	C20	C22	C25	C26	C28	C29	J58	J62	J63	M70	M71	M72
2011	2	4	11	3	6	16	1	-	-	-	1	-
2012	8	12	20	18	10	25	4	-	-	2	3	-
2013	6	22	23	10	21	51	-	1	-	1	1	7
2014	13	16	23	22	11	65	3	1	-	-	1	10

8) 단, [부록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유입 및 유출 자체는 대체로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구분	C20	C22	C25	C26	C28	C29	J58	J62	J63	M70	M71	M72
2015	13	17	41	31	22	85	3	2	2	4	2	8
2016	9	17	45	15	25	69	12	-2	-	8	2	7
2017	17	15	43	26	7	77	16	4	-1	2	-1	6
2018	18	22	26	32	8	47	13	6	5	3	2	24
2019	14	25	9	18	9	68	21	2	3	2	8	12
2020	18	28	37	22	30	47	17	3	2	3	28	22
전체	118	178	278	197	149	550	90	17	11	25	47	96

자료(설명): 업종 유출입 수준이 높은 '제조업(C)', '정보통신업(J)',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중
에서 건수가 많은 업종(중분류 기준)을 선별하였음.

자료(출처): 한국평가데이터(KoDATA)

화성시 동부권역에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와 다수의 지식산업센터가 입지하고 있는데, 위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ICT 제조·서비스업체들이 이러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동부권역에 점차 밀집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또 다른 특징은, 화성시로 유입되는 J 및 M 업종은 C(제조업) 업종과 비교했을 때 경기에서보다 서울에서 오는 비중이 더 높다는 것이다.⁹⁾ 특히, 서울로부터 이러한 업종의 유입은 2016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다.¹⁰⁾

2) 화성시 권역 간 업종 유출입 분석

[표 17]은 화성시 권역 간 유출입(화성시 내부 이동)이 많은 상위 10개 업종을 나타낸 것이다. 화성시 권역 간 업종 유출입의 경우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이동 건수가 가장 많다. 그 외에, 동부권역은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순으로 유출입이 많고, 서부권역은 C25, C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0(화학물

9) 2011년에서 2020년까지 화성시로 유입된 C 업종 가운데 서울에서 유입된 경우는 7.7%인 반면, J 및 M 업종 가운데 서울에서 유입된 경우는 각각 35.4%, 21.5%를 차지한다.

10) 서울에서 화성시로의 J 및 M 업종 유입의 경우 2011~2015년은 연간 2~3건 정도였으나, 2016~2018년은 연간 9~17건, 2019~2020년은 연간 33~44건이다.

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순으로, 남부권역은 C25, C22, C26 순으로 유출입이 많다. 이러한 현황은 앞서 살펴본 타권역(화성시 외부)과의 업종 유출입 현황과 유사하다.

다만, J58(출판업)의 경우 화성시 동부권역과 타권역 간 유출입 순위에서는 상당히 상위에 있으나, 화성시 권역 간 유출입에서는 그리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화성시 내부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과 같은 업종의 이동이 많지 않음을 의미한다. 결국, 화성시 동부권역에서는 주로 화성시 외부로부터 ICT 서비스업종이 유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화성시 권역 간 업종 유출입으로 인한 권역별 순유입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18]과 같다(유입 및 유출 변화는 [부록 표 2] 참조). 동부권역은 C25, C29 등의 순유출이 점차 증가하고 M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순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달리, 서부권역은 2016년부터 C29의 순유입이, 남부권역은 2017년부터 C25의 순유입이 증가하였다. 화성시 내부의 업종 유출입의 경우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부품·장비 제조업종은 동부권역에서 주로 남부권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7] 화성시 권역 간 업종 유출입

(단위: 건수)

동부 → 동부		동부 → 서부		동부 → 남부	
KSIC	N	KSIC	N	KSIC	N
C29	190	C29	5	C29	111
C26	83	C17	2	C25	50
C27	33	C22	2	C26	27
M72	29	C25	2	C22	23
C25	24	C26	2	C27	22
C28	23	C28	2	C28	20
N75	21	H49	2	C33	10
C22	18	N74	2	C20	8
J58	18	C16	1	C24	8
M71	18	C18	1	C10	7
서부 → 동부		서부 → 서부		서부 → 남부	
KSIC	N	KSIC	N	KSIC	N
M72	6	C29	60	C29	56
C28	4	C25	56	C25	49
H49	2	C20	25	C22	32
N74	2	C22	21	C24	18
A01	1	C26	13	C20	16
A02	1	C28	13	C30	15
C10	1	C30	13	C28	12
C16	1	C17	10	C33	10
C17	1	C24	10	C26	8
C23	1	E38	9	C27	8
남부 → 동부		남부 → 서부		남부 → 남부	
KSIC	N	KSIC	N	KSIC	N
C29	64	C29	75	C29	317
C26	24	C25	31	C25	208
C28	20	C22	22	C22	143
C25	14	C28	16	C26	69
C27	11	C20	15	C28	67
M72	10	C30	14	C20	65
C33	7	C26	12	C30	58
C22	6	C24	9	C24	39
H49	6	C17	5	C27	35
N75	5	C32	5	C17	26

자료(설명): 범주별로 이동 건수가 많은 상위 10개 업종을 나타냄.

자료(출처): 한국평가데이터(KoDATA)

[표 18] 화성시 권역 간 주요 업종의 순유입 추이

(단위: 건수)

구분	연도	C20	C22	C25	C26	C28	C29	J58	J62	J63	M70	M71	M72
구	2011	-	-1	-	1	-	-4	-	-	-	-	-	-
	2012	1	1	1	-2	-2	-11	-	-	-	-	-	-
	2013	-	-	-2	1	-1	4	-	-	-	-	1	-1
	2014	-2	-2	-2	-	1	2	-	-	-	-	-	-
	2015	-	-3	-	-2	-	-1	-	-	-	-	-	1
	2016	-2	-1	-4	-2	1	-4	-	-	-	-	-1	1
	2017	-1	-3	-6	-	-2	-6	-	-	-	-	-	1
	2018	-	-1	-7	-	-	-8	-	-	-	1	-	6
	2019	1	-5	-11	-	2	-13	1	-	-	1	1	1
	2020	-2	-4	-7	-1	3	-10	-2	-	-	-	-	2
	전체	-5	-19	-38	-5	2	-51	-1	-	-	2	1	11
시	2011	-	-1	-1	-	-	2	-	-	-	-	-	-
	2012	-	-1	-3	-	-1	-1	-1	-	-	-	-	-
	2013	-1	-	-4	-1	2	-2	-	-	-	-	-	-
	2014	3	-2	-3	-	-	-3	-	-	-	-	-	-1
	2015	-	-1	-2	1	2	-6	-	-	-	-	-	-2
	2016	-3	-4	1	1	-3	10	-	-	-	-	-	-
	2017	1	-1	-5	2	-	8	-	-	-	-	-1	-3
	2018	2	2	-1	2	-3	8	-	-	-1	-	-	-3
	2019	-3	1	1	1	2	4	1	-	-	-2	-	-
	2020	-	-1	1	-	3	3	1	-	-	-	-	-2
	전체	-1	-8	-16	6	2	23	1	-	-1	-2	-1	-11
단	2011	-	2	1	-1	-	2	-	-	-	-	-	-
	2012	-1	-	2	2	3	12	1	-	-	-	-	-
	2013	1	-	6	-	-1	-2	-	-	-	-	-1	1
	2014	-1	4	5	-	-1	1	-	1	-	-	-	1
	2015	-	4	2	1	-2	7	-	-	-	-	-	1
	2016	5	5	3	1	2	-6	-	-	-	-	1	-1
	2017	-	4	11	-2	2	-2	-	-	-	-	1	2
	2018	-2	-1	8	-2	3	-	-	-	1	-1	-	-3
	2019	2	4	10	-1	-4	9	-2	-	-	1	-1	-1
	2020	2	5	6	1	-6	7	1	1	-	-	-	-
	전체	6	27	54	-1	-4	28	-	2	1	-	-	-

자료(설명): 업종 유출입 수준이 높은 '제조업'(C), '정보통신업'(J),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중에서 건수가 많은 업종(중분류 기준)을 선별하였음.

자료(출처): 한국평가데이터(KoDATA)

VI. 경영환경 요인에 관한 설문결과

1. 설문개요

이동유형 및 입지권역에 따른, 화성시 기업의 경영환경 요인 만족도와 주요 경영환경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화성시 내부에서 설립되어 이동 없이 경영활동을 지속한 기업'(A1형), '화성시 내부에서 이동한 기업'(A2형), '다른 지역에서 화성시로 이동한 기업'(B형)이며,¹¹⁾ 화성시 경영환경 요인으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지가', '전문인력 채용', '거래처 접근성', '행정적 지원', '경제주체 간 네트워크', '교통환경', '교육환경', '자연환경'을 선별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이들 각 요인의 수준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들 요인 중에서 경영활동을 지속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부록 표 3 참조). 설문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2달간 진행되었고, 70개 기업(A1형: 38개사, A2형: 14개사, B형: 18개사)이 응답하였다.

2. 설문결과

[표 19]는 화성시 경영환경 요인에 대한 만족도를 점수화(1~5점)하여 나타낸 것이다. 전체 응답 기업들은 '거래처 접근성', '행정적 지원', '자연환경' 측면에서 상대적 만족도가 높았지만, '전문인력 채용', '교통환경', '지가'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낮았다. 그리고 A1형, A2형, B형 간에도 이러한 만족도 순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동유형과 상관없이, 화성시 경영환경 요인 중에서 '거래처 접근성', '행정적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높

11) 설문은 '화성시에서 이동이 없었던 유형'과 '외부에서 화성시로 이동한 유형'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전자로부터 '이동이 전혀 없었던 유형'과 '화성시 내부에서 이동한 유형'을 추가로 분류하였다.

았지만, ‘전문인력 채용’, ‘교통환경’, ‘지가’의 경우에는 낮았다.

[표 19] 이동유형별 화성시 경영환경 요인 만족도

구 분	이동 없음	내부 이동	외부 유입	전 체
지 가	2.71	2.29	2.83	2.66
전문인력 채용	2.11	2.00	2.22	2.11
거래처 접근성	3.32	3.43	3.33	3.34
행정적 지원	3.29	3.00	3.33	3.24
경제주체 간 네트워크	3.05	3.00	3.22	3.09
교통환경	2.37	2.64	2.56	2.47
교육환경	2.76	2.29	2.67	2.64
자연환경	3.26	3.00	3.28	3.21

전반적인 만족도가 가장 높은 ‘거래처 접근성’의 경우, 이동이 없었던 기업 및 화성시 내부에서 이동한 기업은 동부권역에 입지할수록 만족도가 높았고, 외부에서 유입된 기업은 서부권역에 입지할수록 그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다른 이동유형의 기업과 달리, 화성시 외부에서 유입된 기업은 거래처 접근성 측면에서 서부권역을 더 선호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전반적인 만족도가 가장 낮은 ‘전문인력 채용’의 경우, 이동유형과 상관없이 동부권역에 입지한 기업일수록 만족도가 조금이나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0] 이동유형 및 입지권역별 화성시 경영환경 요인 만족도

구 분	이동 없음			내부 이동			외부 유입		
	동부	서부	남부	동부	서부	남부	동부	서부	남부
지 가	2.69	3.25	2.62	2.33	2.00	2.30	2.89	3.00	2.71
전문인력 채용	2.31	1.50	2.10	2.33	1.00	2.00	2.44	1.00	2.29
거래처 접근성	3.46	2.75	3.33	3.67	3.00	3.40	3.33	3.50	3.29
행정적 지원	3.31	3.50	3.24	3.33	4.00	2.80	3.33	3.00	3.43
경제주체 간 네트워크	2.85	3.00	3.19	2.33	4.00	3.10	3.22	4.00	3.00
교통환경	2.85	1.50	2.24	3.00	1.00	2.70	2.78	1.00	2.71
교육환경	3.08	2.50	2.62	3.00	2.00	2.10	2.67	2.00	2.86
자연환경	3.85	3.75	2.81	3.00	4.00	2.90	3.33	3.50	3.14

자료(설명): ‘동부’, ‘서부’, ‘남부’는 응답 기업이 현재 입지하고 있는 화성시 권역임.

2014년 말 동탄 2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을 전후로 외부에서 유입된 기업들의 경영환경 요인 만족도를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2014년까지 유입된 기업들은 ‘자연환경’, ‘경제주체 간 네트워크’ 순으로 만족도가 높지만, 2015년부터는 ‘행정적 지원’, ‘거래처 접근성’ 순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외부 유입 시기별 화성시 경영환경 요인 만족도

구 분	2014년까지	2015년부터
지 가	2.38	3.20
전문인력 채용	1.75	2.60
거래처 접근성	3.00	3.60
행정적 지원	2.88	3.70
경제주체 간 네트워크	3.13	3.30
교통환경	2.13	2.90
교육환경	2.38	2.90
자연환경	3.25	3.30

[표 22]는 경영활동 지속에 가장 중요한 경영환경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결과를 응답 기업의 이동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전문인력 채용’이나 ‘지가’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높고, ‘행정적 지원’, ‘교통환경’, ‘교육환경’, ‘자연환경’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없거나 그 비중이 작다. 이동유형별로 살펴보면, 이동이 없었던 기업(A1형)과 화성시 내부에서 이동한 기업(A2형)은 ‘전문인력 채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들이 많았고, 외부에서 유입된 기업(B형)은 ‘지가’를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한편, 교통환경을 제외한 교육 및 자연환경 등의 인프라적 요소들은 경영활동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요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이동유형별 지속적 경영활동을 위한 주요 경영환경 요인

구 분	이동 없음		내부 이동		외부 유입		전 체	
	N	%	N	%	N	%	N	%
지 가	3	7.9	3	21.4	8	44.4	14	20.0
전문인력 채용	26	68.4	8	57.1	3	16.7	37	52.9
거래처 접근성	4	10.5	2	14.3	3	16.7	9	12.9
행정적 지원	2	5.3	-	-	-	-	2	2.9
경제주체 간 네트워크	1	2.6	1	7.1	3	16.7	5	7.1
교통환경	2	5.3	-	-	1	5.6	3	4.3
총 계	38	100.0	14	100.0	18	100.0	70	100.0

자료(설명): 응답 기업 중 '교육환경'이나 '자연환경'을 선택한 기업이 없어 이 두 가지는 제외하였음.

이를 종합하면, 화성시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전문인력 채용을 경영활동에 가장 필요한 요인으로 여기고 있지만, 그에 대한 만족도는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화성시에서 오랫동안 경영활동을 한 기업이나 화성시 내부에서 이동하는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부권역 입지 기업이 서부 및 남부권역 입지 기업에 비해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만족도가 약간 높은데, 이는 서부 및 남부권역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인력 채용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다. 화성시에 입지하고 있던 기업과 달리, 외부에서 화성시로 유입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다른 요인에 비해 낮은 지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가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낮은 편에 속한다.

VII. 연구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요약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화성시를 크게 세 권역으로 나누어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업 및 업종 유출입을 분석하고, 화성시 기업을 대상으로 이동유형 및 입지권역에 따른 경영환경 요인 만족도와 주요 경영환경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지난 10년간 화성시에서의 기업 유출입 양상과 더불어, 그러한 기업 유출입과 경영환경 요인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타권역(화성시 외부)에서 화성시로의 기업 순유입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주로 경기에서 많은 유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 권역 가운데 남부권역은 지난 10년간 타권역에서의 유입이 가장 많았고, 서부권역은 기업 유출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한편, 동부권역에서 타권역으로부터의 순유입이 2010년대 후반기에 급격히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왜냐하면, 화성시 내부에서는 남부권역 내에서의 이동과 남부권역으로의 이동이 많고, 이에 따라 동부권역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남부권역으로 순유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동부권역에 입지하고 있던 기업들이 남부권역으로 밀려나고, 그 대신에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타권역에서 동부권역으로 기업유입이 더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서울에서의 기업유입 측면에서 2018년부터 동부권역이 남부권역을 앞질렀다는 사실 또한, 2010년대 중반 이후 화성시에서 일어난 기업 유출입 양상의 변화를 반영해주고 있다.

업종 유출입을 살펴보면 화성시 유출입이 가장 많은 업종은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며, 동부권역에서 그다음으로 유입이 많은 업종에는 ‘전

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출판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이 있고, 서부 및 남부권역의 경우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이 있다. 즉, 동부권역은 ICT 제조·서비스업종이 주로 유입되고 서부 및 남부권역은 부품·장비 관련 전통제조업종의 유입되고 있어, 권역별 산업현황의 특성이 기업 유출입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서부 및 남부권역에 비해 동부권역의 경우 ICT 제조·서비스업종의 유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특히 ICT 서비스업종의 경우 2010년 중반 이후부터 서울에서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화성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환경 요인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다만, 동부권역은 그 만족도가 서부 및 남부권역에 비해 조금 높는데, 이는 동탄 신도시 조성, 교통여건(SRT 동탄역 등) 개선, ICT 기업 밀집 등으로 인한 인구 유입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한편, 전문인력 채용과는 달리 거래처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인데, 화성시 외부에서 유입된 기업은 서부권역에 입지할수록 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 서부권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전통제조업종 유출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 이 권역에서는 '전통제조업 기반의 양호한 거래처 접근성 및 기업집적의 특성을 어떻게 남부권역과 차별화된 방향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가 산업클러스터 조성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정책적 시사점

앞의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집적의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경제주체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화성시 동부권역은 2010년대 중반부터 ICT 제조·서비스업종이 집중되는 반면, 서부 및 남부권역은 부품·장비 제조업종이 유입되고 있다. 동부권역은 기존 기업과의 연계 및 ICT를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 활성화 측면에서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¹²⁾ 한편, 남부권역은 전통제조업종의 순수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이들 업종만으로 집적이 이루어질 경우 자칫 제조업의 고도화 및 융복합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를 운영하기도 하지만, 그중에서는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기업 간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또는 플랫폼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공공부문 연구·시험·지원기관이나 민간부문 혁신주체와의 연계를 통해 기술개발 및 사업발굴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화성시에 소공인을 비롯한 영세한 제조업체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업체의 경영활동, 기술개발, 판로개척, 협업, 정보공유 등에 필요한 지원 역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 전문인력의 양성 및 채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 사업체수·종사자수 기준으로 화성시가 전국 시군구 지역 중 상위 지역¹³⁾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기업들은 경영활

12) 이 외에도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동부권역으로 유입되는 ICT 제조·서비스업체 중 경쟁력 또는 잠재력을 지닌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전시회 공동관,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동부권역에 집중된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유망 기업들을 선별하고, 다양한 지원 기관 및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해 집중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기업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해외시장에 제공하는 동시에, 해외시장의 기업 정보를 화성시 기업들과 공유할 수 있는 채널(자매도시 및 해외 상공회의소 등을 활용)을 구축하는 것도 요구된다.

13) 2021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화성시 제조업 사업체수는 27,607개사로 전국(579,050개사) 대비 4.8%, 경기도(184,432개사) 대비 15.0%이며, 제조업 종사자수는 257,574명으로 전국(4,217,537명) 대비 6.1%, 경기도(1,373,285명) 대비 18.8%이다(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구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화성시 외부의 대학 및 교육·훈련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에서 전문인력 공급의 기반인 대학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단, 이러한 인력양성이 지역산업과 정합성을 갖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특화된 산업들을 고려함으로써 화성시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간의 미스매치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 전문인력의 채용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서부 및 남부권역의 교통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서부권역을 기업 리로케이션(relocation)을 위한 전략적 지역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서부권역은 기업 유출입 규모가 남부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업종 유출입 측면에서는 남부권역과 차별적이지도 않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리로케이션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서부권역이 더 적절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화성시 외부에서 서부권역으로 유입된 기업들이 다른 권역으로 유입된 기업에 비해 거래처 접근성 측면에서 만족도가 약간 높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동차 연구개발 및 시험 인프라가 입지하고 있고 향후 국가산단을 포함하는 송산그린시티가 조성될 것이라는 점에서, 서부권역 업종과 전후방 관계에 있는 기업들을 유인할 수 있는 조건을 파악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단순히 산업분류코드상의 분류로 인해 공장부지를 얻기 힘든 기업들도 존재하는바, 이들 기업의 생산원료 및 품목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평가를 바탕으로 그 입지를 결정하는 절차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화성시 외부에서 유입된 기업들이 낮은 지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측면을 볼 때, 화성시(특히 서부권역)로 새로 들어오려거나 돌아오려 하는 기업에 대해 분양가·임대료 인하(산업단지, 공공지식산업센터 등), 세제 혜택(재산세, 취득세 등)의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¹⁴⁾ 이러한 혜택 외에도, 서부권역의 교통 및 정주여건이 필수적으로 개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본 연구는 동태적 관점에서 화성시 권역별로 기업 유출입(이동)을 살펴 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는다. 그러나 자료가 갖는 한계와 기업설문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 유발 요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지역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내부적·외부적 요인 및 입지지역 차별성과 관련된 자료들을 구축하고, 생존분석과 같은 분석 방법 등을 사용하여 기업이동의 유발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산업 및 기업 지원에 대한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14) 물론, 이러한 지원 중에는 다른 공공주체(중앙정부 등)와의 협력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

참 고 문 헌

- 강동우. 2019. 「청년층 지역이동의 특징과 지역 특성의 영향」. *노동리뷰* 167: 47-60.
- 김대영. 2010. 「수도권 생산자서비스업 입지패턴 변화 분석」. *인천연구* 4: 31-46.
- 박동규·조인성·박찬일·홍성호. 2015. 「제조업체 이전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지역정책연구* 26(2): 71-86.
- 송창현·김주영·임엽. 2022. 「수도권 신성장산업 창업 사업체의 지역 간 유출입 네트워크 및 영향 요인」. *지역연구* 38(1): 3-20.
- 안영수·이승일. 2014. 「수도권 기업이동 공간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산업유형별 기업이동 특성 연구」. *국토계획* 49(5): 17-28.
- 이유진·한영숙. 2020. 「기업의 입지 이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기연구원*.
- 전경구. 2015. 「대도시권 산업단지 조성이 기업입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 대구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50(2): 33-48.
- 최준영·오규식. 2012. 「정보통신기술 (ICT) 기업의 지역간 이동 패턴 및 요인 분석」. *국토계획* 47(7): 5-20.
- 화성산업진흥원. 2022. 「화성시 전략산업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화성: 화성시정연구원.
- 화성시. 2019a. 「2035년 화성도시기본계획」. 화성: 화성시
- _____. 2019b. 「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총괄보고서」. 화성: 화성시
- 홍일영. 2008. 「소프트웨어 산업의 집적지 변화와 기업이동의 특성」.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1(2): 175-191.
- Arauzo-Carod, Josep M., and Manjón-Antolín, Miguel. 2012. "(Optimal) spatial aggregation in the determinants of industrial location." *Small Business Economics* 39(3): 645-658. DOI: <https://doi.org/10.1007/s11187-011-9335-6>
- Brouwer, Aleid E. 2004. "The inert firm; why old firms show a stickiness to their location." In *The 44th Congress of the Europ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Regions and Fiscal Federalism"*, 1-23. The Conference held in Porto, Portugal, 25-29 August.
- Brouwer, Aleid E., Mariotti, Ilaria and Van Ommeren, Jos N. 2004. "The

- firm relocation decision: An empirical investigation,” *The Annals of Regional Science* 38: 335-347. DOI: <https://doi.org/10.1007/s00168-004-0198-5>
- Duranton, Gilles and Puga, Diego. 2001. “Nursery cities: urban diversity, process innovation, and the life cycle of products.” *American Economic Review* 91(5): 1454-1477. DOI: 10.1257/aer.91.5.1454
- Holl, Adelheid. 2004. “Manufacturing location and impacts of road transport infrastructure: empirical evidence from Spain.”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34(3): 341-363. DOI: [https://doi.org/10.1016/S0166-0462\(03\)00059-0](https://doi.org/10.1016/S0166-0462(03)00059-0)
- Hong, Sung-hyo. 2014. “Agglomeration and relocation: Manufacturing plant relocation in Korea.” *Papers in Regional Science* 93(4): 803-818. DOI: <https://doi.org/10.1111/pirs.12029>
- Knoben, Joris. 2008. “Radical changes in inter-organizational network structures: The longitudinal gap.” In *Firm Mobility and Organizational Networks*, edited by Joris Knoben, 29-46. Edward Elgar Publishing.
- Pellenbarg, Pieter., van Wissen, Leonardus., and van Dijk, Jouke. 2002. “Firm relocation: state of the art and research prospects.” University of Groningen, SOM research school.
- Schmiedeberg, Claudia. 2010. “Evaluation of cluster policy: a methodological overview.” *Evaluation* 16(4): 389-412. DOI: <https://doi.org/10.1177/1356389010381184>
- Stam, Erik. 2007. “Why butterflies don’t leave: Locational behavior of entrepreneurial firms.” *Economic geography* 83(1): 27-50. DOI: <https://doi.org/10.1111/j.1944-8287.2007.tb00332.x>
- Van Dijk, Jouke and Pellenbarg, Piet H. 2000. “Firm relocation decisions in The Netherlands: An ordered logit approach.” *Regional science* 79: 191-219. DOI: <https://doi.org/10.1007/s101100050043>
- Weterings, Anet., and Knoben, Joris. 2013. “Footloose: An analysis of the drivers of firm relocations over different distances.” *Regional Science* 92(4): 791-809. DOI: <https://doi.org/10.1111/j.1435-5957.2012.00440.x>

“점점 커지는 수도권·지방 IT 격차.” 매일경제. 2022.4.8. <https://www.mk.co.kr/economy/view.php?sc=50000001&year=2022&no=317318>(검색일: 2023년 6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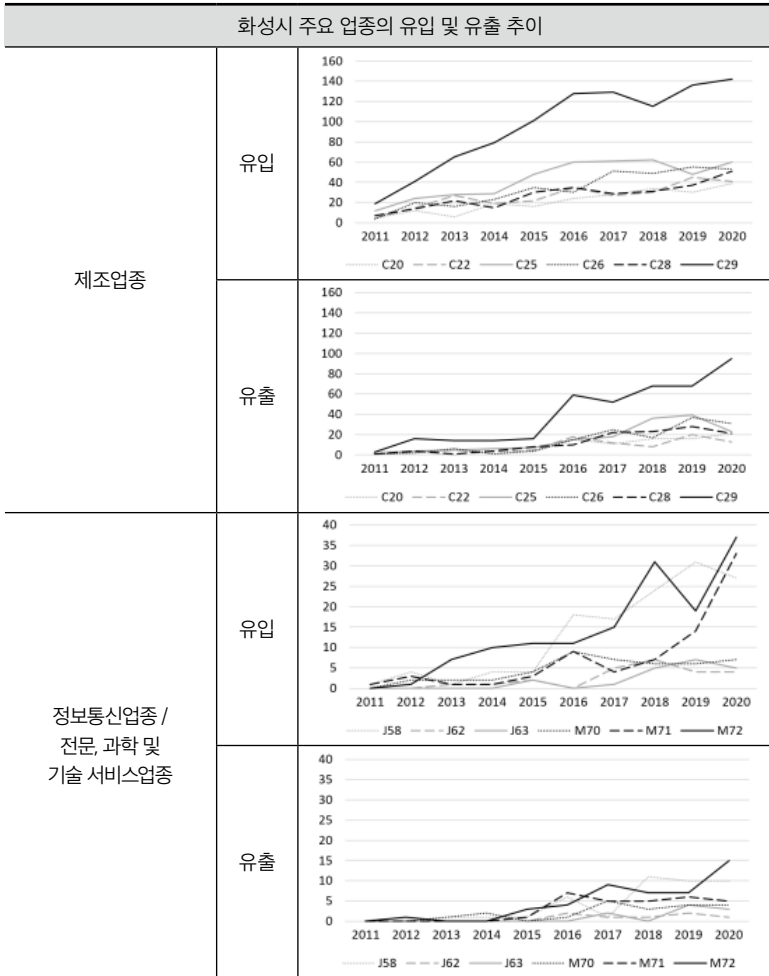
“‘팽창 가속’ 수도권 ‘소멸 직전’ 지방, 두 번째 분단.” 경향신문. 2021.10.6.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0060600015>(검색일: 2023년 6월 4일)

경기데이터드림(<https://data.gg.go.kr>)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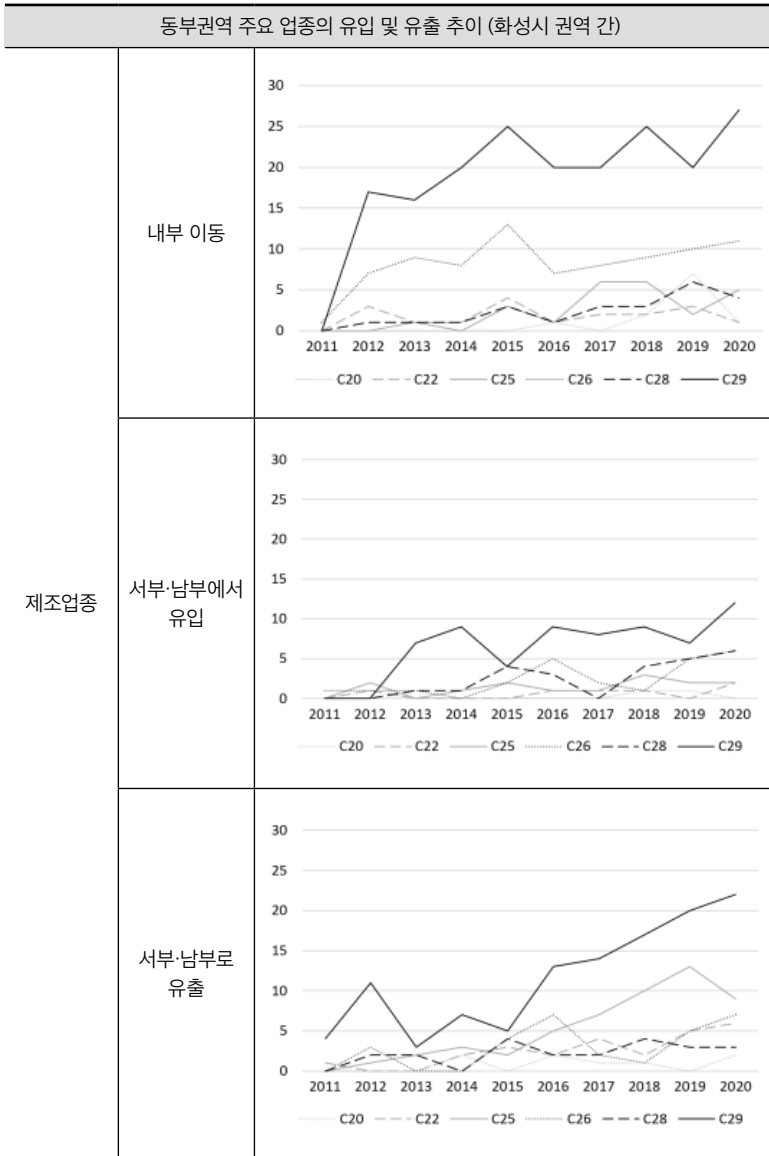
[부록 표 1] 화성시 주요 업종의 유입 및 유출 추이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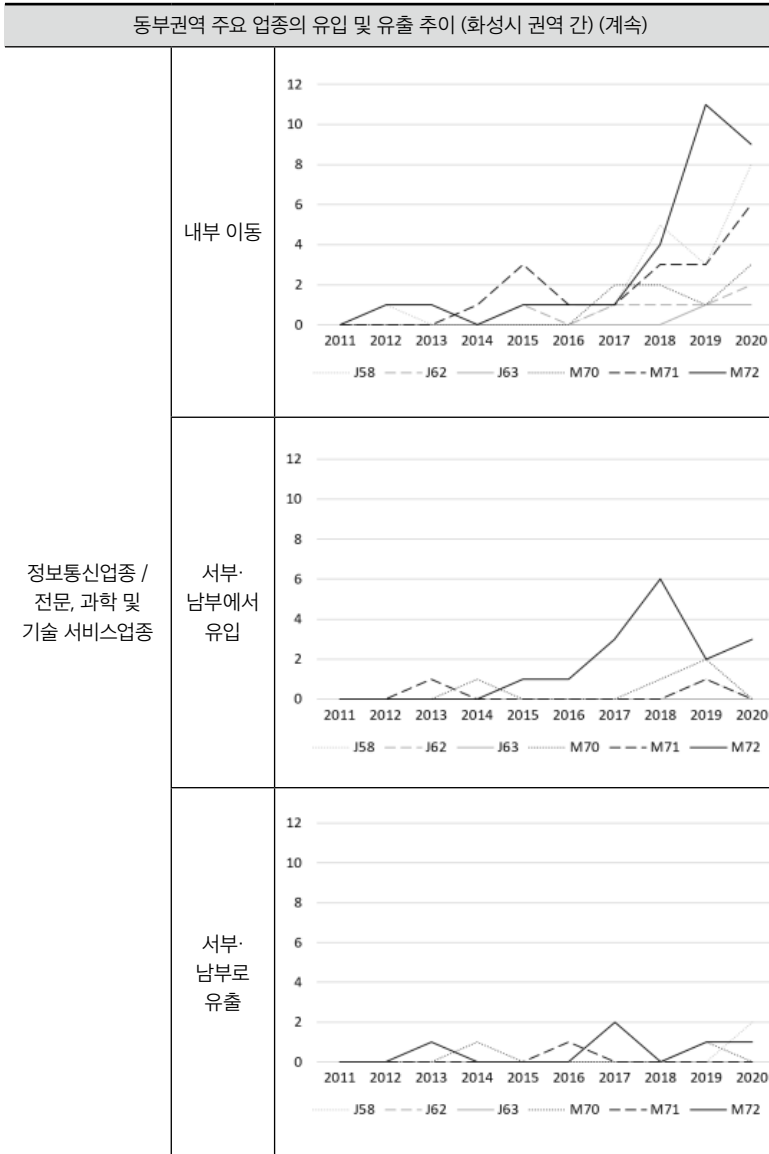
J58: 출판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M71: 전문 서비스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부록 표 2] 화성시 권역 간 주요 업종의 유입 및 유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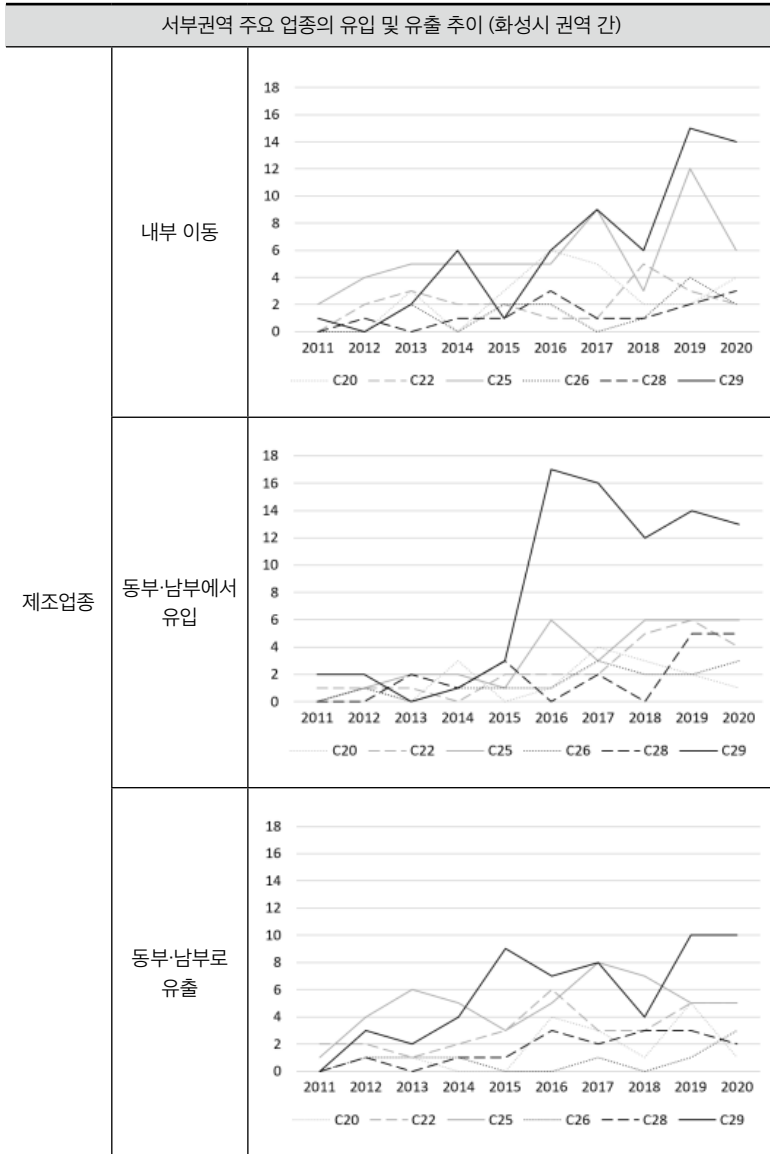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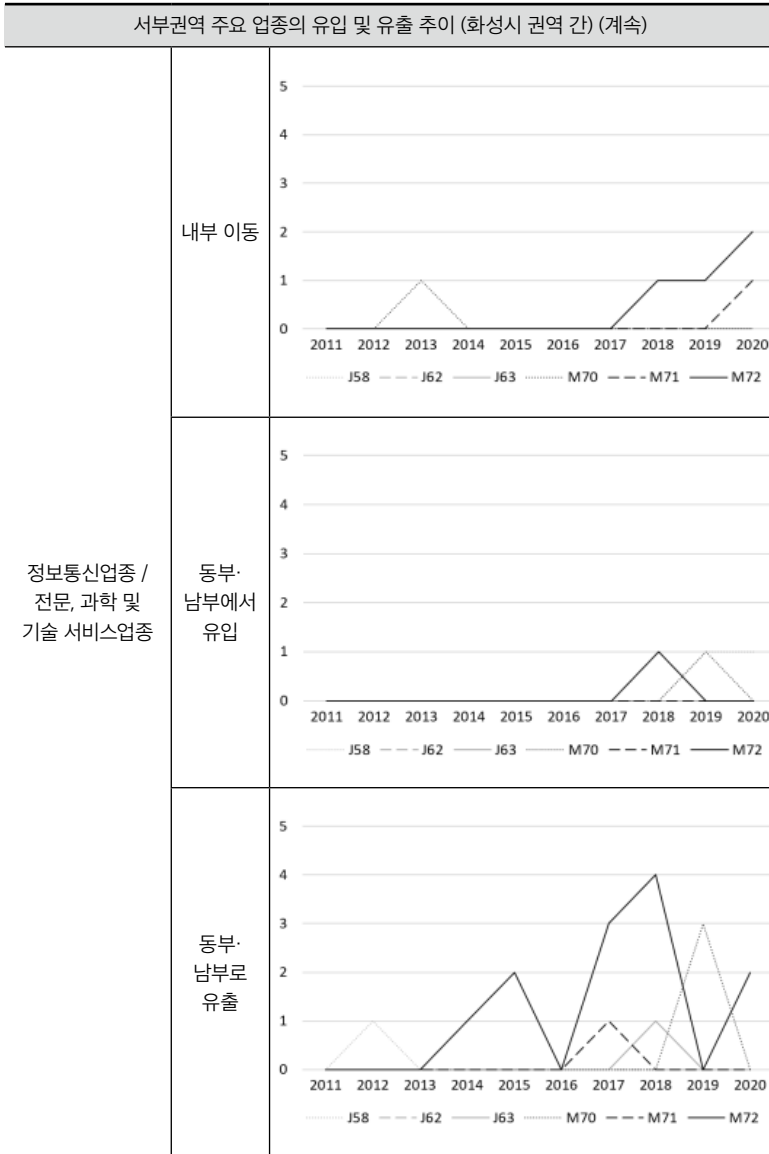
J58: 출판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M71: 전문 서비스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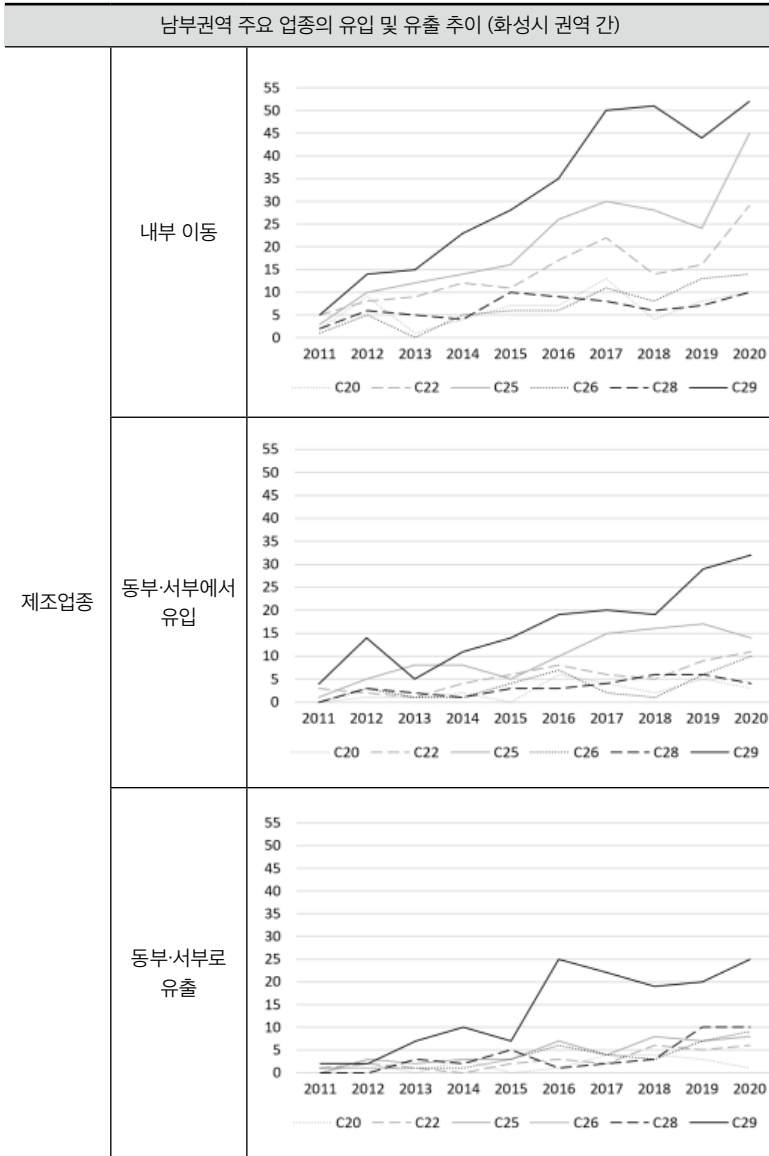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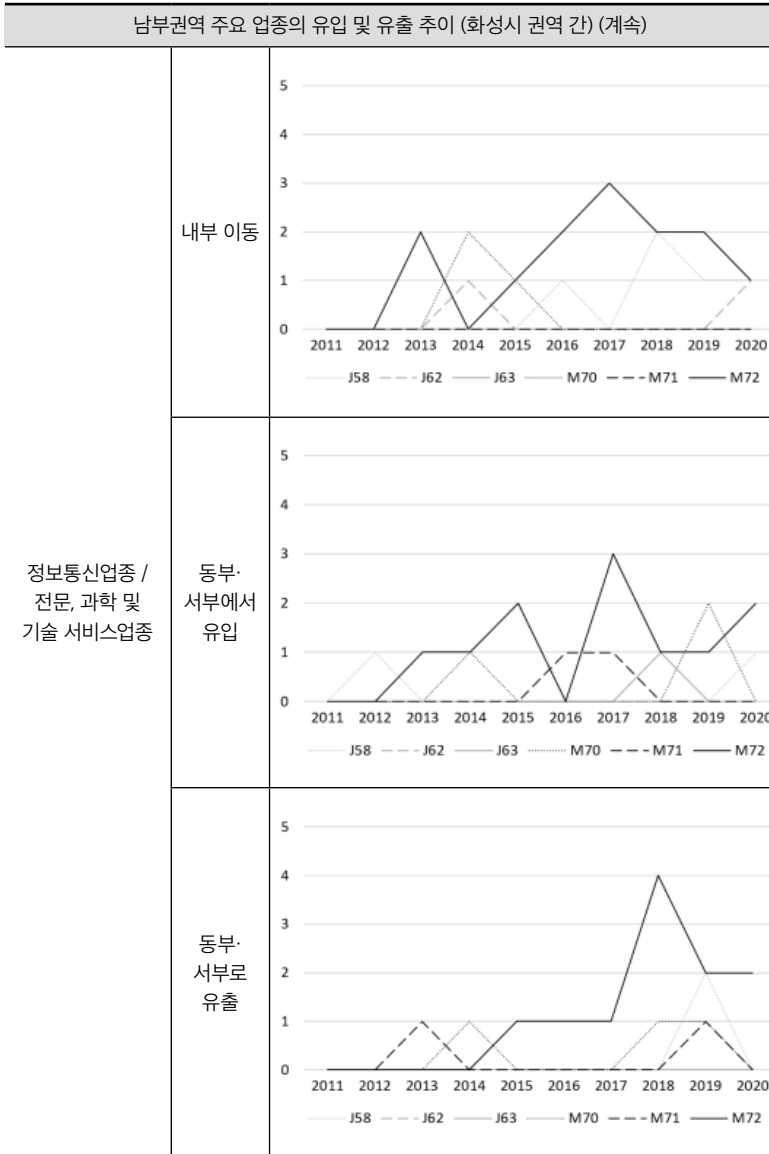
J58: 출판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M71: 전문 서비스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J58: 출판업
 J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3: 정보서비스업

M70: 연구개발업
 M71: 전문 서비스업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부록 표 3] 화성시 기업 유출입 요인 파악 설문 문항

화성시 기업 유출입 요인 파악 설문 문항

1. 업체명: ()

2. 설립연도: ()년

3. 현재 종사자수: 약 ()명

4. 귀사가 속한 산업군

- 석유류 제조업
- 섬유류 제조업 (의복 제외)
- 화학, 비화학 제품 및 보조제품 제조업
- 금속, 기계 및 신발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철강,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인쇄 및 기타제품 복제업
- 코스모, 연탄 및 석유제품 제조업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식품용 알갱이 및 화학용 제조업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의료, 병리,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랙터용 제조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신발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종이, 카드, 종이 및 종이 포장 공업업
- 고무, 플라스틱 및 분도 처리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영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건설업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1 -

- 운수 및 창고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 방송 및 보편업
- 부동산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보건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 주요 생산품목(1-2가지) ()

6. 귀사의 직원은 어떻게 되십니까?

- 내로 ()
- 임원 ()
- 과무정규 이상 ()
- 일반 직원 ()

7. [현재 소재지] 귀사의 소재지는 현재 어디입니까?
(유연동까지 적어주세요. 예) 경기도 화성시 향안면 ()

8. [이전 소재지] 귀사는 현재 소재지 이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유연동까지 적어주세요. 예)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
(단, 이동한 적이 없을 경우는 공란으로 두셔서 바랍니다.)

9. 이전도에 이전 소재지에서 현재 소재지로 이동하였습니까?
(단, 이동한 적이 없을 경우는 공란으로 두셔서 바랍니다.) ()년

다음쪽부터는: A, B, C항목 하나만 선택해서 응답 바랍니다.

- 2 -

[A. 화성지역에서 설립되어 경영활동을 지속하였던 기업만 답하여 주십시오.]

10A. 화성시는 저가 저임하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1A. 화성시는 원천적 비용이 높이다.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2A. 화성시는 거래처와의 접근성이 높이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3A. 화성시는 행정적 지원이 다양하다.

1. 매우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4A. 화성시는 경제주체 간 네트워크가 강하다.

1. 매우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5A. 화성시는 교통환경이 뛰어나다.

1. 매우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6A. 화성시는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1. 매우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7A. 화성시는 자연환경이 뛰어나다.

1. 매우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8A. 경영활동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요인의 순위를 매겨주십시오

1. 저가
2. 전문인력
3. 거래처와의 접근성
4. 행정적 지원
5.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획득 및 협력
6. 교통환경
7. 교육환경
8. 자연환경

19. 기업 유지 또는 존속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 바랍니다.

- 3 -

[B. 다른 지역에서 화성시로 이동한 기업만 답하여 주십시오.]

10B. 화성시가 저가 저임하다.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1B. 화성시가 전문적 비용이 더 높이다.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2B. 화성시가 거래처와의 접근성이 더 높이다.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3B. 화성시가 행정적 지원이 더 다양하다.

1. 매우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4B. 화성시가 경제주체 간 네트워크가 더 강하다.

1. 매우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5B. 화성시가 교통환경이 더 뛰어나다.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6B. 화성시가 교육환경이 더 뛰어나다.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7B. 화성시가 자연환경이 더 뛰어나다.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18B. 경영활동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요인의 순위를 매겨주십시오

1. 저가
2. 전문인력
3. 거래처와의 접근성
4. 행정적 지원
5.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획득 및 협력
6. 교통환경
7. 교육환경
8. 자연환경

19. 기업 유지 또는 존속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 바랍니다.

- 4 -

국 문 초 록

기업의 지역이동에 관한 연구:

경기도 화성시의 기업 유출입을 중심으로

김규환(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연구교수)

이덕(화성산업진흥원 전략기획팀 팀장)

오근상(前 화성산업진흥원 혁신전략팀 책임)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화성시의 기업이동 현황을 살펴보고, 이와 경영환경 요인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지역산업 및 기업지원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평가데이터(KoDATA)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1~2020년의 화성시 기업 유출입을 분석하였고, 화성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동안 화성시의 기업 순유입은 증가하였으며 그 대부분은 전통제조업종이었다. 서부권역은 유출입 규모가 작으나, 남부권역은 화성시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의 유입도 가장 많다. 동부권역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외부에서의 순유입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특히 서울에서의 유입 및 ICT 제조·서비스업종의 유입이 증가하였다. 한편, 화성시 기업들은 전문인력 채용 만족도가 대체로 낮았지만, 거래처 접근성 만족도는 높았다. 그리고 외부에서 서부권역으로 유입된 기업은 거래처 접근성 만족도가 약간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향후 기업지원정책에서 경제주체 간 네트워크 강화, 소규모 제조업체 지원 확대, 지역 전문인력의 양성·채용 촉진, 서부권역에서의 기업 리로케이션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화성시, 기업이동, 기업 유출입, 지역산업, 기업지원

Abstract

A Study on regional movement of firms:

The Case of Firms' entry and Exit in Hwaseong City

Kim, Gyuhan(Research Professor, Institute for Future Growth, Korea University)

Lee, Doug(Team Manager, Strategy and Planning Team, Hwaseong Industry
Promotion Agency)

Oh, Geunsang(Former Manager, Innovation and Strategy Team, Hwaseong
Industry Promotion Agency)

This study examines the regional movement of firms in Hwaseong City and its relationship with business environmental factors, providing implications for local industry promotion. The authors analyzed firms' entries and exits in Hwaseong from 2011 to 2020 using data from the Korea Rating & Data (KoDATA) and conducted a citywide survey. Firms' net entry into Hwaseong increased, primarily in the traditional manufacturing sector. The western region had relatively few entries and exits of firms, while the southern region had the largest entries both within and outside the city. The eastern region has experienced a significant increase in firms' net entries from outside the city since the mid-2010s, particularly in the Seoul and ICT sectors. Firms in Hwaseong generally expressed low satisfaction with recruiting specialized professionals but reported high satisfaction with business partner accessibility. Additionally, firms moving to the western region from outside the city tend to have slightly higher satisfaction with business partner accessibility. For a business support polic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nhancing networks among economic entities, expanding support for small manufacturing businesses, fostering local specialized professionals, promoting their recruitment, and encouraging firms' relocation to the western region.

Key words: Hwaseong City, Movement of Firms, Firms' entry and Exit, Local Industry, Business Support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 중심의 공동 마케팅 전략 제안

강정석*·강선우**

강정석 · 강선우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지역 특산물 기반의 공동 마케팅 전략
2.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 중심의 공동 마케팅 전략 효과

III. 연구 1: 시작 연구

1. 방법
2. 결과
3. 논의

IV. 연구 2: 연구 방법 개선 후속 연구

1. 방법
2. 결과
3. 논의

V. 종합 논의

*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교신저자(E-mail: jungsuk.kang@jbnu.ac.kr)

**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공동저자

<http://doi.org/10.34165/urbanr.2023..24.397>

투고(접수)일 2023.4.29. 심사(수정)일 2023.6.5. 게재확정일 2023.12.14.

I. 서론

우리나라에서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하는 추세이다(홍성익·김유찬 2016).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계속 악화하는 주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이 증가하는 반면 세입이 감소하고,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며, 채무가 급증하기 때문이다(안국찬 2013). 즉, 재원 마련의 어려움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수입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을 늘리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지역 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력을 강화하는 것이다(양현석·정군오 2008).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산업을 육성하는 한 가지 방법은 지역 특산물 마케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때 지역 특산물은 특정 지역의 환경적 특성에 맞아 그 품질이 좋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축·수산물을 말한다(이승훈 2006). 지역 특산물 마케팅이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조직(예: 영농조합법인)이 지역 특산물(예: 보성 녹차)을 이용해 가공상품과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들 상품을 전국 단위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Kavaratzis and Ashworth 2005; Kavaratzis and Ashworth 2008). 실제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지역 조직을 지원해서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예: 보성 녹차 라테)을 개발한 후 이를 판매하거나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예: 보성 다향 대축제)을 개발해서 이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 특산물 마케팅의 공통된 특징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조직에서 동일 지역 특산물을 기반으로 가공상품과 관광상품을 함께 개발해서 전국 단위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점이다. 이 특징을 고려하면, 많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조직에

서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과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간의 연계를 활용한 지역 특산물 기반의 공동 마케팅을 추진한다고 볼 수 있다(Grieco and Iasevoli 2017). 그런데 지역 특산물 기반의 공동 마케팅에 활용되는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과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간의 전략적 연계에 대한 실무적 또는 이론적 고려나 실증적 효과 검증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지역 특산물 기반의 공동 마케팅 전략을 도출하고, 이 전략의 효과 발생과 관련된 소비자의 심리적 기제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효과적인 지역 특산물 기반의 공동 마케팅 전략을 제안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조직에서 추진하는 지역 특산물 기반의 공동 마케팅 전략 효과를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지역 특산물 기반의 공동 마케팅 전략

지역의 관광 자원을 활용한 지역 관광상품은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Mules and Dwyer 2006). 한국의 지역 관광상품은 내용과 주제를 기준으로 지역 특산물(예: 보성 다향 대추제), 문화와 예술(예: 부산 댄스 페스티벌), 생태와 자연(예: 진해 군항제-진해 벚꽃 축제) 및 역사와 문화유산(예: 화순 고인돌 축제) 관광상품으로 구분된다(Choi et al. 2021). 이들 지역 관광상품 중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은 국내 여러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을 활용한 지역 특산물 기반의 공

동 마케팅 전략을 제안하고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조직은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을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과 연계해서 지역 특산물 기반의 공동 마케팅 전략을 추진한다(김영남 외 2011; 박소진 외 2017). 이와 같은 지역 특산물 기반의 공동 마케팅 전략은 문헌 고찰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 체험 제고를 기반으로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 판매를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이용자 수를 늘리는 전략이 있다.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은 소비자에게 지역 특산물과 관련된 체험을 제공한다.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이용 중 지역 특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체험이 긍정적이면, 지역 특산물이 주요 성분인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의 구입에 대해서도 구입이 유발하는 지각된 위험(perceived risk)이 감소한다(박소진 외 2017). 그 결과,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입의도가 높아져서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이 증가한다(Ajzen 1991). 또한 소비자는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을 구입한 후 소비하면서, 지역의 진품성(authenticity), 독특성(uniqueness), 이미지 등을 체감한다(Alderighi et al. 2016). 이와 같은 체감은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과 관련된 특정 지역에 대한 소비자의 관광 만족도와 충성도(tourism loyalty)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서 해당 지역의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재이용의도를 높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조직은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과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 간 선순환적 인과성(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이용 →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 및 소비 →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재이용)을 기반으로 한 지역 특산물 기반의 공동 마케팅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 전략을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중심의 공동 마케팅 전략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중심의 공동 마케팅 전략의 효과는 다수의 선행연구에 의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

다. 예를 들어서, 권상미·이관표(2011)의 연구에서 제천 한방 바이오 축제(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참가 경험이 한방 약선음식 등과 같은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박소진 외(2017)는 청도 와인터널(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방문객을 대상으로 ‘청도 와인터널 체험 → 청도 감와인(지역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의도 제고 → 청도 와인터널 재방문의도 제고’라는 인과성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중심의 공동 마케팅 전략에는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지리적 이동이라는 비용을 감수한 소수의 소비자(관광객)만이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에 대한 긍정 체험을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전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조직이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의 이용자 수를 늘리는 추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많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조직에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유통망을 이용해 전국 단위의 소비자에게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을 판매한다(전남일보 2021/8/30). 그 결과, 소비자는 본인이 생활하는 지역에서도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이용에 필요한 지리적 이동이라는 비용이 없어도 전국 단위의 다수 소비자가 각자 원하는 유통망을 통해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을 구입한다. 이처럼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유통망에서 구입 가능한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은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이용자(관광객) 유인의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Alderighi et al. 2016; Huang et al. 2020; Kivela and Crofts 2006).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조직에서 전국 단위의 다수 소비자가 어디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을 유인책으로 활용해서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이용자 수를 늘리는 지역 특산물 기반의 공동 마케팅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은 지역 특산물 기반의 공동 마케팅 전략을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 중

심의 공동 마케팅 전략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그런데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 중심의 공동 마케팅 전략의 전제인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이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이용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검증한 선행연구는 극히 드물다(Huang et al. 2020). 이에 본 연구에서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이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특정 지역의 특산물 가공상품을 구입한 동시에 해당 지역의 특산물 관광상품을 이용한 소비자의 수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다수 연구 대상의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과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이용을 직접 측정해서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 중심의 공동 마케팅 전략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충분한 연구 대상 수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과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이용을 측정하는 방법의 활용이 요구된다.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의도(vs.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이용의도)는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vs.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이용)을 실행하기 위한 개별 소비자의 준비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이다(Wee et al. 2014). 시간적, 경제적 및 심리적 제약이 없으면,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의도(vs.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이용의도)는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vs.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이용)으로 발현된다. 이에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 대신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의도를,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이용 대신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이용의도를 측정해서 본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특산물과 지역 간 연합 강도(예: 녹차와 보성 간의 연합 강도)와 상품명에 지역(예: 보성)이 명시되지 않은 특산물 가공상품(예: 녹차 라테) 태도가 지역이 명시된 특산물 가공상품(예: 보성 녹차 라테) 구입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알아보하고자 한다.

2.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 중심의 공동 마케팅 전략 효과

보성 녹차, 고창 복분자 등과 같은 지역 표시는 특정 특산물의 품질, 명성 및 기타 특성이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해당 특산물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명시하는 표기를 말한다(서정욱 2006; 조정은 외 2009). 그런데 특정 지역의 특산물을 주요 성분으로 사용했지만, 상품명에 지역 표시를 하지 않은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이 시장에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고창 복분자를 주요 성분으로 사용한 ‘보해 복분자주’, ‘국산당 명작 복분자주’, ‘배상면주가 복분자음’의 경우, 상품명에 고창 복분자라는 지역 표시를 하지 않았다. 또한 특정 지역의 특산물로 널리 알려졌지만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주요 성분으로 하면서 상품명에 어떤 지역도 생산지로 명시하지 않은 가공상품도 존재한다. 그 사례로, ‘나뽀투 녹차 파인트 아이스크림’의 주요 성분인 녹차는 보성이 아닌 제주도에에서 생산된 것인데 상품명에 제주도 녹차라는 지역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가공상품은 특정 지역의 유명 특산물(예: 보성 녹차)이 주요 성분으로 함유된 것처럼 소비자의 오인지를 유발할 수 있다(민승기 외 2021). 본 연구에서 ① 특정 지역의 특산물을 주요 성분으로 사용했으나 지역 표시를 상품명에 명시하지 않거나 ② 특정 지역의 특산물로 유명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주요 성분으로 하며 어떤 생산 지역도 상품명에 명시하지 않은 가공상품을 지역 무표시 특산물 가공상품(예: 녹차 라테)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한편 주요 성분인 특정 특산물의 생산 지역으로 유명한 특정 지역을 상품명에 지역 표시로 명시한 가공상품을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예: 보성 녹차 라테)이라고 지칭할 것이다.

많은 경우, 지역 무표시 특산물 가공상품과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간 품질, 물리적 속성(예: 성분, 맛, 색상) 등의 현격한 차이는 없다. 그

러나 지역 표시는 원산지 효과(place of origin effect)를 유발해서(오두범 2005) 지역 무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대비 다음과 같은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 평가를 유도한다. 먼저 지역 표시는 소비자에게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백남길·함동철 2015). 그 결과, 소비자는 지역 무표시 특산물 가공상품의 품질보다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의 품질을 더 좋게 평가한다(김상훈·박현정 2010). 둘째, 지역 표시는 소비자에게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의 차별적 이미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지역 무표시 특산물 가공상품보다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을 더 차별화된 특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한다(Teuber 2010). 마지막으로 소비자는 지역 무표시 특산물 가공상품보다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을 더 선호한다(조정은 외 2009). 이와 같은 지역 표시가 유발하는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품질 평가, 차별적 특성 인식 및 높은 선호도로 인해, 지역 무표시 특산물 가공상품보다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 의도가 더 높다(김상훈·박현정 2010; 백남길·함동철 2015).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은 외적 속성(extrinsic attribute)과 내적 속성(intrinsic attribute)을 가지며(Sanyal and Datta 2011; Wu and Chalip 2014), 이 두 속성 평가가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Enneking et al. 2007; Mueller and Szolnoki 2010). 앞서 논의한 지역 표시는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이 가진 외적 속성에 해당한다. 이때 외적 속성이란 가공상품 자체의 물리적 속성(예: 성분, 맛, 색상) 이외의 표시(label), 브랜드, 가격, 포장 등과 같은 가외 속성을 말한다.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은 지역 표시라는 외적 속성 이외에 내적 속성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내적 속성은 성분, 맛, 향, 색상 등과 같은 가공상품 자체의 물리적 속성이다(Wu and Chalip 2014).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예: 보성 녹차 라테)은 지역 무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예: 녹차 라테)과 성분, 맛, 색상 등의 주요 물리적 속성이 유사하다. 따라서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의 내적 속성을 지역 무표시 특산물 가공상품의 내적 속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

소비자는 지역 무표시 특산물 가공상품의 물리적 속성(내적 속성)을 기반으로 지역 무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태도를 형성한다(Mueller and Szolnoki 2010; Raz et al. 2008). 지역 무표시 특산물 가공상품의 내적 속성이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의 내적 속성과 유사하므로, 지역 무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태도는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의 내적 속성 평가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무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태도가 좋을수록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의 내적 속성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의도가 높아진다(Enneking et al. 2007; Machleit and Wilson 1988; MacKenzie et al. 1986; Mueller and Szolnoki 2010). 그 결과, 지역 무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태도는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의도가 높은 소비자는 지역 특산물의 진품성, 독특성 및 맛/품질을 긍정적으로 예상한다(Suhartanto et al. 2018). 이와 같은 지역 특산물의 진품성(Mariani and Okumus 2022), 독특성(Aydin et al. 2021) 및 맛/품질(Rousta and Jamshidi 2020)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기대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이용의도를 높인다. 따라서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의도는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이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지역 무표시 특산물 가공상품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의도를 높일 것이다. 이후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의도는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이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 1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1. 지역 무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태도는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의도는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이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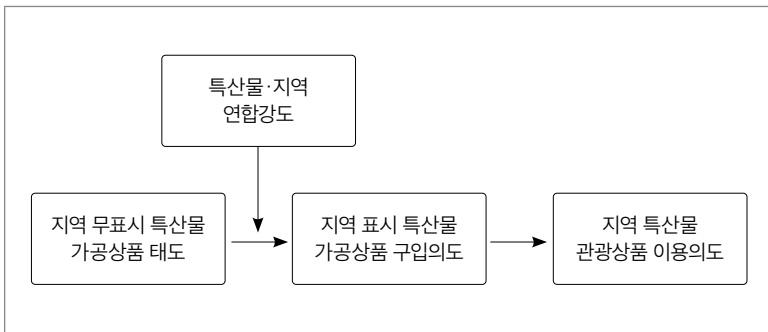
고전적 조건화(classical conditioning) 이론에 의하면, 소비자가 신문 기사, 광고, 입소문 등을 통해 특산물과 지역 이름을 동시에 여러 번 반복해서 접하면 특산물과 지역 간의 연결 인식이 강화된다(조용수 2012). 그 결과, 소비자의 장기 기억에 특산물과 지역 간의 연합이 저장된다(John et al. 2006). 그런데 고전적 조건화 정도에 따라 소비자의 특산물과 지역 간 연합 강도(이하 특산물-지역 연합 강도로 칭함)가 다를 수 있다. 소비자의 특산물-지역 연합 강도 차이가 지역 무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태도와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의도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산물-지역 연합 강도가 강한 소비자는 그 지역을 특산물을 생산하는 대표 지역으로 강하게 인식한다. 이와 같은 인식 때문에 소비자는 그 지역에서 생산한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을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이나 지역 무표시 특산물 가공상품보다 더 선호한다(Ward and Loken 1988). 따라서 특산물-지역 연합 강도가 강하면,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의 외적 속성인 지역 표시가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의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강할 것이다. 반면 특산물-지역 연합 강도가 약한 소비자는 지역 표시에 명시된 지역을 특산물을 생산하는 여러 지역 중 한 곳으로 인식한다. 이와 같은 인식은 지역 표시가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의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Rachmat et al. 2019). 이상의 논의에 의하면, 특산물-지역 연합 강도가 강한 소비자가 약한 소비자보다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을 구입하려는 의도가 더 높다(우승균 외 2013). 그런데 특산물-지

역 연합 강도에 따라서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의 내적 속성 평가 결과에 해당하는 지역 무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태도가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예측할 수 있는 논리적 그리고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1을 설정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특산물-지역 연합 강도는 지역 무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태도가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의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조절할 것인가? (조절효과)

가설 1과 연구문제 1을 종합해서, 본 연구에서 특산물-지역 연합 강도가 '지역 무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태도 →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의도 →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이용의도'의 순차적 관계를 조절하는지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조절된 매개효과를 도식적으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는 연구 모형으로 제시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시작 연구(연구 1)와 시작 연구의 연구 방법을 개선한 후속 연구(연구 2)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그림 1] 연구 모형

Ⅲ. 연구 1: 시작 연구

1. 방법

1) 연구 품목 및 연구 대상

전라북도의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평균 재정자립도는 전국 시도 중 최하위였다(전라일보 2020/8/19). 이처럼 낮은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 지역 특산물 기반의 공동 마케팅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블랙키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전라북도의 지역 특산물 중 월간 온라인 키워드 검색량이 가장 많은 고창 복분자를 연구 1의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 중심의 공동 마케팅 전략 효과 검증 품목으로 선정하였다.

국내 조사 회사의 패널 중 무작위로 선정된 만 20세 이상의 남녀 1,408명이 연구 1의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만 연령대, 거주지역에 관한 상세 내용은 [표 1]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761명(50.7%)이 복분자 생산 지역으로 고창을 가장 먼저 떠올렸다(복분자-고창 최초 상기 유 집단).

[표 1] 연구 1과 연구 2의 응답자 특성

구분		연구 1	연구 2
성별	남성	697명(49.5%)	320명(50.0%)
	여성	711명(50.5%)	320명(50.0%)
만 연령대	20대	228명(16.2%)	128명(20.0%)
	30대	232명(16.5%)	128명(20.0%)
	40대	277명(19.7%)	128명(20.0%)
	50대	290명(20.6%)	128명(20.0%)
	60대 이상	381명(27.1%)	128명(20.0%)
거주지역 ¹⁾	수도권	703명(49.9%)	394명(62.0%)
	비수도권	705명(50.1%)	246명(38.0%) ²⁾

자료(설명): 1)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 비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의 거주자

2)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거주자 없음.

2) 연구 절차 및 측정 도구

연구 1에서 복분자-고창 연합 강도를 측정하고자 복분자 연상 지역 상기도(recall)를 이용하였다(Fisher 1979). 복분자 연상 지역 상기도는 응답자에게 최소한의 기억 인출 단서인 복분자를 제시해서 응답자가 기억하는 복분자 생산 지역을 떠올리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측정하였다(양윤 2014). 자료 수집 후 복분자-고창 최초 상기도(top of mind awareness)를 기준으로, 복분자 생산지로 고창을 가장 먼저 떠올린 응답자를 복분자-고창 최초 상기 유 집단(강한 복분자-고창 연합 집단)으로, 고창 이외의 지역을 먼저 떠올린 응답자를 복분자-고창 최초 상기 무 집단(약한 복분자-고창 연합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1의 구체적인 연구 절차와 측정 도구는 다음과 같다. 연구 1의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각 응답자는 먼저 ① 복분자 연상 지역 상기도(개방형 단일 문항: '복분자 하면 떠오르는 지역 이름을 생각이 나는 순서대로 모두 적어주세요.'), ② 지역 무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태도인 복분자 가공상품 태도(7점 척도의 단일 문항), ③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의도인 고창 복분자 가공상품 구입의도(7점 척도의 단일 문항), ④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이용의도인 고창 복분자 관광상품 이용의도(7점 척도의 단일 문항)를 묻는 질문에 답하였다. 이때 복분자 가공상품 태도는 복분자주, 복분자 막걸리, 복분자 잼 등의 다양한 복분자 가공상품 예를 그림과 함께 제시한 후 측정하였다. 또한 고창 지역에서 생산하는 복분자를 활용한 가상의 관광상품(예: 고창에서 열리는 고창 복분자로 아이스크림 만들기 체험 관광)에 대한 간략한 설명문을 제시한 후 각 응답자의 고창 복분자 관광상품 이용의도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응답자는 본인의 ⑤ 성별(범주형 단일 문항), ⑥ 만 연령(개방형 단일 문항), ⑦ 거주지역(범주형 단일 문항)을 묻는 질문에 답하였다.

자료 수집 후 연구목적은 모르는 1명의 연구보조원(국내 대학 심리학

과 학부생)이 복분자 연상 지역 상기도 응답 내용을 기준으로 복분자 하면 고창을 가장 먼저 떠올린 응답자(복분자-고창 최초 상기 유 집단)와 다른 지역 이름을 가장 먼저 떠올린 응답자(복분자-고창 최초 상기 무 집단)를 분류하였다. 또한 연구보조원이 만 연령을 10세 단위의 만 연령대로 범주화하였다.

2.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 모형([그림 1] 참고)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단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절차를 활용하였다(Hayes 2015; Preacher et al, 2007). 1단계에서 복분자 가공상품 태도가 고창 복분자 관광상품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창 복분자 가공상품 구입의도가 매개하는지를 PROCESS Macro 4번 모형을 이용해서 검증한다(가설 1). 2단계에서 복분자-고창 최초 상기 유무(복분자-고창 연합 강도)에 따라서 복분자 가공상품 태도가 고창 복분자 가공상품 구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조절효과)를 PROCESS Macro 1번 모형을 이용해서 검증한다(연구 문제 1). 1단계에서 검증한 매개효과와 2단계에서 검증한 조절효과 모두가 유의하면, 마지막 단계(3단계)에서 PROCESS Macro 7번 모형을 이용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자료 수집 후 1단계로 실시한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복분자 가공상품 태도는 고창 복분자 가공상품 구입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복분자 가공상품 태도와 고창 복분자 가공상품 구입의도 모두 고창 복분자 관광상품 이용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고). 부트스트래핑 검증 결과(5,000회, CI = 95%), 고창 복분자 가공상품 구입의도가 복분자 가공상품 태도와 고창 복분자 관광상품 이용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간접효과(간접효과 = .404, LLCI

= .352, ULCI = .458), 복분자 가공상품 태도가 고창 복분자 관광상품 이용 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직접효과 = .206, LLCI = .158, ULCI = .254) 및 총 효과(총효과 = .610, LLCI = .571, ULCI = .647)는 모두 유의하였다. 또한 매개효과 경로의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매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 = 19.878, p < .001$).

[표 2] 연구 1: 고창 복분자 가공상품 구입의도의 매개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회귀계수	표준오차	t
고창 복분자 가공상품 구입의도	복분자 가공상품 태도	.702	.017	41.715***
$R^2 = .535, F = 1720.144^{***}$				
고창 복분자 관광상품 이용의도	복분자 가공상품 태도	.206	.024	8.448***
	고창 복분자 가공상품 구입의도	.575	.025	22.656***
$R^2 = .554, F = 928.613^{***}$				

자료(설명): * $p < .05$, ** $p < .01$, *** $p < .001$

2단계에서 실시한 조절효과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복분자 가공상품 태도(회귀계수 = .726, $p < .001$)와 복분자-고창 최초 상기 유무(회귀계수 = .372, $p < .05$) 각각은 고창 복분자 가공상품 구입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복분자 가공상품 태도와 복분자-고창 최초 상기 유무의 상호작용 항은 고창 복분자 가공상품 구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회귀계수 = -.028, $p = .412$). 구체적으로, 복분자-고창 최초 상기 유무 조건 모두에서 복분자 가공상품 태도가 고창 복분자 가공상품 구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표 3 참조). 따라서 복분자-고창 최초 상기 유무는 복분자 가공상품 태도와 고창 복분자 가공상품 구입의도 간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1단계에서 검증한 매개효과는 유의하였으나 2단계에서 검증한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3단계에 해당되는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을 추가로 실시하지 않았다.

[표 3] 연구 1: 복분자-고창 최초 상기 유무의 조건부 효과

조절변인	조건부 효과	Boot 표준오차	Boot LLCI	Boot ULCI
복분자-고창 최초 상기 유	.671	.025	.622	.719
복분자-고창 최초 상기 무	.699	.023	.653	.744

3. 논의

연구 1의 결과, 복분자 가공상품 태도는 고창 복분자 관광상품 이용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복분자 가공상품 태도는 고창 복분자 가공상품 구입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고창 복분자 가공상품 구입의도는 고창 복분자 관광상품 이용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고창 복분자 가공상품 구입의도는 복분자 가공상품 태도와 고창 복분자 관광상품 이용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가설 1 지지). 그러나 복분자-고창 최초 상기 유무(복분자-고창 연합 강도)는 복분자 가공상품 태도가 고창 복분자 가공상품 구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조절하지 않았다(연구문제 1의 결과 확인).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복분자-고창 연합 강도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러 메타분석 연구에 의하면, 연구 방법에 따라서 변인 간의 관계 검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Brown and Stayman 1992; Noar et al, 2016). 이 점을 고려하면, 연구 1에서 사용한 연구 방법의 한계로 인해 복분자-고창 연합 강도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연구 1에서 사용한 연구 방법의 다음과 같은 한계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는 연구 2의 연구 방법을 새롭게 설계하였다.

첫째, 특산물 관여도는 특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개인적 관심도와 중요도 인식 정도를 말한다(Antil 1984). 연구 1에 참여한 응답자의 복분자에 대한 관여도가 낮다면, 복분자-고창 연합 강도가 높더라도 지역 표시의 긍정 효과(고창 복분자 가공상품 구입의도 제고)가 발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복분자-고창 연합 강도에 따라서 복분자 가공상품 태도가 고창 복분자 가공상품 구입의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의 유의한 차이가 없을 수 있다. 따라서 복분자보다 관여도가 높은 특정 특산물을 추가로 선정해서 복분자와 함께 연구 2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1에서 복분자 가공상품 태도와 고창 복분자 가공상품 구입의도를 측정할 때 1개의 복분자 가공상품을 지정하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복분자 가공상품을 예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마다 서로 다른 복분자 가공상품을 기준으로 복분자 가공상품 태도와 고창 복분자 가공상품 구입의도를 묻는 질문에 답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혼입효과를 막기 위해 연구 2에서 특정한 단일 복분자 가공상품(vs. 복분자보다 관여도가 높은 특산물의 가공상품)을 응답자들에게 제시한 후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셋째, 연구 1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개념적인 고창 복분자 관광상품 설명문을 응답자들에게 제시하고 고창 복분자 관광상품 이용의도를 측정하였다. 이와 달리 연구 2에서는 현재 실제로 운영 중인 고창 복분자 관광상품(vs. 복분자보다 관여도가 높은 특산물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응답자들에게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이용의도를 측정할 것이다. 넷째, 고창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보다 복분자-고창 연합 강도가 강하고, 고창 복분자 관광상품 이용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혼입효과를 막기 위해 고창(vs. 복분자보다 관여도가 높은 특산물을 생산하는 지역)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을 연구 2의 연구 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한다. 다섯째, 한 변인을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는 경우, 측정의 신뢰도가 낮을 수 있다

(Peterson 1994). 그런데 연구 1에서 특산물과 관련된 변인(복분자 가공 상품 태도, 고창 복분자 가공상품 구입의도, 고창 복분자 관광상품 이용 의도) 각각을 7점 척도의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변인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 2에서 복분자(vs. 복분자보다 관여도가 높은 특산물)와 관련된 각 변인을 5점 척도의 3문항으로 측정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 1에서 복분자-고창 연합 강도를 복분자-고창 최초 상기도로 측정하였다. 그런데 복분자-고창 연합 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최초 상기도 외에 재인(recognition)도 있다(Fisher 1979). 이에 연구 2에서 복분자-고창(vs. 복분자보다 관여도가 높은 특산물-지역) 최초 상기도뿐만 아니라 재인도 함께 측정할 것이다. 이때 재인은 응답자가 특정 지역이 특정 특산물의 생산지인 것을 아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측정한다(양윤 2014).

IV. 연구 2: 연구 방법 개선 후속 연구

1. 방법

1) 연구 품목 및 연구 대상

연구 2에서 연구 1의 연구 품목인 고창 복분자(저관여 지역 특산물)와 새롭게 추가한 금산 인삼(고관여 지역 특산물)을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 중심의 공동 마케팅 전략 효과 검증 품목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연구 2에서 복분자주와 인삼주를 지역 무표시 특산물 가공상품으로, 고창 복분자주와 금산 인삼주를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으로, 고창 복분자 축제(매년 6월 개최)와 금산 인삼 축제(매년 10월 개최)를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으로 선택하였다.

국내 조사 회사 패널에서 성별과 연령대로 할당표집(quota sampling)

한 만 20세 이상의 남녀 640명이 연구 2의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모든 응답자는 고창과 금산이 소재한 전라북도과 충청남도에서 거주하지 않았다. 응답자의 성별, 만 연령대, 거주지역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347명(54.2%)이 복분자 하면 고창을 가장 먼저 떠올렸다(복분자-고창 최초 상기 유 집단). 전체 응답자 중 462명(72.2%)이 고창을 복분자 생산지로 알고 있었다(복분자-고창 재인 유 집단). 그리고 전체 응답자 중 310명(48.4%)이 인삼 하면 금산을 가장 먼저 떠올렸다(인삼-금산 최초 상기 유 집단). 전체 응답자 중 542명(84.7%)이 금산을 인삼 생산지로 알고 있었다(인삼-금산 재인 유 집단).

2) 연구 절차 및 측정 도구

연구 2의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한 각 응답자는 먼저 ① 복분자 연상 지역 상기도(개방형 단일 문항: '복분자 하면 떠오르는 지역 이름을 생각해 나는 순서대로 모두 적어주세요.'), ② 복분자-고창 재인(이분형 단일 문항: '전라북도 고창이 복분자 생산지인 것을 아십니까?' - 예/아니오), ③ 복분자 관여도(3문항의 5점 척도: $\alpha = .904$)를 묻는 질문에 답하였다. 이후 각 응답자는 ④ 복분자주 태도(3문항의 5점 척도: $\alpha = .911$), ⑤ 고창 복분자주 구입의도(3문항의 5점 척도: $\alpha = .915$), ⑥ 고창 복분자 축제 방문의도(3문항의 5점 척도: $\alpha = .930$)를 묻는 질문에 답하였다.

이상의 질문 모두에 답한 각 응답자는 ⑦ 인삼 연상 지역 상기도(개방형 단일 문항: '인삼 하면 떠오르는 지역 이름을 생각해 나는 순서대로 모두 적어주세요.'), ⑧ 인삼-금산 재인(이분형 단일 문항: '충청남도 금산이 인삼 생산지인 것을 아십니까?' - 예/아니오), ⑨ 인삼 관여도(3문항의 5점 척도: $\alpha = .930$)를 묻는 질문에 답하였다. 이후 각 응답자는 ⑩ 인삼주 태도(3문항의 5점 척도: $\alpha = .915$), ⑪ 금산 인삼주 구입의도(3문항의 5점 척도: $\alpha = .953$), ⑫ 금산 인삼 축제 방문의도(3문항의 5점 척도: $\alpha = .951$)

를 묻는 질문에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응답자는 본인의 ⑬ 성별(범주형 단일 문항), ⑭ 만 연령(개방형 단일 문항), ⑮ 거주지역(범주형 단일 문항)을 묻는 질문에 답하였다.

이상의 절차에서 복분자와 인삼 관여도는 이수범 외(2015)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해서 측정하였다. 복분자주와 인삼주의 설명문(예: 맛, 기능)을 응답자들에게 제시한 후 주현철 외(2019)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해서 복분자주와 인삼주 태도를 측정하였다. 고창 복분자주와 금산 인삼주 구입의도 역시 주현철 외(2019)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해서 측정하였다. 또한 고창 복분자 축제와 금산 인삼 축제의 설명문(예: 개최 일시, 주요 행사 내용)을 응답자들에게 제시한 후 주현철 외(2019)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수정해서 고창 복분자 축제와 금산 인삼 축제 방문의도를 측정하였다.

자료 수집 후 연구 1에 참여하지 않았고 연구목적을 모르는 1명의 연구보조원(국내 대학 심리학과 학부생)이 복분자 또는 인삼 연상 지역 상기도 응답 내용을 기준으로 복분자 또는 인삼 하면 고창 또는 금산을 가장 먼저 떠올린 응답자(복분자-고창 또는 인삼-금산 최초 상기 유 집단)와 다른 지역 이름을 가장 먼저 떠올린 응답자(복분자-고창 또는 인삼-금산 최초 상기 무 집단)를 분류하였다. 또한 연구보조원이 만 연령을 10세 단위의 만 연령대로 범주화하였다.

2. 결과

1) 복분자와 인삼 관여도 비교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인삼 관여도($M = 3.353, SD = .925$)는 복분자 관여도($M = 3.001, SD = .879$)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639) = 10.801, p <$

.001). 따라서 연구 2에서 인삼은 고관여 지역 특산물이며, 복분자는 저 관여 지역 특산물에 해당한다.

2) 특산물-지역 최초 상기 유무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특산물-지역 연합 강도를 특산물-지역 최초 상기 유무로 측정된 연구 모형(그림 1) 참고)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1과 동일한 3단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절차를 활용하였다.

(1) 고창 복분자

1단계에서 실시한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복분자주 태도는 고창 복분자주 구입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복분자주 태도는 고창 복분자 축제 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고창 복분자주 구입의도는 고창 복분자 축제 방문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고). 부트스트래핑 검증 결과(5,000 회, CI = 95%), 고창 복분자주 구입의도가 복분자주 태도와 고창 복분자 축제 방문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간접효과(간접효과 = .429, LLCI = .341, ULCI = .518)와 총효과(총효과 = .494, LLCI = .423, ULCI = .565)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복분자주 태도가 고창 복분자 축제 방문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직접효과 = .065, LLCI = -.030, ULCI = .161). 또한 매개효과 경로의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 = 10.960, p < .001$).

2단계에서 실시한 조절효과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복분자주 태도는 고창 복분자주 구입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회귀계수 = .720, $p < .001$). 그러나 복분자-고창 최초 상기 유무(회귀계수 = .318, $p = .082$) 그리고 복분자주 태도와 복분자-고창 최초 상기 유무의 상호작용

용 향(회귀계수 = -.037, $p = .460$)은 고창 복분자주 구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복분자-고창 최초 상기 유무는 복분자주 태도가 고창 복분자주 구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복분자-고창 최초 상기 유무 조건 모두에서 복분자주 태도가 고창 복분자주 구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표 5 참고). 복분자-고창 최초 상기 유무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3단계에 해당하는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지 않았다.

[표 4] 연구 2: 고창 복분자주 구입의도의 매개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회귀계수	표준오차	t
고창 복분자주 구입의도	복분자주 태도	.706	.026	27.638***
$R^2 = .545, F = 763.875^{***}$				
고창 복분자 축제 방문의도	복분자주 태도	.065	.049	1.345
	고창 복분자주 구입의도	.607	.051	11.935***
$R^2 = .367, F = 184.523^{***}$				

자료(설명): * $p < .05$, ** $p < .01$, *** $p < .001$

[표 5] 연구 2: 복분자-고창 최초 상기 유무의 조건부 효과

조절변인	조건부 효과	Boot 표준오차	Boot LLCI	Boot ULCI
복분자-고창 최초 상기 유	.682	.035	.614	.750
복분자-고창 최초 상기 무	.720	.037	.647	.792

(2) 금산 인삼

1단계에서 실시한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삼주 태도는 금산 인삼주 구입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인삼주 태도와 금산 인삼주 구입의도 모두 금산 인삼 축제 방문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고). 부트스트래핑 검증 결과(5,000회, CI = 95%), 금산 인삼주 구입의도가 인삼주 태도와 금산 인삼

축제 방문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간접효과(간접효과 = .478, LLCI = .393, ULCI = .563), 인삼주 태도가 금산 인삼 축제 방문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직접효과 = .140, LLCI = .052, ULCI = .228) 및 총효과(총효과 = .618, LLCI = .555, ULCI = .680)는 모두 유의하였다. 또한 매개효과 경로 의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 = 12.552, p < .001$).

[표 6] 연구 2: 금산 인삼주 구입의도의 매개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회귀계수	표준오차	t
금산 인삼주 구입의도	인삼주 태도	.792	.025	31.376***
$R^2 = .607, F = 984.459***$				
금산 인삼 축제 방문의도	인삼주 태도	.140	.045	3.123**
	금산 인삼주 구입의도	.603	.044	13.691***
$R^2 = .513, F = 335.445***$				

자료(설명): * $p < .05$, ** $p < .01$, *** $p < .001$

2단계에서 실시한 조절효과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삼주 태도는 금산 인삼주 구입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회귀계수 = .766, $p < .001$). 그러나 인삼-금산 최초 상기 유무(회귀계수 = -.085, $p = .616$) 그리고 인삼주 태도와 인삼-금산 최초 상기 유무의 상호작용 항(회귀계수 = .046, $p = .361$)은 금산 인삼주 구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인삼-금산 최초 상기 유무가 인삼주 태도가 금산 인삼주 구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인삼-금산 최초 상기 유무 조건 모두에서 인삼주 태도가 금산 인삼주 구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표 7 참조). 이상과 같이 인삼-금산 최초 상기 유무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3단계에 해당하는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지 않았다.

[표 7] 연구 2: 인삼-금산 최초 상기 유무의 조건부 효과

조절변인	조건부 효과	Boot 표준오차	Boot LLCI	Boot ULCI
인삼-금산 최초 상기 유	.812	.036	.742	.882
인삼-금산 최초 상기 무	.766	.036	.695	.836

3) 특산물-지역 재인 유무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특산물-지역 연합 강도를 특산물-지역 재인 유무로 측정된 연구 모형(그림 1) 참고)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1과 동일한 3단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절차를 활용하였다.

(1) 고창 복분자

복분자-고창 재인 유무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절차 중 1단계에 해당하는 고창 복분자주 구입의도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앞서 논의한 복분자-고창 최초 상기 유무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절차 중 1단계에 해당하는 고창 복분자주 구입의도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와 동일하다. 따라서 고창 복분자주 구입의도는 복분자주 태도가 고창 복분자 축제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매개하였다(표 4) 참고).

2단계에서 실시한 조절효과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복분자주 태도는 고창 복분자주 구입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회귀계수 = .664, $p < .001$). 그러나 복분자-고창 재인 유무(회귀계수 = .270, $p = .151$) 그리고 복분자주 태도와 복분자-고창 재인 유무의 상호작용 항(회귀계수 = .016, $p = .771$)은 고창 복분자주 구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복분자-고창 재인 유무는 복분자주 태도가 고창 복분자주 구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복분자-고창 재인 유무 조건 모두에서 복분자주 태도가 고창 복분자주 구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표 8) 참고). 복분자-고창 재인

유무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3단계에 해당하는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지 않았다.

[표 8] 연구 2: 복분자-고창 재인 유무의 조건부 효과

조절변인	조건부 효과	Boot 표준오차	Boot LLCI	Boot ULCI
복분자-고창 재인 유	.680	.031	.620	.740
복분자-고창 재인 무	.664	.044	.578	.751

(2) 금산 인삼

인삼-금산 재인 유무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절차 중 1단계에 해당하는 금산 인삼주 구입의도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앞서 논의한 인삼-금산 최초 상기 유무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절차 중 1단계에 해당하는 금산 인삼주 구입의도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와 동일하다. 따라서 금산 인삼주 구입의도는 인삼주 태도가 금산 인삼 축제 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매개하였다([표 6] 참고).

2단계에서 실시한 조절효과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삼주 태도는 금산 인삼주 구입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회귀계수 = .665, $p < .001$). 그러나 인삼-금산 재인 유무(회귀계수 = -.135, $p = .517$) 그리고 인삼주 태도와 인삼-금산 재인 유무의 상호작용 항(회귀계수 = .129, $p = .068$)은 금산 인삼주 구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인삼-금산 재인 유무가 인삼주 태도가 금산 인삼주 구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인삼-금산 재인 유무 조건 모두에서 인삼주 태도가 금산 인삼주 구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표 9] 참고). 인삼-금산 재인 유무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3단계에 해당하는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지 않았다.

[표 9] 연구 2: 인삼-금산 재인 유무의 조건부 효과

조절변인	조건부 효과	Boot 표준오차	Boot LLCI	Boot ULCI
인삼-금산 재인 유	.794	.028	.739	.849
인삼-금산 재인 무	.665	.065	.538	.792

3. 논의

저관여 지역 특산물인 복분자와 관련된 연구 2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복분자주 태도는 고창 복분자 축제 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복분자주 태도는 고창 복분자주 구입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고창 복분자주 구입의도는 고창 복분자 축제 방문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고창 복분자주 구입의도는 복분자주 태도와 고창 복분자 축제 방문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가설 1 지지). 그러나 복분자-고창 최초 상기 유무와 복분자-고창 재인 유무는 복분자주 태도가 고창 복분자주 구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않았다(연구문제 1의 결과 확인). 즉, 복분자-고창 최초 상기 유무와 복분자-고창 재인 유무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없었다.

고관여 지역 특산물에 해당하는 인삼과 관련된 연구 2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삼주 태도는 금산 인삼 축제 방문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인삼주 태도는 금산 인삼주 구입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금산 인삼주 구입의도는 금산 인삼 축제 방문의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금산 인삼주 구입의도는 인삼주 태도와 금산 인삼 축제 방문의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가설 1 지지). 그러나 인삼-금산 최초 상기 유무와 인삼-금산 재인 유무는 인삼주 태도가 금산 인삼주 구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않았다(연구문제 1의 결과 확인). 이 결과에 따르면 인삼-금산 최초 상기 유무와 인

삼-금산 재인 유무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없었다.

이와 같은 연구 2의 결과를 통해, 지역 특산물의 관여도 수준(복분자 vs. 인삼) 그리고 특산물-지역 연합 강도 측정 방법(최초 상기도 vs. 재인)과 무관하게 '지역 무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태도 →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의도 →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이용의도'의 매개효과는 발생하지만(가설 1 지지), 이와 같은 매개효과를 특산물-지역 연합 강도가 조절하지 않는다(연구문제 1의 결과 확인)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V. 종합 논의

연구 1과 연구 2에서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예: 고창 복분자주) 구입의도가 지역 무표시 특산물 가공상품(예: 복분자주) 태도가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예: 고창 복분자 축제)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특산물-지역 연합 강도(예: 복분자-고창 최초 상기 유무, 복분자-고창 재인 유무)에 따라서 지역 무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태도가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의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달라지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연구 1과 연구 2를 통해 '지역 무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태도 →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의도 →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이용의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지만(가설 1 지지), 이와 같은 매개효과를 특산물-지역 연합 강도가 조절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연구문제 1의 결과 확인).

연구 1과 연구 2에서 확인한 특산물-지역 연합 강도가 지역 무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태도와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의도 간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첫째, 특산물-지역 연합 강도가 강할수록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의 외적 속성인 지

역 표시가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의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클 것이다. 따라서 지역 표시 효과를 좌우하는 특산물-지역 연합 강도는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의 내적 속성 평가 결과인 지역 무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태도와 함께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의 내적 속성 평가 결과에 해당하는 지역 무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태도가 외적 속성인 지역 표시보다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Sanyal and Datta 2011). 특히 지역 표시가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지나치게 미약한 경우, 지역 표시 효과를 결정하는 특산물-지역 연합 강도가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 결과,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특산물-지역 연합 강도가 지역 무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태도와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의도 간의 관계를 조절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후속 연구를 통해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의 외적 속성인 지역 표시와 내적 속성 평가 결과인 지역 무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태도가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의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차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비자는 농·축·수산물의 생산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에 비해 가공상품의 생산 지역에 대한 관심은 낮다(이계임 외 2011). 따라서 연구 1과 연구 2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의 지역 표시에 주목하지 않아서 특산물-지역 연합 강도의 조절효과가 발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의 지역 표시를 시각적으로 강조하여(예: 지역 표시와 함께 고창의 브랜드 로고를 응답자들에게 제시함), 후속 연구에서 특산물-지역 연합 강도가 지역 무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태도와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의도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확인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연구 2에서 복분자를 저관여 지역 특산물로, 인삼을 고관여 지역 특산물로 선정하였고, 인삼 관여도(3.353)가 복분자 관여도(3.001)보다 유의하게 높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관여도 측정에 사용된 5점 척도의 중간값이 3점임을 고려하면, 인삼 관여도와 복분자 관여도 모두 높은 수준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품목인 인삼과 복분자의 관여도 모두 높지 않다면, 인삼-금산과 복분자-고창 연합 강도에 따라서 인삼주와 복분자주 태도가 금산 인삼주와 고창 복분자주 구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개입하는 지역 표시의 긍정 효과(예: 금산 인삼주나 고창 복분자 구입의도 제고)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특산물-지역 연합 강도의 조절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인지도와 관여도가 높은 지역 특산물(예: 황성 한우)을 선정해서 특산물-지역 연합 강도의 조절효과 발생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연구 2에서 측정된 태도와 구입의도의 대상은 지역 특산물(인삼, 복분자)이 아닌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인삼주, 복분자주)이다. 따라서 지역 특산물에 대한 관여도 차이가 아닌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에 대한 관여도 차이가 특산물-지역 연합 강도가 지역 무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태도와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의도 간의 인과성을 조절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고려해서 관여도의 차이가 있는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을 이용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조절효과를 검증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무표시 특산물 가공상품(예: 복분자주)에 대한 태도보다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의 제품군(예: 주류)에 대한 태도가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결과,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의 제품군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면, 특산물-지역 연합 강도와 무관하게 지역 무표시 특산물 가공상품에 대한 태도와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의도 간 정적 관련성이 일관되게 강할 것이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의 제품군에 대한 태도를 측정 한 후 이를 통계적으로 통제된 조건에서 특산물-지역 연합 강도가 지역 무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태도와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의도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그리고 실무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 중심의 공동 마케팅 전략인 지역 특산물 가공 상품과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의 위계적인 연계 방법(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판매 촉진을 통한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의 활성화)을 개념적으로 제안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지역 특산물 가공 상품 중심의 공동 마케팅 전략(전국 단위의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 판매 촉진 →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이용자 유치)은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중심의 공동 마케팅 전략(다수의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이용자 유치 →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 판매 촉진)과 달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조직이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의 이용자 수를 늘리는 추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전제가 없다. 실무적 측면에서 전국 단위의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 판매를 늘리는 것이 다수의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이용자 수를 늘리는 것보다 쉬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 중심의 공동 마케팅 전략이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중심의 공동 마케팅 전략보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특산물 관광 상품 중심의 공동 마케팅 전략 효과를 검증한 다수의 선행연구가 있지만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 중심의 공동 마케팅 전략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선행연구는 소수란 점(Huang et al, 2020)도 본 연구가 가진 이론적 함의이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특정 지역의 특산물 가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구입의도가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기반으로 한 관광상

품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셋째, 본 연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조직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실무적 함의를 제공한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특정 지역과 특산물 간의 연합 강도를 강화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예: 복분자와 고창 간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고창 복분자주 SNS 광고)보다 지역 무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자체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 태도를 형성하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동(예: 복분자주의 효능을 알리는 고창 복분자주 SNS 광고)이 해당 지역의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의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지역의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입의도가 높아지면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기반으로 한 관광상품의 소비자 이용의도가 높아져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앞서 논의한 본 연구의 이론적 그리고 실무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과 그 제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후속 연구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연구 1과 연구 2는 연구 변인 간 시간적 우선성(temporal priority)과 혼입변인 통제가 확실하게 확보되지 않은 일회성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역 무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태도와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의도 그리고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의도와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이용의도 간의 인과성을 명확하게 검증하지 못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 실험 또는 2회 이상의 설문조사 실시 결과를 기반으로 한 교차지연 패널 상관(cross-legged-panel correlation) 분석을 활용해서 연구 변인 간 쌍별 인과성을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강정석 2022). 둘째, 연구 대상에 따라서 지역(예: 보성, 고창)과 특산물(예: 녹차, 복분자)에 대한 사전 정보나 지식, 태도, 선호도 등이 다를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인차 변인이 연구 변인 간의 관계에 혼입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혼입효과

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개인차 변인을 조작하거나 통계적으로 통제하는 후속 연구의 실시가 요구된다. 셋째,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은 경험재에 해당한다(Greenwood and Dwyer 2014). 따라서 소비자는 신뢰할 수 있는 선행 체험을 통해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이용의도를 결정한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이용의도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신뢰할 수 있는 선행 체험은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 후 긍정적 소비 경험(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에 대한 긍정 평가)이다(Alderighi et al. 2016).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소비 경험이 아닌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의도를 측정 한 후 연구 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후속 연구에서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 경험자를 대상으로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에 대한 소비 후 평가가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는 지역 표시가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의도와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이용의도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고창 복분자나 금산 인삼이라는 실제로 존재하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였다. 다양한 혼입변인(예: 지역 특산물에 대한 사전 지식 및 선호도 차이)의 개입을 막으면서 순수한 지역 표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 가상의 지역 특산물(예: 인천 샤인머스켓)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 2에서 사용한 연구 품목인 특산물 가공상품이 복분자주와 인삼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특산물 가공상품을 이용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강정석, 2022. 『독학사 4단계 심리학: 심리학연구방법론』, 서울: 시대고시기획.
- 권상미·이관표, 2011. 「축제의 품질과 만족이 지역 특산품의 인지도와 구매의사에 미치는 영향: 한방바이오축제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3(1): 429-446.
- 김상훈·박현정, 2010. 「제조 원산지과 브랜드 원산지가 소비자의 품질 인식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마케팅연구 25(2): 19-40.
- 김연선, 2014. 「관광펜션의 웹사이트 신뢰형성요인과 신뢰도, 구매의도 및 만족도와의 관계 연구」, 호텔관광연구 16(1): 1-17.
- 김영남·서용진·정철, 2011. 「지역축제 참가자의 지역특산물 구매행동: 제주 들불축제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5(3): 197-217.
- 민승기·조정은·서혜영, 2021.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지리적 표시제 발전방향」, 식품과학과 산업 54(4): 260-267.
- 박소진·손상희·경길영, 2017. 「지역특산물 브랜드체험이 브랜드지식, 구매의도, 관광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청도 와인터널을 중심으로」, 마케팅논집 25(1): 27-45.
- 백남길·함동철, 2015. 「농산물의 지리적 표시 기능이 지역이미지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27(3): 361-377.
- 서정욱, 2006. 「지리적 표시제 도입이 지역 문화산업 진흥에 미치는 영향: 보성녹차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2): 229-244.
- 안국찬, 2013.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방안」, 한국자치행정학보 27(4): 41-56.
- 양윤, 2014. 『소비자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양현석·정근오, 2008. 「지역산업연관모형과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재정정책논집 10(1): 31-60.
- 오두범, 2005. 「지역 브랜드 평판이 지역 산출물에 대한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언론학보 49(1): 108-132.
- 우승균·설상철·정성광, 2013. 「지역 원산지 명성과 브랜드 인지도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구매목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16(3): 99-117.
- 이계임·조소현·전상근·김성훈·송양훈, 2011. 「농식품 원산지표시의 효과 분석과 활용도 제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수범·문원기·송민호·신명희, 2015. 「소비자 지향적 정보제공을 위한 홈쇼핑 영상구성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46(1): 1-28.

- 이승훈. 2006. 「전자상거래에 의한 지역 특산물 포장디자인의 브랜드 이미지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용수. 2012. 「고전적 조건화 모델을 통해 본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형성과 효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포럼 35: 329-342.
- 조정은·김동진·김현정. 2009.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관한 연구」.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15(4): 159-171.
- 주현철·임정섭·강정석. 2019. 「브랜드확장에 대한 내·외현태도가 구입의향에 미치는 영향: 모브랜드-브랜드확장 유사성의 조절효과」.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10): 901-911.
- 홍성익·김유찬. 2016.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16(1): 159-184.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50: 179-211.
- Alderighi, M., Bianchi, C., and Lorenzini, E. 2016. "The impact of local food specialities on the decision to (re) visit a tourist destination: Market-expanding or business-stealing?" *Tourism Management* 57: 323-333.
- Antil, J. H. 1984. "Conceptualization and Operationalization of Involvement."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1: 203-209.
- Aydin, B., Erdogan, B. Z., and Baloglu, S. 2021. "Examining the role of country ima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uisine image and intention to visit a country."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Research* 23(4): 555-568.
- Brown, S. P., and Stayman, D. M. 1992.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Attitude Toward the Ad: A Meta-Analysi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1): 34-51.
- Choi, K., Kang, H., and Kim, C. 2021. "Evaluating the efficiency of Korean festival tourism and its determinants on efficiency change: Parametric and non-parametric approaches." *Tourism Management* 86: 104348.
- Enneking, U., Neumann, C., and Henneberg, S. 2007. "How important intrinsic and extrinsic product attributes affect purchase decision." *Food Quality and Preference* 18(1): 133-138.

- Fisher, R. P. 1979. "Retrieval Operations in Cued Recall and Recognition." *Memory & Cognition* 7(3): 224-231.
- Greenwood, V., and Dwyer, L. 2014. "Challenges to Consumer Protection Legislation in Tourism Contexts." *Journal of Tourism Consumption and Practice* 6(2): 1-22.
- Grieco, C., and Iasevoli, G. 2017. "Co-Marketing Alliances: Definitions and Approaches. Insights from a Literature Review." *Management Research Review* 40(9): 971-989.
- Hayes, A. F. 2015. "An index and test of linear moderated mediation."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50(1): 1-22.
- Huang, S. C. L., Wang, C. Y., and Yan, Y. R. 2020. "Motivational typology of online food souvenir shoppers and their travel-related intentions." *Sustainability* 12(18): 7624.
- John, D. R., Loken, B., Kim, K., and Monga, A. B. 2006. "Brand Concept Maps: A Methodology for Identifying Brand Association Network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3(4): 549-563.
- Kavaratzis, M., and Ashworth, G. 2005. "CITY BRANDING: AN EFFECTIVE ASSERTION OF IDENTITY OR A TRANSITORY MARKETING TRICK?"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96(5): 506-514.
- _____. 2008. "Place Marketing: How Did We Get Here and Where Are We Going?" *Journal of Place Management and Development* 1(2): 150-165.
- Kivela, J., and Crotts, J. C. 2006. "Tourism and gastronomy: Gastronomy's influence on how tourists experience a destination."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Research* 30(3): 354-377.
- Machleit, K. A., and Wilson, R. D. 1988. "Emotional Feelings and Attitude toward the Advertisement: The Roles of Brand Familiarity and Repetition." *Journal of Advertising* 17(3): 27-35.
- MacKenzie, S. B., Lutz, R. J., and Belch, G. E. 1986. "The Role of Attitude toward the Ad as a Mediator of Advertising Effectiveness: A Test of Competing Explanation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3(2): 130-143.
- Mariani, M., and Okumus, B. 2022. "Features, drivers, and outcomes of

- food tourism.” *British Food Journal* 124(2): 401-405.
- Mueller, S., and Szolnoki, G. 2010. “The relative influence of packaging, labelling, branding and sensory attributes on liking and purchase intent: Consumers differ in their responsiveness.” *Food Quality and Preference* 21(7): 774-783.
- Mules, T., and Dwyer, L. 2006. “Public sector support for sport tourism events: The role of cost-benefit assessment.” *Sport in Society* 8(2): 338-355.
- Noar, S. M., Hall, M. G., Francis, D. B., Ribisl, K. M., Pepper, J. K., and Brewer, N. T. 2016. “Pictorial Cigarette Pack Warnings: A Meta-Analysis of Experimental Studies.” *Tobacco Control* 25: 341-354.
- Peterson, R. A. 1994. “A Meta-Analysis of Cronbach’s Coefficient Alpha.”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1(2): 381-391.
- Preacher, K. J., Rucker, D. D., and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 Rachmat, R. A. H., Hurriyati, R., and Sultan, M. A. 2019. “Product Differentiation, Celebrity Endorsement and Purchase Intention: Case Study of Makuta Cake Bandung, West Java, Indonesia.” *Global Business and Management Research: An International Journal* 11(1): 275-283.
- Raz, C., Piper, D., Haller, R., Nicod, H., Dusart, N., and Giboreau, A. 2008. “From sensory marketing to sensory design: How to drive formulation using consumers’ input?” *Food Quality and Preference* 19(8): 719-726.
- Rousta, A., and Jamshidi, D. 2020. “Food tourism value: Investigating the factors that influence tourists to revisit.” *Journal of Vacation Marketing* 26(1): 73-95.
- Sanyal, S., and Datta, S. K. 2011. “The effect of perceived quality on brand equity: an empirical study on generic drugs.” *Asia Pacific Journal of Marketing and Logistics* 23(5): 604-625.
- Suhartanto, D., Dean, D., Sosianika, A., and Suhaeni, T. 2018. “Food souvenirs and their influence on tourist satisfaction and behavioural intentions.” *European Journal of Tourism Research* 18: 133-145.

- Teuber, R. 2010. "Geographical Indications of Origin as a Tool of Product Differentiation: The Case of Coffee," *Journal of International Food and Agribusiness Marketing* 22(3-4): 277-298.
- Ward, J., and Loken, B. 1988. "The Generality of Typicality Effects on Preference and Comparison: An Exploratory Test."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5: 55-62.
- Wee, C. S., Ariff, M. S. B. M., Zakuan, N., Tajudin, M. N. M., Ismail, K., and Ishak, N. 2014. "Consumers perception, purchase intention and actual purchase behavior of organic food products." *Review of Integrative Business and Economics Research* 3(2): 378-397.
- Wu, D. G., and Chalip, L. 2014. "Effects of co-branding on consumers' purchase intention and evaluation of apparel attributes." *Journal of Global Scholars of Marketing Science* 24(1): 1-20.

"올해 추석 선물도 '지역특산물'·'택배'가 대세." 전남일보. 2021.8.30. <http://www.jnilbo.com/65678262890>(검색일: 2023년 4월 16일)

"전북 인구·재정자립도 최하위... 특단 지원책 절실." 전라일보. 2020.8.19.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6082>(검색일: 2023년 4월 16일)

블랙키위(<https://blackkiwi.net/>)

국 문 초 록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 중심의 공동 마케팅 전략 제안

강정석(전북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강선우(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 판매 촉진을 통한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이용자 수를 늘리는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 중심의 공동 마케팅 전략을 실증적 검증에 기반하여 제안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만 2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예: 고창 복분자주) 구입의도는 지역 무표시 특산물 가공상품(예: 복분자주) 태도가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예: 고창 복분자 축제)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특산물-지역 연합 강도(예: 복분자-고창 최초 상기도)는 지역 무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태도가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구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않았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무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태도 개선 → 지역 표시 특산물 가공상품 판매 촉진 →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이용자 수 증대'의 전략을 제안한다.

주제어: 공동 마케팅, 특산물-지역 연합 강도, 지역 표시, 지역 특산물 가공상품, 지역 특산물 관광상품

Abstract

A Proposal for a Co-Marketing Strategy to Focus on Local Specialty Processed Products

Kang, Jungsuk(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Psycholog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Kang, Seonwoo(Master Student, Department of Psycholog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suggests a co-marketing strategy focused on increasing the number of consumers using local specialty tourism products by promoting the sales of local specialty processed products, which is supported by an empirical examination. Two online surveys were conducted with individuals aged 20 years or older. Consequently, the intention to purchase local specialty processed products with a regional indication (e.g., Gochang Bokbunjaju) mediated the effect of attitude toward local specialty processed products without a regional indication (e.g., Bokbunjaju) on the intention to use local specialty tourism products with a regional indication (e.g., Gochang Bokbunja Festival). However, specialty-region association strength (e.g., top-of-mind awareness of Bokbunja-Gochang) did not moderate the impact of attitude toward local specialty processed products without a regional indication on the intention to purchase local specialty processed products with a regional indica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proposes a strategy of 'improving consumer attitude toward local specialty processed products without a regional indication → promoting the sales of local specialty processed products with a regional indication → increasing the number of consumers to use local specialty tourism products with a

regional indication' to revive local economy.

Key words: Co-Marketing, Specialty-Region Association Strength, Regional Indication, Local Specialty Processed Products, Local Specialty Tourism Products

서평

▣ 주목받는 미래 자율주행으로 엿보다
『퓨처라마 모빌리티 혁명의 미래』 변완희 지음.
2021. 서울: 크레파스북.
한대희

주목받는 미래 자율주행으로 엇보다

『퓨처라마 모빌리티 혁명의 미래』. 변완희 지음. 2021. 서울: 크레파스북.

한대회*

대중교통 확대로 도시교통 문제는 해결되는가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으로 우리의 삶과 도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의문을 해결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안내서로서, 변완희의 『퓨처라마 모빌리티 혁명의 미래』를 주목한다.

저자 변완희는 공공 영역에서 교통을 연구하는 학자이다. (참고로 T맵이나 카카오처럼 민간 분야에서 교통서비스를 연구하는 학자도 있다.) 그는 민간도로, 주차장, 녹색교통 등 전통적인 도시교통 분야와 지능형교통체계, 공유자전거, 통합 모빌리티 등 첨단교통까지 다양한 분야 업무를 수행하였다. 최근에는 그의 저서 『배려도시』, 『걸을 수 있는 도시, 걸어야 하는 도시(공저)』에서 자동차에 빼앗긴 보행권 회복을 주장하였다. 교통의 다방면 전문가인 그가 이번에는 첨단기술의 집약체인 자율주행자동차로 미리 보는 세상을 책으로 소개하였다. 많은 교통전문가들은 대중교통이 도시교통 문제의 해결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자는 “도시문제 해결에 있어 대중교통의 한계는 명확하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마냥 등을 떠미는 것보다 자동차를 타고 도심에 진입하기 쉽도록 만드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205쪽)라고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저자가 안내하는 새로운 미래로 떠나본다.

* 교통공학박사, 현대전광역시청 사무관, 前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미래도시융합공학과 겸임교수

과거-현재-미래 연결

저자는 자율주행자동차로 촉발될 도시 대변혁을 설명하기 위해서 총 3부로 책을 구성하였다. 교통수단 발전 역사를 고찰하고, 현재 개발 중 이거나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한 후 이 기술로 인한 미래 변화상을 소개하는 전개를 하였다.

먼저 1부 주제는 “도시와 자동차”이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새로운 기술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맥락 이해는 미래 예측에 좋은 바탕이 될 수 있다. 저자는 도시와 교통수단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도시의 탄생부터 산업혁명 시대, 현대 시대의 도시와 교통수단, 특히 자동차로 인한 도시문제를 연결하였다. 교통과 도시 발전 관계를 역사적인 흐름으로 전개한 서사 방식은 이 책의 후반부에서 자율주행자동차도 사람, 도시와 함께 문명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서술을 암시한다.

역사 고찰 후 2부 주제는 “미래의 모빌리티”이다. 미래 모빌리티 출현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자동차 업계의 위기를 진단하고 새로운 기술 출현을 설명하였다. 배출가스와 연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없는 내연기관의 한계를 보여 준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 약 100년 전 내연기관 자동차에 밀려 사라졌던 전기자동차의 부활, 소유에서 공유로 가치가 변하고 있는 공유자동차, 자동차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출현과 기술개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리고 「전기 + 자율 + 공유」 세 개의 모빌리티가 결합하여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가치를 가질 것일지를 설명하였다.

기술 소개 이후 3부에서는 “도시 대변혁”이란 주제로 자율주행자동차가 가져올 도시교통, 도시공간, 도시생활의 변화를 다뤘다. 도시공간구조 이론이나 일상 속 변화 예시를 통해 논리적으로 미래 변화를 설명한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저자는 자율주행자동차로 변하는 세상을 도

시와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에 초점을 맞춰 고찰하였다. 기존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서적들이 산업이나 기술 발전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다른 저자의 관점이 드러나는 장이다.

에필로그에서 교통전문가인 저자가 변화를 대하는 태도와 성찰을 보여준다. “도시와 사회의 변화를 기업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 이제는 도시전문가들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맞는 도시계획을 하자.”(276쪽)라는 제안으로 기존 계획가들의 변신을 촉구하였다. 자동차를 처음 만든 영국이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 뒤쳐진 이유로 1856년 제정된 영국 의회의 ‘붉은 깃발법(The Locomotive on Highway Act)’을 지목하였다.(277쪽) 혁신과 신기술에 대한 저항을 얘기하고 자율주행자동차도 혁신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여러 프로젝트의 성공·실패 경험 이 축적되면 마침내 도시의 대변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278쪽)로 글을 마무리하였다.

모빌리티 변화를 왜 알아야할까?

큰 변환의 역사에는 과도기가 있다. 한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로 변화하는 도중의 시기, 그리고 그 새로운 상태가 아직 정착하지 않은 불안정한 시기 말이다. 기업의 경우 과도기에 대응을 잘하면 미래에도 성장할 수 있지만 대처를 잘못하면 낙오 정도가 아니라 회사가 없어지기도 한다. 약 백 년 전에는 전기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쟁력에 밀려서 세상에서 사라졌었다. 현재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다시 경쟁하며 IT 회사(구글 등)가 자율주행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과도기이다.

패러다임(paradigm)이 변하고 있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여러 분야에서 자주 사용된다. 그렇다면 패러다임은 언제 변해야 하는 걸까?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은 현재의 패러다임으로 어떤 상황을 설명하지 못할 때이다. 예를 들면 내연기관 자동차의 성능

(연비) 개선으로 온실가스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2015년도에 독일의 아우디폭스바겐 그룹이 연비와 배출가스를 조작한 ‘디젤게이트’를 기억해 보자. 이 사건 이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으로는 결코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로 패러다임 변화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좋아질 미래를 꿈꿀 수 있다. 도시에서 마차가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은 도로 가장자리를 걸었고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보도를 만들었다. 매연이나 악취로 삶의 질이 안 좋았던 산업혁명 시절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증기기관 철도가 발명되자 교외로 빠져나가고 전원도시가 탄생하였다. 포드 자동차의 모델T가 저렴하게 팔리고 고속도로가 놓이면서 도시가 커지고 대도시권이 형성되었다. 개인 소유 자동차가 늘어나고 대중교통도 발달했지만 교통혼잡, 환경오염, 교통약자의 이동권 한계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미래 모빌리티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운전면허증이 없거나 몸이 불편해서 이동에 제약이 있던 사람들도 자율주행자동차를 통해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공유방식 자율주행자동차 덕분에 굳이 자동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어진다. 도로가 막히는 구간을 도심항공교통(UAM)으로 이동한다. 우리 삶의 방식이 변한다.

미래의 인기 직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시대의 인기 직업은 인기학과와 직결된다. 서울대학교의 최고 인기학과는 1960년대 화학·섬유공학과, 1970년대 화학·기계·건축공학과, 1980년대 전자공학·물리학과, 1990년대 컴퓨터공학과, 2000년대 의과대학으로 변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 역사와 맞닿아 있다. 현재 정부는 AI, 반도체, 배터리(정밀화학), 미래자동차 분야 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

모빌리티와 미래권력을 이해할 수 있다. 산업 변화와 관련하여 현재

눈여겨 볼 사실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이끄는 선두 그룹은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2023년 기준으로 자율주행 기업 순위를 참고하면 1위 인텔 모빌아이, 2위 구글 웨이모, 3위 바이두, 4위 GM 크루즈, 5위 현대차 그룹과 미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합작사인 모셔널(미국 본사)이다. 정유회사가 전기자동차 제작에 뛰어들기도 하고 수소에너지에 투자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차 전지 산업이 반도체만큼 큰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거대한 변화가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촉발된 것이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한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공유자동차 등은 첨단 기술로 구성된다. 고성능 배터리 제작 및 관리 기술, 라이다(LiDAR)나 레이더(Radar) 등 감지(Sensing) 기술,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인공지능(AI) 기술과 이를 위한 하드웨어(AI 반도체), 5G 통신기술 등이 주요 핵심기술이다. 디자인도 빼놓을 수 없다. 만일 학생이라면 직업 트렌드를 이해하고 미래 직업을 위해 평소 습득할 지식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 행정가라면 이런 신기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수 있다. 계획가라면 새로운 도시계획을 준비하고 신기술로 인한 사회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도시문제 해결사인가

이 책의 핵심은 “퓨처라마 모빌리티 혁명의 미래”라는 제목에 잘 나타난다. 심지어 표지에 ‘퓨처라마’라는 제목이 가장 큰 글자이다. 이 책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1939년에 그린 미래 퓨처라마는 곧 현실이 된다는 것이다. 본문에서는 “퓨처라마 모빌리티 혁명의 미래”라는 제목에 걸맞게 풍부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퓨처라마의 개념이 무엇인지 처음에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필자가 못 찾았을 수도 있다.) 독자들

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프롤로그에서 ‘퓨처라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로 퓨처라마(Futurama)의 유래는 이렇다. 1939년 뉴욕 세계 박람회에 Norman Bel Geddes가 디자인한 전시 및 놀이기구가 있었는데 20년 후 미래(1959~1960년) 세계의 가능한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자동차 제작사인 General Motors Corporation의 후원을 받아 설치하였고, 자동화된 고속도로와 광대한 교외 지역이 특징이었다. 자율주행자동차(Autonomous Vehicle) 개념은 1939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세계 박람회에서 보여준 GM의 퓨처라마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기술 발달의 한계로 1960년대 그런 고속도로는 구현되지 못했다. 저자는 과거에 그런 미래상인 퓨처라마가 곧 현실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부정적인 결과, 어두운 그늘도 있을 것이다. 저자는 과거 포드의 모델T가 자동차 중심의 삶을 만든 것처럼 자율주행자동차가 인간의 삶을 바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의 장점들이 많이 서술되어 있다. 만일 전기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과 무게 증가로 인한 문제 등을 다루었으면 보다 균형 있는 논의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지만 미세먼지 배출은 많다는 것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이다. 이유는 배터리 탑재로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무거워서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에서 미세먼지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문제는 지구가 병드는 것과 관련된 문제라면 미세먼지는 사람의 몸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다. 미세먼지 관점으로 보면 전기자동차인 자율주행자동차가 무제한으로 도로를 돌아다니는 것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장수는 교수(서울대학교)는 “자동차 무게에 기반한 새로운 정책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만일 개정관을 준비한다면 이러한 논의를 추가

하여 보다 다양한 시각과 논의를 반영하기를 제안한다.

자율주행으로 펼쳐질 미래도시를 찾는다면

변완희의 『퓨처라마 모빌리티 혁명의 미래』는 도시와 교통의 상호관계에 대한 해석,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이 가져올 변화 등을 연결하여 미래도시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출간된 기존 도서들이 기술개발 동향이나 시장 분석에 집중한 것과 달리 자율주행자동차가 도시와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도시교통의 한계에 대한 현실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 기술 발전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과 도시 생활을 변화시킬지에 대한 저자의 논지와 증거 등은 기술 활용의 이해를 높이고, 미래의 교통과 도시,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섭하고자 하는 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도시연구』 후보

- | 『도시연구』 발간연혁
- |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활동
- | 『도시연구』 학술행사 보고

『도시연구』 발간연혁

발행일	통권	내용	비고
2007. 10. 15.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논단: 인천 경제 자유 구역(『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방향』) 외 3편) • 지역연구: 『버스-도시철도 간 물리적 환승 환경 평가 연구』 외 2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연구』 제호 발행
2008. 10. 15.	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논단: 인천의 도시재생(『도시재생사업과 산업기능 확보방안』) 외 2편) • 지역연구: 『소비자의 아파트 구매결정요인과 마케팅 전략』 외 1편 	
2009. 10. 15.	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논단: 국가경쟁력과 도시브랜드(『국가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의 도시브랜드 전략 방향』) 외 3편) • 지역연구: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의 정태적·동태적 경영효율성 평가』 외 3편 	
2010. 10. 15.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논단: 인천의 공간구조와 위상(『수도권의 공간구조 진단과 경인발전축의 정책방향 모색』) 외 3편) • 지역연구: 『주거이동과 화물통행 패턴으로 본 인천의 공간구조』 외 2편 	
2011. 10. 15.	제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논단: 인천광역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 전략(『보편적 복지 논쟁의 맥락과 쟁점』) 외 3편) • 지역연구: 『도시림 보전관리를 위한 생태평가 방법의 적용』 외 1편 	
2012. 9. 30.	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논단: 도시재개발의 패러다임 전환(『인천시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외 2편) • 일반연구: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의 비대칭성 검증』 1편 	
2013. 9. 30.	제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논단: 해양도시와 해양문화(『인천의 해양도시적 성격과 해양역사상 - 고대를 중심으로』) 외 1편) • 일반논문: 『인천시 육지지역 상록활엽수 식재현황 및 도입가능성』 외 2편 	

발행일	통권	내용	비고
2014. 9. 30.	제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논단: I. 원도심 재생 II. 해양 항만 인프라 확충(『미국 보스턴 도시재생정책 사례 및 시사점』 외 3편) • 일반논문: 『새주소 지도를 이용한 인천 도시공원의 입지적정성 평가』 외 2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 도시연구』 제호변경
2015. 9. 30.	제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논단: 지역자산의 가치와 미래(『가상가치평가법(CVM)을 이용한 한남정맥의 환경적 가치 추정연구』 외 1편) • 일반논문: 『인천지역의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분해』 외 4편 	
2016. 9. 30.	제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논단: 도시와 가치 1 - 섬과 해양의 가치화 방안(『인천 섬 갯벌에 대한 생태적 가치화 방안과 적용』 외 1편) • 일반논문: 『주거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한 인천광역시 주거환경만족도 영향요인 규명』 외 6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선정(8월 2일) • ISSN 변경
2017. 6. 30.	제1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논단: 도시와 가치 2 - 문화, 인물, 예술(『인천 뷰티 라이프스타일 산업 육성 방안』 외 1편) • 일반논문: 『인천시 성별 임금격차의 변화요인』 외 6편 	
2017. 12.30.	제1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논단: 생활문화 활성화(『지역에 밀착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외 1편) • 일반논문: 『지방행정서비스와 개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외 6편 	
2018. 6.30.	제1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논단: 인구구조변화와 도시(『청년 주거 운영방식에 따른 유형별 사례연구』 외 1편) • 일반논문: 『인천시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외 6편 	
2018.12. 30.	제1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논단: 기후변화와 도시(『정책통합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정책 변화 연구』 외 4편) • 일반논문: 『동서독 지자체의 교류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외 3편 	

발행일	통권	내용	비고
2019. 6. 30.	제1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논단: 사회혁신과 시민참여(『사회 혁신과 마을』 외 2편) • 일반논문: 「지방의원의 정치적 요인이 지역구 예산 배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외 5편 	
2019.12. 30.	제1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논단: 평화교류시대와 도시정책 (『인천 서해 공간의 평화적 재구성에 관한 연구』 외 3편) • 일반논문: 「중국의 도시규모와 행복지수의 비교」 외 1편 	
2020.6.30.	제1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논단: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4차 산업혁명 시대 드론산업 정책의 제도화와 대안전략』 외 2편) • 일반논문: 「갈등의 공간적 전이와 다중 스케일적 연구」 외 5편 	
2020.12.30.	제1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논단: 여성과 도시(『코로나-19(COVID-19) 이후 한부모가족의 주거 스트레스 유형별 특성과 지원 방향 모색』 외 1편) • 일반논문: 「공원 기반 포용적 근린재생사업의 경제적 가치 추정」 외 6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선정 (11월 2일)
2021.6.30.	제1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논단: 팬데믹과 도시 I (『복합적 차별과 코로나19 감염위험』 외 2편) • 일반논문: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외 4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연구』 제호변경
2021.12.30.	제2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논단: 팬데믹과 도시 II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자원순환 정책분석 연구』 외 1편) • 일반논문: 「테헤란로 오피스빌딩 입면 유형에 따른 전기에너지사용량 특성」 외 7편 	
2022.6.30.	제2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논단: 이주민의 도시(『국제 이주자 경제 활동의 관계적 스케일』 외 1편) • 일반논문: 「마포·용산·성동(마용성) 현상의 이해」 외 6편 	

발행일	통권	내용	비고
2022.12.30.	제2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논단: 초고령사회와 도시(『중고령자의 재취업 일자리 안정성과 영향요인 분석: 주된 일자리 경력특성을 중심으로』 외 1편) • 일반논문: 『자연복원 형태의 승기천 하수조 정비사업의 경제적 가치 추정 연구』 외 6편 	
2023.6.30.	제2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논단: 주거 안정과 주택정책(『일산신도시 도시설계 적용 특성 연구: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외 1편) • 일반논문: 『지방소멸 위기지역 유형화와 특성 분석』 외 6편 	
2023.12.30.	제2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논단: 도시와 대중교통(『순서형 로짓 모형을 이용한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DRT) 이용자 만족도 분석』 외 1편) • 일반논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년계층의 공공주택 입주 의향 분석: 수도권 무주택 청년계층을 중심으로』 외 7편 	

『도시연구』편집위원회 활동

2023.1.1.~2023.12.30.

회차	일시	안건 및 결정사항
제1차	2023.1.3.(월)	• <제24회 도시연구세미나 발표 공모: 주거 안정과 주택정책> 발표자 선정 심의
제2차	2023.1.10.(화) 10:00~12:00	• 신임 편집위원장 임명 및 신규 편집위원 위촉 • 2023년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운영계획
제3차	2023.1.25.(수)	• <제24회 도시연구세미나 발표 공모: 주거 안정과 주택정책> 발표자 선정 추가 심의
제4차	2023.2.15.(수) 10:00~12:00	• 2023년 상반기 도시연구 학술행사 개최 준비 • 2023년 하반기호(통권 제24호) 기획논단 주제선정 • 2023년 상반기호(통권 제23호) 서평도서 추천
제5차	2023.5.2.(화) 10:00~11:30	• 2023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재인증평가자료 검토
제6차	2023.6.7.(수)~ 6.12.(월)	• 통권 제23호 기획논단/일반논문 게재편수 및 게재 논문 확정
제7차	2023.7.6.(목)	• 「제25회 도시연구세미나 발표 공모: 도시와 대중교통」 발표자 선정 내부심의
제8차	2023.8.11.(금)	• 2024년 상반기호(통권 제25호) 기획논단 주제선정 • 2023년 하반기 통권 제24호 서평도서 추천
제9차	2023.12.11.(월)~ 11.13.(수)	• 통권 제24호 기획논단/일반논문 게재편수 및 게재 논문 확정

『도시연구』 학술행사 보고

2023. 1. 1. ~ 2023. 12. 30.

회차	행사내용
제24회 도시연구세미나	<p>[제24회 도시연구세미나] 주거 안정과 주택정책 - 일시 : 2023년 4월 7일(금) 10:00~16:30 [온라인 화상회의/생중계] - 주제 : “주거 안정과 주택정책” - 인사말씀 : 이왕기(인천연구원 학술지 『도시연구』 편집위원장)</p> <p>[1부] 대학원생·신진 연구자 세션 세션사회: 정혜은(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학술간사)</p> <p>■ 주제발표 1: “청년과 노인 가구의 주거 불안정 유형별 수준의 차이와 영향요인 : 2010년, 2020년 주거실태조사 비교를 중심으로” · 발표: 정수영(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후연구원), 김은지(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석사과정) · 토론: 김호기(서울연구원 도시인프라계획센터 부연구위원)</p> <p>■ 주제발표 2: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운영실태 비교분석: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 발표: 윤 난(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 · 토론: 이정철(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p> <p>■ 주제발표 3: “구조, 성능, 환경 특성을 반영한 최저주거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 관악구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중심으로” · 발표: 조우리(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석사) · 토론: 유영수(인천대학교 도시건축학부 교수)</p> <p>[2부] 전문가·중견 연구자 세션 세션사회: 민혁기(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학술간사)</p>

회차	행사내용
제24회 도시연구세미나	<p>■ 주제발표 4 : “통근이 거주 중인 지역(군/구)에 대한 만족도 및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 인천광역시 거주 근로자를 대상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양은모(성균관대학교 경제대학 연구교수), 배호중(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과생애연구본부 부연구위원) • 토론: 이종현(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p>■ 주제발표 5 : “공공임대주택 정책 성과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 국내외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고진수(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부교수), 김천일(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조교수), 지규현(한양사이버대학교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교수) • 토론: 봉인식(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 선임연구위원) <p>■ 주제발표 6 : “수요자 중심 주거복지정책이 가능한가?: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주거복지 지방화를 중심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박동하(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 연구위원), 양희진(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김나현(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김준형(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토론: 남원석(서울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 연구위원)
제25회 도시연구세미나	<p>[제25회 도시연구세미나] 도시와 대중교통</p> <p>- 일시 : 2023년 9월 22일(금) 10:00~16:30 [온라인 화상회의/생중계]</p> <p>- 주제 : “도시와 대중교통”</p> <p>- 인사말씀: 이왕기(인천연구원 학술지 『도시연구』 편집위원장)</p> <p>[1부] 대학원생·신진 연구자 세션</p> <p>세션사회: 정혜은(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학술간사)</p> <p>■ 주제발표 1 : “지속가능한 도시 이동의 (재)구성: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나타나는 사회문화적 실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김진주 (전남대학교 문화인류고고학과 박사과정) • 토론: 김우중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

회차	행사내용
제25회 도시연구세미나	<p>■ 주제발표 2: “고령 디지털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복지에 관한 연구: 폴란드 ‘포즈난’과 ‘대전광역시’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전숙연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 토론: 이주용 (경기대학교 창의공과대학 도시·교통학전공 교수) <p>[2부] 전문가·중견 연구자 세션 세션사회: 민혁기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학술간사)</p> <p>■ 주제발표 3: “인과성 분석을 통한 고령자 통행태와 교통복지 정책효과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이동우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이현수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학생연구원) • 토론: 이동민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p>■ 주제발표 4: “순서형 로짓모형을 이용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이용자 만족도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추상호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박유진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시계획과 석사과정) • 토론: 백주현 (고양시정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 연구위원) <p>■ 주제발표 5: “교통카드 자료를 활용한 수도권 지하철 중심의 접근성 지표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신성일 (서울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토론: 박호철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도시연구』 규정

- | 『도시연구』 편집 및 발간 규정
- |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 | 『도시연구』 논문심사 규정
- | 『도시연구』 연구윤리 규정

『도시연구』편집 및 발간 규정

2007년	3월	12일	제정
2008년	4월	25일	개정
2008년	8월	20일	개정
2011년	5월	6일	개정
2012년	4월	17일	개정
2012년	12월	17일	개정
2013년	9월	16일	개정
2014년	4월	4일	개정
2016년	6월	10일	개정
2017년	2월	16일	개정
2017년	7월	20일	개정
2021년	3월	2일	개정
2022년	8월	11일	개정

I. 『도시연구』의 성격과 구성

1. 인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도시연구』라 칭한다.
2. 『도시연구』는 연구원이 발간하는 정기간행물로서,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은 창의적인 연구 결과 및 일정한 주제에 관한 연구성과·동향·전망을 학술논문의 형식에 따라 기술한 것을 말한다.
3.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도시연구』의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II. 논문투고 및 게재절차

1. 원고는 상시접수하며, 접수 일자(원고가 본지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2. 논문은 온라인투고시스템을 이용하여 투고한다.
3. 투고자는 온라인투고시스템 상의 투고신청서에 논문제목, 목차, 주

저자의 이름, 소속 및 직급/직위, 주민등록상의 주소, 연락처와 함께, 원고의 주요 내용을 기재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또한, 논문 뒤에는 참고문헌과 국문초록 및 영문초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4. 교신저자(해당 원고 관련 문의에 응할 수 있는 공동저자)가 별도로 있다면, 교신저자의 이름, 교신저자의 소속 및 직급/직위, 주민등록상의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주저자와 공동저자를 반드시 구분하여 명시한다.
5. 접수된 원고 중 본지 투고 규정 및 원고작성 방법에 의거해 작성하지 않은 원고는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저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투고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도시연구』 게재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된다. 단 필자의 사용권은 허락한다.

III. 논문의 기본요건

1. 투고자는 『도시연구』의 논문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원고 파일, 논문투고신청서, 문헌 유사도 검사결과 확인서, 연구 윤리 규정 준수 서약서, 저작권 이용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논문투고 신청서에는 논문제목(한글·영문), 필자명(한글·영문), 소속기관과 직위(한글·영문), 주소(주택 및 직장), 전화번호(E-메일 주소 포함)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였는지 확인한다.
2. 투고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출간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접수된 원고는 연구원의 소정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3.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연구부정행위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은 다음의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2)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3)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4)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4) 부당한 저자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3)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논문의 내용은 제목(한글), 저자명(한글), 차례, 본문, 참고문헌, 국문초록, 주제어, 영문초록(Abtract), 영문주제어(Keywords) 등의 순으로 구성된다.
5. 주제어는 5개 이내로 한정한다.
6. 논문은 본문, 각주, 참고문헌, 부록(필요시)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로 한다.
7. 서평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40매 이내로 한정한다.
8. 원고 분량이 본 규정보다 지나치게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에는 본지 편집위원회가 저자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9. 초록 및 주제어는 모두 국문과 외국어(영어)로 표기해야 하며, 국문 초록은 600자(200자 원고지 3매) 이내, 영문초록은 200단어 이내로 작성해야 한다.
10. 모든 원고는 본지가 제공하는 원고작성용 한글 양식 파일(신국판 152×225)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IV. 논문 구성요소별 작성요령

1. 저자표기 및 저자약력작성
 - 1) 국문제목 밑에 국문저자명을 기재한다.
 - 2) 저자가 1인일 경우, 국문저자명의 오른쪽 위에 *를 입력하고, 각주에 소속 및 직급/직위를 표기한다. 저자가 복수일 경우, 주저자가 맨 앞에 오도록 하고 저자와 저자 사이에 가운뎃점(·)을 넣어 구분한다(주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등 기입 가능)
 - 3) 저자의 약력에는 저자의 현재 소속과 부서(또는 학과), 직위(또는 직급)를 순서대로 작성하고, 교신저자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

해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1인 저자

*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E-mail: paper@ii.re.kr)

(2) 2인 이상 저자(주저자와 교신저자가 같은 경우)

*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교신저자(E-mail: paper@ii.re.kr)

**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3) 2인 이상 저자(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다른 경우)

*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교신저자(E-mail: paper@ii.re.kr)

2. 내용목차의 번호는 I. 1. 1) (1) ①의 순서를 따라야 한다.

3. 표와 그림에는 [표 1], [그림 1] 등과 같이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표 제목은 해당 표의 상단 중앙에 맞추기로, 그림 제목은 해당 그림 하단에 중앙 맞추기로 표기해야 한다. 표와 그림에 있는 글자와 숫자는 선명해야 하며, 흑백으로 작성해야 한다.

4. 본문의 인용문헌과 각주,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인용문헌

(1) 본문의 인용문헌은 저자의 이름, 출판년도, 인용한 쪽을 적어 표시한다. 국문저자명은 성과 이름을 모두 밝히고, 영문저자명은 성만 표기하며, 중국과 일본 등 한자 표기 저자명은 국문저자명의 표기 방법에 준한다.

(2) 같은 문헌을 다시 언급하는 경우에도 처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하며, 혼란을 주는 “같은 글”, “같은 책”, “앞의 글”, “앞의 책”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3) 한 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괄호 안에서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언급한다.

(4)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명, 발행 年年/月月/日日(월간지의 경우 발행 年年/月月),

쪽수를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한다.

(5) 표기 예는 다음과 같다.

- ① 단독연구 : 손정목(2007)에 따르면 …; Smith(1992, 94)는 …; 이들의 연구(김용창 1997; 송도영 2009, 96)는 …; …라고 보고 있다(윤호영 2001; 조한혜정 2011).
- ② 2인연구: 서현진·민병일(2001)에 의하면 …; Abrams and Jajodia(1992)는 …; …라고 주장하고 있다(Gilbert and Gubar 1978, 1-25; Murphy 1988, 39-52).
- ③ 3인 이상 연구 : 김만중 외(2001)는 …; Avram et al.(2009)는 …; 라고 지적한 바 있다(Farmwinkle et al. 1985, 233).
- ④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 …(동아일보 2017/2/15). …(월간경향 2009/2, 233)

2) 각주

- (1) 본문 중에 부연설명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의 마지막 글자 오른쪽 어깨에 일련번호(예: 1), 2), 3), …)를 붙이고, 해당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 (2) 각주에는 가능한 한 인용자료의 출처를 기재하지 않는다. 자료 출처는 본문에 인용표시를 한 뒤 참고문헌에 기재해야 한다. 본문에 인용표시를 하기 힘들 경우 각주에 출처를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인용자료를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참고문헌

- (1) 국문 참고문헌을 가나다순으로 먼저 열거한 후 동양문헌을 기재한다. 그다음 서양문헌을 알파벳순으로 나열한 후, 신문기사, 인터넷 웹 검색자료를 기재한다.
- (2) 단행본의 경우 저자, 출판연도, 서명, 페이지(필요한 경우), 출판사의 순으로 기록하고, 국문 및 동양문헌의 서명에는 겹낫표(『』), 서양문헌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국문 보고서 및 학술지 논문의 경우에는 논문 제목에 홑낫표(「」)를 표기한다.
- (3) 동일한 저자의 문헌은 연대순으로 나열하고, 동일한 연도의 문헌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순서(가나다 또는 알파벳 순)에

따라 연대 뒤에 a, b, c …를 기입한다.

- (4) 서양문헌의 저자는 성, 이름순으로 표기한다.
- (5) 저자가 복수일 경우 모든 저자를 다 밝힌다.
- (6) 인터넷 검색 자료는 제작자, 제작연도, 주제명, 웹 주소와 검색 일자 순으로 기재한다. 웹에 공개되어있는 전자책은 서명 옆에 “[eBook]”을 표기한다.
- (7) 표기 예는 다음과 같다.

① 국문 단행본 및 보고서, 논문

김석철. 2011. 『건축과 도시의 인문학』. 서울: 돌베개.
홍익표·진시원. 2015. 『세계화 시대의 정치학』. 서울: 오름.
조영무·최용환·이준호. 2017. 「경기도 주요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연구」. 경기연구원.
인천광역시. 2016. 「인천 미래 성장동력 8대 전략산업 육성방안」.
김미향. 2006. 「자아탄력성 증진 훈련이 중학생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옥련·허철수. 2011. 「청소년기 부모의 자녀교육과 갈등 척도 모형 연구」. 상담학연구 12(6): 2007-2028.

② 영문 단행본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Berelson, Bernard R., Paul F. Lazarsfeld., and William McPhee. 1954. *Vo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③ 영문 논문

Jilberto, Alex E. Fernandez. 1991. “Military Bureaucracy, Political Opposition, and Democratic Transition.” *Latin American Perspectives* 18(1): 32-65.
Partz, M., Mentro, J. P., Lauter, P., Scarcelli, T. A., Alexandrowicz, M. P., Banshi, P. P., ...Sauls, C.

E. 2008. "A qualitative study of modern Native American dance." *Journal of Dance Methodology* 12(3): 12-21.

④ 번역서

베버, 막스(Weber, Max). 1990. 『유교와 도교』. 이상을 역. 문예출판사.

클레그·히긴스·스파이비(Clegg, Stewart R., Winton Higgins, and Tony Spybey). 1994. "경제문화: 포스트 유교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공유식·김혁래·박길성·유홍준 편. 『신경제사회와의 이해』. 역사비평사. 195-210.

Weber, Max. 1951(1920). *The Religion of China*, translated by Hans H. Gerth. New York: Free Press.

⑤ 신문기사, 주간지, 월간지 등

이은상. "여성의 사표 신사임당." 동아일보. 1993.7.17: 5면.

안병만. "지자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과 시련." 월간중앙. 1991(8): 11-18.

⑥ 인터넷 웹 검색자료

"내향 재개발 지지부진 '상상플랫폼' 우선추진." 경인일보. 2016.10.31.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device=pc&key=20161030010009866>(검색일: 2017년 7월 20일)

오동근. 1996. "한국 도시정책의 미래." <http://www.idi.re.kr/researchRPT/list.do?tab=7>(검색일: 1998년 10월 20일)

"연속간행물 내용목차 서비스." <http://www.oclc.org/oclc/promo/512alrt/7512alrt.htm>(검색일: 2003년 2월 10일)

김영범·신동호. 2001. 『북한 문예론』[eBook]. 서울: 톨스토이. <http://www.tolstoe.com/newebook/mall/ebook-detailview.asp?contentsID=154>(검색일: 2001년 11월 8일)

Philip B. Kurland and Ralph Lerner, eds. 1987. *The Founders' Constitu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ttp://press-pubs.uchicago.edu/founders/>(accessed February 28, 2010)

Kirsi Peltonen, Noora Ellonen, Helmer B. Larsen., and Karin Helweg-Larsen. 2010. “Parental Violence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9(11): 813-822. doi: 10.1007/s00787-010-0130-8

5. 초록 작성법

- 1) 국문초록의 경우 국문제목-국문저자명-국문요약본-국문주제어 순으로 작성한다.
- 2) 영문초록의 경우 영문제목-영문저자명(성, 이름)-영문요약본-영문주제어 순으로 작성한다.

6. 사사표기 방법

- 1) 사사(謝辭) 표기 및 연구비 출처는 논문 첫 페이지 제목 각주에 필자의 소속과 직위에 앞서 기재한다.
- 2) 논문의 투고접수일과 심사수정일, 게재확정일은 논문 첫 장 각주에 편집위원회에서 기재한다.

V. 기타사항

1. 본문 속에서 약어를 사용하고자 할 때 해당 용어를 처음 사용할 땐 풀어쓰고 그다음부터는 약어를 사용해도 된다.
예) 유럽통화제도(EMS: European Monetary System)는 1979년 3월 창설되었다. EMS는 현재 유럽공동체의 ...
2. 필자 자신의 논문이나 저술을 지칭할 때 ‘졸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필자의 이름을 적어 밝혀야 한다.
3. 국문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1) 한자는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먼저 한글을 쓰고

괄호 속에 한자를 부기한다.

예) 지체주의(肢體主義)

- 2) 외래어는 학계에서 통용되는 번역어를 사용하되, 존재하지 않는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번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외래 용어를 부기한다.

예) 조합주의(corporatism)

- 3) 외국 인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 발음대로 표기하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예) 마오쩌둥(毛澤東), 세보르스키(Adam Przeworski)...

- 4) 외국 지명은 교육부의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 발음대로 표기한다. 단,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필요 시 간략한 설명을 추가할 수 있다.

예) 뉴욕, 치앙마이, 타간로크(Tagantrog, 러시아 남서부의 로스토프 주에 위치한 도시)

VI. 발간

1. 원고교정

- 1) 편집위원회는 오탈자, 비문(非文), 논리 전개의 오류 등을 교정하거나,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게재 논문 및 순서 결정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의 심사가 모두 종료된 후, 다음의 주제 분류와 순서를 따르며, 같은 주제분류 내에서는 심사 결과 등급 순을 따라 게재순서를 정한다.

(1) 도시계획, 도시환경

- (2) 문화관광
 - (3) 행·재정, 교육, 사회복지
 - (4) 지역경제
 - (5) 교통물류
 - (6) 동북아, 국제
- 2) 기획논문과 일반논문의 게재편수는 연간발간계획에 의거하며, 기획주제에 부합하는 일반논문을 기획논문으로 조정할 수 있다.
 - 3) 발간계획의 게재편수를 초과할 경우, “게재”로 판정받았더라도, 논문 게재를 보류할 수 있으며, 보류된 논문은 저자와 협의하여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3. 원고료 지급
 - 1) 채택된 논문에 한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단, 원고료는 실제 게재된 후에 지급하고, 게재 당시의 연구원 일반 예산·학술지 발간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원내 연구진이 투고하여 게재가 확정된 경우, 원고료의 50%를 지급한다.
4. 발행 횟수와 시기
 - 1) 본지는 1년에 2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2) 발행일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0일로 정한다.
5. 저작권
 - 1) 『도시연구』 게재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연구원에 귀속된다. 단 필자의 사용권은 허락한다.
6. 발행 부수
 - 1) 본지의 발행부수와 인쇄의 질 등은 연구원에서 정한다.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2007년	7월	15일	제정
2010년	5월	20일	개정
2012년	4월	17일	개정
2012년	12월	17일	개정
2013년	9월	16일	개정
2014년	4월	4일	개정
2016년	6월	10일	개정
2017년	2월	16일	개정
2017년	7월	20일	개정
2018년	2월	1일	개정
2019년	2월	15일	개정
2020년	2월	7일	개정
2021년	3월	2일	개정
2022년	8월	11일	개정

I. 구성

1. 편집위원회는 연구원 내·외 인사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도시연구 분야의 국제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약간 명의 해외편집위원을 둘 수 있다. 편집위원회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학술간사와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II. 임무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과 편집, 발간 등 『도시연구』의 발행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또한 『도시연구』의 편집 및 발간 규정, 편집위원회 회칙 등 『도시연구』의 발간에 필요한 제반 규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III.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의 선출기준

1. 편집위원장은 인천연구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인천연구원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편집위원의 구성은 특정 지역 및 전공분야에 편중되지 않아야 한다.
4. 학술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추천으로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IV. 편집위원장 및 위원, 간사의 역할

1.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모집, 논문의 심사의뢰와 공정한 심사, 발간 등 『도시연구』의 편집과 발간에 따르는 제반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2. 편집위원은 『도시연구』 발행의 기획,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추천 및 추천, 심사 결과의 추진 등의 권한을 가진다.
3.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투고자의 개인적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4. 학술간사는 기획논단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공모전, 학술행사 등의 주제를 기획하고, 해당 분야 필진 추천 및 섭외를 담당하며,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준비 및 회의록 작성, 투고원고 접수, 편집위원장이 최종 승인한 심사결과의 통보, 『도시연구』의 출간·배포, 원고 게재료 및 심사료 지급서류 작성 등 『도시연구』발간에 따른 제반 회계 및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V. 편집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1. 위원장과 위원, 학술간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통해 편집위원을 추천받은 후 원장의 승인을 얻어 편집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단 임기는 잔여임기에 한해 편집위원으로 활동한다.
3. 위원장의 부재가 생긴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하며, 원장의 허락을 통해 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한다. 단 임기는 잔여임기에 한해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한다.

VI. 편집위원회 회의

1. 편집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의 결석시에는 출석위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해 회의를 진행한다.
3. 편집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위임 포함)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4. 해외 거주 편집위원은 회의 참석이 어려우므로 개의를 위한 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VII. 회의비 지급

1. 편집위원회에 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의견서를 제출한 외부 위원(인천연구원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소정의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도시연구』 논문심사 규정

2008년	9월	10일	제정
2011년	5월	6일	개정
2012년	4월	17일	개정
2012년	12월	17일	개정
2013년	9월	16일	개정
2014년	4월	4일	개정
2016년	6월	10일	개정
2017년	2월	16일	개정
2017년	7월	20일	개정
2017년	12월	4일	개정
2018년	11월	15일	개정
2020년	2월	7일	개정
2021년	3월	2일	개정
2021년	8월	4일	개정
2022년	2월	17일	개정

I. 심사대상

1. 『도시연구』에 게재하고자 하는 모든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2. 도시리포트 및 서평과 같은 비논문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한다.

II. 심사절차

1. 1차 심사: 투고된 논문은 해당 분야의 전공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여 심사한다. 단 편집위원회에서 적합성 검토를 하여 투고된 논문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하면 1차 심사 전에 반려할 수 있다.
2. 재심사: 1차 심사 결과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1차 심사위원이 저자의 원고 수정본을 재심사한다.
3. 논문심사자는 심사의뢰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심사 총평과 함께

심사 결과(A, B, C, D)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보완 요구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논문심사 결과 통보 및 수정요구서'를 즉시 투고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논문심사 종합판정 결과가 '수정 후 재심사'인 경우 투고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90일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논문투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수정논문을 9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그 사유의 합당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추후 수정논문의 제출이 허용될 수 있다.
6. 심사위원 평가 결과가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되었을 경우, 필자가 수정한 논문에 대하여 재심사한다.
7. 재심사의 경우, 동일한 심사 절차 과정에 의해 심사를 진행한다. 단, 심사판정이 심하게 엇갈리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8. 심사 결과에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장은 제출된 이의 내용 검토를 위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편집위원 전원이 해당 논문을 재심사하여 다수결에 따라 재심 여부를 의결한다.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원래 심사 결과를 적용한다.

III. 심사위원 선정

1. 편집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 중에서 심사하려는 논문과의 전공 일치도 및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정, 위촉한다.
2. 편집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당해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분야의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장이나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집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인천연구원 직원이 투고할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천연구원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4. 심사위원은 3인을 위촉하며, 논문의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각각에 대하여 익명으로 처리한다.
5. 편집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경우 전체 논문 심사위원의 30% 미만을 유지하도록 한다.
6. 논문을 심사하는 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IV. 논문심사 기준

1. 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과 자율적 판단에 의거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하되 본지의 논문심사의견서의 양식에 맞춰 다음의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 본지 투고 규정 및 원고작성 방법의 준수 여부
 - 주제의 독창성
 - 연구 방법의 적절성과 연구자료의 신뢰성
 - 논문의 학술적 또는 정책적 기여도
 -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타 도시, 국가의 연구
 - 논문 및 체제의 일관성
 - 표·그림·사진·지도·참고문헌(각주)의 적절성
 - 선행연구의 검토
 - 국문·영문 초록의 질적 수준
 - 연구윤리 준수의 적절성
2. 심사위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논문을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

며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등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 윤리 규정에 위반된 사항은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V. 심사위원의 익명성

1.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저자와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남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저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VI. 논문심사 판정 기준

1. 논문심사의 판정은 1차 심사결과는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의 4가지로 판정하며, 2차 심사결과는 ‘게재’, ‘게재 불가’의 2가지로 판정한다.

■ 1차 심사

- 1) 게재가(평점 평균 3.3점 이상)
 - 심사위원 3인이 모두 A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2인이 A로 평가하고, 1인이 B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2인이 A로 평가하고, 1인이 C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 중 1인이 A로 평가하고, 2인이 B로 평가한 경우
- 2) 수정 후 게재(평점 평균 3.0점)
 -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A로 평가하고, 1인이 D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이 각각 A, B, C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이 모두 B로 평가한 경우
- 3) 수정 후 재심사(평점 평균 2.0점 이상 2.7점 이하)
 - 심사위원 3인 중 2명이 B로 평가하고, 1인이 C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이 각각 A, B, D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 중 1인이 A로 평가하고, 2인이 C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이 각각 A, C, D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B로 평가하고, 1인이 D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 중 1인이 B로 평가하고, 2인이 C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이 각각 B, C, D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이 모두 C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 중 1인이 A로 평가하고, 2인이 D로 평가한 경우
- 4) 게재 불가(평점 평균 1.7점 이하)
-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C로 평가하고, 1인이 D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 중 1인이 B로 평가하고, 2인이 D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 중 1인이 C로 평가하고, 2인이 D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이 모두 D로 평가한 경우

※ 1차 논문심사 판정 기준표

유형번호	평가 결과			총점	평균	판정	비고
1	A	A	A	12	4.0	게재가	게재확정
2	A	A	B	11	3.7		
3	A	A	C	10	3.3		
4	A	B	B	10	3.3		
5	A	A	D	9	3.0	수정 후 게재	필자가 논문을 수정한 후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확인하고 게재
6	A	B	C	9	3.0		
7	B	B	B	9	3.0	수정 후 재심사	심사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필자는 논문을 수정하고, 수정 논문과 수정 사항 개요를 제출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 3인에게 재심사를 의뢰하고 평가결과 평점의 평균 3.0점 이상이면 편집위원회에서 확인 후 게재
8	B	B	C	8	2.7		
9	A	B	D	8	2.7		
10	A	C	C	8	2.7		
11	A	C	D	7	2.3		
12	B	B	D	7	2.3		
13	B	C	C	7	2.3		
14	B	C	D	6	2.0		
15	C	C	C	6	2.0		
16	A	D	D	6	2.0		
17	C	C	D	5	1.7	게재 불가	
18	B	D	D	5	1.7		
19	C	D	D	4	1.3		
20	D	D	D	3	1.0		

■ 2차 심사

- 1) 게재가(평점 평균 3.0점 이상)
 - 심사위원 3인이 모두 A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2인이 A로 평가하고, 1인이 D로 평가한 경우
- 2) 게재불가(평점평균 2.0점 이하)
 - 심사위원 3인 중 1인이 A로 평가하고, 2인이 D로 평가한 경우
 - 심사위원 3인이 모두 D로 평가한 경우

※ 2차 논문심사 판정 기준표

유형번호	평가 결과			총점	평균	판정	비고
1	A	A	A	12	4.0	게재가	
2	A	A	D	9	3.0		
3	A	D	D	6	2.0	게재불가	
4	D	D	D	3	1.0		

VII. 소요기간

1. 논문심사위원 위촉: 편집위원회는 논문 접수 후 10일 이내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투고논문이 『도시연구』의 성격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2주 내로 기간을 연장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1차 심사: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후로부터 2주 이내로 심사의견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며,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장의 판단하에 3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거절, 심사 지연 등의 이유로 심사위원을 교체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본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재심사: 심사위원은 재심사를 의뢰받은 후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며,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장의

판단하에 2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심사위원의 연락 두절, 사망 등의 이유로 심사위원을 교체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본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논문 수정 보완: 1차 심사 결과 ‘게재 불가’를 제외한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는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수정 보완 의뢰를 받은 후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한 논문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수정 후 게재’ 판정 논문은 수정결과표와 함께 기존 심사자 3인에게 확인 요청을 보내 원고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초과한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5. 논문 수정 확인: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다시 제출한 논문이 수정 보완 요구대로 수정되었는지 확인한다. 1차의 경우 10일 이내에, 2차 이후에는 7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검토의견서 작성이 지체될 경우, 투고자에게 일정을 통지하고 연장할 수 있다.

『도시연구』 연구윤리 규정

2009년 4월 15일 제정
2013년 9월 16일 개정
2014년 4월 4일 개정
2017년 7월 20일 개정
2019년 12월 20일 개정
2021년 3월 2일 개정
2022년 2월 17일 개정
2022년 8월 11일 개정

I. 연구윤리 규정 제정 배경

제1조(제정 배경)

인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가 능동적으로 자치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이론과 접근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학술지 『도시연구』를 발간한다. 『도시연구』의 발간은 도시정책 관련 연구자들의 최신 연구성과를 소개함으로써 지역 아카데미즘의 기초를 마련하고 인천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또한 『도시연구』 연구윤리 규정의 제정은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위하여 『도시연구』의 편집위원은 물론 연구논문의 저자와 평가자가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윤리수준을 명백히 밝혀줌으로써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함이다. 연구윤리 규정의 내용은 이미 관행으로 지켜져 오고 있는 규정들을 정리한 것이지만, 모든 관련자에게 연구논문의 작성과 평가 및 편집에 대하여 연구원이 추구하는 윤리 수준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2조(제정 및 적용)

이 규정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7.17.)”을 준용한 것으로 연구원의 학술지에 게재되는 연구성

과물의 연구영역에 맞게 제정되었으며, 제정일로부터 연구원의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성과물과 그 연구자에게 적용된다. 또한, 연구원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II. 연구논문 윤리규정

제3조(사회적 역할과 책임)

학술연구자로서 책임 있는 연구 및 지적 활동을 하여야 하며, 자연환경의 복원, 창출, 보호 관리 등의 연구활동이 사회 공익적 책임을 수반하여야 한다. 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 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 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4조(기본 연구윤리)

연구활동에서 정직성, 진실성(integrity)과 정확성이 연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사항임을 인식하고 연구의 제안, 계획, 수행과 결과보고 등 모든 연구활동 수행과정에서 이와 같은 기본원칙을 추구한다. 특히, 위조, 변조, 표절 및 중복발표 등과 같은 부정행위를 배격한다.

제5조(보편성의 원칙)

연구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을 수 없으며,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6조(전문가로서의 품위유지)

새로운 지식창출과 기술개발로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전문가로서의 긍지와 품위를 유지한다.

제7조(법령의 준수)

연구 및 지적 활동의 전 과정에서 관계 법령이 정한 규정과 윤리강령에 명시된 규범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8조(연구대상의 존중)

(자연 환경 연구) 자연환경을 다룰 때에는 자연환경의 복원, 창출, 보호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인류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 (인간 대상 연구)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기관 윤리위원회(IRB)의 심의 통과를 권장하며,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서면 동의서 및 기관윤리위원회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연구 자료의 기록, 보존)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생성된 데이터, 샘플 등의 자료를 최초단계에서 최종단계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기록하고 보존한다.

제10조(저자 표시와 지식재산권)

저자 표시는 연구의 아이디어 제시, 설계, 수행, 해석 등 연구에 직접 참여한 자로 제한하고 발표논문에는 연구과정에서 참고·인용한 타인의 연구업적을 밝힘으로써 원저자의 권리와 지식재산권을 존중한다. 표시된 저자는 논문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진다.

제11조(사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새로운 발견이나 연구 및 지적 활동의 업적을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을 취할 권리가 있으며, 한편 사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제12조(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연구 및 지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에 대해서는 이를 미리 공표하고, 연구의 독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자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한다.

제13조(연구환경 조성)

책임 있는 연구와 지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적 자유, 공정성, 개방성과 상호존중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적극 참여한다.

제14조(윤리 교육의 실시)

연구와 지적 활동의 책임자는 참여자들이 이 윤리규정을 성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의무가 있다.

제1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연구진실성을 확보할 수 없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칭한다)이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2. 변조: 연구데이터, 실험과정 등을 조작하여 연구내용 및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연구에 참여한 자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
5. 학문 분야에서 통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

III. 윤리위원회

제16조(구성)

윤리위원회는 외부위원 2인을 포함해 편집위원 5인으로 구성되며,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임명한다. 구성된 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임명한 위원장 1인을 두며, 윤리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윤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운영과 권한)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대상 논문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2.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칙 위반보고가 있거나 제보가 있는 경우 보고자, 제보자에게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 의혹이 있는 대상자에게 그에 대한 진술 및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윤리위원회는 제보나 보고가 없는 경우에도 윤리규칙 위반의 의혹이 있는 경우 그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의혹이 있는 대상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윤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18조(절차)

투고논문이나 간행된 논문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 또는 부정행위 제보자(이하 '제보자'라 한다)가 위원장에게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힌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해당 논문의 연구 윤리성에 대해 검증하며, 예비조사에서 판정까지 6개월 이내에 절차가 종료되어야 한다.

1. 예비조사: 위원장은 제보를 받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들이 제보문건을 열람하게 하고, 부정행위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부정행위의 성립 가능성이 현저한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수렴되면, 아래의 절차를 진행한다.
 - 1) 연구윤리 위반이 의심되는 해당 연구자(이하 '해당 연구자'라 한다)에게 제보 내용을 통보하고, 1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 2)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면, 위원회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린다.
 - 3)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본조사의 절차를 진행한다.

- 4)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단, 익명 제보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5)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본조사: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의 절차에 따라 본조사를 진행한다.
- 1) 외부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위원회'를 소집한다. 단, 위원회 소집 전에 제보자에게 심사위원 명단을 알려서 제보자가 심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해 심사위원을 재위촉한다. 위원회에는 해당 논문과 제보내용,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논문의 연구윤리성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다.
 - 2)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가 접수되면,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의견서를 통보하고 이에 대해 이의 제기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3) 제보자나 해당 연구자가 심사의견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 제보자의 이의 제기서류, 해당 연구자의 이의 제기서류를 위원들이 검토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3. 판정: 위원장은 위원회의 판정을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며, 제보자 또는 해당 연구자는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를 재소집하여 1회에 한해 직접 재조사하고 최종 판정을 내린다.

제19조(제척)

윤리위원회에 속한 위원이 피조사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윤리위

원회의 위원자격이 일시 상실된다.

제20조(제재조치)

인천연구원 원장은 윤리규칙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행할 수 있다.

1. 투고 논문 및 그 저자에 대해서는 그 후 3년간 단독 혹은 공동으로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신청할 수 없으며, 게재 이후 위반판정이 밝혀질 경우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공식 삭제한다.
2.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3. 제재조치의 결과에 대하여는 대상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인천연구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비밀보호)

윤리위원회 위원 기타 윤리규칙 위반 여부의 조사·심의에 참여하는 사람은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에는 조사의 대상이 된 의혹 내용이나 피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IV. 저자 윤리규정

제22조(표절, 위조, 변조 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와 함께 인용하거나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위조),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변조)하지 말아야 한다.

제23조(연구 업적의 명기)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논문의 순서는 저자의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하며 단순히 특정 직책 또는 지위에 있다고 해서 공동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 연구에 충분히 기여했음에도 저자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제24조(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투고해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연구물을 유사 학회 등에 중복하여 투고해서도 아니 된다.

제25조(재투고)

『도시연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다만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기존 논문과의 ‘연구의 방법’, ‘자료의 해석’, ‘논리 전개방식’ 등 상당 부문 차별성이 있는 경우에는 재투고를 인정한다.

제26조(인용 및 참고 표시)

1. 저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하고,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인적으로 취득한 자료의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공한 자의 동의를 받은 이후라야 인용할 수 있다.
2. 저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참고

할 경우에는 주석을 통해 인용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V.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제27조(기본자세)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논문 투고자의 인격과 양심 및 전문성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8조(형평의 원칙)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의 전공분야, 투고자의 성별·나이·소속기관·출신 등에 대한 어떠한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소성을 배제하여 동등한 시각을 견지하여야 한다.

제29조(심사의뢰)

심사의뢰는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하며, 투고자와 친분이 있거나 혹은 적대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심사위원이 선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0조(비밀유지)

편집위원은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투고자의 인적사항 및 심사위원 등에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VI. 논문심사자 윤리규정

제31조(심사의 객관성)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32조(저자의 독립성 존중)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되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한다.

제33조(중복심사)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또는 중복심사중인 경우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4조(심사비밀 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심사자는 심사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기 전에 심사논문의 내용을 타 연구에 인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9년 4월 15일 제정되었으며, 이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13년 9월 16일부터 발생한다.
3.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14년 4월 4일부터 발생한다.
4.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17년 7월 20일부터 발생한다.
5.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발생한다.
6.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21년 3월 2일부터 발생한다.
7. 이 개정 규정의 효력은 2022년 2월 17일부터 발생한다.
8. 이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7.17.)”에 따른다.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이왕기 인천연구원 부원장

국내 편집위원

- 김윤영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정욱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김종형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민혁기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학술간사
박선주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배덕상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서봉만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유해연 숭실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윤갑식 동아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윤혜영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이나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소라 한국환경연구원 자원순환연구실 연구위원
정세은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성윤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정수종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교수
정혜은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학술간사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교수

채은경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최영화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해외 편집위원

이성희 영국 더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李順成 중국 산둥사범대 공공관리학부 교수

편집간사

서지윤 인천연구원 연구기획실 전임행정원

유다형 인천연구원 연구기획실 전임행정원

통권 제24호 **도시연구** Korean Journal of Urban Studies

발행 2023년 12월 30일
발행인 박호군
발행처 인천연구원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화 032)260-2628
홈페이지 www.ii.re.kr

교정·교열 김아진
편집·인쇄 도서출판 다인아트

ISSN 2765-7205
